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

수원 시민운동 30년 1991-2020 활동가 구술기록

사람책으로 엮는 Human Library 수원지역 시민운동 연구

고경아 고정호 권미영 김명욱
김충관 노건형 류명화 민진영
박완기 박승하 박진 박천우
서주애 송원찬 신승우 안병주
유문종 유주호 윤은상 이성호
이인신 장동빈 전경숙 정선영
최미정 최용선 허윤범 홍은화

목차

1기 1991-1995

용기종기놀이방 개원과 보육운동	전경숙	6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김충관	20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및 자료집	박완기	24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단 활동	최미정	32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	박천우	38
해방50주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한마당	고정호	42

2기 1996-2000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유문종	46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고경아	50
수원 인권영화제	송원찬	58

3기 2001-2005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대응 시민운동	류명화	24
지역 미디어 개선 운동	민진영	68
우만고가차도 건설 반대운동	김명욱	74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권미영	84

4기 2006-2010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 운영	이성호	104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 운영	박진	116
이의지구 광고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	장동빈	126
수원참여예산연대 결성	허윤범	58
수원촛불	안병주	132

5기 2011-2015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홍은화	142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입점 반대 활동	노건형	148
수원시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반대	서주애	152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	신승우	162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안병주	132
북수원민자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장동빈	126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공동행동	유주호	84

6기 2016-2020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	이인신	168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윤은상	174
광고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	윤은상	174
서수원 난개발 방지 시민대책위원회	최용선	192
수원 지방선거 100대 과제 선정 및 작성	최용선	192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대책위 활동	정선영	204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위 활동	박승하	216
수원지역 시민운동 30년을 돌아본 아홉달 경과보고, 평가와 제안		224

1기 1991-1995

옹기종기놀이방 개원과
보육운동
전경숙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김충관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및 자료집
박완기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단 활동
최미정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
박천우

해방 50주년,
통일맞이
수원시민한마당
고정호

3기 2001-2005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대응 시민운동
류명화

1기 1991-1995

응기종기놀이방 개원과 보육운동

수원지역 비영리 탁아운동의 시작, 보육문제를 수원지역에 제기하고 시민운동으로 풀어온 출발 (91년)

전경숙

전경숙님이 경험하신 1991~1995년의 시민운동이나 보육운동을 한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전경숙 ■ 그때 우리의 화두는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에게 보호받은 권리를’이었어요. 이 슬로건이 기억납니다.

당시 많은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여성운동, 통일운동도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육운동에 참여하게 된 시대상황이나 개인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전경숙 ■ 1990년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혜영·용철 이 사건’으로 농사로 먹고살기 힘들어 도시로 올라온 부부가 둘 다 막노동을 하며 아이를 키워야했어요. 일을 나가며 문을 잠가놓았던 거죠. 안에서 아이들이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질식사 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라고 전국에 탁아소 100여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와 함께 보육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어요. 비영리민간탁아시설을 운영하는 보육·탁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파악하고자 한 조사에 제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설문조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찾아온 사안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살던 봉천동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 있어서 조사를 했어요. 산동네에 있었던 ‘씩씩이어린이집’과 ‘봉천동어린이집’ 등 세 군데를 조사했어요. 그 당시에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교사들이 아이들을 모아 산동네 열악한 곳임에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걸 보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조사한 곳은 산동네를 내려와 봉천동 시내에 위치한 시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을 찾아갔어요. 거긴 너무 시설이 좋은데 아예 설문에 응해주지 않았어요. ‘씩씩이어린이집’ 등 비영리 민간탁아는 아이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었는데, 그 잔상이 오래 남았었나 봐요.

제 전공은 달랐는데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잠긴 집 안에서 아이가 불장난하다가 죽었다는 사건도 충격적이기도 했고, 설문조사 나갔다가 보았던 교사들에게서 받은 감동도 오래 간직하고 있었죠. 조사활동을 마치고 몇 달 지났는데 수원에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주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는데 혹시 하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서울 살고 있었고 보습학원에서 저녁에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전시간에만 도와주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임신을 해서 밥 냄새 때문에 음식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아이들 밥 챙겨주는 시간까지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 인연이 되었던 게 바로 당시 정당에서 운영하던 <소꿉마당>이었어요. 평민당 지역운영위원장과 부인이 함께 운영하셨어요. 거기에 잠깐 일하는 교사로 들어갔죠. 서울 집에서 새벽에 나와 대중교통으로 와서 아침 7시 반에 문 열어서 아이들을 받고, 점심먹이고 정리하고 나서 서울역 근처의 보습학원가는 일을 해가며 몇 달이 지났어요. 원장선생님이 출산 때가 다가오니 저에게 아예 종일 하겠냐고 제안해 결국 서울의 학원 일을 정리했어요. 혼자하기 힘들어 아이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해서 둘이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즈음에 사회복지과 졸업을 앞둔 이기원씨(졸업 후 탁아소 설립 준비팀에 합류하면서 수원여성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나중에 대표를 맡게 된다)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비영리 민간탁아의 이름을 걸고 있으니 그때 직장 일을 하는 여성들의 아이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탁아소 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렸던 수원여성회와도 연결되었어요.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한빛교회 오규만 목사님도 <아이벙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옹기종기어린이집>은 1991년 5월에 개원을 했는데, 당시 한빛교회<아이벙놀이방>과 <소꿉마당>, 이렇게 세 군데가 (비영리)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 어린이집은 계속 잘 운영이 되었나요?

전경숙 ■ <소꿉마당>과 <아이벙>은 정리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소꿉마당>이 정리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들의 임금 문제였어요. 그 당시 간호사였던 후배 초임이 6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저희가 20만원 월급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정에서 내는 보육비 10만원을 다 운영비로 쓰고 빠듯하게 월급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중 몇 명은 (야간보육으로)돈을 많이 내는 아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30만 원을 내는 그 애들만 놀이방 일과 후에 따로 데리고 가서 야간보육을 했던 거예요. 교사들을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원장은 운영에 대한 것은 원장이 결정한다며 그런 걸로 따질 거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10월 인가에 쫓겨났어요.

그때 수원민주사랑청년회의 선배님들이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후배들을 그런 식으로 부려 먹느냐, 하루 종일 일하는데 20만원 저임금을 주느냐고 항의를 했던 거죠. 지역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되자 원장도 어린이집을 정리했어요.

한빛교회 <아이벙>은 오규만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정리가 되었어요. 교사들도 다 정리되었는데, 원아들이 줄어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정부에서 돌봄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

났어요. 우리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조건의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굳이 <아이벳>이나 <소꿉마당>에 보내지 않게 된 거였죠. 보육시설이 정리가 되었지만 세 보육시설 교사들은 그 이후에도 모임은 계속 했던 거 같아요.

<소꿉마당>에서 나오고 한 달인가 두 달 쉬고는 <옹기종기>로 들어갔어요. <옹기종기>도 개원준비부터 같이 운영하던 분이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자 이기원 대표가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기원 씨와 친구 그리고 나, 셋이 하게 되었어요.

<옹기종기>에 합류할 당시 상황들을 이야기해주세요.

전경숙 ■ <옹기종기> 상황은 수원여성회 20주년 자료집에 잘 나와 있는데, 1989년 탁아소설립추진준비위에서 추진하였고, 그 당시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고민했던 회원들과 초대회장이었던 박정순 회장이 준비하였고, 2대인 김정만 회장 때 설립하였어요. 그 당시 김정만 회장과 몇 지역을 다니다 수원 외곽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았던 고색동 지역을 선택 하였죠. 그때 공간을 마련하고자 비누를 만들어 팔거나 후원받은 옷을 바자회에서 팔거나 모금했어요. 보증금이 3백만원에 월세 15만 원이었던 거 같고, 월급 20~30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당시에 아이들 모집정원이 20명이었는데 다 차지는 않았고, 15명인가 16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원지역 시민운동 활동가들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입학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전경숙 ■ <옹기종기> 때는 아니었어요. <올망졸망> 때 많았고, <평동어린이집> 때가 제일 많았어요. <옹기종기> 때는 지역 아이들로 시작했어요. 공간 자체도 기차길 옆이라 기차 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차길 옆 세 여자라고 지역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젊은 여자 셋이 동네에 들어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네' 하며 주민들이 궁금해 했고 유치원하고는 다르다며 아이들을 보냈던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조건의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다 장사하거나 일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집에서 아이를 보냈어요. 나중에 진짜 조건이 어려우신 가정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학부모들에게 좀 까다롭게 했던 것은 보육운동이 당사자 운동이라 생각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학부모회도 있었고, 가정방문 꼭 해서 엄마들과의 유대관계를 만들었어요. 생일잔치 때는 케이크 대신 미역국을 끓여올 수 있게 하고, 후원차집도 함께 준비하는 등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했어요. 지금이야 엄마들 동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월1회 자모회를 통해서 재정공개하고 운영상황도 나누었어요. 워낙 보육료가 싸기도 했고 함께 해야지 보육(환경)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지요.

3세 아이부터 입학하는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옹기종기>를 운영하다 <울망졸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나요?

전경숙 ■ <울망졸망>에서는 0세부터 3세의 아이를 받았어요. 저는 이기원 대표의 의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있으면 잘 기획해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내곤 했어요. 결혼한 활동가들이 “애를 낳고 싶은데 보낼 데가 없어 걱정이야”라고 얘기하곤 했어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면 다행이었으나 그렇지 못하면 직장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아 타아를 적극적 고민하고 추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울망졸망>에서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전경숙 ■ 매교동에 위치한 팽나무 삼거리 바로 그 앞에 <울망졸망>이 만들어졌지요. 이기원, 정순옥, 전효순 그리고 장정희(현 수원시의원) 이렇게 네 명이 <울망졸망>의 교사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지요. 당시 장정희 씨는 노조간부였는데, 아이를 낳게 되니 돌봐 줄 곳을 찾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어요. <울망졸망> 준비팀은 보육교사를 찾고 있었고 그 분도 자녀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갖게 되면서 어려움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세 명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중에 합류했어요. 그 당시 저는 <옹기종기> 교사였어요, 운영 책임자였던 이기원 대표는 <울망졸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수원여성회 사업에 주력하면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때 저는 큰애를 낳고 <옹기종기>를 육아휴직한 상태였어요. <울망졸망>에 교사로 들어와 큰 애를 함께 돌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서 저도 장정희 씨처럼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거지요.

그때 <울망졸망>에는 영아 돌봄이 필요했던 맞벌이 부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믿을만한 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영아타아를 전담하는 <울망졸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아이들의 수는 십여 명 정도였고, 교사가 3명이었어요. 그때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영아는 5:1이었고 유아의 경우 15:1로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연령에 따라 2:1이나 3:1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울망졸망>의 경우가 3:1정도였으니 교사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럼 수원여성회의 평동어린이집 운영은 어떤 계기로 맡게 되었죠?

전경숙 ■ 영아타아를 맡아 운영하는 곳도 주변에 많이 생겨났어요. 입소연령이 3세부터인 곳들도 영아를 받았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맞으니 더욱 보육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났어요. 24시간 타아도 생겼고, 수원시청이나 삼성, 은행에서도 직장 타아가 생겼어요. 아기들이 크면서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아이수가 줄어들고 규모가 작았던 <울망졸망>의 교사들은 서서히 소진되면서 계속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수원 인근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생기며 직업훈련을 위해 오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위탁한다는 공고가 났는데, 수원여성회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한옥자 대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옹기종기> 출신 중에 경험있는 교사가 파견되었어요.. 비영리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한계와 당시 보육의 공공성 확보¹⁾을 요구가 있었고, 당시 수원시장의 공약에 시립어린이집 10개 확충이 들어있었어요.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역시 한옥자 대표 때인데, 수원여성회도 적극적으로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나섰어요, 비영리민간보육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있었기에 마침내 평동어린이집을 수탁하게 되었죠. 1998년 당시 시민단체가 시립시설을 위탁받는 경우가 별로 없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정말 훌륭한 공간에 들어갔던 거 같아요. 원래 평동사무소가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 들어갔지요. 지금은 개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보육 및 유아교육에 힘써왔던 수원여성회에서 이 부문의 활동을 정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전경숙 ■ 더 이상 수원여성회가 돌봄에 있어 롤모델로 있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었어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주변에 많이 생겨났고 제대로 운영하는 곳도 많아졌으니까요. 수원여성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수원여성회의 출발과정에서 영·유아 돌봄 영역은 중요한 운동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수원여성회에 돌봄 이외의 다른 영역들이 크게 요구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힘이 덜 모아졌고, 누가 맡아 하더라도 우리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하에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어요.

게다가 후에 들어온 젊은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육운동가는 아니었어요. 시민단체인 수원여성회를 사용자로 인식하고 주말에 진행되는 간담회나 벼룩시장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수당이나 휴가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높아진 반면 관리자가 된 수원여성회 사무국 활동가는 계속 저임금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쌓여갔어요. 그리고 여성회가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해 운영할 보육운동가로 보낼 원장이 더 이상 없었던 것도 이유였어요.

보육운동에서 이어 화서희망지역아동센터,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참여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전경숙 ■ 돌봄을 하다 보니 민간·시립어린이집, 영아탁아, 공동육아 등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여성들에게는 방과 후 아이들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요.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방치가 되고, 그래서 엄마들도 일을 많이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되지요. 수원여성회는 방과후 방치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는데 1999년 IMF시기에 여성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방과후 무료공부방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학교로 교사를 파견했었는데 점점

1) '정류장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함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변화되어 2005년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정착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운영비는 따로 없으니 파견된 분들이 급여에서 간식 사 먹었다고 했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선생님들 중에 자기 돈이라도 털어서 애들 라면 끓여 먹었다고 말해요. 지금은 라면 사 먹이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과자도 사 먹이고 했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며 돌봄을 진행했던 거예요. 학교 공간에서 그 애들을 돌보아야 하니까 학교 눈치도 보아야했어요. 그 과정에서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아이키우기 좋은 수원 만들기 보육조례운동 등의 실천 활동들도 전개했지요.

방과후 사업을 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형태에서 교실 운영으로 바뀌어가면서 제도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교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재정, 공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죠. 지역아동센터로 시설을 조건을 갖추면 시에서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 지원으로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후원회를 꾸려야 했어요. 이미 공부방 연합회가 생겼었어요. 야학도 있었고요. 집에서나 교회 공간 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열었어요. 수원에서도 여성회 뿐 만 아니라 교회 공간들에서 선교 차원에서 운영하던 데가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건비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한 곳당 200만원이 안 되었을 거예요. 교사에게 80만 원 월급 주고, 제가 받았던 월급으로 월세로 냈던 거 같아요. 그때 월세가 거의 60만 원 정도 했었던거예요.

초창기 방과후 교사파견 할 때 많게는 13명 정도 되었는데 2003년 수원여성회가 중심이 된 방과후 교실운영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수원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팔달동 방과후교실 3곳을 운영하였고, 수원초등학교는 학교 공간 부족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던 방과후 교실을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사용하다가 또 주민자치센터 이전으로 자체공간을 마련했어요. 팔달희망교실도 팔달동 주민자치센터의 새마을 문고에 있다가 주민자치센터 행정구역정비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원방과후교실도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2005년에는 팔달희망과 화서희망이 수원여성회 부설 지역아동센터로 남게 됩니다. 저는 2007년에 화서희망지역아동센터에 있다, 2012년에 팔달희망으로 옮겨 1년간 있다가 그다음에 제가 수원여성회 대표의 역할을 맡아 팔달희망을 그만두었어요.

그 뒤에 지역아동센터 활동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경숙 ■ 사실은 더 이상 책임지고 운영할 활동가가 없었어요. 월세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거든요. 함께했던 센터장이나 저나 돌봄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냥 자기 돈에서 했어요. 후원자를 늘렸어야 해결됐을 텐데. 화서희망의 월세가 60만원 이었는데 그것을 책임질 센터장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성회가 월세 부담을 해가기 어려워니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의 운영체를 알아보자 했고, 그때 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위탁을 이어받았죠. 지금은 이름을 바꿔 '키다리꿈' 지역아동센터라고 부르

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돌봄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운영주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렸던 것인데, 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보증금만 돌려받고 웬만한 물건이나 권한은 다 주고 나왔던 거 같아요. 팔달희망 역시 센터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판단에 정리하게 되었어요.

여성회가 지역 사회에서 1990년부터 보육운동을 해온 과정이 전경숙님의 생애주기와 연결되어 왔네요. 맨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며 보육실태를 생생하게 알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키우며 여성이 겪는 직접적인 고민들이 생겼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삶이 되었어요.

그 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나 내용도 잠깐 소개해 줄 수도 있나요?

전경숙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기본은 아이들이 굶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식비가 지원되지 않아요. 먹거리는 제일 좋은 걸로, 생협 물품을 우선적으로 썼어요. 센터장마다 다르지만 저는 생태·환경 부분에 신경 썼었고, 지역연계를 통해 전래놀이를 교육활동에 도입했어요. 저의 성장 과정에는 전래놀이 활동이 있는데요, 아이가 아파서 중간에 일을 아예 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뭐할까 고민하다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건 ‘놀이’이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전래놀이를 지역에서 4년인가 진행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전래놀이가 많이 확산되기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놀이를 많이 하게 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에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어려운 조건의 아동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은 기본이고, 다문화, 조손 가정, 이혼 부모도 많았고 아빠 혼자 키우는 애들과 방치된 아이들...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가끔 밤에 전화 받곤 했어요. ‘선생님 누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동네 곳곳이나 다른 동네도 찾으러 가야했어요. 집에서 밥을 안 챙겨 주는 애들도 많았어요.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기본이 아이들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기초학력도 안 되어 기초학력도 좀 신경을 썼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를 존중하며 살아야 해 등... 그래서 시민단체 등 외부자원을 연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어요. 여성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부모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 추진했지만, 부모님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진행을 계속 해야 하나 싶도록 관심이 없어서 가정방문도 하고 부모님들 개인 면담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게라도 소통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린이집하고는 또 달라요.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교사들에게 완전히 맡기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독립성이 있잖아요. 가정방문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가정방문 가서 ‘애가 이렇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왠지 튕겨 나간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 때의 어린이 상황과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만나는 아이들의 상황은 달라졌나요?

전경숙 ■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매탄동이 부자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화석희망 시절과 다르지 않아요. 어디나 어려운 가정은 있는 거니까요.

옹기종기 어린이집, 올망졸망 어린이집, 평동 시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수원지역사회의 돌봄 활동에 있어 여성회나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의 협력과 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어떤 속상함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나요?

전경숙 ■ 실제로 초창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가건물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니 쾌적할 수 없지요. 지역의 활동하는 선배들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도배할 때 도와 주고, 창고에 방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나무 가져와서 만들어 주고, 입구에 슬레이트로 지붕도 만들어 주고. 관심과 도움을 많이 보내주었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이 바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힘은 들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굳이 속상한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보육이나 돌봄은 주류운동이 아니라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때는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이 전선운동이었다면 여성운동이나 돌봄 운동은 그냥 부문운동이라 해야 되나, 그냥 귀엽게 봐준다고 해야 할까. 활동가들 사이에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성운동을 폄훼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봄도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애들이 실컷 뛰어 놀고 나면 낮잠을 재우기도 하는데 지역 선배활동가들을 만나면 ‘요즘도 애들 잠자는 약을 먹여 재우냐’며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때 그런 뉴스들이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듣기 거북했어요.

통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이 집중되다보니 활동가들에게 아이들을 돌보다가도 시위나 행진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요구되기도 했었나요?

전경숙 ■ 실제로 돌봄, 보육운동도 여성노동운동에서 출발했어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²⁾소속의 탁아소들이 서울 구로 같은 공단지역에 많았던 것은 본인들 문제였기에 엄마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본인이 미싱 일을 하러 가야하는데 아이를 봐 줄 데가 없으니까, 아이 보는 것은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인천 지역이나 구로지역, 창신동 이런 데서 먼저 출발했던 것도 돌봄이 노동운동에서 시작되었고 당사자 운동이었죠. ‘어머니대회’라고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전국행사가 진행되었어요. 어머님들이 부산, 광주에서도 오고 정말 몇 백명이 와서 대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빌려 행사를 했었어요. 제가 4회, 5회를 참석했었는데 광주같이 먼 지역에서 참여하는 엄마들의 오면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일할 권리, 아이에게 보호받은 권리를’이 그 당시 슬로건이었어요. 실제로 그 모태는

2)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기원은 80년대 공단과 빈곤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탁아소에서부터 출발했고, 탁아소를 세운 보육 운동가들은 1986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발족했다.

노동운동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맞다고 봐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통일운동 관점이나 노동운동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계속 수민청(수원사랑민주청년회) 활동과 나중에 수원여성회에 들어가서도 그 관점으로 활동했어요. 지역 선배활동가들은 후배들이 보육, 돌봄을 한다고 하니 관심 가졌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요거는 중심운동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육 관련 대회나 행사를 하면 남성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배우자도 잘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바자회 같은 것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팔아주기는 했지만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영역이 여성회 활동 주제에서 빠지게 되었네요. 물론 수원시 돌봄 정책에 대해 계속 관심을 이어갔겠지만, 실제 그 분야의 활동가가 재생산되기도 어려웠고, 자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월세)를 부담하며 계속 운영하기에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쉬움이 크진 않았나요?

전경숙 ■ 정리하자고 할 때마다 저는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에 섰던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평동시립어린이집을 정리할 당시 저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라도 가서 책임지고 운영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 공간 만들 때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는지 알거든요. 하나를 세우기까지 개인주머니도 털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다들 아니까. 그러나 정리하자는 말을 꺼낸 사람도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제기한 것이니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아쉬움은 늘 있죠. 지역아동센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달 60만 원의 임대료가 필요한데, 내가 내줄 수 없으면 실무자에게 계속 운영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재정적인 이유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정리한 건 정말 아쉬워요. 시민운동의 철학과 가치를 견지하며 지역아동센터나 평동어린이집을 운영해 나름 모델로서 역할을 잘 해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운영체로 돌아서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아쉬웠죠. 그때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보육운동에 함께 했기 때문에 생태·먹거리·통일·환경·미디어·공동체 등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 진행했어요.

이후 보육활동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는 정부 정책으로서의 보육, 즉 국공립 시설과 운영 형태로 가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이 훌륭한 시설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갔어요. 현재 보육정책의 흐름과 관련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전경숙 ■ 지택연 시절에 시설이 100군데였으면 그때는 엄마들하고 같이 하는 보육운동이었어요. 보육시설들 많이 생기고 나서는 1995년도에 ‘보육교사회’로 이름을 바꾸어요. 민보련(민간보육시설연합회)이라고도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100개였던 것이 1만 개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 보육운동 차원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하는 이유들이 더 많았어요.

보육정책관련해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꾸려졌어요. 처음 ‘지택연’의 주도하에 모임이 진행되었고, 분과를 나누어서 원장들 모임, 교사들 모임으로 나뉘어 평등하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진행되었던 것은 원

장모임이었고, 교사모임의 동력과 의지는 계속 떨어져 성원이 차지 않는 거예요. 원장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으니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저녁 일곱 시까지 아이를 돌본 후에나 모일 수 있으니 모임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사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슬로건이 만들어졌어요. 교사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운동을 전환시킨 거죠. 원장 대 교사로 대립을 하는데, 교사는 모이지도 못해요. 원장들은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보육교사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100군데의 지탁연 교사들이 교사였지만 함께 운영하다보니 다 원장과 비슷한 마인드였거든요. 이런 관계와 입장을 거의 우리가 이해를 못 했던 거 같아요. 지탁연이 보육교사회로 또 나중에 보육노조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육노조가 되면서 계속 참여자 수가 줄어 나가는 거죠. 이 모임들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보육정책 방향이 아이들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아이에게 보호받을 권리를’을 외치면서 노력했던 것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때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사가 훨씬 높았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보육교사의 처우가 높아졌거든요. 지난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깐 그 안에 있는 원장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괜찮죠. 그런 감시활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다 개방적인 운영으로 엄마들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넣었더라고요. 그게 평동어린이집에서 추구한 바였거든요. 정책은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죠. 아동대 교사비율이 2대1, 3대1 정도면 보육하기 좋은 구조로 나아갔어요. 그런 정책들이 악용되지 않게 계속 지켜본다면 정책 자체는 지금 아이들한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의 운동이 전에는 직접 하나의 모델을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원장, 교사, 학부모가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민주적인 운영과정이 되도록 보육 정책이 추진되도록 시민사회가 감시도 하고 제안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군요.

혹시 지금 수원 지역 사회에서 그런 활동이 시민운동 속에서는 펼쳐지고 있나요?

전경숙 ■ 여성회에서 보육 관련 몇 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수원지역의 보육노조에 활동한 분들 중 어린이집에 비리를 폭로하면 해당 시설에서 쫓겨나고 내부고발자로 알려져 다른 곳에도 취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부고발을 하면 처음엔 엄마들이 결집하고 응원하고 함께 항의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원장의 말에 넘어가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원장이 사과하고 잘 해나가겠다고 약속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교사들의 문제는 뒷전인 거예요. 원장이라는 위치가 너무 견고한 성이라서 몇 번 원장들과 싸우다가 낙인찍히고 말아요. 그렇게 내부고발하고 나오면 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회도 인권단체와 보육노조와 함께 해서 인권 문제로 대응했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그 내부고발시설인데도 원장 편을 들어 교사를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 있는 교사로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함께 대응하면서 견고한 벽을 느꼈어요. 공무원들도 위탁한 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문제없는 시설을 만들려고 오히려 원장 편에 동조하는 거죠.

현재까지 30년의 긴 시간에 걸쳐 여러 경험과 고민이 켜켜이 쌓였던 보육과 돌봄 활동을 들어보니, 수원지역 시민운동에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요즘에 시민운동가들한테 제안이나 희망,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전경숙 ■ 기운을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1990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활동가로 남아있는 거 같아요. 활동가의 연령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저의 이십대부터 보던 분들을 지금 오십 대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우리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불안정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이 되려면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와 있는 조직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성장해갈 수 있게 해야 하겠고, 그러려면 기운을 좀 더 내야겠죠. 가치를 유지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또 하나는 활동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돌봄 영역이 특히 그랬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당시의 견고한 인식 때문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엄마를 이상한 시선으로 봤거든요. 저에게도 낯선 말이었던 ‘육아의 사회화’가 지금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활동들이 있어 가능했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그 일에 매진해야 하고,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 시민단체의 실무자 역할을 그만두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려준다면, 그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전경숙 ■ 믿음의 시선으로 관심을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어야겠죠. 우리 선배들이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주체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늘 불안해하잖아요.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원여성회가 2년마다 총회를 통해 대표가 바뀌니까 ‘왜 그렇게 자주 바꾸냐.’는 질문을 받곤 했어요, 하지만 대표는 임기 동안 소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공동대표 2년, 상임대표 2년을 했었는데 거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지도력이 다시 힘을 쏟겠지요. 그래서 한 조직이 지속가능하려면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하고 그 사람이 의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돌봄의 영역 활동을 정리할 때에도 ‘이것은 그 전 세대의 영역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91년도부터 10년 혹은 20년까지는 돌봄을 했던 분들이 주체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의제를 맞닥뜨린 그 세대들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새로운 의제를 놓고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겠죠.

돌봄운동과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전해주세요.

전경숙 ■ 돌봄 운동이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를 좀 더 얘기한다면 활동가들의 운동과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했던 게, <평동시립어린이집>이나 <용기종기>, <울망줄망>이 했던 역할들이 아니었나 해요. 어쨌든 출산하게 나면 운동을 그만두는 여성 활동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돌파구가 되어준 것이 <평동어린이집>이었고 <울망줄망>이었어요. 수원여성회 만의 의지라기보다는 수원지역사회와 활동가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활동을 중단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찾은 것이었고, 지역 활동가들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활동가들을 그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파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쪽 지켜보면서 그때 ‘평동시립어린이집이 없었다면 수원지역에서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기 어려웠을거야.’하고 속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평동어린이집>을 정리하면서 91년부터 2010년까지의 20년 보육운동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보자 했는데 자료는 다 모아 놓고도 못 했어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그때 팔달, 희망 정리하면서 쓰자 하고는 또 못 했어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 30주년 때 활동가들의 역사를 써 보자고 정리하다가 서로 논점이 다르고 기억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정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수원지역 운동을 정리하는 일이 중용하고 가치있는 일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기에 인터뷰에 선뜻 응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할 때도 계셨었나요? CCTV는 수원시에서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됐었는데 어떤 일들이 기억나세요?

전경숙 ■ 그때 엄마들 중에 CCTV로 우리 애들이 24시간 감시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런 감시 체계에 너무나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보육시설에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었잖아요. 그런데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감시기능이 한계가 많은데, CCTV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평동시립어린이집이 CCTV 설치에 반대했다고 찍혀서 이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원시의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전경숙 ■ 시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죠.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계속 축소되어가고 있잖아요. 정부, 시에서 지역단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고 같이 노력하잖아요. 수원지역은 단체들의 연대가 잘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연대도 필요하고 실제로 시에서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께 상생할거라고 생각해요,

수원여성회 보육운동 관련 연표

- 1989.06. 탁아소기금마련을 위한 헌옷 바자회
- 1990.07. 일하는 엄마들의 나눔자리 (소꿉마당, 아이벗놀이방, 수원여성회탁아소준비위원회)
- 1991.05. 옹기종기놀이방 개원 (~1998.2.)
- 1991.10. 수원여성한마당 '엄마에게 일터를, 아이에게 탁아소를'
- 1994.04. 영아탁아소 '올망졸망어린이집' 개원 (~1998.2.)
- 1995.11. 토론회 '방과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 1997.06. 고색동 자녀교육강좌
- 1997.09.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신나는어린이집' 위탁운영 (~1999.1.)
- 1998.05. 시립 '평동어린이집' 개원 (~2015.12.)
- 1999.01. 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업-10개 시설에 10명의 보조교사파견
- 1999.06. 수원여성회 활동가 자녀 대상 '생각하는어린이집' 운영 (~ 2000.8.)
- 2000.04. 화서희망교실 시작
- 2001. 수원시 실업대책반 지원사업 5개 시설 교사 파견사업 실시 (수원초, 안릉초, 매원초, 샘골공부방, 팔달동주민센터)
- 2003.03. 아이키우기좋은수원만들기 보육조례제정시민연대 활동
- 2001. 4개 시설 교사 파견사업 실시 (수원초, 매원초, 송죽동방과후교실, 팔달동방과후교실)
- 2005. 수원여성회 부설 '방과후아동센터' 개설
- 2008.12. '화서희망지역아동센터'로 명칭변경 (~2013.12.)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로 명칭변경 (~2019.12.)

1기 1991-199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지역 환경운동을 본격화하고 시민사회 단체 연대를 활발하게 촉진하게 된 계기. 수원환경운동센터 창립에 기초를 놓음 (1993년)

김충관

귀하가 활동한 시기를 회고하며 수원지역 시민운동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김충관 ■ 시민운동은 '비전 찾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민들의 비전 찾기. 그동안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운동은 찬·반을 떠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자, 공공선을 추가하는 비전을 모색하는 시기였지 않나, 운동이었지 않나 싶어요.

이때도 직접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양상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통해서 였어요. 당연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것에 더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조사, 연구, 정책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죠.

김충관님이 활동했던 '세계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 환경한마당'을 추진하며, 당시 활동을 회고해주시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김충관 ■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으로 시작한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행사는 1992년 6월 7일 아주대광장에서 1천명이 참여해 개최했어요. 주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 였고요. 시민단체들이 함께 행사위원회를 꾸리고 시민단체들이 대거 연대해 개최한 것은 이듬해인 1993년 행사³⁾부터였어요.

또 다른 환경행사로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1994년 4월 22일에 수원YMCA가 주최해 서호 저수지에서 개최했어요. 2회 대회부터는 시민 자전거 대행진으로 시민단체들이 함께 진행했어요.

3) 1993년 6월 12일 오전11시~오후5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세계환경의 날 기념 '93 수원 시민 환경한마당' 행사의 주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함께 가꾸는 푸른 수원'이었다. 참여단체로는 경기기서적, 고등교회환경선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수원지부, 기독교청년협의회(EYC), 수원지역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미술인협의회, 수원사랑민주청년회, 수원여성회, 여성신문수원지사, 화성군농민회,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수원지부, 흥사단수원지부, 수원문화운동연합(15개 단체)등이었다. 행사내용은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대회, 환경사진전, 재활용품전, 아나바다 장터, 환경백일장, 환경도서전, 먹걸이전, 환경놀이마당환경그림전, 환경노래와 환경극 등이었다. (참고, 숲과 나눔재단, 환경 아카이브 플숲에서)

1993년에는 행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해 추진했어요.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했다고 봐야겠죠. 그때는 환경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이 생각이 없었죠. 시도 마찬가지로였고. 환경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듣기는 하지만 실생활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었잖아요.

수원시민 환경 한마당을 통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참가했던 글짓기를 참가했던 노래자랑을 참가했던 뭔가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수원지역에 있는 미술학원들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초·중·고 학교들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림그리기 대회에 3~4천 명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와서 하루 동안 전시한 것도 보고 체험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림 그리기에도 참여하면서,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이제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 한마당이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의 문제 의식과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수원시민 환경한마당을 통해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고 수원에도 전문적인 시민환경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발전적 제안으로 1993년 9월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1994년에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죠. 여기에는 지역 내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70여명과 15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어요.

그때 창립선언문에 '우리가 버린 땅과 하늘, 강과 바람이 울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죽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키고 살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호응, 연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펼쳤던 노력은 어떤 것이었나요?

김충관 ■ 사실 지금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사무국을 구성하고 행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거의 주 1회씩 했고 참여단체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열띤 논의를 했고 수원지역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각 단체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와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사무국을 구성하면 각 단체에서 두 달 동안 사무국에 간사를 파견했고요. 어떤 사람은 총무를 맡고 어떤 사람은 기획을 맡았고요.

그 단체의 일도 하겠지만 30% 정도는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사무국 역할을 맡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했고요.

혹시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충관 ■ 당시에 주체적 조건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운동이 오랫동안 진행된 것도 아닐 때여서, 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현 수원시민운동을 바라보며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김충관 ■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두 번째는 포용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적 포용성. 왜냐하면 자기전문성을 견지하다 보니 그 단체나 그룹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폐쇄성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부담스럽고 힘든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어 나갈 때는 너무 앞서나가지 말고, 약간은 그 사람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해요.

세 번째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제기의 결과에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A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B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게 결론이 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결론이 났을 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수원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멋지다. 더 발전시켜가자', '우려스럽다. 이렇게 대응해가자' 등 의견과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김충관 ■ 지난 10년간 수원지역 사회의 변화는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어요. 특히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나름대로 성숙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참여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의 반영 등 세밀한 추진과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입안, 결정, 그리고 실행, 평가 등에 시민들의 참여는 활발해졌고, 또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담보되기도 했다고 봐요.

그러나 공공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공감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전세계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사적이익이 공적이익에 우선하고, 지속가능성 등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흐름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교육이 학교, 그리고 평생학습 등 모든 영역에서 뿌리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과 제도 등이 공적이익과 지속가능성 실현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요. 또한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계획, 실행, 평가체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박완기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1991~1995년도 당시 활동한 시민운동을 회고하며, 한마디 문장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박완기 ■ 수원에서 시민운동이 새롭게 태동했던 시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예고하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수원여성회가 1988년에 창립했고, 1990년대 초 YMCA 황용원 사무총장과 YWCA 김은희 사무총장님의 취임으로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어요. 1992년에는 수원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에는 수원환경운동센터와 다산인권상담소가 창립했어요. 이 단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부정·부패·관권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원지역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이후 공선협)를 발족해 활동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수원지역 시민단체 연대체가 발족했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공선협은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부정부패 반대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맞는 수원시의 과제들을 제안해 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2000년대 총선연대 활동 이전까지 공선협 활동 사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로 추진된 환경한마당, 통일한마당을 매년 개최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1995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의 심재덕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시작하며, 이전 임명직 시장 시기 관변단체들을 동원하던 거와 다르게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시정을 운영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1기 1991-1995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및 자료집

1992년 지방자치의원선거를 평가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앞둔 수원 지역의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보고서 발간 (1993, 수원경실련)

박완기

3기 2001-2005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대응 시민운동

수원시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위주의적 행정집행에서 시민사회와의 공론화과정을 요구하며 서명 및 캠페인 활동 추진. 한편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활동도 제시됨. (2001년)

류명화

2011년 수원 시민협이 창립하며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수원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곤 했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회의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많이 만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박완기 ■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도 수원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이 제기되며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과 가격 인상에 동조하던 단체들이 소원해졌고, 심재덕 시장의 구속 이후 김용서 시장이 당선되며 시민단체 간 연대의 에너지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원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도 위축되었어요.

류명화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쌓아온 선거개혁 등 정치 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 등의 거대담론을 다루던 연대운동이 침체 되자, 각 단체 고유의 활동 의제들이 드러나고 시민들의 조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1990년대 시민운동을 통해 축적된 힘이 각 주제별 시민운동을 성장시키며 단체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도 통일운동을 생각해보면 국가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개최하며 개성과 금강산 방문행사를 할 때, 여성회 자체로 통일 소모임을 꾸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수원 이렇게 바꾸자’란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박완기 ■ 지방선거를 맞아 수원시정 관련 책을 내자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평가, 의원 설문조사, 조금씩 다루어 본 정책제안을 취합해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995년 1월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했고 분야별 내부 토론을 열심히 했어요.

강현구 교수님이 이 일에 중심을 잡아주셨고, 완성된 자료집을 토대로 1995년 6월에 ‘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선협이 토론회를 주최해 시민사회 모두의 큰 관심을 받았고, 실제 많은 방청객이 참여했어요. 관선 수원시장으로 재임했다가 출마한 이호선 후보가 이 토론회에서 밀렸는데, 실제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에는 경실련, 경기일보, 경기방송이 공동주관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선거 토론회는 선거법이 바뀌며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면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학에서는 수원지역과 같은 지방의 쟁점에 대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서너 달 집중적으로 토론해 도출된 정책제안서를 요약한 후,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을 모아 시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며 시장 평가토론회도 가끔 했어요. 의회 방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21세기 수원시정 개혁 청사진으로 ‘우리 수원 이렇게 바꾸자’ 책자발간 이후 나온 정책 자료집으로는 (사)녹색환경연구소에서 출간된 자료집이 한 번 나왔어요. 이 책

자에는 시민사회가 시장후보자들이나 시장에게 수원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을 그려내고 변화시켜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 뒤로 시민운동이 결집하여 지역사회 비전을 그려내는 힘이 약화하지 않았나 싶어요.

1990년대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시민운동이 경쟁력이 있었고 전문가들 역시 헌신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었다고 생각해요. 1995년 지방자치 이전에는 수원시장은 관선으로 임명직이어 자기 비전을 가질 수 없었고, 언론 역시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었을 때였어요. 수원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대안을 내올 수 있었던 곳이 시민단체들로 압도적이었어요.

경인일보 노영란 기자 같은 경우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경실련 주변에서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취재거리를 획득하였고, 김경호, 최종식, 유재명 등의 기자들은 시민사회와 상의하면서 좋은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했어요. 지금은 언론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 언론사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책자발간을 통해 수원지역 시민사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박완기 ■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원지역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싶었어요. 2011년 수원시 목표인구를 150만 명으로 수립하려고 할 때, ‘죽어도 이권 아니다.’라고 해, 결국 130만 명으로 줄이도록 영향을 끼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준비해 발표하고 출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시 편찬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박완기 ■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편찬하기는 어려웠어요. 전문가와 경실련 임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요. 초안을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가졌어요. 교통 분야, 도시계획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었고, 한 분야당 15~30여명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고 그 토론 결과를 모았어요. 그 당시는 경실련의 집행위원회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시민환경감사단원들은 경실련 사무실에 두세 번씩 오기도 했고요. 의회 방청도 하고 시민상담실에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열성적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상담에 응해주었어요. 회원들의 참여가 대단했어요.

수원 공선협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은? 시민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박완기 ■ 그때는 토론회, 성명서 무엇을 해도 처음이었던 시절이라 신선했고 언론의 관심을 받았어요. 수원지역 시민운동의 기초를 다지던 그 시기에 시민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도 나이가 비슷해 서로 잘 어울리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체

가 가진 역량을 묶어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활동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분께 공동질문을 드려요. 시민활동가들이 불링도 치고 밥도 같이 먹었던 시민운동 초기의 에너지가 오늘에는 약화되었고 회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활동가들이 줄어들고 있거나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들이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대안의 방안은 없을까요?

박완기 ■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이 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봐요. 전문성 부족 등 각 단체들의 어려움을 연대의 힘으로 뚫고 나갔는데, 지금도 똑같은 형태와 방법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시대는 바뀌었고 다른 분야의 실력은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그대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큰 틀이 바뀌고 있어, 시민운동의 형태와 방식도 확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류명화 ■ 시민단체 회원들이 줄어들고 활동가가 없으며 시민운동이 간헐적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심의 소통을 하다 보니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 다양성을 축적하지 못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시민사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여전히 좁지 않은가 싶어요. 세상이 변하는 것,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줄어드는 것도 그러한 흐름에서 아닐까 싶어요. 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는 시민운동을 통해 변화를 조성해 왔지만, 밖의 세상도 함께 변해왔어요. 1990년대 시민운동의 결과로 억울함을 경험한 시민 누구라도 행정의 문을 뚫고 들어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꼭 시민운동의 성과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회 변화에 따른 요인도 많다고 봅니다

박완기 ■ 시민운동 활동가의 재생산 구조가 바뀌었어요. 학생운동의 경험을 갖고 시민운동에 참여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새로운 활동가를 어떻게 충원할지 고민이 될 거예요. 영역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실련 얘기를 하면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민운동이 시민단체들 내에 갇혀 있지 않나 싶어요. 염태영 수원시장이 3선을 한 것이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어요. 시민운동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사회적 역할은 커져 있지만, 그것은 지역 시민운동이 함께 확장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류명화 ■ 이제 당사자 운동이라 할 부문별, 특히 마을 만들기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영역 자체는 좁아졌지만 깊게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펼쳤던 시민운동이 마무리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있어요. 수원지역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모으고 변화를 몰고 왔던 지점에 미비한 부분을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 해결해나가고 있어요. 영통 소각장 문제를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섰어요. 시민운동

을 단체와 회원으로 생각해 좁아졌다고 하지만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영역을 벗어나 명망가인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환원되지 않고 개인의 활동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시민사회 영역이 고립되고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활동과 정치의 영역이 순환되면 좋겠어요.

박완기 ■ 시민운동 활동가가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될 때, 당시 시민운동 판으로는 ‘정권에 들어가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어요.

류명화 ■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이 한창이던 2014~15년에, 마을만들기 활동 우수지역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동네별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이 부착된 동네가 1등을 했어요.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동네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준 다 했지만, 동네 간 치열한 전쟁의 장을 만들었어요.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겠다며 시민단체 활동에서 중간지원조직 등 타 영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용인하고 경쟁을 부추겨도 괜찮은 건가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시민들의 힘으로 마을을 바꿔보자고 시도한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수원 지속협에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니 문제 제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했어요. 수원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 많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이 어려워요. 관료들이 요구하는 형식만 맞춰주고 부작용이 많이 드러났어요. 수원시의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이름인 ‘마을 르네상스’는 시민들이 부르기 어려워요. 오히려 ‘따복’은 시민들이 따라 부르기 쉬웠어요. 마을 르네상스의 이름을 짓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도했던 것도 시민단체 출신들이에요.

박완기 ■ 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수원지역 시민사회의 여러 보이지 않는 역량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수원시장이나 시의원들의 활동에 있어 수원의 전반적인 실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높아졌다고 평가하고요. 시민운동은 느슨한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크지 않아요. 수원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한 단계 전진했는데, 시민단체로 보면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1~2005년 시기, 수원 시민운동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운동’ 이었는데, 이후 당선된 김용서 수원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가 좋은 않았던 시기였어요.

이 시대에 시민운동을 하며 활동했던 류명화 님의 소회를 한 마디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해주세요.

류명화 ■ 여성운동을 해온 저로서는 ‘짚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면 제기를 해야 했고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시기였어요. 그동안 묻혀 있었던 사소한 문제들이 발견되면 ‘이거 부당해요’라고 말하고, 특히 여성과 관련해 부당함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당시 수원여성회 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에 여성회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나요?

류명화 ■ 경실련에서 연대 활동을 제안해 시작했어요. 그 당시 노건형 경실련 사무국장 과 신뢰가 쌓여있던 것이 바탕이 되었죠. 수원시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117% 올렸어요. 여성회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어요. 환경보호를 위해 그 정도 가격 인상을 감수하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게 맞는지? 여성회의 회원 들의 경우 쓰레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고 있어 흥미롭게 토론을 했던 거 같아요.

이 운동에서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심재덕 시장과 친하나 좀 떨어져 있느냐의 여부로 나뉘어져 있기도 했어요. 이것이 시민단체들간 관계에 불편함을 주었어요.

이 운동에 대해 수원경실련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관련해 소개해 줄 이야기 해주세요.

박완기 ■ 노건형 활동가에게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을 넘겨주고 경기경실련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경실련 사무국으로 올라갔어요. 수원시가 117%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렸으며, 그 부당함을 고발하는 한 수원시민의 이야기가 KBS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어요. 이 방송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처음에는 시민사회가 외면하고 있었어요. 중부일보에 있던 김경호 기자가 취재하면서 고발 시민, 수원경실련 활동가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이 쟁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살펴보니 시민들의 종량제 배출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면 처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시민들의 동의과정이 없이 117%를 높게 인상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니냐는 의견으로 갈렸어요.

수원시가 쓰레기처리비용 원가를 계산하며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비용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어 수원시 추산 근거가 깨졌어요. 경실련은 1년간 매주 거리와 아파트를 방문하며 부당함과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받았어요. 이를 김용서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해 의회가 움직였어요. 또 하나는 이 건과 별개로 심재덕 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운동이 벌어지던 상황에 구속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는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전개로 수원 시민단체들 간에 끈끈러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시민사회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류명화 ■ 여성회도 그렇고 일반 시민으로 'KBS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 출연했던 김미정씨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일반 시민이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좋았어요. 시민사회가 이슈를 먼저 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민이 움직이고 시민단체들이 보완해주는 형태였어요. 여성회 회원들의 경우 자기 문제로 다가왔어요.

수원시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정책 방향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영동시장 등 시장 상인들은 '줄이려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라. 아예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에게 설명도 없이 인상하느냐며 시 정책 결정을 비판했어요.

박완기 ■ 심재덕 시장도 이 결정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 같아요. 그러나 원가계산 산정이 잘못 집행되었다며 환경부가 수원시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117% 인상은 그의 구속수감과정에서 수원시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하게 되었어요. 이 건은 2002년 시장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고요. 심재덕 시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조정하는 과정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달성하려던 쓰레기 감축목표는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선거 결과로 시민 사회의 소원함도 치유되지 못했어요.

박완기님은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창립 과정에 참여하셨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박완기 ■ 1996~1997년 여러 지역에 ‘지방의제’를 조직하기 위해 녹색연합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논의를 시작했어요. 수원에서도 순천, 청주지역의 활동사례를 듣고 학습하거나 수원환경운동센터, YWCA, YMCA 등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며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을 제가 맡았어요. 창립과정에서 상임대표를 이화수 아주대 교수가 맡았고 사무국장을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님이 맡았죠. 각 단체 사무실에 상근자를 배치하고 경제부문은 경실련, 환경부문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여성부문은 YWCA에서 관련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는 분과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했어요. 수원시에서도 적극 이 과정을 지원해 1997년 4월 22일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정,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합의한 수원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희망의제 21>을 채택하고, 각 영역에서 이행하는 활동을 했어요. 시민사회는 이행 활동에 대해 성과와 대안 제시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어요.

1999~2000년 수원희망의제21 추진활동은 심재덕 시장의 관심이 높아 환경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순천, 청주, 수원이 대표적으로 지방희망의제21 활동이 왕성하게 추진되었는데, 수원이 좋은 사례를 많이 남겼어요. 이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단위와 전국 단위로 지방희망의제21을 확장해갔어요. 수원에서 지방희망의제21의 모범을 보인 것은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잘 나누어 활동한 측면과, 제2기 심재덕 시장의 높은 관심으로 행정에서의 지원 역할이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재선된 심재덕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이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던 것과 거의 비슷했고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에서 개최하던 환경교육에 참여하게 했고, 공무원과 시민단체간 정보 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는 시민사회들과 함께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박완기 ■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을 바꾸어보려는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류명화 ■ 바램은 행정과 시민사회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이나 시민단체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있는데, 이를 비빔밥처럼 어울리도록 돕고 정보를 소통하며 새로운 맛을 내도록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했어요.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써 분과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시민단체 각자의 틀과 시각에서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활동들을 공유하고 발전시켜가는 점들이 좋았어요. 지속적으로 다양한 단체나 시민들이 만나 교류하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민선8기에 들어서는 재정구조도 악화되어 활동이 많이 축소되는 거 같아 아쉬워요.

박완기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와 명칭을 변경한 현 수원 지속협에 대해 드는 근본적인 의문은, 환경의 가치로 한정하거나 좁은 범위의 환경정책과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민선5기 수원 시정운영에서 좋은시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 구조에서 걷어내 전 수원시정을 포괄하는 거버넌스기구로 만들었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수원지역에 맞게 재구성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해요.

류명화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원리가 시장(행정)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원하거나 하려는 것을 추진하는 거지요.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 즉 민의 요구와 활동의 결정 권한이 높아지도록 이 기구의 재구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2021.08.23 15:20 수원경실련 | 이상명 진행, 이상명·김성연 기록

1기 1991-1995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인단 활동

가정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씨에 대한 구명을 위해 지지서명 및 법률구조활동, 여성시민사회운동으로 가정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지역에서 연대하여 이루어내는 계기를 마련함 (1994년)

최미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명칭을 함께 사용)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미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여성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여성법률상담소’로 창립한 법률구조기관이고요, 저와는 1985년 법률임상실습 강의를 수강하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호정 박사(치과원장, 국회의원)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본부를 방문하고, 초대 소장인 이태영 박사와 면담도 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학습과정을 통해서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역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본부의 지부담당 부소장의 제안을 받았어요. 수원지부 준비팀(사회발전협의회)과의 협의 하에 본부 파견 상담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지요.

1990-2020년까지 30년을 5년 단위로 나누었을 때 제1기(1991~1995년)를 회고하며, 귀하가 참여한 수원지역에서 펼쳐진 시민운동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면?

최미정 ■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성평등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대 활동을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1월 폭력 남편 살해로 이순심씨가 구속되자 구명을 위한 방청단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추진되었고, 단체들간 연대는 활발하게 추진했는지요?

최미정 ■ 수원가정법률상담소의 자문위원이자 후원회원이었던 김칠준 변호사가 이순심씨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지역 방청단 구성의 계기가 되었어요.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인단’(이하 ‘방청단’으로 사용)에는 수원과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수원가정법률상담소와 수원여성회, 수원YWCA, 내일신문 수원지역사업부 여성모임, 내일신문 안양지부 주부모임, 사회발전협의회 주부대학 총동창회, 수원농협 주부대학 총동문회, 수원여성의전화(준), 수원카톨릭여성연합회, 안양 경실련, 안양YWCA, 안양 정책개발연구소, 여성신문 수원지사 주부모임, 이순심씨의 이웃들(이상 15개 지역단체)과 서울 여성의 전화, 인천 여성의 전화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94년 2월에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방청단 준비를 위한 소모임을 가졌고요. 방청단에 참여할 단체(모임)의 대표와 활동가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실행위원장은

김경희 수원여성의전화 준비위원장이, 사무국은 수원가정법률상담소가 맡았고 저는 부실행위위원장으로 방청단 실행위원회의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역할로 참여했어요. 김은희, 김정만, 이은주, 심정혜 등 실행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청단은 3월 21일 결성식을 갖고 출범했어요.

방청단은 재판 방청과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순심씨 지지와 지원을 위한 면회활동을 순차로 진행했고요, 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이순심씨 구명’을 위한 가두서명을 받았어요. 시민의 방청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청단을 공개 모집도 했고요, 재판부에 이순심씨 무죄 석방을 위한 서명(총16000여명)을 받아서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어요.

수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총6회) 평균 100여명의 방청인이 참여했고요. 200명 이상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⁴⁾ 방청단으로 참여한 여성시민단체 특히 수원지역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했고요, 사건을 초기에 접수한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홍보와 방청기록 등 역할을 맡고, 남충지 활동가가 회의와 재판과정에 늘 함께했어요. 96년 7월에 개최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토론회’에는 이순심씨가 직접 참여해서 방청단으로 참여한 여성들과 인사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이순심씨 사건의 개요와 방청단이 주장했던 요구사항은?

최미정 ■ 1994년 1월 16일에 발생한 이순심씨(당시 안양시 신촌동 거주) 사건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23년) 남편에게 주먹과 발, 작대기 등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가정폭력 피해자 이순심씨가 가해자 남편을 부엌칼로 살해한 후 자수한 사건이에요.

1심에서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라는 논고로 살인 결과와 가족범죄의 패륜성에 초점을 맞추어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김칠준 변호사와 방청단은 이순심씨의 사건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이순심씨가 남편의 구타로 인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일상적인 위험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녀를 구해줄 제도나 사회적 개입이 불가하고 부재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김광일 박사의 증언에 근거해서 이순심씨는 오랜 구타와 억압상황으로 폭력에서 탈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심리상태였고, ‘매 맞는 아내’의 특성상 사건 당시 일시적인 급성해리장애 등으로 일시적인 책임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입니다.⁵⁾

4) 여성인권운동아카이브 참조

(http://www.hrarchive.or.kr/theme/basic/list.php?search_content=&make_where=&make_start_date=&make_end_date=&category=&shape=&detail_url=board_list&no=16098&page=326&develop_mode=)

5) 94고합130이순심변론요지서 참조.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심씨는 남편을 18세에 벽돌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났음,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월급을 전혀 집에 가져오지 않았고, 도박과 음주가 일상이었음. 남편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없이 이순심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음, 살림을 마구

법원은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순심씨의 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1심에서 징역 4년(94년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95년1월)을 선고했어요.

현재까지 법원은 상습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한계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남편의 폭력에 대항해서 ‘즉각적인 반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침해의 ‘현재성, 급박성’은 침해 위협의 지속성, 상존성으로 확대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방어의 ‘적절한 범위와 방법, 필요성 등’을 판단할 때에도 ‘매 맞는 여성의 특성을 감안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⁶⁾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방어 살인’을 한 경우, 그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묵인·방조하고, 관습으로 조장해 온 가정폭력범죄의 책임을 또다시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가정폭력근절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판결이든 입법이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 시민운동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느꼈고, 아울러 현재에 주는 교훈을 회고해주세요.

최미정 ■ 이순심씨 방청단 활동은 생생한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지역에 알렸고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여성인권의제에 대한 여성시민사회 연대의 소중한 성과로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대응해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성문제 전반을 드러내고, 정책 쟁점화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여성조직(구심점)이 없던 상황에서 방청단 활동은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출발선이 되었어요. 96년 7월에 개최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기여성 토론회’에는 30개 여성단체(여협 소속 14개 회원단체, YWCA 5개지역단체, 가정법률상담소 3개 지역단체, 내일신문 2개지역 여성문화센터, 수원·안양 여성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경기연합회, 수원교구 카톨릭 여성연합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전문직여성클럽)가 함께 했고요 ‘370만 경기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하여 가정폭력 근절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수는 건 예사였고 방안에 석유를 부리는 등 난동을 부린 적도 있음. 만삭에도 3일이 멀다하고 구타를 당했고 남편의 몽둥질로 이마가 찢긴 적도 있고, 깨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얼굴을 긁어서 흉터를 남김. 남편의 귀가하는 발소리에도 심장이 뒹 정도로 공포스러웠지만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서 경찰 신고는커녕 말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함. 남편의 폭행을 이웃이 개입하여 말려준 적도 있으나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으나 아이들을 자신과 같은 고아로 만들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 이순심씨는 결혼생활 내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남편대신 가족을 부양함. 사건 당일(94.1.16.) 상황은 4일 전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이유없이 폭행하고(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 집안 물건을 마구 부수던 남편이 16일 새벽 다시 만취해서 귀가를 했고, 망치로 텔레비전과 문갑 등을 부수고, 만아들로 하여금 부수 물건을 치우도록 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술주정을 부렸음. 그간의 증오심과 분노가 폭발한 이순심씨는 정신없이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살해함.

⁶⁾ 한인섭(1996),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의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법학 제37권 2호 참조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어요.7)

토론회에 참가했던 여성단체 중에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연대’의 결의를 이어갈 독자적인 여성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 단체를 중심으로, 97년 2월에 ‘경기여성연대’8)가 출범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방청단 활동은 ‘경기여성네트워크’9)의 조직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방청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서울과 지역, 지역 단체 간 역할분담의 경계로 인한 갈등이었고요, 아쉬운 점은 여성시민의 참여형 운동으로 보다 확장하지 못한 것과, 이 활동이 지역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성찰적 평가작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활동을 회고하는 이번 인터뷰는 활동자료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앞으로 여성운동 나아가 시민운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는 생활의제 속에서 구조적 (젠더)불평등의 지형을 파악해 내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운동경험의 축적과 연속성을 위하여 활동, 특히 ‘사회적인 세력화’를 만드는 연대 활동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지면 좋겠어요.

현재의 수원지역 시민운동을 바라보며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최미정 ■ 오래된 젠더각본의 해체는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어서 어렵습니다. ‘즐겁게’ 활동할 수 있어야 소진되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고요, 자치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보이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과 운동방식에도 좀 더 용기를 내주면 좋겠어요.

2021.09.02. 09.06 전화와 서면 인터뷰 | 이상명 진행·기록

7) 가정폭력방지를위한경기여성연대 발족기념 토론회(1996.7.2.) 자료집 참조. 본 연대는 ‘경기여성연대 창립’ 직전까지 활동한 한시적 조직이었으나 경기지역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폭력관련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전개함.

8) 경기여성연대는 여성의 인권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창립함. 최근 전국 최초의 ‘경기도기초여성지원조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했고, 경기도내 시·군 여성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 중임. 국회는 올해(2021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선별지급 관련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만11세에서 18세의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면 누구나 생리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제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아쉬움은 있으나 그동안 극히 ‘사적이고 부끄러운 여성문제’로 여겨진 월경을 ‘공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여성법제사에 유의미함.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데 경기여성연대와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함.

9)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창립 순)의 연대체로 2007년 여성단체 활동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연대사업을 진행함.

참고자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이순심(43, 94년 1월), 이상희 할머니(73세) 구명운동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지역여성단체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96년 5월 15일 10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수)를 구성,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1998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시급한 것은 '가정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삭제하고,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이 '경미한 범죄'라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원칙의 확립과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처벌법이 다루는 '가정폭력범죄'를 다양화하고, '가정구성원' 범위의 확대를 요구한다. '가정폭력'이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친밀성'을 토대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거의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의 구심이 있으며, 지금까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1기 1991-1995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

1995년 12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원천을 복개해 차도로 만들려는 정치인들과 수원시에 의해 30%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던 중, 하천 생태계 및 화성 역사문화공간을 보전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으로 수원천 복개가 철회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보존하는 활동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후 단체와 시민들은 하천유역네트워크를 구성해 4대 하천 보전활동을 펼쳐오고 있음

박천우

박천우 님께서는 장안대에서 33년간 한국사를 가르치고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1990년대 초에 <수원시민광장>을 창립하고 그 대표로도 활동하셨는데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우 ■ 시민단체가 행정이나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자립할 수 있을 때, 정치가나 행정,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광장은 회원들이 돈을 내서 사무실을 얻었고, 실무자 인건비를

제공하며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시민단체의 시정과 정치가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질거라 생각하며, 수원지역사회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오세범, 최미정, 김철준, 권영택, 전영찬, 배경록, 김정석, 김동균, 이기우, 김상희, 김형인, 황군자, 김상용, 배봉균 등이 함께 했어요.

투명한 아파트관리비 운동도 수원시민광장의 주요 시민운동이었어요. 제가 구운동의 삼환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1995년 1월 관리비 고지서에 평소 15만원(32평 기준)이면 충분하던 관리비가 25만 원으로 고지되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난방비 포함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주민 8백여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고 투명한 관리비 부과와 책임 있는 관리를 강제하기 위해, 새로 뽑힌 주민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나를 추대했어요. 또 주민비례로 1개동에 1~2명씩 선출되는 동대표에 아파트 관련 전문가들이 나섰고, 보일러 전문가, 회계전문가, 설계사, 주택공사 직원 등으로 동대표가 구성됐어요. 부정과 비리는 발붙일 곳이 없었지요. 아파트 관리 규약도 민주적으로 개정했고, 주민대표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만 뽑도록 했어요. ‘주민소환제’도 새로 도입했구요.

관리사무소도 ‘열린 문화교실’로 탈바꿈했어요. 낮에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법률·건강·취미·교양강좌의 교실이 되고, 밤에는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었지요. 주민불편신고센터 구실을 할 ‘민원상담실’도 생겨, 방송과 신문, 전국에서 삼환아파트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었어요.

그리고 참여연대의 도움으로 다산상담소 주관으로 1995년에 제1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해, 수원지역 아파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민주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법률적으로 다루었어요. 아파트 내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들이 바꾸어 가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나는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삼환아파트에서 1년에 걷히는 관리비가 보통 2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5억 8천만 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면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시의원,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제대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천우님은 1990년대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을 정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를 회고해주세요.

박천우 ■ 1995년 12월 6일,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활동도 수원시민광장의 주요한 활동주제였어요. 제가 본부장을 맡았고 염태영 수원 시장이 당시 사무국장으로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지요. 16개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했어요. 공동대표들은 장화를 신고 수원천 복개 구간을 걸으며 수원천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을 다지기도 했어요.

당시 남수문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대단했어요. 팔달문 근처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하며,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수원천 복개는 부당하며 꼭 화성의 일원인 남수문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팔달문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복개를 통해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필사적인 활동을 했지만, 수원천을 복개로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도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논쟁은 몇 년간 수원지역에서 뜨거웠어요.

심재덕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수원천의 자연하천으로의 복원 결정과 추진 과정은 김용서 시장을 거쳐 염태영 시장으로 이어져 계속 추진되었어요. 수원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화성과 팔달산이 있어 수원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에서 산다는 자긍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아졌고, 전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문화도시로서의 수원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¹⁰⁾에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시민들에게 알렸나요?

박천우 ■ 1995년 12월에 작성해 시민들에게 배포한 리플렛, 〈개혁과 효의 상징 화성(사적3호)은 수원시민의 뿌리요, 세계적인 자랑입니다〉를 통해 본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10) 참여단체로는 경기사학회,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녹색회, 수원경실련, 수원문화원, 수원미술인협의회, 수원민예총, 수원시민광장,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여성회,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정조 사상연구회, 흥사단 수원지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수원연합이 참여하였다.

- 떠들썩한 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 한편에서는 문화유산 훼손! 수원시장은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 수원천 복개는 문화파괴, 환경파괴, 생존권 파괴
- 수원천 복개가 아닌 복원으로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높여야.
- 200년 역사를 가진 영동시장 상권을 특성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 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의 한계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천우 ■ 화성의 성벽을 바라보면 치와 포루, 각루, 암문들 하나하나 모양이 다르고 구조가 다른데, 그 예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해요.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과학에 근거한 축성 설계도에도 고개가 숙연해져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수원시민들은 정조가 창조한 도시를 수원시 내 지역인 화성행궁과 화성성곽으로만 한정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건릉과 용주사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수원과 화성, 오산시는 한 행정구역이 되어야,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원의 미래와 관련하여 바람이 있다면?

박천우 ■ 전에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박상욱 오산시장이 세마대에 모여 세 도시가 상생협약을 통해 발전해가자고 할 때, 모두 함께하자 약속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틀어져 저는 실망했어요. 세 도시가 같이 협력해 가야, 시민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수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해요.

염태영 시장의 재임 기간에 일월저수지에 수목원을 만든 것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수원의 명소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게 한마디 전해준다면?

박천우 ■ 바람직한 시민운동이란 시민의 세금(지방세와 국세)을 걷고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인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세금을 똑바로 쓰도록 올바른 정치가를 발굴해 투표로 잘 뽑아야 하고, 잘 쓰도록 감시하고 참여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이나 기업에 의존되는 시민운동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항상 기울여야 합니다.

2021.09.07 11:00 권선동 파리바게트 | 이상명 진행, 김성연 기록

참고자료

일지로 본 수원천 복개 및 복원과정

- 1794년 화성축성 당시 수원천을 준설한 뒤 북수문인 칠간수인 화홍문을, 남쪽에는 구간수인 남수문을 축조(수원천은 화성의 중심을 흐르는 화성의 일부)
- 1922년 대홍수로 화홍문과 남수문이 유실됨. 안타깝게 여긴 수원 유지들이 1932년 수원명소보존회를 결성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화홍문을 복원했으나 남수문은 이때 복원되지 못함.
- 한국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수원천 주변에 거주하며 흘러보낸 생활오수로 수원천이 오염되고 1972년 북수동~매교동 구간 수원천복개 계획 수립, 이후 복개를 염두에 둔 옹벽공사 추진
- 1988년 4월 27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천 복개가 선거 공약이 되면서 재점화되었고, 문화재관리국의 남수문터 유적구간 공사제외(480m) 요청을 수용해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건설부가 승인해 1991년 1단계 복개공사 시작. 이유는 수원천을 복개해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와 악취가 진행했던 환경오염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음.
- 수원천 복개공사가 진행되자 수원문화원의 심재덕 문화원장은 수원문화원소식지 '수원사랑'을 통해 수원천 복개의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
- 1992년 12월에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수원천 복개와 팔달산터널을 선거공약에 넣어 당선되자, 문화재관리국이 반대해 누락된 480m구간에 대한 복개를 재추진.
- 1994년 8월 23일 문화재 관리국은 복개중지와 원형 정비를 요청. 이런 과정에서도 수원천 1단계 복개공사는 1994년 7월 말 공사가 완공되었고, 경기도는 1994년 10월 12일 수원천 복개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
- 수원천 복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져 1995년 12월 15개의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 1995년 민선1기 6.27 지자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심재덕 문화원장이 수원시장으로 당선. 심재덕 시장은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추진한 팔달산 터널과 수원천 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
- 1996년 3월 14일 수원시의회 시정 질의로 수원천 2단계 복개구간 공사계획 질의
- 1996년 5월 15일 수원천변 도로개설 공사 기본설계용역 통해 수원천 복개중단에 따른 10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 1996년 5월 21일 심재덕 시장이 수원시의회 150회 임시회에서 수원천 복개중단 발표하자, 수원천 주변 상인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 수원시의회의 반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자연하천으로의 복원, 천변상가 이전, 남수교 건설 등의 추진이 지지부진.
- 1998년 6월 4일 민선2기 선거에서 수원천 복개중단을 공약한 심재덕 시장이 무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되며, 수원천 복개의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됨.
- 수원천 2단계 복원공사는 1999년부터 본격 추진돼 2004년 천변도로 개설이 마무리되고 자연하천 복원사업은 확대 추진됨.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추진한 화성성역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
- 수원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수원시는 2006년 12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 수원천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2009년 7월 수원천 복원공사를 착공해 2012년 6월 9일 수원천 남수문 복원기념 한마당축제를 끝으로 40여 년간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원천은 자연하천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옴. (100억 원을 들여 복개하고, 670억 원을 들여 복원함.)

※ 수원일보에 기고한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의 <수원 현미경> 자료를 발췌해 구성

1기 1991-1995

해방50주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한마당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학생, 청년단체 중심으로 펼쳐온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을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온 계기(95년), 매년 시민통일교육과 캠페인, 통일한마당 행사를 추진 중

고정호

1991~1995의 시기에, 혹은 수원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전 과정에서, 고정호 님이 즐겨 사용하고 운동의 목표로 삼았던 구호나 문장을 소개해 주세요.

고정호 ■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작성해 쓰던 이 표어를 지금도 좋아해요.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 걸음’

1991~1995년 시기에 수원에서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고정호 님이 추진했던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말씀해주세요.

고정호 ■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나를 자주·민주·통일운동에 참여하게 이끌었어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2년 정도 수원 민청련의 실무자를 거쳐, 수원사랑민주청년회 회원으로 활동을 이어 나갔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열사들이 많이 돌아가셨던 때였고, 범민족대회 개최 및 문익환 목사님의 사망(1994년 1월) 등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거세게 펼쳐졌던 시기였지요.

나는 1992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수원연합이 참여한 경기남부지역 통일선봉대의 대장으로 안성, 안산, 수원, 안양 등을 돌며, 남북평화통일운동의 정세와 희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쳤어요. 1994년에는 수원사랑민주청년회가 포함된 한청협 차원의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목포와 부산에서 서울로 2개 조의 행진대열을 구성해 통일운동의 의지를 모으고 행진하는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행사를 펼쳤어요.

당시 통일행사는 정부나 사회적으로 불온하게 여겨, 학생과 일부 청년단체 회원, 진보적인 지식인과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을 앞둔 7~8월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요관심 사항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내용들이었고, 다양한 시민들과 토론하고 합의해가는 과정보다는 결정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1994년 여름 통일선봉대 활동과 범민족대회를 마치고 나서는 내게 통일운동에 많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7~8월 한시적 활동을 넘어 365일 시민들의 삶의 일상에서 펼칠 수 있는 통일운동으로, 일부 지식인층의 전유물이거나 자족적인 잔치로서의 행사가 아닌 공개적이며 대중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좌에서 우까지 이념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서 누구라도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수원지역 통일운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고정호 ■ 저는 1995년 8.15 수원시민통일한마당 행사를 준비하는 수원연합 자주통일위원장으로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른 수원지역의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방향과 내용을 담으려고 했어요. 수원연합 등 통일운동을 꾸준히 펼쳐 온 단체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찾아가 요청을 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통일운동에 상반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단체들을 방문해 참여를 요청하니, 깜짝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러한 내 행동은 통일운동을 주도해왔던 기존 단체들과 내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통일운동이 활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으로 깔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당시 통일운동을 펼칠 때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호응(지지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 펼친 노력을 소개해주세요.

고정호 ■ 1995년 이후 ‘수원시민통일한마당’ 행사는 매년 개최되어 시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들이 생각하고 일상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해왔어요. 1998년 이후 김대중 정부는 ‘햇빛정책’을 추진해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높여갔어요. 이러한 평화의 정세와 바람은 수원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펼치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 해주었지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판문점에서의 만남과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펼쳐지며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나갔고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일상화되었어요. 수원지역에서도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시민들이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에 나섰어요.

현 수원지역 시민운동을 바라보며 단체나 활동가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고정호 ■ 최근 남과 북의 정세가 경색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교류협력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사안별로 판단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 생각해요. 우리는 북한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태도로 북한을 알려고 노력하고 교류를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요.

현재 통일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 전반에 청년 등 젊은 세대의 참여가 떨어져 걱정이예요. 1980~1990년대에는 통일운동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속에서, 오히려 시민

운동 진영의 통일운동에서 목표가 희미해졌다고 생각해요. 이를 극복하려면 통일운동의 전문성을 높여야 해요. 현재 AI 시대로 급속히 변해가고 정보공개가 되는 시대에 통일운동은 뒤떨어져 있어요.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 생각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통일운동은 혼자 혹은 일부 사람들만 해서는, 안되는 운동이지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고 그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수렴해 펼쳐는 통일운동이 되기를 희망해요.

2021.08.09 17:00 경기에너지협동조합 | 이상명 진행·기록

2기 1996-2000

21세기수원만들기
협의회 활동
유문종

좋은마을만들기
운동
고경아

수원
인권영화제
송원찬

4기 2006-2010

수원참여예산연대
결성
허윤범

2기 1991-1995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활동

지속가능발전(SD)의 가치를 구현, 확산하기 위해 행정·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제를 선정하고 민관협력으로 실천해온 활동.

이 기구는 1997년 4월 22일 창립한 후 2007년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또 201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한국과 수원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유문중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표기)에 활동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주세요.

유문중 ■ 1998년 1월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우연히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의 염태영 사무국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안부와 진로 등을 묻고 나누는 과정에서 협의회 활동을 소개해주며 사무국장을 맡아볼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받았고 마음이 끌렸어요.

이 시기는 한국사회가 자주·민주·통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의 선봉에 서왔던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가 참여한 청년단체들과 함께 해산을 결의하고, 대중들과 함께 포용과 협력, 대안적인 사회 비전을 모색하며 합법적인 사회운동으로 전환하던 때였어요. 저도 이때 지난 활동에 대한 성찰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였어요. 3개월에 걸친 수습 기간을 마치고 1999년 4월 정기총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유문중 님이 함께하신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의 활동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유문중 ■ ‘민관협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필요할 때 하다 필요 없으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이 정보나 인력, 예산을 가지고 있어 주도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만으로 수원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어요. 시민사회나 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을 하도록 행정이 장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때 ‘좋은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어떤 활동을 추진했나요?

유문중 ■ 협의회는 1997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진하기 위해 5개 부문인, 수원시 행정, 시민

사회단체, 여성단체, 기업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던 이화수 교수를 상임대표로 선출하며 창립했어요.

당시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희망수원21」을 작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기업, 시민사회별로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천 여부를 점검해 나갔어요.

- 희망1. 시내 어느 곳에서나 서장대가 또렷히 보이도록 한다.
- 희망2.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희망3. 소음이 적은 조용한 도시를 만든다.
- 희망4. 버려지는 쓰레기량을 줄인다.
- 희망5.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 희망6. 환경상품을 애용하고, 소비절약을 실천한다.
- 희망7. 가정마다 물을 아껴 사용한다.
- 희망8.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든다.
- 희망9. 시내 하천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한다.
- 희망10.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한다.
- 희망11. 적정한 인구밀도를 갖춘 도시를 만든다.
- 희망12. 화성과 어울린 문화공간을 확대한다.
- 희망13.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도시를 만든다.
- 희망14. 도심공원에 다람쥐가 살 수 있도록 한다.
- 희망15. 광고산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만든다.
- 희망16. 도시내 자동차의 통행을 줄인다.
- 희망17. 가장 편안한 대중교통을 만든다.
- 희망18. 상쾌하게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달리게 한다.
- 희망19. 보행자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
- 희망20.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희망21. 시민이 자랑하는 환경친화업소를 확대한다.
- 희망22. 세계인이 즐겨 찾는 수원을 만든다.
- 희망23.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펼친다.
- 희망24. 영세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 희망25.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 희망26. 노년층의 사회활동을 확대, 지원한다.
- 희망27.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 희망28.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늘린다.
- 희망29.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높인다.
- 희망30. 여성고용을 창출하고 취업을 확대한다.
- 희망31.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을 만든다.

크게 역점을 두었던 활동으로는 첫째,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 행정 관행을 바꾸어, 수원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가 가진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 협력하는 활동이었어요. 심재덕 시장은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했어요.

협의회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5개 부문이 망라되어 수원지역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을 추진했어요. 당연진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환경국장은 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이 지원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기록해 지원해주었어요. 그리고 수원경실련과 수원환경운동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환경대학'에 수원시 공무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실현 방안을 배우고 민과 관의 벽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둘째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학습 및 교류를 위한 연수회 추진이었어요. 1999년 창립한 푸른경기21실천협회의 염태영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 시(도)의원, 기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연수과정을 추진해, 해외의 '지속가능발전'과 '민관협력' 우수사례 현장을 살펴보고 시야를 넓히도록 지원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인상적인 활동이었다고 평가해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유문종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성, 창조적인 발상들을 접하며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통합성을 갖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정보나 권한, 정보가 부족해서 오는 것도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시민단체가 가진 경험과 관성에만 의존해 새로운 사실과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고정관념의 틀에 얽매인, 시민운동의 방식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시민단체 활동을 성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업적인 활동가를 통해 회원을 모으고 후원한 회비를 기반으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 인건비를 충당하는 현 시민단체 방식의 시민운동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 나아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메타버스, SNS)

통합성은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의 가치와 조화롭게 추구해가는 분야의 통합일 수 있어요. 나아가 현세대만의 이익과 행복 추구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 개발이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 즉 세대간 통합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지역과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간 상생협력의 노력을 펼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원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유문종 ■ 민선 5기로부터 7기까지 ‘시민의 정부’를 표방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더 넓고 더 깊어져 시민의 공감과 참여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로 나아가며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문의 하나는 시민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활동을 시민들과 만나 의제화하고, 이를 내년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떻게 정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힘을 조직화하고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난 후 3개월 후인 6월 1일에 지자체 선거가 있게 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선거에만 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선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언론에서도 정치인들의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정책선거가 실종될 가능성이 커요.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수원사회를 바라보며(현재의 활동이나 공간), ‘멋지다. 더 발전시켜보자’라거나, ‘우려스럽다.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수원 발전에 큰 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유문종 ■ 공원이 생활공간 곳곳에 들어서 있고, 텃밭들도 조성된 공원이 많이 있는데, 잘 가꾸어 나가면 좋겠어요.

수원시는 현재 204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현재의 공간을 미래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소유주와 건설사들과 시민 사이에서 토지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갈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세대(의 이익)를 주장하고 대표해줄 주체가 없거나 약해요.

현재 제기되는 민원들은 현재의 시점 그리고 현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 주장되고 있어요. 해결방안 역시 현 세대의 문제해결로 귀결되고 있어요. 다음 선거 시기인 5년이나 4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의 이익이나 불안 해소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곤 하죠. 미래세대의 민원에 대해 누가 생각하고 주장할 것인지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09.23 16:30 수원시청 | 이상명 홍은화 진행·기록

2기 1991-1995

좋은마을만들기 운동

90년대 말부터 시민단체들과 21세기수원만들기협회의 공동사업으로 광고산 유기농마을, 행궁동 한데우물길, 나혜석거리 조성 등을 펼쳤고, 2011년부터는 민관협력으로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경아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고경아 ■ 남편 이근호씨가 서울대 농대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수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근호씨 친구 중에 수월사랑민주청년회 활동을 하던 박영철씨를 통해 수원여성회가 운영하는 올망졸망어린이 집을 소개받았어요. 97년경이고 당시 3,4살이 된 한별이를 맡기고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동화읽는어른모임을 소개받았어요. 수원여성회 안에 주부들 모임으로 하고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려했다기보다는 임신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사회랑은 단절되어 있다가 연결되었던 것이 아이 교육, 주부모임으로 연결되어 지금까지 왔네요.

고경아님에게 마을만들기 운동이란?

고경아 ■ 살아온 삶에 대한 터닝포인트. 새롭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마을만들기 운동이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지 결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운동인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역사회 안에서의 변화를 만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흐름 속에 같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나온 많은 삶들 중에서 새롭게 세상을 보거나 사람과 관계를 하거나, 앞으로 누구랑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한 운동, 흐름, 에너지였다고 생각해요.

99년도 수원의제21의 사업으로 송죽동, 구운동 등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마을학교를 했었고 그때 KYC나 환경운동센터가 결합되어서 마을만들기를 열어갔습니다. DJ정부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운동도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시기의 마을만들기를 회고해주시겠어요.

고경아 ■ 수원KYC가 이근호, 박영철, 홍영표 셋이서 지역에서 시민운동도 하며 먹고 살아가면 좋겠다하면서 거금 천만원씩을 모아서 꾸러기 과학학원을 차려요. 그러면서 회원들끼리 생협을 해보자는 고민이 생겨나요. 법인체를 형태는 아니고 광고에서 나는 채소를 회원들에게 바로바로 공급해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시도하면서 이근호씨가 배달을 했었어요. 그 즈음 심재덕 시장 때 광고산

안의 축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리밭집으로 변하는 시점이었고 광고산을 친환경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홍보하는 반디불이 축제에 이근호씨가 갔을 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걸 보았다해요. '다슬기를 뿌려놓으면 우리는 농약을 치겠다'했다더라고요.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안에 사람도 살고 있는 건데, 오로지 자연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한 측면으로는 지역운동으로 사라지지 않게 지켜야하고 보존해야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게 광고산과 수원화성이고 우리가 지역운동을 하는 매개가 될 수 있겠다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화성길라잡이로 활동하게 된 행궁동과 관계 맺게되고 행궁동의 다양한 자원들을 찾게 되었죠. KYC는 마을만들기라기보다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역으로 들어가서 시장이 되자, 동네로 들어가서 통장이 되자 이런 흐름 속에서 KYC도 동네 안에 사무실을 얻게 되고 어떤 동네에서 지역과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해요. 이찬성 현이근호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그 때 당시에 하광공동 통장이셨어요. 통장님 땅을 일부 빌려서 시민텃밭을 하게 되고, 그 분의 논과 광고 작목밭들을 유기농업 단지로 바꿔보자 해서 한 10년 동안 함께 해서 유기농 쌀로 인증받기도 했어요.

이 과정들은 연계되어서 KYC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해갔군요.

고경아 ■ 김용서 시장이 되고서 시민사회단체가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이근호씨가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의제를 받쳐줄 조직이 없을 때 KYC가 결합해서 행궁동과 광고, 세류동에서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푸른경기21의 푸른대학이라던가, 도시재생대학 같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과 함께 듣고 진행해온 것이 지금의 마을만들기와 유사한 모습이었죠. 광고의 농산물을 KYC 회원들, 유원보성아파트 주민들과 직거래로 연결했던 활동들이 전 역사로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문종 선배가 의제 사무국장일 때 KYC가 결합했던 방식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바꾸자 하는 것은 나를 바꾸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일, 이게 KYC 비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KYC노래도 있어요.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 참여·나눔·성찰 1%씩 , 3%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 3%가 되자. 나눔에 있어 화성 길라잡이로 지식나눔을 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지역사회 3% 인간이 되자는 운동을 해왔어요. 그 가운데 마을만들기도 있던 것이었어요.

2005년 이전에 KYC의 마을과 관련된 활동과 이후 한데우물길이나 행궁동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운동과 마을르네상스로 이어지는 과정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군요.

고경아 ■ 2005년 화성행궁 앞 광장이 조성될 때 광장 앞에 U턴이 안되는 거였어요. 남창동 사람들이 행궁앞 U턴 도로를 요구하며 데모하고 승리하여 지금은 종로교회

앞에 U턴이 되죠. 이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루었는데 뭐라도 해보자 하며 보리회관에서 행궁길 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주민사무국장, 의제 사무국장으로 이근호씨가 구성원이 되요. 성 안의 사람들이 행동이 성과로 이어내며 활동을 하고 싶어하던 때였고, 당시 화성사업소에는 김충영 소장님이 계시면서 마을 사람들과 뭔가를 하고 싶어하셨어요. 의제가 이때부터 들어왔던 시기이고, 2003년도부터 화성길라잡이를 해온 KYC가 화성을 동반 안내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한축으로 대안공간 눈이 2005년도 개관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시작했고 안산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가 2006년, 2007년이잖아요. 2007년도 <살아나는 거리 간판에 날개를 달자> 국토부 공모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컨소시엄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대안공간 눈과 KYC가 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데우물길 축제도 하고,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의제가 역할을 하고 작가 그룹이 상상을 더해주면서 그때부터 활동에도 켄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기존 시민운동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행궁동에서 마을만들기가 펼쳐졌다고 보이지만 당시 다른 시민단체들의 시각, 반응 등을 회고해주시겠어요.

고경아 ■ 행궁길발전위원회가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면 보리회관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헤어지는 주례모임을 했어요.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했죠. 센터 생기고 이근호씨가 르네상스센터장으로 가고나서 그 모임이 유아무야되었는데... KYC가 행궁광장 건너편 건물 3층에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있는 활동가가 거기 뭐하러 가냐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 동안은 주민들이 제게 말도 안 걸어주셨어요. 이름도 KFC, BYC라고 불렀어요. 제가 대표라고 인사해도 이름도 한번도 안불려주다가, 한데우물창작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과 작가들 중간에서 KYC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행사에서 계획서 쓰는거 도와드리고 먼저 가서 책상의자 놔주고 플랭카드 걸어주고 행사 마치고 주민들 돌아가시면 정리해주며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를 KYC라고 제대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시민사회단체들이 KYC는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라 하기보다는 운동성을 잃은 단체라고 표현했던 것 같긴 해요. 이미 KYC는 자주·민주·통일을 내걸었던 초기활동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주민들 모임과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연결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을 교육해서 화성 안내자로 코디네이터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태동한 전통적 시민운동들과 결이 다른 운동들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활동지점이 변해 있는 것을 느끼거나 지역 운동 구도 속에서 부정적 인식들을 접하기도 하는데 외로움, 우울 등이 있지는 않았나요?

고경아 ■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구나 싶었던, 외롭거나 힘들었던 지점을 이야기해보면요. 2013년도 생태교통을 하고 주민추진단을 조직했는데, 대상지역 주민들로 모이고 행동을 해본 추진단이 힘을 갖기 시작하고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추진단을 해체했어요, 그러다가 관의 필요에 의해 1주년 행사로 보존위원회라는 조직을 또 만들더라구요. 해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동네를 움직였던 사람들과는 다른 위치에 서있어야 하면서 엄청 공격을 당했죠.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분노, 속상함이 남아 있나본데요. 좀더 햇볕에 말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게 된 것은 마을에서 오래도록 활동을 해왔어도 동네에 살지 않으면 외지인이고 이주민, 귀화식물처럼 대하는 경험을 했어요. 생태교통할 때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마을일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KYC가 행궁동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데에 같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행정이나 동네 흐름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했을 때 결정적으로 제 편에 서주지 않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더 하고자 하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판단했고 어쩌다보니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었지만, 활동하면서 격한 상황이 올 때 잘 견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지점이었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주민추진단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상처가 되어 있네요.

행궁동에서 펼쳐졌던 마을만들기를 수원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전역에서 하게 되고 관변화·정책화 되어지면서 규모가 크고 넓게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서 경기도 따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성찰하셨을 텐데 경기도에서 바라본 수원의 마을만들기 운동,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고경아 ■ 좋은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질 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 매주1회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했어요. 했던 이야기나 탄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왜 하나,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대화가 우리 의제나 목표를 합의해가는 과정의 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할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았던 거였겠죠. 의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다음에는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역할을 해야 할지를 놓고, 어떨 때는 두사람, 네사람이 모여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근호 라는 사람이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많은 선후배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목표를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수원 시민사회에 녹아져 있다고 해야할까요. 그런 형식이 마을만들기, 마을르네상스에도 기초가 되어주었다고 봅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수원 사람들은 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며 의아해할 만큼 수원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주체에 대해 고민이 앞서갔던 거였죠. 마을의 주민이 중심 축이고, 중간지원조직이나 전문가 코디네이터의 한 축과 행정의 축, 3주체가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마을만들기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활동에서 표현한 것은 수원이 먼저였던 거예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떠나고 싶지 않으면 마을만들기의

목표가 아니겠냐는 인식이 수원에서는 익숙하다가 다른 지역들은 만나보며 깊이 있게 운동으로 고민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전국마을넷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원에 오면 느껴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른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라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수원에서 지역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가야하는 방향을 마을과 주민에게 찾아가는 과정이 마을만들기 흐름이 같이 결합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분야는 노령화, 소수화되고 약해졌다고들 합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양성된 지도자들보다 마을만들기나 주민운동 측면에서 태동하고 양성되어 곳곳에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진작하는 지역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마을만들기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고경아 ■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KYC 화성길라잡이 활동가가 행궁동에서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지점과 수준에 있어, 개인의 여러 조건으로 그런 임무가 부여되는 것도 있겠지만 KYC가 시민단체로서 가졌던 사명이 공익활동과 만나지는 현상이었던 거죠. 화성 안내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와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최보라, 신종희 등이 화성길라잡이로 들어와서 다른 단체로 나가서 활동하신 사례들이죠. 시민운동과 만나지고 역할해 가는 창구가 필요해요.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어야 해요. 내 골목의 쓰레기만 고민하면 골목문제로 머무르는데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과 제도를 들여다보고 고민해가도록 누군가가 건드려 줘야 하잖아요. 시민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과거에는 했었고 지금은 생활 속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그 분들 삶 속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과 정책으로 양성되는 마을지도자들이 한 걸음 더 나설 수 있도록, 마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 전체로 시야를 넓히도록 견인하고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마을운동에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시는군요.

고경아 ■ 시민사회랑 마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개인으로도, 단체로도 존재하고 다양한 조직의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시민사회를 지나치게 단체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을만들기도 제도화 되어서 주로 공모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측면만 조명되어지는데 그런 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민을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또 동네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저 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동네에서 뭘 하나하는 질문과 만나요. 공모사업은 행정의 규격에 맞춰야하니 뭐라고 안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이 갖는 여러 단점이 있지만 수원시가 갖는 권력의 일부분을 행사해서 마을을 움직이고 변화하게 하는 면모도 있어요. 공모사업을 행궁동 안에서 KYC가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주민들 10명 모아오시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페이퍼 작업이나 실무를 돕는 것으로 동네 안에 녹아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가 예산을 투여되면서 길들여지고 관변화되었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성미산 같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지원되는 예산에 맞추고 예산이 끝나면 활동이 중단되면서 자발적 주민운동을 훼손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경아 ■ 지금도 비슷한 비판이 있죠. 공모사업이라는 형태가 어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라고 미션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결과로 공동체성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공모사업의 설계는 일련 사업인 것 같아요. 조직화되어있는 모습만 공동체로 볼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마을에서 점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점으로 있다가 물과 같은 필요가 있으면 진흙처럼 뭉쳐져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다시 점이 되는데, 흩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커뮤니티 안에 없으면 공동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없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없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적 방식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마을 분들이 필요에 의해 얼마나 결사하는지 저는 2013년에 보았거든요. 목표가 생기니까 뭉치는 거죠. 조직이 없는 게 아니고, 조직의 형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지언정 동네를 움직이고 있는 활동은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요.

공모사업은 설계적 측면에서 아쉽기는 해요. 공모에 참여했을 때만 관심을 가져주지, 떨어지거나 한번 끝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원정책이 부족하잖아요. 이근호씨가 마을르네상스센터장으로 있을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경험한 사람들이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주제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다른 역할을 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지원했어요. 갈수록 공모사업은 섹시해지는데 사업만 있고 사람은 안남는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마을 일을 하고 싶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으면 공공의 서비스로 당연히 제공 되어야지, 무슨 공모사업 사냥꾼처럼 하게하는 지금의 예산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자치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적 서비스로 해야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고민해야 돼요. 예산에 길들여진다는 말이란 측면에서는 맞아요. 계속 공모사업을 하려면 시나 동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입바른 소리를 하기 쉽지 않죠. 또 행정을 알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되면 그만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옹고 그림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공모사업의 설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사업예산을 처내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공모사업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안에 위치하면 잘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관계하면서 시야를 넓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조직이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센터 뿐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들이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운동의 큰 흐름이지 않나요. 단체가 지역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분리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안에 마을 관련 활동이 포진되어 있는데 마을르네상스센터 시절과 다르게 도시재단의 한 기구로서 위치한 중간지원조직이 미흡하거나 마을만들기 운동들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경아 ■ 한 건물에 다 모아 놓았잖아요. 그 안에 조직들이 의사소통하기에는 효율적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중심과 가치를 둘 것인지, 행정의 효율성이 우리의 우선 가치라면 모여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지역사회랑 더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중간조직이라면 동네로 쪼개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은 누구냐, 당신은 열쇠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그 열쇠를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냐. 되냐안되냐 누구의 허락 받고 쓰는 관계는 주인이 아니냐고 해요. 비밀번호 알려주고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책임지는 공유공간이어야지 누군가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순간 내 공간이 아닌 것이죠. 지속가능재단이 모여 있고 아니고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중간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원하는가를 생각해보자고요. 행정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면 거기 붙어 있어야하겠고 주민들이 행정적인 일을 더 잘하게 역할하려면 주민들 곁으로 가야겠죠. 저는 융합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융합이 일어나는 장소는 마을이잖아요. 깔대기처럼 마을 안에는 다 모여있는데 융합이 일어나는 장소를 벗어나 중간지원조직 끼리 모여있는 형태가 맞는가 하는 고민은 있어요.

미래를, 시민운동을, 수원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민운동 열심히 하고있는 시민협에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고경아 ■ 가까이 있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지만 광교상수보호구역 투쟁하는 것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원에서 멋진 공간이나 활동, 반대로 우려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고경아 ■ 일단 가깝게는 대동계가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공감토론이나 마을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모여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대동계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연구사업도 하고 마을대화모임도 하고 있는데, 태생도 흥미롭기도 하고 지금 하는 연구사업 중에 <마을살이정류장>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마을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야한다는 사명을 대동계가 갖고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도 아닌데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체가 놀라워요. 수원의 마을만들기 운동의 상징적

인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수원 사회이면 좋겠어요. 보통은 배타적인 관계를 만나오잖아요. 수원에서 활동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배제와 소외가 그 안에서도 있지요. 나와는 다른 요구, 흐름, 태도에 대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수원 지역이 되면 좋겠어요. 대동계도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단위와 사람들이 끌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따복센터에 있을 때는 지역을 돌아다니고 호흡을 하는 것 같았는데, 공무원이 되니까 섬에 갇혀 있는 기분이고 떨어져 있는 기분이고 저도 그 사회 안으로 잘 끌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마을에서 연구역량을 키우는 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의 용어로 표현된 연구가 마을과 사람들의 필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실패하는 부분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실제로 정책축제 등에 마을 사람들을 한 두 명이라도 꼭 끼워서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삶의 문제를 정책이라는 용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정책용어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정책이 되고 나서도 실행 여부를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어가는 힘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진데에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연구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연구자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현장을 만나야하고, 현장의 사람과 연구자를 만나게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또 다른 역할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중간 조직의 역할이고, 센터만 중간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특히 시민사회에 역할을 하려는 사람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면서 운동성을 가져가게 되면, 어느 순간 공동의 목표가 생길 때 뭉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2021.08.25 20:30 온라인(Zoom) | 이상명 진행, 김성연 기록

2기 1991-1995

수원인권영화제

다산인권센터와 시민사회가 함께 매년 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학습과 토론마당을 진행해왔다.

송원찬

4기 2006-2010

수원참여예산연대 결성

2006년, 경기복지시민연대와 환경·여성단체 등 9개 단체가 모여 수원시 예산감시활동과 시민들의 요구를 기초로 예산편성 제안 등을 위해 결성하였다.

예산활동가 양성을 위한 예산학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등 일상적 시의회 방청 활동을 진행하였고 예산 분석과 정책토론회, 대안예산 요구안 작성, 관급 공사비 이종 지급·경관육교 설치·광고수련원 인조잔디 조성 등 수원시정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허윤범

허윤범님,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결합했던 시기와 계기를 이야기해주세요.

허윤범 ■ 사회복지 공부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바라보던 시선과 비슷했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면 사회를 변화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존 복지관이 갖는 한계를 알고 있기에 2002년도 경기복지시민연대로 찾아갔어요. 시민단체가 뭐있나 찾아보다가 학교에서 가까운 수원에서 역할을 찾았습니다. 경기 단위로 활동하는 데에는 실제 조직과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 단위 활동도 필요하고 그러면 수원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판단이 반영된 거였어요.

2002년도의 어떤 주제들로 활동들이 이루어졌나요?

허윤범 ■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는 청소년 운동, 시민 대상 지역사회복지대학 등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지방선거를 대비한 10대 아젠다 작업들을 해왔어요. 제 관심 자체가 정책 쪽이었는데 잘 맞았었죠. 정책 의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운동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2003~2005년은 경기도 복지예산 분석을, 2006~2008년은 수원참여예산 운동을 했던 거였어요. 2003년도 시작할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경기복지시민여대 대표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진짜 할 거냐,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하셨어요. 시민단체 운영위원들이 활동가들이 하겠다는 것을 웬만하면 지지하고 같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만큼 예산사업이 운동 토대가 없었던 거였지만 전 꼭해야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송원찬 ■ 당시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낮고, 경기도가 예산의 8%대이었으니까, 전략적으로 30%로 확충하는 정책 제안이 필요했어요. 복지예산 확충운동을 목표로 했고 그

러려면 예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먼저였죠. 처음에 주먹구구로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예산 분석 자체가 당시로서는 처음이라 항목 맞춰가며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었어요. 경기도 다음에 시군 지역 단위도 해야 한다면 수원시가 적절하였고 마침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을 연결해서 전체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고 속에서 허윤범님의 활동을 한 단어, 문장으로 표현해주신다면?

허윤범 ■ 예산운동으로 지역 복지운동의 한 축을 세우는데 일조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전국적인 복지운동으로도 앞서가는 사례였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생긴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 쪽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A복지관 얼마, B복지관 얼마 정해져 내려오던 것을 수원시에 통으로 줄테니 알아서 복지예산을 쓰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 많은 단체들은 지방권력 감시운동은 매우 약한 현 상황에서 복지예산으로 안 올거다 하는 우려로 반대했어요. 부산의 경우, 준비되어있다 얼마든지 오케이 하며 다른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반대였죠. 그 때 우리가 했던 경기도 복지예산운동이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예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전국 단체 모아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수원시 경우는 분권교부세로 복지 예산이 잘 쓰여졌나요, 복지사들 예상대로였나요?

허윤범 ■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교부세 내에 일반·특별·부동산·분권교부세에서 결국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어요. 시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5년 단위로 연장하고 한번더 연장했다가 2015년에 없어지게 돼요. 원래 취지가 분권교부세에 들어가는 돈을 일반교부세로 넘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분권교부세에 70개 항목 정도의 사업이 있었는데 2~30개는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고 나머지만 내려서 일반교부세로 들어갔는데, 그게 정말 사회복지계가 우려했던 대로 다른 부분에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게 그 예산들이 A복지관으로 가야하는 예산인데 줄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죠. 예산 구조상 다른 데 써도 되는 권한이 지방에 주어진 것인데, 지방공무원들은 그 조차도 잘 몰라요. 관례적으로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당시 상황과도 연결되며 지역복지운동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수원 참여예산연대에 9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허윤범 ■ 수원의 예산감시운동을 정리하려면 경실련 활동이 접목되어야지 참여예산활동만으로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경실련이 경실련 관점에서 해온 활동이 있었고, 경기 복지시민연대는 지역운동을 해야한다는 조직적 고민으로 제가 수원 활동을 참여했고, 여성회가 주축으로 2005년도 11월에 시민단체 공동으로 의정감사활동을 했었어요. 이 세 단체의 활동과 이해가 맞아떨어졌고 마침 아름다운재단의 기획사업으로 제안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결합해서 진행한 기획사업이었고 안산, 고양과 수원시가 함께 진행한 사업이었죠.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예산운동은 복지예산을 분석해서 이런 복지예산을 해야한다고 제안하는 운동이었고 지금 참여예산의 효시로 볼 수 있는 형태였던거죠. 경실련의 예산감시와는 다른 차원이 만나졌던 거였어요.

예산 집행에 대해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로 나아갔다는 것이군요.

허윤범 ■ 참여예산운동이 생겨난 배경도 그런 거였잖아요. 단지 비판을 넘어서 사후적 감시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사전에 운동하는 것. 2003-2005년 경기복지시민연대의 활동이 그렇게 참여예산운동의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지역에서도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민운동이 보통 뒷북치게 되잖아요. 이미 계획이 나오고 나서 반대한다든지 사후적 행동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참여예산운동과 같은 사전적 접근이 생소하고 어려웠을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긴 과정을 이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허윤범 ■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있었고, 밀고나갈 주체가 확실했어요. 제가 있었고 경실련의 김미정 국장, 여성회에서도 임혜경, 류명화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인적역량이 확보하고자 예산활동가학교를 하면서 윤은상, 이근호 활동가들이 예산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결합했고 큰 인적 동력이 되어주었어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의 책임감이 달랐겠죠. 3년간은 인건비, 운영비 걱정없이 그 일에 매진하게 하는 기반이 되면서 운동을 업그레이드하게 했어요. 아름다운재단은 이후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주민감사나 소송으로 대응할 때도 아름다운재단과 연결된 변호사 그룹에서 도와주셨어요.

그 때 그 운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한계들은 없었을까요?

허윤범 ■ 모든 운동이 그렇기는 하지만 3년으로 될 운동이 아니잖아요. 참여예산은 오랜기간 공부와 연구가 되고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사실 저도 2008년에 떠났고 그러면서 지속성이 담보하기는 어려웠어요. 3년만 놓고 평가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예산연대에 이어서 수원에서 201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도화되었고 그 과정에 류명화, 임혜경, 김광원 등이 참여했구요. 참여예산연대 활동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방권력 감시운동 내지 예산운동으로 놓고 이야기하는지에 달라질 수 있겠어요.

2008년 허윤범님이 이 활동을 떠나면서 민간단위에서 연대를 꾸려서 진행하는 형태로 계속해 가는데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군요.

허윤범 ■ 주민참여연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도화가 되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수원은 사전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봐요.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대응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시죠.

허윤범 ■ 2006년도 12월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면서 알려졌어요. 예산연대를 꾸려서 활동할 때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도 했어야 했어요. 이 사건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이 이전에도 많이 있어왔던 거지만 333억이라는 규모,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결과라는 공신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돈을 받아낸다는 것을 떠나서 주민 직접참여제도인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소환이 알려지고 있던 때였는데 시범적 사업으로 해보자는 측면도 있었어요. 참여예산연대만이 아니라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송이 쉽지않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직접 참여제도를 알려낸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참여예산연대라는 동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끌고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그 당시 관행들을 고쳐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공무원들을 처벌해야한다는 지점에서 갈렸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척을 지면서 지역을 가꿔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던 거였죠. 법원 판결은 어땠었나요?

허윤범 ■ 공무원의 처벌이 징계와 환수일 텐데, 징계 6명이었어요. 3명 중징계, 3명 경징계. 큰 사건인데 너무 적다, 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감사공무원들 만났을 때, 상황 이해는 되지만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어요. 환수는 못했는데 그 논리는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법적 조치로서 환수되지는 못했지만 수원시가 자율적으로 걷은 1억 정도를 복지 쪽에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응들로 문제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었나요?

허윤범 ■ 앞의 역사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수원에서 경실련 빼고 권력감시를, 특히 재정을 꾸준히 다른 곳이 없었잖아요. 수원시민운동의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참여예산연대의 가장 큰 의미는 지방권력감시운동의 상시적 기구가 생겼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초과근무 활동을 하면서 견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시에도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권력감시운동이 이후 제도화된 주민참여예산운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허윤범 ■ 제도화의 맹점은 형식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원래 요구했던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참여예산연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잘 만들어졌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

고 생각해요. 연구회에 참여예산 활동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제도 만들어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크게 했죠. 참여예산연대 활동이 없었으면 수원참여예산연구회가 잘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졌어도 행정에서 입맛 맞는 사람들로 배치해서 형식적으로 흘러갔을 수 있어요. 실제 많은 지자체가 그러고 있을 거고요. 수원은 그래도 당시 지역회의하고 해서 장안구·권선구 등에 만들어졌어요. 참여해보니 시민들 3~40명 모인 데에서 구청 예산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이전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어요.

행정적으로 펼쳤던 분야에 시민사회가 권력감시의 방식과 내용을 잘 넣어서 의미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게 했다고 볼 수 있네요. 현재 수원 시민운동을 바라보며 단체나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허윤범 ■ 현재는 귀동냥 정도로 접하는 상황이라서... 단지 촛불혁명의 지점을 떠올려봐요. 흔히들 시민사회도 예전 같지 않고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로 자료와 이야기를 잘 모아놓고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소모임·토론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도록 시민운동이 유지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정적 시기가 올 때 그 힘이 표출될 수 있도록 말이죠.

송원찬님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운동이 펼쳐지는 것에 참여하고 봐오셨는데, 수원의 참여예산연대 활동들을 다르게 평가하거나 한계, 교훈 등을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송원찬 ■ 다른 지역에 비해서 권력 감시, 예산 감시 운동에 대한 수원 지역 단체들이 관심 갖고 연대하고 활동한데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도 대응을 치열하게 했죠. 싸우는 과정에서 단체들끼리의 연대나 의지가 극대화 되는 형태가 되서 전체 시민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다만 제도화에 편입되어 지속적 감시운동으로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단체 안에서는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대응해야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다만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3~40%로 확충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이제는 지방예산과 국도비 예산까지 하면 거의 4~50%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액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치 예산들을 좀더 기획력 있게 사용되도록 여전히 예산 감시나 예산 대응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인권영화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송원찬님은 어떤 계기나 경험, 깨우침으로 수원 시민사회운동과 결합하게 되셨나요?

송원찬 ■ 수원대학교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구속되어 김칠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군대 가기 전에 김칠준·김동균 합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되었죠. 재대하고 복학해서 1년 다니자마자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받아 시작된 것이 95년이었습니다. 다산인권상담소는 당시 법률사무소 부설로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학생

운동 관련 사건들 변론하는 일을 지원했어요. 당시에 시민운동이라고 표현되기보다 노동운동이 대세였어요. 노동문제만 했다면 확장력이 제한되었을 텐데 사회복지의 문제에도 연결해 나갔어요. 인권인식이 확대되고 여성인권, 환경권, 복지권 등 권리의 방향이 다양해지면서 직접적 시민사회와 함께 할 현안이 많아졌어요.

95년도 법률사무소 부설 기구로서 노동자·학생들 구속에 소장 작성하는 등 권리구제의 일들을 했을 때는 인권운동·시민운동과는 다른 개념이었을까요?

송원찬 ■ 박진 활동가와 나는 법률사무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어요. 거기서 예산도 받고 직원으로서 규정되어 소송 대응하는 역할로는 양이 차지 않았고 그 이상의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해야 한다는데 토론과 논의가 있었어요. 확장되어가는 고민들을 계속했고 다산인권센터로 분리되면서 변호사가 소장이었던 체계들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범무법인 다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더욱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에 관심 갖고 연대를 하고자 했죠.

인권상담소에서 다산인권센터로 전환하면서 이전과 후의 인권의 담론이 달라는데 그 때의 인권은 무엇이었나요?

송원찬 ■ 당시 다산인권센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싸움꾼이었어요. 의경 자살사건 있고, 여러 노동의 치열한 사안들에 소송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현장에 가서 연대도 하고, 피케팅도 했죠, 허선 실장님이나 오세범 실장님은 노동 분야 전문가이고 그렇지 않은 박진이나 나는 인권 영역을 확장해가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노동과 학생운동의 공안사건을 했던 법률사무소의 구조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가는 것이 법률사무소와 다산인권센터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권영화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인권운동단체로서 준비해가며 모델로 삼았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모티브로 한 영화제를 제안하고 지역에서 진행할 단체를 모집하는데 경기 수원은 다산인권센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제의식을 문화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자는 취지였어요. 1996년도에 수원인권영화제를 하게 되요.

인권운동으로 현장에서 싸우고 이슈파이팅도 하지만 사람들 체감되어 인권인식이 확장되려면 인권교육도 필요하고 영화제 같은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역사회 단체들에 제안해서 연대해서 준비위원회도 구성했어요.

당시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었죠?

송원찬 ■ 43항쟁을 담은 다큐 <레드헌트>와 같이 검열을 거부하거나 불가판정된 작품들을 상영하니까 탄압이 심했어요. 2회 때는 그야말로 탄압이 심했죠.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를 국가보안법, 공연법 등등의 위반으로 구속했어요. 상영장이었던 교동성당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해서 숙식을 교동교회에서 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영화제가 아니고 당시로서는 영화제를 빙자한 강력한 주장이었

던 거죠.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알리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슈였고 지켜내야 한다는 연대단체들의 의지도 강했어요.

영화제가 탄압도 있고 이슈도 되고, 전국에서 전달해가며 상영하다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도 있었어요. 상영시간은 되었는데 작품이 오지 않고 있고 직전에 받아 틀고... 감독, 관람자들의 대화의 시간도 하고요. 초기에는 탄압이 있어서 대관이 안되기도 하고 교동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영화 사전 검열이 위한 결정되고 검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다산인권센터가 꿈꾸었던 인권 신장이 이루어졌나요?

송원찬 ■ 초기에 힘들었지만 인권영화제가 우리에게 큰 사업이기도 했고, 많은 매니아층 형성되고 다산인권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자리잡는 계기도 되었죠. 학생들, 선생님들도 많이 와서 영화 보셨어요. 단체들과 관계도 만들어지고 연대 구성원들과 같이 수원인권영화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영화제도 생겨나고 인권영화가 대중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뒤에 사건들도 있는데,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수원에 인권운동이 정착하고, 확산하게 되었던 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원찬 ■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권단체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수원시에도 인권 담당 부서가 생기고 제도화의 틀을 갖는데. 시민운동과 지방정부의 협치는 어떻습니까? 또 시민운동에서 제기한 바들의 제도화 방향은 잘 되고 있나요?

송원찬 ■ 인권단체에서는 약간 빗겨 나와있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의 필요성, 사회 변화, 시민의식이 수용·반영된 바가 제도화이니까 인권이 우리사회 담론으로 자리 잡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처럼 중앙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자체에서도 인권을 행정체계 안에서 다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요. 다만 다산의 고민은 제도화된 자리에 참여하기도 안맞고 지역사회의 인권 확산을 위해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필요성의 사이에서 고민과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원시민들의 인권이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관련하여 약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을 느끼신 점이 있나요?

송원찬 ■ 인권은 제도화·공론화가 진행되었지만 내재화되기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죠. 혐오와 편견의 시스템에 익숙해온 사람들이 변화하여 개인적 관계에도 인권의 눈을 적용하기 위해 꾸준한 인권교육과 제도개선 등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노동 등 굵직한 권력집단에 대한 인권문제가 사인과 사인에 있어 갑질이나 성

추행 등 개인 관계로 더 세분화해 가잖아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현장은 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니까 개인 간의 인권 민감성이 확장되어 가는데는 지난한 과정을 예상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 운동 과정에서의 인권의식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산에서 추구했던 인권의 방향과 내용들이 시민사회를 통해 확장되었나요?

송원찬 ■ 그것보다는 다산인권센터라는 수원의 중요 조직이면서 전국현안에 뛰어다녀왔잖아요. 시민운동가, 활동가들도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옳음과 정의의 기준을 자신과 단체에 두면서 또 다른 자기 권력화, 시민운동의 권력화, 정당화로 경직될 수 있어서 상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항상 자기 성찰은 필요해요.

수원 지역 하면 시민운동의 모든 영역이 존재하고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들을 하는데, 현재 시민사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고민하는 단체 활동가나 운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송원찬 ■ 오히려 현장을 나온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겠습니다, 시민운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 시민운동의 포지션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봐요. 권력감시운동이나 정치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했던 우리 사회 시민운동의 역사성이 있었고, 민주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힘은 약화되었을지언정 다양성으로 확장되어가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에 맞게 시민사회 성장과 관찰방식들이, 아젠다들이 전환되어야 하는거지 권력 감시 운동, 저항운동으로만 비교해서 지금이 떨어진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 토양과 성숙함을 확장해 나가는데 선배들의 지원과 고민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활동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들은 다른 역할로 규정을 하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센터가 될지, 기금조성이 될지 현장의 활동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민운동의 트렌드나 변화를 봐야합니다. 온라인 시민운동, 1인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정형화된 시민운동의 조직구조가 영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트렌드나 변화들을 지역사회에서 인큐베이팅 한다던가 현장의 활동가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2021.9.3.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이상명·김영균 진행, 이상명·김성연 기록

3기 2001-2005

지역 미디어 개선 운동
민진영

우만고가차도 건설
반대운동
김명욱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
권미영

4기 2006-2010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공동행동
유주호

3기 2001-2005

지역 미디어 개선 운동

경기연합방송(이후 티브로드 수원방송으로 현재는 SK브로드밴드로 바뀜)의 수신료 인상 반대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책위 활동을 펼침, 이후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방송기능 확보와 퍼블릭 액세스 참여, 방송제작 및 송출 활동을 진행(2003년)

2003년~05년도 지역 언론방송 시민운동을 하며 당시를 회고하며 한 마디로 표현하면?

민진영 ■ ‘재미있는 도전’. 미디어에 대해 저도 잘 모르던 시절, 다양하게 경험하며 배웠던 시절이었어요.

민진영

수원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민진영 ■ 용인 서천리에 있는 은성교회 부

목사로 목회하는 도중에 수원 매향교회 이주현 목사님이 경기민언련의 실무책임자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경기민언련에서는 당시 ‘조중동 신문 모니터링’과 같은 중앙언론사들의 신문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은 민언련 전국사무국과 중복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해 전국의 활동으로 넘기고, 지역에서는 경기지역의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활동 방향의 수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니 이를 받아들였고,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2003년 1월 경기민언련의 사무국장으로서 참여하며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실무책임자와 교회 목사로서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수원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과제들을 토론하고, ‘수원시민 통일 한마당’과 같은 연대행사를 같이 준비해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2005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조직되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 경기지역의 언론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독자·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원 시민단체들보다는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연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었어요.

주)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사의 수신료 부당인상에 대한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민진영 ■ 저는 수신료 인상 대책위 활동이 시작했을 때는 경기민언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라 잘 알지는 못해요.

2000년 초반 하더라도 TV 시청을 하려면 유선방송에 요금을 지불하고 보아야 했어요. 송신기에서 전파를 쏘아 방송을 시청하는 형태인데, 도시지역에는 높은 건물 이 많이 들어서면서 전파를 가로막아 난시청 지역이 늘어났어요. 화질 좋은 지상

파 방송프로그램을 보려면 유선방송사가 설치한 케이블 방송에 가입해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방송 시청자들에 대한 케이블TV 유선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커져갔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방송들을 유료 혹은 고가의 채널에 묶어 시청자들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판매했어요. 진행 과정은 <민주연론 10년, 시민이 미디어다>에 잘 정리되어 있어 이것으로 대신할게요.

참고자료

경기연합방송 수신료 부당인상에 대한 투쟁과정

2002년 6월, 구 수원유선방송인 주)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은 수원과 경기남부지역에 케이블을 통한 중계유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으로 전환한다고 통고하였다. 여기에는 월 수신료 4,000원인 '의무형' 중계유선상품을 시청하던 대다수 가입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부당하게 월 5,500원(부가세 포함)인 '보급형' 케이블 TV상품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무형 상품에서 보급형 케이블TV상품으로 전환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재계약이 필수인데, 가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슬그머니 지로 청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에 2002년 7월부터 대응 활동에 들어가 10월 14일에는 밀알교회에서 수원경실련, 수원YMCA, 경기민연련, 수원YWCA, 민주노동당 장안, 권선지구당 등은 수신료 부당인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에 대한 요금인상 무효화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쳤다. 요구사항으로는 ①계약의 전환없이 부과한 7~10월분의 부당인상액 4,000원을 가입자 전원에게 다음 달 요금에서 환급할 것, ②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무형 상품을 포함하여 케이블상품의 정확한 상담을 하도록 상담원들에게 조치할 것, ③ 기존중계유선가입자들의 자동전환시 의무형 상품으로 전환할 것, ④ 의무형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질이 기존 유선 서비스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⑤ 이 건과 관련 대시민 공식 사과문 형태의 방송보도, 신문게재 및 자막방송(방송보도 1주일간, 신문보도 각 3차례씩)을 한다.

<민주연론 10년, 시민이 미디어다 p73~74, 경기민주연론시민연합, 2011 참조>

주)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은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시행했고, 2003년 2월 5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발족했는데, 그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민진영 ■ 저는 시청자위원회에 2004년쯤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참여해보니 방송사는 위원들의 제안에 관심을 갖기보다 계약자 증대나 방송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주기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식사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방송사의 주요 임원들은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시청자위원회 회의이니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시청자위원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 시청자위원들에게도 뉴스, 연예 등 분야를 나누어

방송시청 모니터링을 해서 소감과 제안문을 작성해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시청자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계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했어요. 시민들이 방송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사가 시간을 배정해 송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매주 수원지역의 주요 쟁점에 대해 행정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방송토론을 하고, 이를 반복 송출해 출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알아본 시청자들이 자연스레 인사를 해주거나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제작 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민진영 ■ 당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방송제작 및 보도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방송위원회도 생겨났고요. 과거에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만 했다면, 이 시기에는 케이블방송사가 지역 뉴스나 활동을 방송으로 제작 보도를 해야만 했어요. 공적인 책임을 지워 3년에 한 번 방송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지역성과 공공성 분야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 했지요.

시민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송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었나요?

민진영 ■ 지역 뉴스가 생산되고 지역의 이슈를 다루고 공론화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어요. 방송국에서 PD와 작가를 붙여주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획단으로 참여하여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정하고 찬반 혹은 다양한 의견을 줄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장동빈, 박진, 이정희, 이승우, 윤은상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시사토론 프로그램 기획단으로 참여했어요. 3년 넘게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지원으로 시작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들이 일상이나 시사적인 내용으로 방송 작품을 제작해 제출하면 선정해 방송으로 송출해 주었어요.

성과가 컸는데 왜 중단되었어요? 앞으로 수원 시민사회의 활동이 방송·언론을 통해 소개돼 시민들과 만나고 공감을 높일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진영 ■ 티브로드 수원방송의 지배주주였던 태광의 방송 정책이 광역화로 바뀌면서, 토론 프로그램 시즌2로 기획했던 ‘말달리자’의 토론 기획을 방송사가 가져갔어요. 종영 결정도 방송사가 단독으로 결정했지요. 아쉬움이 많았어요. 케이블방송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D와 기자들을 타 지역으로 순환 보직시켜 일할 사람도 없게 되었지요. 무노조경영을 실행한 것이지요. 또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사측과 시민사회 쪽에서 동률로 추천해 구성해왔는데, 사측에서 추천한 위원 중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2명이 자리를 비우자 시민사회 쪽에도 2명의 위원을 출여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쪽 위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시청자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중단되었어요.

방송사로서 공익적 역할 수행은 지역과의 약속이었는데, 시민단체를 이해함에 있어 가입자 유치확장수단이나 방송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는 방패막이 용도의 수단 정도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공감감이 높으려면 지역 방송이나 신문의 역할이 중요할텐데, 이후에는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민진영 ■ 경기민언련에서 주요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 건강한 여론이 생성되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오지는 못해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중앙방송과 신문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방송' 혹은 '우리 신문'이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영·호남 등에서는 신문의 한 면을 매주 시민사회단체에 할애해 활동 소식 등을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원의 매탄지역에서 10여 년간 마을신문을 만들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마을 미디어네트워크에서 5~6km 거리 내에서 송출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방송을 허가받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라디오방송을 허가받았고 이중 경기도는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매탄마을공동체 라디오방송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라디오방송의 이름과 방송내용 구성, 추진체 형식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원 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활동이나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해 다양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활동을 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도 그런 기능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민진영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설치 구상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토론해 완성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제안을 해서 국·도·시비 매칭 22억 원으로 만들었어요. 독립적인 공간을 찾다가 찾지 못해 결국 청소년문화센터의 방송국 공간을 활용해 운영했어요.

그러나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의 한 부서로 통합되며 운영과정에 불만을 품었던 저를 비롯한 두 명의 위원이 나왔어요.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방송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방송기술을 향상해주는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니지만요. 또 공간이 너무 좁아 영상미디어센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웠어요. 120여 만의 인구대비로는 너무 작은 규모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현재의 공간은 청소년 공간으로 기증하고 새로운 공간에 스튜디오를 꾸려 운영했으면 좋겠고, 각 구에 소규모로 하나씩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런 미디어 환경이 마련되면 시민운동에서 다루던 주요 쟁점을 미디어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겠지요?

민진영 ■ 미디어센터에서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영역에 있는 시민과 활동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역할은 가능할 것입니다.

의제 여론기능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맡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단체와 행정 사이의 협치, 이견과 갈등, 쟁점에 대해 공론화하면 좋겠어요.

현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민진영 ■ 시민들의 생각을 읽고 의견을 정리하며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에는 활동가들 사이에 많은 소통과 토론이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활동가들 사이의 소통이 많이 파편화되었다는 인상을 가져요. 일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주2~3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생각들도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활동가들 사이에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라지며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 같고, 새로운 청년활동가들이 진입하며 오래된 시민운동 활동가들과 만남을 꺼려해하는 분위기도 이러한 경향을 더 부채질하는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원시의 정책이나 공간 등 소중하게 가꾸어가야 할 자산과 개선해가야 할 사항,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주세요.

민진영 ■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운영은 모범적인 민관협치제도였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와 행정이 책임을 갖고 모여 공약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제 활동도 긍정적이지 않았나 평가해요. 아쉬운 점으로는 수원의 상징으로 '화성, 정조'를 이야기하는데 피부로 안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수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화성, 행궁 등을 잠깐 거쳐 가는 공간이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는다(공간이 없거나 머물러 활동할 만한 요소가 부족)고 생각해요. 이를 채워가면 좋겠어요.

2021.09.10 11:00 상상캠퍼스 | 이상명 진행, 이상명·김성연 기록

티브로드 더 이상 시청자를 우롱하지마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티브로드 수원 방송을 비롯하여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허위·과장 영업을 이유로 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결정, 13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에 따르면 이들의 허위, 과장 영업은 주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돼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통해 전환을 강요하거나, 디지털전환 가입 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사전 공시 없이 변경된 요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등의 부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디지털 상품 무료 체험을 설득한 뒤 사전 동의 없이 디지털 상품으로 임의로 전환한 경우 등도 주요 허위·과장 영업 사례로 꼽혔다.

시청자불만처리위에서 이번에 검토한 대상은 총 84건으로 SO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티브로드 계열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티브로드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티브로드가 시청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허위, 과장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 제라도 티브로드는 시청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0년 7월 16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출처: <https://ggccdm.tistory.com/541?category=126238>

우만고가차도 건설 반대운동

민선 3기 수원시의 일방적인 우만고가차도 개설에 맞서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 요구, 피해지역 주민 지원활동을 하다 구속을 당함. 도로입체화를 통한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운동이 펼쳐짐

김명욱

민선3기 수원시의 일방적인 우만고가차도로 건설 반대운동에 적극 행동하셨습니다. 이때 소속이 어디셨죠?

김명욱 ■ 수원환경운동센터 부설 녹색환경연구소에 제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인계동의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래 마을신문입니다. 연구소 들어가기 1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우만고가차도는 그 현장을 취재할 목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을신문 취재차 기자 신분으로 갔다가 현장 활동가로 변화된 거네요?

김명욱 ■ 우만고가는 인계동과 우만동 한 가운데가 공사현장이었고, 인계동의 상당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었던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취재할 목적으로 갔다가, 투쟁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데 주민들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깐 제가 옆에서 조금 조언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덜 다치고, 이렇게 하면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쉽게 좀 관철할 수도 있다. 원래 예전에 학생 운동에 이어 시민운동도 한 경험으로 조언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이고, 잘 됐네. 김명욱 씨, 취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우만고 가반대주민 대책위에 정책 고문으로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매번 대책위 회의할 때마다 저를 불렀고 저는 취재 목적 겸, 옆에서 정책 자문을 하게 되었어요. 수시로 갔던 기억이 나요. 주민들의 농성이 장기화되고 용역깡패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주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결정적 조짐으로 다가오던 상황에서 제가 수원시에다 강력하게 공청회를 요청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청회 사회를 봤어요. 당연히 주민들은 요구 사항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고, 수원시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진행하다가 막고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요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겠다고 빠져 나가려하는 것을 제가 못 간다, 주변에 계신 아주머니 몇 분께 막아라, 정 급하면 양동이 라도 갖다 주라고 한거죠. 그랬던 것이 나중에 공무원 감금 폭행으로 고소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용역깡패들이 투입된 일이에요, 그때가 4월 20일 전후였는데, 우만고가 건설현장에서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 해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서 아주머니들을 들어 내치고 있다, 큰일 났다, 완전히 아수라장이고 전쟁터다. 그 얘기 듣고 출근 안 하고

바로 그 현장으로 갔어요. 정말 시커먼 유니폼을 입은 용역깡패들이 그 힘도 없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다 여자들이고 노인네들인데 들어 매치고 번쩍 들어 저쪽으로 내치고 하여튼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리다가는 주민들이 다치고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제 집사람이 민주노총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지금 방송차 한 대만 빨리 보내라 해서 그렇게 민주노총 방송차를 빌려서 그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선두에 서서 집회를 지휘 했어요. ‘용역깡패로 강제 해산, 웬 말이나.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외쳐가며 제가 그때 하루 종일 투쟁을 했었어요. 투쟁하다가 주민들은 이려고 다치고 난린데 시장은 어디서 뭐하냐, 김용서 시장은 늘푸른 음악회라고 아주대학교에서 음악회를 관람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송차 돌려가지고, 아주대학교까지 갔죠. 음악회 하는 데에다 마이크를 정조준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구호 외치고 농성하고. 그랬더니 경찰차가 달려와요. 경찰 2~3명이 들이닥쳐서 나를 잡으라고 손짓을 하니깐 같이 갔던 주민들이 나를 둘러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 다리가랑이 사이로 피해 나왔어요. 또 현장에서 데모 하던 어느 저녁에는 우리는 이려고 있는데 수원시장 어디 있냐, 수원시장 집에 가 있다고 하니 주민들하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김용서 시장 자택인 망포동 아파트까지 가서 밤새 촛불 농성을 했어요. 그렇게 투쟁을 했던 부분과 이전 공청회에서 제가 공무원들 못나가게 했다고 집시법 위반, 폭력, 공무원 감금·폭행 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어요. 집행유예로 2달 살고 나왔고요.

반대 투쟁하다가 구속까지 되셨군요.

김명옥 ■ 그 다음이 또 웃기죠. 계속 집회하던 상황에서 저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중부경찰서에서 여러 번 통지가 나왔어요. 지금 주민들이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가롭게 조사받을 상황이 아니니 다 끝난 다음에 받겠다고 했죠. 근데 3번 이상 안 받으면 강제 연행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2시간이면 조사 끝내고 보내준다고 하니 그 말만 믿고 3번째 통지받고 제가 갔었죠. 가서 한 2~3시간 조사가 끝나고 보내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손에 수갑을 딱 채우는 거야. ‘김명옥 씨는 이제 못 나갑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구속된 거예요.

그렇게 구속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나요?

김명옥 ■ 어쨌든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겠죠. 구속 절차를 다 밟아놓고 자진 출석하게 할 목적으로 참고인 조사한다고 거짓말했던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그들 논리가 있겠죠. 거기서 바로 구속되어 재판 받았던 그때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애가 나올 상황이었는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한 달인가 지나서 아내가 특별 면회를 왔을 때 우리 아들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많았던 사건이었죠. 그때 태어난 우리 도현이 돌잔치도 주민들이 성대하게 해줬어요, 도연이가 19살이니까 우만고가 투쟁도 19주년이에요.

**우만고가차도 건설현장의 주민농성장을 인도래 마을신문에서 취재로 갔다가 이 운동에 핵심인들이
되어지셨는데, 이 주민농성이 있고 얼마 만에 참여를 하신건가요?**

김명옥 ■ 그 당시에 시가 일방적으로 고가차도를 놓겠다는 발표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
하거나 설명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고가차도가
들어오는구나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당시 그 주변의 세대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들어온 신상미소지음아파트 포함한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놓거나 사람들이 걸어도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거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고가차도는 반
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로 우리를 설득해달라고도
했는데 시에선 좀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현수막 붙고 집회하니
까,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마을신문에 답아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냥 단순히 취재 목적으로 간 거예요. 제가 2001년부터 마을신문을 시작했었고 그
때가 2003년도니까 한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일년에 4번씩 냈어요. 그런 단순한
동기에서 대책위에 노크하고 찾아갔던 거죠.

**어떤 계기와 고민들이 환경운동과 마을신문, 또 주민들의 직접 행동과 연결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당사자 주민은 아니었고 우연찮게 개입되었다가 중심에 서게 되셨잖아요.**

김명옥 ■ 제가 전에 KYC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을 하면서 2002년도 4월에 인계동에
서 시의원 첫출마를 했어요. 마을신문을 그 전부터 만들었는데 출마 후에도 지역 활
동 차원에서, 풀뿌리 자치운동 차원에서 제작해 왔던 거였고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해 공부 하고 싶었는데 녹색환경연구소에 기회가 생겨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가 우만고가차도를 주민들과 같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운동을 현장 체험하
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만고가차
도는 제가 환경운동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 운동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그 전에도 지방 선거에 나가고 마을신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동네 현안이라든지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들에서 밀접해서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
만 그 운동의 중심에서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마을 신문
을 만들려고 순수한 취재 목적으로 갔다가 조언을 드린 건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해왔고 저도 동네에서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네 지
역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이고, 잘못하면 불상사가 생길 상황이 보이니까, 내가 중간
에서 잘 좀 코치하면, 주민들도, 시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응했던 수원시의 방식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죠. 공청회에 온 공무원들
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가버린다던지, 또 용역 강패를 동원해 가지고 노인네들, 할
머니들을 강제로 해산시킨다던지, 이러면서 좀 극명한 주민투쟁으로 전개가 됐던 양
상이 되었어요.

주민들은 저를 외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또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시민운동가로서 대접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잡혀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줬고, 제가 없었을 때는 1일 후원주점을 열어서 집사람이 출산했을 때 격려금을 보탠다던지, 또는 돌아가면서 출산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죠. 그분들은 저를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자기 사람으로 인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만고가차도는 주민들과 제가 한 몸으로 함께 해왔던 운동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만고가차도가 건설이 되었어요.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심정은 또 어떠신지요.

김명옥 ■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죠. 사실 초기부터 하려고만 했다면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애초에 지하철도 얘기가 안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또는 건설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을 향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얘기했어요. 어차피 놓을 거라면 주민들에게 이익될 만 한 건 다 받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죠.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친 사람들도 많고, 15여명 정도 되는 주민대책위에게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재산가압류가 들어와서 집안에 다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그분들이 한 1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저랑 주민자치위원장이 감옥에 갔고, 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손실을 겪으며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붓고도 결국에는 고가차도가 지어졌을 때 주민들 속에서도 패배감, 상실감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왜 했나 하는 자책과 평가도 일부에서는 강하게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수원의 교통 문제를 차도를 확장하고 입체화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수원을 거쳐 통과하는 차량은 외곽으로 빼고, 도심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도로나 거리를 조성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는 주민들의 뜻은 끝까지 고가차도가 나온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인우회’라고 인계동·우만동 모임이 만들어져 최근까지도 모이면서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만고가 뿐만 아니라, 동수원고가, 밀레오레고가, 한일타운 지하철도로 이어지며 이후에도 3~4개가 추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동네만의 사안과 이권을 위해 싸웠던 투쟁이기보다는, 수원시 교통정책에 대한 싸움이었던 측면에 주민 행동의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 당시 수원시의 일방적인 도로정책 내지는 교통정책에 대응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싸웠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투쟁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명옥 ■ 그 당시에 시민단체로는 사실 경실련이 적극적으로 했었고,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일부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저하고 주민대책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가 붙는 양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좀 일찍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왜 시민운동가를, 주민대책위원장을 구속하느냐, 구속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시민운동 전체 진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니까 어느 순간에 주민들에게 가해진 손배상 가압류도 풀고, 우리도 한 2달도 안 돼서 집행유예 받아 나왔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함께 했던 건 사실인데, 그때 민선 3기 김용서 시장의 그런 일방적인 행정에 대응할만한 좀 더 조직적인 시민운동의 대항력이라든지 네트워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교통대란이 심각했던 시기인 것은 맞고, 수원역을 비롯해서 여러 곳곳이 상당히 막혔죠. 도시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로 인구유입이 심각해지고 차는 많아지는데, 한국 사회 어디에서도 사실 녹색교통운동으로 풀어진 데가 없었어요. 그런 새로운 대안의 교통정책을 만들어냈 사례가 없어서 그냥 그 물에 휩쓸려 들어간 측면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교통문제는 참 시민사회운동으로 풀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김명옥 ■ 저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러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과 대기문 제등,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원시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야하는가의 문제예요. 1번 국도를 입체화해서 수원시민 이용이 몇 %나 되겠어요? 1번국도는 대부분이 통과차량인데. 사실 우만고가차도는 그 이후에 본격 적으로 건설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 증거로 경 기도 예산이 전체 도로예산의 거의 70% 이상 지원했다는 것을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 이건 수원시 고유의 목적이 아닌거죠. 그런 목적이라면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원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는 건데 수원시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교통정책으로 보여졌지만, 행정을 펼쳐가는 수원시 집행부가 주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김명옥 ■ 그럼요. 결국에 저와 주민대책위원장을 고소·고발한 것은 지금 고인이 된, 그 당시의 도로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시민을 고발한 거죠. 근데 그 분이 뭐 시장의 결재 없이 했을리는 없고,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시민을 고발한 거예요. 사실 경기도민을 위해서 1번국도 입체화를 한 것이고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맞춰 우만고가를 한 거예요. 이 지역주민들이 놓아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통과차 량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었으면 서수원이거나 영통 쪽의 외곽으로 빼거나 거기를 입체화시켜야죠. 왜 도심 한가운데를 입체화했으며 우만고가는 또 무슨 상 관이 있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원시장이 수원시민들을 희생시킨 거 아닌가요. 공사하려고. 그런 단체장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걸로 주민들을 고발하고, 구속까지 시킨, 또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 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가 정말 건설 붐이었죠. 대부분의 육교, 고가차도, 지하차도가 들어섰어요.

김명옥 ■ 엄청났죠, 정말. 그런 건설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뒷거래가 정말 없었을까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만고가차도 건설 반대 운동 이후에도 여러 역할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수원지역에서 김명옥님이 해온 시민활동을 좀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김명옥 ■ 저는 학생운동 한 10년, 그 다음에 시민운동 한 10년, 그 다음에 시의원 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한 10년, 그렇게 30년을 운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경험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우만고가차도를 만난 겁니다. 우만고가차도에서 일방적인 시 행정 독주와 시민의 편에 서지 않는 공무원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 행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의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연장선에 있었다는 거죠. 다 운동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왔다고 저는 사실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시민운동인데, 시민운동은 저에게는 정치적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남들이 가장 안 가는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서 환경과 교통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가차도나 시민운동의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시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환경 분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만고가차도를 포함한 시민운동은 제가 이후에 정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모든 활동의 본질을 규정한 중요한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했던 시의 관행을 바로잡는 일들을 시의원 의정활동을 통해서 펼쳐냈는데, 혹시 그렇게 개혁되거나 개선되는 사례로 소개해주신다면요?

김명옥 ■ 이제는 좀 오래됐다고 해야 하나? 39살에 시의원 되어서 8년 했어요. 지금 54이니까 7년 흘렀나요? 시의원 8년 하면서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 어떤 본연의 사명이라든지 일이기보다도 어떤 그 정치권력을 위한 정치가 너무 많았어요. 공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부분들, 공천권자와 그 당에 충성해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 8년 했으면 됐다, 이제 다른 사람도 좀 해야 되지, 이게 내 평생 직업도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시의원이 일단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런 술과 긴장, 스트레스들로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고지혈증에 체중도 갑자기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의원 하면서 일단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의원들끼리 스터디도 했었고,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사전에 우리가 기획을 해서 여행사 없이 직접 가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방향으로 했고, 의원연구단체도 그때 처음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구요. 저는 철저히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하거나 선거운동도 전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했어요.

그게 우만고가 투쟁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건도 안됐지만. 저는 자전거 타는 걸로 모든 게 가능했어요. 환경의 제나 녹색교통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던 측면도 있었구요. 우만고가의 투쟁의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적대적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시의회 들어가서 공무원들과의 사이를 잘 끌어가는 스킬이 필요했는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만고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질책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었어요. 대신에 그걸 뛰어넘는 녹색교통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같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공무원이 뽑은 최우수 시의원에 제가 3연속 선정 되니까 의원들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맨날 김명옥이만 뽑냐, 없애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3명을 뽑았어요. 하여튼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민운동가가 앞으로 시의원이든 시장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조언해줄 수 있을까요?

김명옥 ■ 전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의원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가 많은 예산을 시로 부터 받잖아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청 같은 거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많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큰 틀에서 시민단체가 전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험 많고 미래를 보고 운동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원 받고 사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안목을 가지고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저는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공모사업에 매몰되는 시민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업은 하면서 시의원 하는 것은 터부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멀리하면 할수록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잖아요. 저는 활동가들이 출마도 적극 해야 하지만, 행감 등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의원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 어떤 조례를 만드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하면은 당선운동, 낙선운동도 해서 시의회의 정치권력을 바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정치 현실들을 바꾸기는 해야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김명옥 ■ 코로나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고 좀더 내용 있게, 본인에게 부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접촉면적을 넓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운동을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만나야하고,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나오거나 하지 않듯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권력을 행사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각 당에다가 시민단체 몫을 요구하고 시민활동가로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활동으로 검증된 사람이니까 공천

을 하라고 각 당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시민단체의 몫으로 공천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개인적으로 공천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 진영에서 해야 되는 거죠. 비례대표도, 각 지역별로 한두명씩은 시민단체가 공천할 수 있게끔, 서른 몇 명 중에 열 명 정도는 시민단체가 공천을 하는 거죠.

우만고가차도 건설반대 운동할 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방식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변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명옥 ■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치와 분권이라던지, 시민 참여 도 시계획이라던지, 협치라던지, 시민단체를 넘어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어요. 우만고가 때는 일방적 행정을 견제할만한 법적 조례나 장치도 없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도 부족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 자료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시민들 저항에 용역깡패들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태영 시장님 12년간 그런 부분들을 뿌리부터 바꾸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든 것은 의미가 있었다봅니다.

우만고가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활동들의 성과와 지금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명옥 ■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시민단체 활동가1명과 주민 1명이 구속되었던 상징성이 있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지역적인 요구가 아니고 교통정책에 대한 시의 일방적인 독재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운동의 기본적인 취지나 정신, 맥락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걸 교훈삼아서 시도 일방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사람의 얼굴을 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문명의 편의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게 우만고가 반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저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가야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속가능한 교통이라던지 생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지역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호응, 연대 등을 높이기 위해 펼쳤던 노력이 있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옥 ■ 그 이후에 바로 광교신도시 개발 문제가 터져요. 그 당시에 광교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대라기보다는 친환경적 개발이었어요.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토론회도 개최하고, 환경지 답사도 가고, 환경영향평가도 요구하고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마스터플랜도 만들었어요. 친환경 개발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민들 여론이 개발 쪽으로 바뀌어서 엄청 당황했어요. 결국에는 토지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죠. 어쨌든 광교신도시를 2만 세

대로 제한하고 녹지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경기도시공사의 광고신도시 개발 추진 측에서는 2만 세대를 2만4천 세대, 결국에는 3만1000세대까지 늘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천저수지의 5천평을 묻었고, 광고산 녹지축 위의 자락까지 아파트가 들어간 거죠. 그런 대응하기 위해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 광고신도시의 주민들을 조직해서 대항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변질되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정책 활동으로 국한되니까 한계가 많았죠. 그 활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대응하며 그렸던 광고신도시와 지금의 광고신都市는 어떤가요?

김명옥 ■ 저는 놀랐어요. 일단 아파트와 아파트가 너무 타이트해요. 또한 광고산의 녹지축도 굉장히 많이 훼손됐고, 생태통로라고 하나 놓았는데 그건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지, 생태통로의 역할로 전혀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교통문제, 주차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 너무 많은 인공구조물로 산책로 조성을 해서 자연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개발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지어서, 당초 계획인구가 7만 정도인 걸로 아는데, 훨씬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거기서 세수 증가는 되지 않았을까요?

김명옥 ■ 세금 무지하게 나오죠. 근데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져가요. 시는 아무 것도 없이 컨벤션센터 하나만 얻은 거예요. 그런데 유지보수 관련 비용은 수원시에서 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듣기로 알다시피 세금이야 일정 부분 들어오지만, 과잉개발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하게 될 거예요. 학교 문제, 방음벽 문제, 교통·주차·녹지 문제 별의별 문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외에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명옥 ■ 꼭 선수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자. 지역 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지역정치거든요, 지방의회, 지방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정치세력을 온건하게 세우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지만, 환경단체가 산이고 하천이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세우는 사람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를테면 도덕성일까요? 화합력일까요? 수원이 당면한 문제하면 여타에 흔들리지 않고 독심으로 밀고나가는 추진력일까요, 어떤 역량, 덕목이라고 보시나요?

김명옥 ■ 저는 현시장님의 정책과 특성이 있었고, 그 전과 전전대 시장님의 정책이 다

다르고 장단점이 있겠죠, 현재는 그 세 분의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 것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도덕성이나 품성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소탈하고 겸손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합니다. 끌고가는 게 아닌 서로 소통하는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원이 되기 위해 어떻게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미래 수원을 만들어갈 것인가의 측면으로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은 이제는 지양하고 관리형으로 가야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문화와 관광을 중심에 둔 경제활력에 중심에 두어야겠고요. 어쨌든 수원은 문화나 농업하고는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문화와 농업을 콘텐츠로 해서 경제적 기반을 탄실하게 가져가고, 한편으로는 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특례시는 새로운 기회로서 잘 살려서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 생존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활동 또는 공간들은 너무 소중해서 살려 가면 좋겠다, 반대로 개선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김명욱 ■ 수원에서 농업을 잘 조명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가까운 여기산에 우장춘, 김인환, 정남규 묘소가 있어요. 우장춘 박사가 알다시피 근대 농업을 일본에서 처음 들고 온 사람이고, 또 한분은 농진청을 만든 사람이에요. 또 한분은 72년도에 농진청장을 하면서 통일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이 기반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어요. 농진청이 이전했지만 아직도 농업과 작물에 대한 연구는 남아서 이루어지고 있고 서둔동을 가면 새마을운동이 첫 봉기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현대 역사에서 농업의 상징성이 수원에 있습니다. 농촌박물관도 지어지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자원이 지금은 개량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서 도시농업이 갈수록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농업은 식량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여건도 좋고, 정신도 있고, 미래의 비전도 있으니 에코팜, 케이팜등 도시농업을 서수원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 했으면 해요.

저는 광고나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 가격이 싸서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아파트를 무한대로 짓고있는 것도요. 화성진안지구에 2만9천 세대를 짓겠다 하는데, 2만9천 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가면 3만5천세대가 들어와요. 수원과 경계가 무너지고 도시와 도시가 붙는 연담화가 가속화 될것입니다. 삶의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집은 이제 그만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이제 택지개발을 그만해야 합니다.

3기 2001-2005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 발족(2003) 후 청구인 서명운동(2005.3~6월 22,909명 서명)으로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발의함. 천막철야농성(시정), 천인선언, 선전전(2006) 등으로 제정을 촉구.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수정가결 (2006.04.26)

권미영

4기 2006-2010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공동행동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시민분향소 설치,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 수원역·호매실·성대앞·매탄 촛불행동을 매주 진행해옴.

유주호

먼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수원시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전반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영 ■ 사실은 거의 20년 전이라서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2003년도에 수원시에 시민단체 월례회의가 있었어요. 그 해 9월경 안건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원지역에도 급식조례제정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 되었어요. 그 당시 경기도는 좀 늦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도시에서 이미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조례운동을 진행하던 때였어요. 또 학교급식이 대부분 위탁급식이라 급식사고가 많이 나던 때였어요. 그리고 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지요.

처음엔 학교급식조례운동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했었어요. 또 경기도운동본부가 있는데 수원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고요. 논의 가운데 경기도 학교급식개선 및 조례제정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단체별로 경기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수입인 신청과 서명활동을 전개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조직의 틀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가 제안되고 수원운동본부 발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11월에 각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참여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자 회의를 결성하고, 11월26일에 학교급식개선 및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 발족식을 기자회견과 함께 수원역에서 진행하게 된 거죠.

긴 이야기지만 2004년에 주민발의로 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정이 진행된 후에 2005년부터 수원시 조례제정운동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어떤 진보나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

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주겠다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 회의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아주 다양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민노당이라든가 정당도 함께 하고 수원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 천주교수원 교구 등 종교단체도 함께 했었지요. 또 전교조 그리고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회의 외에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직능 기관들도 경기도조례제정운동을 할 때는 같이 참여 해 주셨어요. 직능기관의 대표도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도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장을 찾아간다는가 할 때 같이 참여하면서 공감대가 넓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수원YWCA가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YWCA가 주 사무국을 맡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어 오늘 인터뷰에 임하게 된 거 같네요.

수원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당시 시의원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결국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가결해야 하니깐요. 그 당시 네 분의 시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었어요. 김현철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차궁호 의원님 등 시의원 분들이 조례안 검토와 절차 등을 자문해 주셨고, 또 다른 시의원과의 협력하는 일들을 도와주셨지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모임, 집행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의견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주민발의 운동방식과 조례제정의 목표들은 경기도 조례제정 수원운동본부로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공유했었고요, 참여했던 단체들은 너, 나 할 것 같이 정말 열심히 진행했었거든요.

수원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토론회도 열었고 광고산, 수원역, 농산물센터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서명을 받았었어요.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아파트에 홍보하여 서명을 받았던 단체들도 있구요. 그런데 이 서명을 받을 때 반대급부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다 동의를 해 주셨던 거 같아요. 하지만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 서명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에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기록하기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서명받는데 어려움도 따르긴 했었지요.

3년 넘게 긴 호흡으로 이끌어와서 2006년도 4월 26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참여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수 쪽에서 참여한 단체들에 기억하십니까?

권미영 ■ 처음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경기도조례제정 수원운동본부로 활동할 때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있는 수원지역의 회원단체들이 개별 단체 이름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기지부 수원지회를 통해서 서명을 받아 주시는 일에 함께하셨었지요. 그 당시 경기도조

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 활동 시에는 12개 단체가 참여했었던 거 같아요. 그 당시 참여했던 단체들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드릴 수 있겠네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천인 선언을 조직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권미영 ■ 천인선언을 설명하려면 경기도조례제정운동과 수원시조례제정운동을 좀 나누어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04년 9월22일에 경기도의회에서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 당시 경기도는 20만 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지만 실제 유효서명수는 16만2천명이었어요. 청구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다 들어가고 또 유효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분류하는 일들도 만만치 않았지요, 각 단체마다 사무국인 수원YWCA에 모여서 구와 동을 나누어 서명용지를 분류하는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원도 2만 명 이상 서명받는 것이 목표였어요. 경기도조례는 조례 제정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WTO 위반소지가 있다며 조례에 대해 제소를 했었지요.

경기도학교급식조례 제정 이후 수원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다시 펼쳐졌어요. 그해 10월에 조직을 정비하는 회의를 했었어요. 실무 집행단체를 4개 단체(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연합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일하는 여성회)로 구성하여 대표자도 상임대표 4인 체제로 구성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참여단체도 확대되어 수원지역 19개 단체가 참여했었어요.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수원시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민토론회와 시민홍보를 위한 10문10답 자료를 준비하고 수원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었지요.

2005년 3월~6월까지 3개월간 서명을 받아 6월 20일에 수원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지요. 당시 수원시 주민발의로 청구할 수 있는 참여자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1만1천명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 2만 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주셨고요. 6월20일 수원시청 앞에서 22,909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와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그 전에 시청 앞에서 수원시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 기자회견을 먼저 했었고요. 상임대표분들 집행위원들, 참가단체 실무자들 50여명이 참여했었어요.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후 문제는 우리가 청구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제정되기까지의 어려움이었어요. 2005년 6월20일에 수원시에 청구인 서명용지를 제출한 후 2006년 4월에 제정되었으니 근 10개월이라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 많은 싸움과 어려움이 있었죠.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수원시는 국내산으로 한다는 조항은 WTO에 위배된다는 견해와 예산확보동의 문제 등을 검토의견으로 하여 의회에 제출했고요. 의회 역시 9월 임시회에 상정하지만 협의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보류의 움직임이 커보였어요. 그래서 보류되지 않도록 각 신문에 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하고, 임시회에서 통과를 촉구하여 시의원들에게 1:1로 꽃과 우리농산물로 만든

간식을 전달하며 대화로 설득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던 거지요.

수원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하는데 수원시와 의회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당시 수원시는 학교급식조례 관련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데 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재정을 수원시에서 담당해야 하나”에 대한 문제로 시민단체는 예산만 요청하면 되는 줄 아느냐 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시청 실무진에서는 급식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경기도조례가 행자부에서 제소한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조례안 문구에 국내농산물이 라는 표현과 무상급식에 대한 문구 삭제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수원시의회에서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후 수원시 체육 청소년과, 자기기획위원장, 위원 분들을 상임대표 분들과 방문하고 면담하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어쨌든 수원 최초로 주민들의 힘을 모아 청구된 조례가 집행부와 의회에 의해 조례안 안건만 상정하고 그냥 넘어갈 위기였어요. 사전설명회, 간담회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보류되었지요. 그래서 2005년 11월에는 12월 본회의를 앞두고 시청 앞에서 원안대로 조례안 상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하며 지지자들의 천인서명에 돌입했던 것이지요. 10월 이후 천인선언 등을 진행할 때 저는 타 기관으로 발령이 나서 조례제정운동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있네요. 천인선언,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은 일하는여성회 이미영 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주민 발의는 몇 명이 동의서를 넣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인선언하고 그게 연결이 되나요?

권미영 ■ 조금 다르지요. 당시 1만1천명 이상의 주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면 되었는데 22,909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여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지요. 천인선언은 주민발의 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후 지속적으로 심의가 되지 않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중의 하나였던 것이니까요. 9월 보류 이후 2006년 2월에 열린 임시회까지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임기 안에 제정하겠다는 말만 시의회에서 반복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운동본부에 연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철야, 천막농성을 시청 앞에서 진행했던 거예요.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해오셨던 여러 운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권미영 ■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드는데 보람도 재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민주진영, 보수진영 등 진영의 논리와 진영에 따라 양분되는 운동들이 참 많았잖아요. 또 당시 진보당이 강하게 활동하던 때였던 거 같아요. 이때 운동본부에서는 정치적 운동으로 가지 않도록 강한 원칙들을 세웠었어요. 한 예로 당시 수원 남문에서 수원시급식조례제정 관련 집회를 할 때, 한 정당에서 주황색의 잠바를 입고 참

여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참여를 제지하고 집회에서 나가달라고, 이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고 요청했었죠. 시민들에게 급식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야 하는데 여러 단체가 함께 하는 집회에서 하나의 정당색이 나타나면 운동이 훼손되고 참여하려던 시민들이 참여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지요.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이름을 걸어달라고 할 때 회의를 통해 다 차단시켰었어요. 참여 없이 이름만 걸거나 하는 것들을 막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관들이 나름 열심히 했었지요. 이 운동이 먹거리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굉장히 컸고 수입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예요. 또 하나 그 당시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식중독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으로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급식은 밥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이라는 개념의 운동이었지요. 급식으로 인한 학교 학생들 간의 갈등도 없애고 급식은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급식 먹거리를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같이 갔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서명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당시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부모 서명도 많이 받아주셨지요. 사실 이것은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서명용지에 서명을 대강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서명용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취합된 서명용지를 구와 동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만 남네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얻기가 쉬웠던 그런 주제였다는 거군요.

권미영 ■ 주제는 명확한데 수원시에 주민발의 조례 제정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발의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냥 의원발의라든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힘을 행사해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수원시 차원에서 그대로 느껴졌었지요.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동감한다 해도 문구마다의 이견이 많이 있었구요. 이 운동은 시민들의 주권운동인 거였어요. “주민발의가 뭐다, 주민들의 힘이 뭐다. 왜 우리가 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주민의 힘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주민발의로 이것을 하시려고 했죠? 시의회 의원발의나 행정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권미영 ■ 물론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지만 급식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

용들은 주민들의 주권, 자녀들의 건강권과도 매우 밀접한 내용들이었죠. 충분히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정말 필요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우리 스스로 만들자 라는 주민운동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시의원들도 이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지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모든 부분에서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WTO에 걸린다면서 방해를 했구요,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 저항이 많았지요.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기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좋고 가능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해 온 많은 지역들의 성과가 있었기에 주민발의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거 같아요. 수원도 그냥 의원 발의로 해서 쉽게 가지 말고 주민들의 참여로 함께 가보자라는 것들이 있었지요.

타 지역에 이미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든 성과들도 있으니 수원도 의원 발의로 쉽게 가지 말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로 가보자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당시 어떤 목표로 추진했었나요?

권미영 ■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주민발의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우리 농촌 살리기에 대해서 알린다”라는 질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발의는 시민 대비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수치적 양적 목표도 있었죠. 그래서 그 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수원시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수는 청구인수는 1만1천명 이상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2만 명 이상이 참여해주셨죠.

그 뒤로 이렇게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은 없는 거죠?

권미영 ■ 지방자치제도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없을 거라고 봐요. (수원시에서는 마지막이자 처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토론회를 펼치고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또 시민들에게 공유해 주면서,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진행해왔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 안에도 소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성단체들이 열심이었지요. 수원YWCA에도 소모임들이 있었고 회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조직이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겼던 거 같아요. ‘나도 여기 구성원으로서 서명을 받는다’ 하면서 이웃, 교회를 통해서 서명을 받아다 주곤 했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 먹이겠다니까 많이 참여했었어요. 시나 교육청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예산이 안 맞는다, WTO에 제소되어 외교적 문제가 된다 등 반대도 많았었어요.

이렇게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과정이 수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권미영 ■ 저는 이러한 조례제정운동이나 여러 운동을 볼 때 당장의 어떤 성과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었고 대부분이 주민발의 운동이었지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과제였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이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기 힘들지요, 그 당시의 운동들이 기반이 되어서 현재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기반이 되었고, 또 친환경급식센터와 친환경급식조례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었겠지요.

혹시나 수원 이외에 경기도 지역에서 수원 이외에도 지역에서 이런 무상급식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권미영 ■ 안산, 고양도 굉장히 활발하게 먼저 진행했었고 수원이 늦었죠. 이미 많은 시군에서 활발하게 급식조례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수원은 급식조례운동 시작이 조금 늦었지만 경기도급식조례제정운동의 수원본부로서 성실하게 참여했어요. 그 기반을 가지고 수원시조례제정 운동을 펼쳐나갔었지요. 함께 한 단체들과 민주적인 합의, 지속적 공유 등을 해가면서 진행했기에 원안 수정의 아쉬움이 크지만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자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서 함께 연대하고 그런 어떤 정보를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이 꽤 이렇게 정말 앞 뒤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일이 될 때 운동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3년간 하다 보면 서로 지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권미영 ■ 기관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급식조례제정 수원운동본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깐 기본적으로 업무가 좀 많았지요. 그리고 조례안이 제정되고 정책에 입안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조례제정운동본부에 마무리는 못하고 2년간 함께 했네요.

여러 단체 활동가가 함께 하는 가운데 참여하던 활동가들의 역할이 변경될 때도 있고, 각 단체마다의 분담된 역할이 있는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좀 어려웠지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했지만 모든 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서요.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운동은 각 기관이 함께 회비를 내어 진행했었어요. 시와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도 쉽지 않았어요. 오래 되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잘 안 나긴 합니다.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운동을 회고하면서 한마디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권미영 ■ 시민운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연대의 힘인 것 같아요. “연대의 힘”. 왜냐하면 각 기관들이 아무리 좋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 조직만의 운동이고, 저것은 저 조직만의 운동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갔을 때 그것이 조직된 운동으로 시민들에게 시너지를 내고 또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단체 운동으로만 가다 보면 금방 끊어지고 기억해 주지도 않고 역사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좀 빠져 있기도 하지만 시민운동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권미영 ■ 변해야 된다. 이제는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느슨한 연대로 결합을 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사회가 된 거 같아요.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이 어떤 제도나 그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외부의 시민들을 끌어 들이는 데 한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중심 운동들이 변하지 않으면 시민과 결합하는 운동은 점점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욕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결합을 하려면 그에 맞게 운동방식도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이를테면 YMCA나 YWCA나 경실련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상담을 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일로 그런 단체를 찾아오지는 않죠. 어떤가요?

권미영 ■ 안 찾아오고 본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죠. 온라인상에서 내가 관심 있는 운동 내가 관심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서 조직 없이 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조직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펀딩을 한나라든가 뭘 한나라든가.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시민단체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틀린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활동가들의 연령도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 20년 전에 뛰었던 실무 활동가들이 지금 이 나이에 현장에 뛰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젊은 청년 세대와의 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요. 물론 요즘 취업, 일자리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정의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청년층들을 이 시민 운동에 어떻게 결합시키려는가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시민 운동이 지속되려면요.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명 정도의 청년 인턴을 지원해 10개월 생활임금을 주고 시민단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활동하고 경험하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할 활동가나 청년들을 지원할 방법들을 고려한다 하면 어떨 거 같아요?

권미영 ■ 저는 욕심이 나는데. 하지만 제가 현재 일하는 조직은 특성이 명확해요. 일자리, 취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성평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의 기관이에요. 공익활동의 운동조직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조직이라 그런 친구가 오면 운동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 일만 배우다가 마칠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권미영 ■ 일자리 지원 역할이 공익이라고 보고 연결한다면 괜찮겠지만 시민운동으로 본다면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턴이나 청년 인력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어떤 단체에서 인턴 역할을 할 때는 잉여 인력이 아니라 충분히 기관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어서 적어도 인턴 활동 이후에는 시민운동, 공익활동에 대한 비전을 갖게끔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잉여인력으로서의 역할만 하다가 마치면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공동행동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4.16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지금까지에 활동과정에 대해 유주호님이 기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주호 ■ 제 이야기와 수원지역 활동가들의 기록집을 가지고 왔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록집에는 4.16활동에 대한 중요한 일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결합하면서 집행 활동을 하다보니, 회의록과 선전물, 보도자료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족하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수원에서 활동한 기록도 남아 있고요.

세월호 과정들은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수원시민들이 무사귀환 촛불 집회를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수원역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모임인 매탄동 촛불이 피켓팅을 4월 22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도시로서나 마을단위에서의 수원활동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분향소가 4월 30일 설치를 하고, 아마 8월까지 운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보산 마을촛불이 참사가 일어난 다음 달인 5월 24일 시작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님들과의 공동행동은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활동을 한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참사로 희생을 당한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느끼며, 같이 아파했던 시민 분들이 촛불과 서명이라는 공간으로 모여 다양한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천만서명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2014년에 수원시내에 게시한 족자현수막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성금과 문구를 모아 1,000개를 시내에 걸었습니다.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회의를 하면서 몇 개 정도 할까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이 100개, 200개 등의 개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민들을 믿고 1,000개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하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후 수원시와 협조적으로 세월호 활동을 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000개의 현수막이 가능했던 것은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활동가들과 같이 동참해줬던 시민들의 주인 의식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1,000개의 현수막을 시내에 거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셨군요. 또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유주호 ■ 신청하신 분의 성명과 원하는 내용의 문구를 받아서 현수막에 넣었어요. 일일이 1천개의 현수막 디자인을 활동가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워서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참가자들이 직접 달았어요. 지역을 나눠 가지고 길거리에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은 많이 힘들었죠. 족자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일주일 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거리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에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 한 것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에 그 구간 10km에 집회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원의 중부·서부·남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었죠.

2014년 12월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성원들이 송년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한해를 돌아보고, 2015년을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수원지역 4.16활동은 풀뿌리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 됩니다.

‘성대역피켓팅팀’이 1월부터 활동을 매주 시작하게 됩니다. 성대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성교회의 사회선교부에서 활동하시는 신도분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피켓팅을 하시다가 올해 7주기 이후에는 매월 리본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교회 내에서 직접 세월호참사 관련 행사도 하셨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참사 초창기에는 피켓팅을 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쳐다보지를 았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피켓팅을 진행하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과 의문이 많은 것이 드러났을 때 교인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을 직접 느끼신 거죠. 남기업 교수님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몸자보를 하고 전철을 타고 다닐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은 아닌지? 세월호참사의 피해 도시인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활동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희생자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구조를 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구조를 안해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과 다른 탑승자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된 문제잖아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었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세력들이 그들이잖아요. 박근혜는 지금 구속이 되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은 구속사유에 탄핵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해수부와 경찰청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버젓이 지금도 직위를 유지하고, 새누리당은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꿔서 뽀뽀하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수원지역으로 옮기면 ‘희망샘도서관’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해 주신 것 같아요. ‘4.16수원지역북콘서트’와 시민문화제를 직접 주관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진실버스 등의 참여를 희망샘도서관-인문학팀이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은 ‘희망샘도서관’이 수원4.16연대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4.16활동을 하면서 수원의 풀뿌리지역에서 4.16활동을 하는 모임과의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만나다 보니 지금 수원4.16연대 운영위원회에는 풀뿌리 모임인 ‘영통노란리본공작소’와 ‘수원여성회노란리본공작소’ ‘매탄마을노란리본공작소와 촛불’와 성대역피케팅팀 등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수원지역의 활동은 3주기까지는 회의도 진행이 되고 같이 활동하는 폭이 넓었습니다. 3주기를 진행하면서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에 참여를 했던 단체들의 결합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다보니 3주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혼자 다 하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역할을 나누워서 할 실무역량이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당시 회의의 구성원에 의견을 주지만 책임을 안 져주니까 어려웠습니다. 아마 무상급식 할 때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행사적으로는 수원시립합창단과 수원시민합창단에서 같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와 약속의 무대를 의미 있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4.16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세월호 참사 3주기 때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참가자들이 아직 조례를 만들기에는 내부적으로 “준비와 공론화가 부족하다”여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풀뿌리 모임이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회의에 참여를 했던 것은 3주기가 지나고 하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자 사는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4.16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통해 수원지역의 4.16활동을 다시 잘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회의를 결합을 하셨을 때 풀뿌리 활동가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하셨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소한 단어가 있는 안전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 없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표현도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표현을 일반화하여 ‘안내’, ‘나눔’ 등 친숙한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수원에서도 ‘박근혜퇴진 수원시민행동’을 발족 하는데 산파 역할을 한 것이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이었습니다. 초기에 참여를 했던 50곳이 넘는 모임과 단체를 기본으로 마음을 모아 많은 단위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국민들이 외쳤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세월호참사 이후 누구나 공감하던 요구였습니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같이 묵묵히 헌신하던 동갑내기 친구죠. 김영균, 김성연씨가 있어서 가능했겠죠.

다시 수원 4.16 활동 이야기를 하면 영통노란리본공작소 3주기 때부터 같이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란리본 나눔을 책임져 주시고, 직접 수원역시민분향소 지킴이 활동도 하시면서 4.16의 공감대를 넓혀 갔던 것 같습니다. 수원은 현재 ‘4.16 조례’가 제정이 되고, 수원시도 수원4.16연대와 함께 4월16일을 전후해

서 공동으로 기억과 약속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4.16활동가들과 수원시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4.16 관련해서는 피해자 도시를 빼놓고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염태영 시장님이나 수원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안산시도 이 정도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올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수원시청에 세월호 기와 대형현수막을 게시 한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진행을 하니깐 바로 안산시, 안양시도 진행을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원시가 세월호기를 게양하니깐 안산시도 진행을 한다고 안산지역 활동가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수원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영통노란리본공작소에서 활동을 하는 구민서 씨가 용인시장한테 수월도 하는데. 용인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깐 바로 수락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진행한 세월호기 게양이라는 4.16활동이 주변도시에 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서 모두 좋아했습니다. 한번 개정된 수원시 4.16 조례는 피해자 도시와 광역 단위를 빼고는 전국 지자체 최초입니다. 수원시 조례가 계기가 되어서 성남, 광주, 울산, 서울 등 전국에 생기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2022년 4.16세월호 참사 추모와 기억의 사업은 올해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지난 8월 신청을 했고요. 현재 성남시와 울산시에서 4.16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수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에, 최소한 이러한 참사가 재발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4.16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활동은 정부와 지역의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에도 행정이 책임 있게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4.16의 교훈인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다음에 진실 규명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수원4.16연대는 단체 중심은 아닙니다. 풀뿌리 조직이 중심입니다. 일상적으로 자기 마을에서 4.16활동을 매주 진행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4.16재단이 설립이 될 때 수원지역에도 운영위원 제안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YWCA에 제안을 하고 초창기에 이귀선 총장님이 운영위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6재단이 만들어질 때 수원지역의 풀뿌리모임에서 100만 원을 내는 발기인을 6~7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사업은 수원역에 있는 안산가는 버스정거장에 설치한 4.16세월호표지석이었습니다. 안산시에 건립 예정인 생명안전공원으로 갈 수 있는 장소에 표지석을 설치한 것입니다. 수원시민들의 모금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 공식적으로 4.16기억 행동을 하는 토대로서 조례가 중요하지만 사실 만들어 놓고 안 하면 끝인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어

요. 북콘서트와 진실의 연날리기. 두 가지 하기로 회의 때 결정하고 신청해서 진행했습니다.

어제 성대역 피케팅팀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간담회를 했어요.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해야하나 고민이 많죠. 간담회를 진행하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한번 힘을 내고 계십니다. 가족분들과의 만남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지역에서 4.16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오십 명 되는 거 같아요. 제가 풀뿌리 별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위 때 50명을 100명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일상적으로 풀뿌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원과 전국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4.16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전일 상근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안에 일이 생겨 경제활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월호 조례 수원시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했어요?

유주호 ■ 세 가지입니다. 희생자 추모, 진실 규명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원래는 안전사회 건설로 넣으려고 했는데, 건설하면 지자체와 의회는 목표가 생기는 거라서 건설·교통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꿨죠.

세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원가를 해보거나 지역적 접근을 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유주호 ■ 4.16기억공간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영통에 있는 교통공원을 안전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수원시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안전공원 한 공간에 4.16기억공간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전국 자체 최초였을 텐데, 그게 안타깝게도 오산시가 그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수원시가 안전공원 조성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 수원4.16연대 안에서는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하반기에 좀 준비와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 의제로 출마자들한테 질의 및 정책제안을 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현재 수원시의회 의원 몇 분들과 4.16기억공간에 관해서 공감대가 있거든요. 수원시의회 의원분들이 4.16활동을 많이 공감하시고 참여를 같이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함께 4.16의제가 제기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원지역 4.16기억공간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게 된다면 그 과정에 그걸 같이 했던 시민, 단체, 희생자 가족들이 TF에 참여를 하고,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TF를 꾸려서 가는 과정들을 10주기까지 좀 만들어내는 게 추후에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은 수원4.16연대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연대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4.16세월호 운동은 시민단체 간의 연대의 틀이 아니라 어떤 거점의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또 연결되어 펼쳐졌습니다. 성대역 피켓팅, 영통노리공, 매탄촛불이죠. 그동안의 방식과는 지금 다르게 조직되어지고 또 1~2년 하다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활동하는 수원지역의 4.16활동은 놀라운 일이지요. 이 부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주호 ■ 단체와 풀뿌리모임의 특성이 모여 4.16활동의 시너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단체의 활동은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4.16 문제만 결합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또 그 단체 활동가들의 역량배치에도 한계가 있었던거죠. 저도 단체 활동가인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체의 상황을 무시하고 4.16활동만 하자라고 제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원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일상적으로 4.16활동을 하는 풀뿌리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임들과 단체의 특성이 잘 결합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4.16활동을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4.16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 수원 지역 단체의 힘이 있거든요. 집중시켜내요. 이것들을 잘 적절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많이 부족하네요. 현재 제가 아쉬운 점은 작년 올해 직장생활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활동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24시간 맞교대 근무라 조금씩 시간을 낼 수는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단체나 모임 등을 찾아다니려고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하면서 교감이라고 그럴까? 서로 뭔가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그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 찰나에 제 상황이 어려워진거죠. 그 시기에 정종훈 대표님도 4.16연대 대표로 활동을 하시고 여러가지 많은 일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의 현재를 위기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약하냐. 자주 퇴보하냐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지역을 비판하기도 하고 참여하여 만들어진 수원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은 대단히 좋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면 좋을지요.

유주호 ■ '수원지역 시민 사회단체를 어떻게 보냐' 라는 그런 무거운 질문을 하세요. 잘 못 대답했다가는... 일단은 저도 권미영 선생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세대교체는 필요하다. 젊은 층이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전교조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한참 이야기를 할 때 성장한 세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과 청년 운동, 지역 운동, 노동 운동을 하다가 또 각 단위에 와서 자기 자리를 정체성 운동의 정체성들을 찾아가면서 헌신하면서 활동하고 상근 비도 거의 받지 못하면서 해오면서 단련됐던 세대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운동을 받쳐줬던 학생 운동과 노동운동의 힘이 있었다고 봐요. 지금 시대를 냉정하게 보면 많은 운동진영의 조건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는 사실은 보편적인 시민사회단체라기보다는 통일 관련한 활동을 하잖아요. 지역에서 세월호와 통일 운동 여기는 상근비가 없거든요. 철저한 헌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재생산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인 건 경인대진연이랑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요. 끊임없이 활동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뜻이 미래세대로 가지 않으면 힘들다. 거기에 중요한 것들은 ‘국민주권’이라고 봐요. 미리 얘기 질문하실 것 같은데 주권,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문제든 박근혜 퇴진이든 저희 시민사회 운동진영에서 준비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성숙된 국민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행동은 ‘미션·효순이 문제’, ‘한미FTA 반대’와 ‘광우병 촛불’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행동에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좀 했던 역할들을 하면서 약간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려면 활동가들이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자기 실력들을 높혀가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자기 공치사를 내려놓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꾸 지자체와 활동을 하다 보면 관변화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일정 정도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원칙은 저는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찾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맞춰서 우리 단체든 수원 시민사회 단체들도 사업 방식과 우리의 태도에 혁신을 갖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4년 참사 당시 수원에서는 4월 30일부터 8월까지 분향소를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분위기, 반응들은 어떠했나요?

유주호 ■ 분향소 운영하고 사실은 이게 서명 받았던 얘기를 연동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남해로 내려간 안병주 활동가가 많이 고생했죠. 천막 치고 분향소가 있는 수원역 롯데리아 광장에서 많이 잤어요. 그리고 분향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꾸며냈던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수원역이라는 공간을 사회적 의제가 터졌을 때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만들어 가던 과정들. 그게 뭐 뭐든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추모하는 분향소가 이루어지죠. 그 공간들을 다 시민들이 만들어냈죠. 지금 환승 주차장이 생겨서 시민 분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당시 시민사회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추모와 기억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일부러故노무현대통령 분향소가 설치되었을 때 많이들 분향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역에서 새로운 활동가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오렌지 활동가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젊은 활동가들과 뮤지션들. 그곳에서 만났던 분들과 진도 팽목항, 목포신항, 광화문광장 등을 같이 가면서 활동을 했죠. 수원역에 분향소를 만들고 그 공간이 거점이 돼서 주변에 시민분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서명을 받았잖아요.

수원역 지하에서 서명과 피켓팅을 못하게 해요. 근데 2014년에는 애경백화점에서

도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제가 네 시간 써서 서명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시간만 하려고 하다가 서명을 하시는 시민 분들의 줄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서명지를 꽉 채우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원역에 있던 분향소를 오가는 시민 분들이 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 집회 신고를 10km는 대략 어디에서 어디였죠?

유주호 ■ 정확하게 10km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북문에서 남문, 그리고 수원역 방향의 양쪽 도로에 신고를 했고, 탑동사거리에서 구운동 LG빌리지와 반대편의 삼익아파트 방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칠보 쪽에서 활동하시는 촛불시민 분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2014년 1,000명의 이름을 건 현수막 게시도 놀랍습니다. 훼손된 것은 없었나요? 또 얼마 동안을 걸었죠?

유주호 ■ 정확하게 천 개 했어요. 거의 개인 이름 걸었어요. 2주 동안 걸었고요. 훼손이 됐죠. 달면서 훼손이 됐습니다. 저는 칠보 쪽에서 달고 있었는데, 수원역에서 남문 방향으로 걸고 있던 안병주 활동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서 현수막을 떼어낸다고. 그래서 바로 제가 수원시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수원시는 무슨 권한으로 집시법상 허용된 현수막을 자르냐고.

아, 보수단체가 자른 게 아니라 시에서 현수막 철거하는 팀이 철거했다는 거군요.

유주호 ■ 네. 사실은 그 후의 과정이 있어요.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이 사과도 했죠.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일정 정도 훼손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대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수원시가 2주 동안 현수막을 떼지 않고 한 3주 걸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수단체가 건드릴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훼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원역에서는 크게 현수막을 우리가 걸었을 때 목사라는 분이 칼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가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집회하는데 와서는 욕설을 하더라고요. 이거 참 어려워요.

시민합창단 구성도 감동적입니다.

유주호 ■ 저는 100명이나 되는 시민 분들이 합창단에 참여를 하실지 몰랐어요. 접수현황을 보고 깜작 놀랐어요. 근데 3주기인데 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의식에서 시작을 했고 수원시에 수원시립합창단 공연과 수원시민합창단과 합동공연을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 시립합창단 사무국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연습할 때 직접 와서 같이 해 주시고 지휘자도 섭외를 같이 해주셨어요. 이게 있어서 가능했고 그리고 모집을 하는데 아까 지역의 원로 선배님 황인성 선배님이나 또 장애인 단체, 수지 꿈학교

나 이런 데 다양한 성원에서 많이 하고 풀뿌리 모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휠체어 타고 계시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참여했어요. 이분들이 합창하는 도중에 긴장을 하고 하면 이렇게 생리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추모하고 같이 하던 자리에 실수를 할까 걱정을 하시면서 미리 예방적으로 약도 드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간다는 의미를 4.16참사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합창에서 찾았다는 글을 봤을 때,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한 활동가는 아들과 함께 합창 무대에 섰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끝나고 나서 “엄마, 나도 내가 언니 오빠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고 나도 세월호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며 울컥하더라고요. 이후 3주기 중앙행사로 광화문 무대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원과 원주의 시민분들이 같이 합창을 하게 됐고 정종훈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셨고 전국적으로 그게 많이 회자도 됐고 시립합창단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공동 질문으로 먼저, 현재 활동가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권미영 ■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게서 초심을 지키면서 시민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 운동은 본인의 가치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속에서 초심을 지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저 감사하지요. 현장에 있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요.

유주호 ■ 철학에세이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 자신이 활동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제를 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의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회나 또 그거에 있는 구성원들의 뭔가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철저한 안목. 그거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뜻이 같다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 타인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배려심. 그리고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잖아요. 정치나 사회 변화의 중심에 이제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되게 높아지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국민들의 주권실현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다양하게 그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건강. 저도 요즘 운동하는데 모든 단위 활동가들 건강 챙기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원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이나 어떤 공간과 관련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권미영 ■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많은 개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성 있는

산업들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일거리가 많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수원은 스카이라인이 없어지고 아파트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전통 문화 도시의 수원보다는 높은 아파트 중심의 굉장히 삭막한 도시가 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지요. 수원에 도로, 지하철 개통, 여러 상황들과 맞물려서 아파트 개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잘했다고 여겨지는 정책은 팔색길과 북부순환도로 개통이에요. 특히 북부순환도로는 환경파괴 등 여러 이유로 시민단체가 매우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수원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영통까지 수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출근 시간이 엄청 가까워졌지요. 그리고 도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구요. 제가 보기에 이용률도 굉장히 높구요. 제가 사는 북수원에서 광고까지 10분이예요. 사이드 이야기이지만 저는 수원 토박이예요. 북부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송죽동 광고산 근처에 제 친정집이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이 산을 통과하는 길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주 일찍부터 도로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도시계획이나 도로 계획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광고산 훼손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큰 역할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로 개통으로 도심의 교통량이 얼마큼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수원에서 광고나 영통 쪽으로 이동할 때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수원은 원체 용인 화성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도로 개통 정책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유주호 ■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과 많이 놀러 가는 곳이 시청, 시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문 행궁광장, 수원역입니다. 수원역은 요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아파트단지가 거대화 되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려면 골목이 있어야 되고 골목이 만나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파트는 외부인 못 들어가고 골목길도 없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집으로만 동선이 움직이다 보니깐 옆집에 사는 이웃들도 잘 모르잖아요. 서로 만나기 어렵다 보니깐 생활공간에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혼자인 경우가 많고 또 학원에 다니기 정신없는데 친구나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지고 있죠. 수원에는 보기좋은 행궁광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마을안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나영이가 제 나이가 되고 아이들하고 생활을 할 때, 삭막한 아파트 말고는 반가운 사람들과 어울렸던 마을 골목길의 기억도 없어지겠죠.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파트 시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의 논리에 자꾸 포장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고요.

수원하면 좋잖아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울려져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는 없는지. 마을을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나 주거공간을 고민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숲세권이니,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니 하며 안전하게 누리는 공간을 강조하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고 누구나 개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건 아파트 소유자들로 n분의 1로 나누어진, 각자가 나누어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유주호 ■ 싱가포르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부인 친구 부부가 그곳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다녀온거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거실이 나옵니다. 구조가 이렇다보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집안일을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의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아이들 옷 입히는 것도 그분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의 싱가포르 아이들은 혼자서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를 보면 거리 정비도 잘되어 있고,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각자의 삶을 우선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태권도 시키는 이유 딱 하나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도장에서 아이들이 절도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구령과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보면 어쨌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든 또는 공유 공간을 좀 갖추어야겠죠. 저는 무조건적인 아파트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09.06 16:00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 김영균·이상명·김성연 진행, 신윤범·이상명 기록

4기 2006-2010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 운영

이성호

박진

이의지구 광고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

장동빈

수원촛불

안병주

5기 2011-2015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안병주

북수원민자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장동빈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 운영

2005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교류, 연대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창립함(2011년),

한편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의 비전과 지역운동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을 찾는 <지역운동in수원>을 매년 개최함.

이성호

2000년대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 문제들의 논의와 해결을 함께 하는 연대체를 고민하고 준비하여 2011년 2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수원 시민협)를 창립하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여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이성호 ■ 수원 시민협을 구성하고 활동 방향을 잡기 위해 2010년부터 논의가 시작했을 거예요. 2011년 2월 창립하며 15년까지 상임대표를 했어요. 말로는 실무형 대표를 상임대표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발로 뛰는 역할을 했었어요. 투쟁의 현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또 다른 상임대표였던 박희영 목사님은 행사나 주요 인사를 만나는 장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2011년 1월 1일 팔달산 서장대 앞에서 수원 시민협(준비위)이 진행하는 해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이고 연대 활동도 했지만, 시민협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시민운동은 어떤 차이가 났는지 소개해주세요.

이성호 ■ ‘이제 통로가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 수원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책임질 단위가 있었던 거 같고, 책임지려고 했던 거 같아요.

초창기는 단체 대표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잘 모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수원 시민협 활동을 옆에서 보면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끌어가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몇 단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대표자들이 함께 움직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운영위원장을 맡은 활동가들의 역할과 당시의 주요 활동 여하에 따라 수원 시민협 활동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어요. 운영위원장들의 헌신적인 역할이 컸다고 할까요. 초창기에는 활동에 대한 에너지가 모여 여러 활동가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거 같아요. 사실 어느 조직이든 무슨 특별 위원회든 뛰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띄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 같아요. 창립 시기에는 수원환경운동센터 이영석 활동가가, 다음에는 수원YMCA 김성연 활동가가, 그 다음에는 수원여성의전화 정유리 활동가가 맡아 단체들의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거 같아요.

수원 시민협이 개별단체로 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시국사건을 여러 단체가 모이고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나요?

이성호 ■ 오히려 수원 시민협은 단순히 사회 이슈를 따라가며, 시국사건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연대 활동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각 단체의 주요 목적 행사들에 대표들이 참여해, 그 단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고유사업을 살피고, 응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 였어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체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활동가들끼리도 깊은 사감을 하게 되거든요. 시민협은 이런 점에서 기존의 주제별 혹은 사안별 투쟁연대기구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1월 1일 해맞이 행사와 같은 경우처럼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활동가들의 고민과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었고, 수원 시민협의 활동을 알리자는 것도 포함되었어요. 최근 시민협의 활동에서는 이런 점이 약화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수원 시민협의 활동 속에 담으려 했던 초기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성호 ■ 수원시민협을 상근체제로 갈 수 없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각 단체의 사업을 하기도 버거운데, 연대 일까지 하려다 보니 최소한의 면피만 하게되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창립 초기에 저랑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이영석 활동가랑 올인을 했던 거 같아요. 세월이 흐르며 운영위원장을 맡아 줄 활동가를 찾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것을 봐요. 최근에는 운영위원장의 활동비로 월 20만 원을 집행하는데, 사실 활동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너 책임을 맡아라’ 하는 의미 정도. 그래서 제가 계속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재정을 모아 시민협의 상근자 하나 좀 더 키우자.’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직까지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수원 시민협 활동을 통해 서로 각 단체들이 타 단체의 활동들을 이해하거나 활동가들의 교류와 협력이 잘 되었나요?

이성호 ■ 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원 지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해 시민협 활동들을 지원하는 MT나 워크숍을 계속 정기적으로 추진했고, 도움이 됐어요. 활동가 워크숍을 2011년도 4월에 갔었고, 이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추진했어요. 최근에는 상근자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이성호님은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이성호 ■ 내가 처음 수원지역 시민운동을 시작한 게 1989년도였어요. 수원연합이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은 수원사랑민주청년회에 장용환 활동가가 있었는데, 늘 일단 우리끼리 먼저 친해지자, 그래야 사업이 잘된다고 늘 얘기했었어요. 족구를 하며 먹으면서 놀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연대사업을 하는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것이 단점인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는데 일단 같이 가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향이지요.

소주 한잔하고 친하게 된 후에 사업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요

즘 시민협 활동가들의 경우 회의 끝나고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술 먹자 제안하는 활동가도 별로 없어요. 지금 유지되는 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어울림 한마당’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각 단체 대표들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라요. 밥 한 끼 같이 먹어보지 못했고, 한 번 인사를 한 후 다음 회의에 갔었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최근 시민운동에 참여한 젊은 활동가들은 긴밀한 유대관계가 많이 끊기긴 한 것 같아요.

수원 시민협의 상임대표로서 처음 조직을 꾸리고 활동을 하면서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지는 않았는지요?

이성호 ■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참 보람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이 그랬던 거 같아요. 어제도 대학교 학보사에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담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시민운동, 문화운동 활동가로 살아온 것에 후회 없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 거예요. 시민협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시민운동, 문화운동을 하며 정말 그 보람을 느꼈거나, 그 당시 어떤 수원 시민협 활동을 하며 힘을 모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성호 ■ 워크샵, 체육대회도 했었고, 신영복 선생님을 모셔서 했던 ‘아름다운 동행’이 생각이 나요.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택배가 와 열어보았는데 선생님의 글씨로 글귀를 보내온 거예요. 나중에 수원 민주화운동·시민운동 기념관(가칭)이 생기면 기증하려고 해요. 제일 생각나는 것은 2011년 1월 1일 팔달산 서장대에서 개최한 ‘해맞이 행사’예요. 처음 진행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해맞이 행사를 시민협이 한 5년인가 했다가 이후에는 저희 풍물굿패 샅터를 중심으로 진행했어요. 100만 원 정도의 경비조달도 벅찼고 새벽에 물품을 준비하는 것에도 좀 힘들었어요.

‘1월 1일 해가 뜬다.’라는 건 시민들이 뭔가 기대를 하며 꿈을 꾸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인사를 하고, 수원시민들의 안녕과 평화에 대해 기원을 했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세월호에 갇혀 숨진 학생과 교사를 생각하며 묵념을 했고, 3·1운동 100주년 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희생되신 분들을 생각했어요. 아울러 그해 수원 시민협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호명하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 코로나-19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벅차거든요.

현재 수원 시민협에는 2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연대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했었나요?

이성호 ■ 그 당시에는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열한 서너 개 단체가 회의에 잘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각 단체들은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 시민협이 해야 할 사업들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

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민협 정책위원회도 2012년에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던 해여서 운영이 되었어요. 지방선거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도 있었고요. 문화분과도 따로 있었어요.

시민협을 만들게 된 배경과 목적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성호 ■ 제가 그걸 잘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현장에 잘 담겨있어요. 현장에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1. 수원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정책을 개발하고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이후 활동을 하며 현장을 수정하고 보완해 운영규정을 바꾸어 갔고요.

우리의 조직을 연합회로 갈 거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일단 협의회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연합회로 가자.’라는 말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직까지 협의회로 남아있어요. 모든 단체들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빠지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넣은 좀 느슨한 형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창립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원시민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산증인인데요. 창립정관에 담긴 시민협의 목적 3가지는 잘 추진되어 왔는지 각각 평가해줄 수 있나요?

이성호 ■ ‘수원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의 문항은 늘 지금까지도 해왔던 거라 생각해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에 대한 문항은 아쉬움을 느껴요. 시민사회단체 소통과 연대란 시민협 구성원들의 각 단체 발전을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정책을 개발하고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의 문항은 각 단체들이 자기 영역을 계속 추진하며 꾸려나가지 않나 싶어요.

각 단체가 해나가고 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하려 할 때 시민협 이외의 단체들이 참여하게 해 19개 단체가 참여해 개정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시민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각 영역에서 다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시민협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거 같아요.

시민협이 창립되고 수원시정과 민관협력은 잘 이루어졌나요?

이성호 ■ 창립시기에는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며 민관협력 혹은 민관협치가 많이 확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임 시장 시기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함께 시민협을 통해 각 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했던 게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성호 ■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2012년에 마을 주간행사도 같이 했었네요.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 수원 시민협도 같이 참여했어요. 2011년에 마을르네상스센터가 만들어졌고, 좋은 마을 만들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수원 시민협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들어갔어요.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민법정에도 함께 참여했어요. 2012년의 2030 수원도시계획 시민계획단 활동도 있었네요. 수원YMCA를 주관단체로 해 시민창안대회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수원시로부터 위탁해 진행하다가 다음 해에는 수원시민협을 팔호에 넣어 공동 주관단체로 했다가 다음에는 시민협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어요. 그 때 YMCA가 맡아주지 않았다면 벽차서 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여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된 것도 있었어요.

수원시민협이 있어서 수원지역의 시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나요?

이성호 ■ 지역에 사안이 생기면 어떤 사안은 어느 단체, 어느 연대체가 활동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거나 할 때 시민협이 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사회단체 20여 단체가 모였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보면 큰 것이거든요. 수원시 차원에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으로 묶었을 때 수행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수원시의 해당 분야 행정과 파트너가 되어서 여성은 여성, 문화는 문화, 또 환경은 환경 이렇게 만나고 협의하다 보면 그걸 통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단체가 시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던 것을 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후에는 시민협을 통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갑자기 어디선가 된 게 아니라 시민협이라는 걸 만들고 활동을 하고 만나가면서 사업이 확대되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모임인 '경기도정네트워크'와 같은 형태의 모임, 수원시정 네트워크(가칭)을 수원에서도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떤 의원만 선정해 시민사회가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좁은 지역사회내에 이러쿵저러쿵 소문만 양산해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협의 여러 연대사업을 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그게 뒷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현재의 수원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성호 ■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얘기를 몇 번 하기도 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활동가들도 그 전문성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협의 대표나 활동가 이후에 정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무조건 반대다.'라며 늘 이야기 했어요. 저희 풍물굿패 샅터의 경우에 지동 재래시장에 동짓국을 한 게 내년이면 30년째예요. 한 해도 안 빠지고 했어요. 샅터의 정체성에 맞게 고유한 영역에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삶터는 계속 그 일을 하면 돼요. 이렇듯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 힘을 가지고 시민협의 역량을 키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영역을 키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원에 시민운동 활동가로 생활하거나 단체 회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경제공동체를 수원 시민사회영역에 만들고, 역력이 된다면 수원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쟁도 해야지만 투쟁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삶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셔서 이성호가 빠진 삶터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삶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삶터의 조직운영 원리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요?

이성호 ■ 삶터 운영에서 제가 해오던 역할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대 사업을 맡아왔는데 지금 시민협 모임이나 경기 민예총이나 수원 민예총 활동에도 제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한 단체가 어떤 인물 중심의 단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공동체 즉 민주적인 의사 결정체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단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의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러한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이성호 ■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청소년한마당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데, 모든 사업추진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추진 내용들이 매뉴얼화되어 누구라도 그것을 따라 진행해가면 되도록 했어요. 민예총 활동이나 삶터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매뉴얼을 중시했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저와의 인간관계나 사업관계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의 경우 제가 빠진다면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길 수 있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수원 시민사회운동에서 젊은 활동가들의 참여가 미약한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성호 ■ 세대적으로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80년대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저는 민주화운동, 정의, 공동체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며 왔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오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삶터에 실무자 4명이 20대예요. 근무 조건에 맞게 일하고 또 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며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생활하는 거 같아요. 이러한 문화에 전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예전 시민단체의 운영원리에 젊은이들 보고 맞추라하면 어려울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이니 정의로운 사회, 민주화 등등의 가치를 위해 일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아닌 듯해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실무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의 마련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판을 만드는 역할이 제게 있다 생각해요. 그래야 젊은 활동가들이 계속 이 터전에서 활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 역할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 사업을 구상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시민협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자력으로 해가기 어려운 듯 싶어요.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국가가 수원시의 공공적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호 ■ 그것도 맞고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샤프터의 경우에도 전문예술단체로 활동을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인증이 되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어 노동부 지원으로 인력을 한 명 더 채용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투쟁현장에서 풍물만 치면 되었다면 이제는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간 것이지요. 작년 전통문화예술진흥원에서 상근자 세 명을 5개월 동안 파견해주어 우리 문화활동에 참여시켰고 그 중의 한 명을 계속 실무자로 고용했어요. 올해도 세 명을 파견해 주었어요. 최근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며 느낀 건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은 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생소했는데 해보니 이미 샤프터가 해오던 모든 활동들이 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공익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이더라고요. 샤프터의 문제를 넘어 현재 수원지역 시민사회들이 가진 재정이나 활동가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지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가는 건지, 대표자들이 모여 토론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원시에 살아가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에게는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비관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호 ■ 그래도 수원지역에는 그 기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반이 약하고 전망이 없으면 시민단체들 다 문 닫았지 않았을까요?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듣지만 이제 그 걸 기반으로 다른 일을 도모하면 된다는 희망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데가 전국에 어디에 있을까요? 수원지역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이 잘 되고 있고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주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 단체에만 너무 매몰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기 단체도 유지하기 힘들다 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사실은 연대 사업을 자주 해야 자기 단체도 더 성장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 같아요. 샤프터는 시민협 활동을 하며 연대사업에 참여하였고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민협 활동을 하며 광범위한 시민들 만났고 그러면서 샤프터의 활동량이 더 커졌어요.

그럼 이제 시민운동 활동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결코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데, 이런 시민사회가 희망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현 조건들을 잘 묶어 세울 만한 사람이나 지혜가 없을까요? 없다면 2010년도에 시민협 조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듯이 우리 또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거 다시 또 해서 뭐 필요하냐는 소리도 있겠지만, 만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라 생각해요.

수원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런 거 발전시키면 좋겠다, 혹은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례 하나씩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이성호 ■ 문화예술 쪽만 계속해서 얘기해 미안하긴 한데, 이 부문에서 민관협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백서를 만드는데, 각 과에서 했

던 사업에 제목만 3.1운동 100주년 이름을 붙여 올라왔어요. 제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오던 사업인데 이름만 붙여요.

021.10.19 15:00 풍물굿패 삶터 | 이상명·김영균 진행, 이상명·김성연 기록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창립과정과 정관

1.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창립 경과보고

- 1997년 민주화운동 과정은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자율적, 자치적, 지역적'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수원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 약 20여년을 보내며 '지역이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임을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변성, 일시성, 뒷북치는 역할에서 중심성, 지속가능성, 성숙한 미래비전을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제시해야 할 책임을 짊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원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정해 갈등을 줄여가야 할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이미 부여받고 있다. 2009년 국회의원 선거과정,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하기도 하고, '좋은 정책 제안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 소중한 경험들은 향후 수원지역사회운동속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기운이, 6.2 지방선거 이후에 다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더 큰 연대운동으로 나아가자는 큰 틀의 합의에서 왔음을 '역사성'으로 적극 해석해야 할 것이다.
- 2010.08.19. 18:00 수원여성의전화에서 '수원지역의 소통을 위한 활동가 모임'을 진행하고, 이러한 소통과 연대를 책임지는 일꾼을 선임하였다. 일꾼은 윤경선, 박진, 송준호, 이상명이었다.
- 2010.09.14. 18:30 수원YWCA에서 김낙경(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천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였다.
- 2010.10.22. 19:00 수원여성의전화, 민선5기 이후 수원시정의 현재 인식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해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임미숙 민주노동당 수원시 위원장의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 2010.11.27. 16:00 아주대학교 법학관 133호에서, '시민이 주인되는 수원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메니페스토연구소 소장), 이상명 (수원 YMCA 부장), 이근호 (수원의제2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였다.
- 2010.12.20. 19:00 수원여성의전화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제안하며' (수원YMCA 이상명 부장) 발제를 듣고 함께 토론을 하였다.
- 2011.01.18. 18:30 리젠시호텔에서, '만남이 첫걸음입니다.'란 주제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 2011. 02.08 17:00 수원여성의전화에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칭) 창립에 관한 토론을 하며, 준비위원을 구성하였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이재훈(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준비위원으로는 송준호, 이영석, 윤경선, 이상명을 선임하였다.
- 준비위원들은 매주 정기모임을 하면서 정관, 취지, 창립총회와 창립대회를 준비해왔다.

2. 참여단체

수원KYC,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수원생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YWCA, 수원YMCA,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여성회, 풍물굿패 삶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수원지부, 수원새날의료생협, 극단城 (17개 단체)

3. 창립대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 2011.03.03(목) 오후 4시~6시 | 화성박물관
- 참여대상 : 각 단체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참여 요망
- 내용 : 1부 대표자회의(총회), 2부 창립식

4. 향후 사업계획

- 월 1회 운영위원회, 분기별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단체 활동의 공유, 지역 현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소통과 연대를 통한 수원지역사회의 발전을 찾는 역할
- 연1회 시민사회단체 회원까지 참여하는 한마당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통한 교류마당)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회 및 활동 진행

5.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창립 당시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수원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정책을 개발하고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제3조 [사업] ①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 개혁과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
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협력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단체의 자격] ① 본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이어야 한다.
2. 1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로서 정관상에 명시된 활동 목표와 그간의 활동 내역이 시민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온라인 단체 포함)
3. 지역의 연대조직은 개별단체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가입 절차] ① 본회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본회 회원 중 2개 단체 이상의 추천서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2. 회원단체 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서류와 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가입 신청을 한 단체를 심사하고, 회원단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원 단체의 권리] ①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7조 [회원 단체의 의무] ①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 단체의 견책과 제명] ① 본회의 회원단체로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에는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 단체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결의한다.
- ③ 견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절 대표자 회의

제9조 [대표자 회의의 지위] ① 대표자 회의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대표자 회의 구성] ① 대표자 회의는 회원단체의 대표자1인과 실무책임자1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참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11조 [대표자 회의 소집 절차]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 ②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③ 상임 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임시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회원단체 10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2조 [대표자 회의 의사 진행] ① 상임대표 중 1인이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대표와 감사의 해임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2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13조 [대표자 회의 기능]

1.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정관개정
4.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중요한 결정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지위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자 회의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단체 실무 대표책임자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절차]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5이상인 임시 운영위원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중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상임대표 • 감사

제17조 [상임대표의 지위]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상임대표는 대표자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집행한다.

제18조 [상임대표 구성 및 회의] ① 상임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상임대표 1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되며,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4장 재 정

제20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후 다음 해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단체의 회비와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보칙

제23조 (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준용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효력발생] ① 이 정관은 2011년 3월 3일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 매년 첫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4기 2006-2010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 운영

2005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교류, 연대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창립함(2011년),

한편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의 비전과 지역운동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찾는 <지역운동in수원>을 매년 개최함.

박진

2006-2010 그 시기 중요 활동으로 2009년도에 시작한 지역운동포럼in수원을 꼽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 FTA부터 시작한 논쟁거리들, 4대 악법 문제들이 있었고, 추진되던 민주적·진보적 운동들이 결국 MB로 총칭된 수렁에 빠져들었죠. 광우병 소고기 반대로 촛불이 서고, 수원에서 수요촛불을 들게 되는 과정이 길게 이어지며 2009년 <지역운동포럼in수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심정으로 그 시기와 상황을 한 단어,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박진 ■ 지역운동포럼을 하게 되었던 상황을 봤을 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 서고 모든 개혁들이 다 좌절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광우병 촛불이 불타오르면서 민주주의 요구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데에 큰 힘을 얻었죠. 그래서 수원촛불을 시작했던 건데, 어마어마한 탄압으로 청계광장의 촛불이 잦아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일상의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촛불에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최근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매주 캠페인을 해 봤는데 시민단체도 동력이 안 되거든요. 그 때는 판만 벌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돌아보면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이었다는 걸 그 때는 몰랐죠.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답함과 미진하다는 생각에서 연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2009년 초 용산 참사가 있고 계속 탄압국면으로 가던 상황에서 집회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촛불만 들지 말고 촛불로 모여서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들하고 진보적 담론들, 운동에 대한 담론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지역운동포럼이었어요.

잠시 주제를 바꿔서 박진님이 수원 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수민청이었어요?

박진 ■ 다산인권센터에서 시작한 게 맞다고 봐야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수원사랑민주청년회에 간 것이 96년도인데 회원으로서 청년활동을 열심히 했고, 97년도 1월에 다산에 들어왔어요.

당시 다산은 법률상담소였었죠. 참여하게 된 계기는?

박진 ■ 이전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노동 현장으로 가는 흐름이었고 96년경에는 조직적으로 어떤 전망을 고민하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역으로 나가보면 어떻겠냐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웬지 노동현장을 가는 것은 무섭더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거 같고, 아마 NL이라서 그랬을 것 같고(웃음) 그래서 지역으로, 청년회로 왔던 거예요.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전공이 법학과니까 전공을 살리는 지역운동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다산에서 사람을 뽑고 추천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인권영화제를 97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박진 ■ 제가 들어왔던 97년도가 2회였고 송원찬 선배 때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세계인권선언이라고는 들어보았지만 인권을 지역 시민운동의 주제로 세우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영화제라는 것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보고자 했던 것 같군요. 인권운동 초창기,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셨는지 그 당시를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박진 ■ 다산인권상담소가 지금하고 또 달랐거든요. 그 때는 변호사 사무실의 한 부설기 구였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소송업무를 했어요. 일종에 사무장 역할이었죠. 노동, 일반 사건에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철거, 여성, 학생·학교폭력의 문제들이 다산인권상담소에 왔고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걸 직원들이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상담업무를 하고 소송업무를 도왔죠. 거기에 추가되었던 게 시민사회 업무였어요.

솔직히 처음 다산에 인권이 뭔지 모르고 왔고, 법률사무소에서 일종의 권리 구제와 관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 많이 안했으니까 여기서 법률 지식 많이 얻어서 법률상담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만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소박한 생각에 아무 고민 없이 온 거죠.

근데 어렵더라고요. 소송업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람을 상담 하고, 법률적인 견해를 드리고, 소송에 쓰이는 증인·피해자 심문사항을 다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배워가는 과정에서 한 1년은 지지고 볶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잘 하니까 인권영화제가 맡겨져서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힘들게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했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갔어요. 인권상담소 자체도 인권운동을 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법률사무소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시민사회 연대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또 한 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시기도 꽤 됐죠. 그러면서 저희 고민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늘려가자 하면서 해마다 변화양상을 가져갔어요. 소송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더 가서는 아예 소송업무를 떼버리고 독립해 갔던 거예요. 소송업무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있는 사건을 팔로우하는 거니까 책임성도 컸고 변호사와는 종속관계로 있게 돼요. 재판에 나가는 것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활동가가 ‘내 사건이다’ 하기 어려운 구조죠. 소송업무와 분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권단체라고 스스로도 자처하고 정체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영란 활동가가 총원 되면서부터 라고 저는 봐요. 본격적으로 인권 스터디를 하면서 정립을 하고 거기

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인권을 찾아나갔다면 그 시기 부터는 인권이라는 중요 테마 속에서 우리 일을 배치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제대로 인권운동을 시작한 해라고 생각해요

수원촛불은 다산에 있어서, 박진님에게 있어서 인권운동이었나요, 시민단체 연대 활동의 의미였나요?

박진 ■ 양자를 두고 얘기한다면 시민사회 연대활동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활동이었잖아요. 인권운동이기도 하고, 지역연대이기도 하고, 수원촛불을 관통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서로 관련되었고 다 포괄하는 거죠.

당시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의 주제나 활동사례들은 어떤 것들이었죠?

박진 ■ 수원촛불은 촛불집회만 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광우병 소고기, 4대강, 의료민영화, 교육공공성을 4대 의제로 정하고 그 중심으로 한 수원시민대책회의를 만들었어요. 대책회의에서 그 주의 의제를 정하고 촛불집회에서 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촛불이 의제 중심이었던 거지 이명박 아웃이라는 정치적 이슈만은 아니었어요. 4대 의제만 한 것도 아니고 용산 참사가 있으면 용산 참사, 쌍용차 있으면 쌍용차, 밀양, 언론악법... 시기마다의 이슈파이팅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계속 탄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권운동의 과제는 이 비민주적인 사회의 현장, 현장마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겠죠.

수원촛불과 관련한 다른 인터뷰에서도 수요일에 판만 열면 그냥 사람들이 와서 촛불을 들었다고 표현되었어요.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수원촛불의 한계나 성과를 이야기하신다면?

박진 ■ 돌아보면 성과는 많았죠.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촛불만 들었던 게 아니라 매주 뒷풀이를 했잖아요. 직접계 뒷풀이를 해서 그때 먹은 술값으로 건물을 올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매번 만나고 친해진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만나면 안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야. 지금도 다산의 상당한 자산들은 그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남았고요.

그리고 현장이 주는 힘을 활동가들이 알게 되었어요. 활동가들은 늘 현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야 노동현장과 집회가 늘 있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연대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간절하니까, 스스로 기획하고 매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계속 논의했어요. 그때는 직접다고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이었어요. 현장을 스스로 만들고, 그 현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활동가로서는 어디 보다 훌륭한 민주주의 훈련장이었던 거죠.

4대 의제 집행위원장을 같이 했던 사람이 저, 민주노총의 이선희, 다산의 안병주, 환경운동연합의 윤은상, 전교조의 서윤수 들이었거든요. 보통 때라면 사실 별로 안

만나지는 분야의 사람들인데 계속 만나고 협의하면서, 가족보다도 더 만나고 형제 자매처럼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의제를 넘나드는 횡적 연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지속성이죠. 전국 촛불 중에 이렇게 길게, 매주 한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8년을 했나요? 모두다 이슈가 터졌을 때 촛불을 들지 우리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판을 벌여놓고 거기에 의제들을 계속 결합시키는 방식은 없었어요. 안병주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초창기에 안병주는 자발적 시민들의 행동에 중심을 두자는 의견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저는 시민단체가 판을 벌려야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판을 벌리거나 아니면 단체들만 하거나. 초기에는 만났는데 서로 다른 걸 알게 되고 다투고 심지어 돈 문제도 생겨서 판판히 깨져나갔거든요. 근데 수원은 저희가 중심을 잡고 시민단체들이 없으면 판이 안 벌어진다는 기본 신뢰와 관계를 형성된 거죠.

한계... 이제는 안하니까 한계죠. 세대가 바뀌더라도 민주주의 장 자체를 지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촛불을 통해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참여자들이 참여는 이어졌는데, 시민단체의 결합력, 연대는 지속되었나요?

박진 ■ 아까 얘기했던 공동집행집행위원장 외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관계는 깊었다고 생각해요. 외면한 단체는 없었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수원촛불 참여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희망 김장’이란 행사를 했었어요. 경기 지역 장기투쟁사업들의 노동자들에게 김장을 담가서 보내는 행사였어요. 밤에 배추 절이고 그러는데 수원지역에서 안 온 사람이 없었던 거야. 잘 안 만나지던 분들도 그날 밤에 다 있었어요. 아, 명실상부한 연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했어요.

촛불이 계속 이어지지 않은 건 활동가들이 지쳤기 때문이죠. 이게 몇 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뭘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이게 몇몇 활동가들한테 집중 되니까 이들이 지치면 지속되기가 힘든 거죠.

수원은 시민단체 활동가가 많고 연대가 잘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중앙에서 연대도 경험하시면서 수원지역 시민운동과 그 연대 양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박진 ■ 제가 지역운동에서 오래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수원시민협 운영위에 참여했는데, 논의력이 낮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의제로 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논의에 올라와요. 이것이 수원 지역만의 특성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전반적인 시민사회운동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수원은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역량이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 영향력은 훨씬 줄었잖

아요. 이게 그냥 시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석률은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오히려 회의 하면 잘 안 와서 논의가 어려웠잖아요.

지역문제에 관련된 의제를 놓고 모이다가 상설화되고 제도화된 모임체를 구성해서 가지는 필요성들이 제기되었고, 고양의 무지개연대나 부천 사례 등을 표본으로 2011년 시민협 창립으로 오게 되었어요. 수원촛불 인권운동을 하면서 시민협이 구성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했거나 어떤 관점을 가졌어요?

박진 ■ 우리가 시민협 창립이전에 수원시민단체월례회의 때는 참여했던 단체잖아요. 지역 사안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하여 애정 있게 참여했고 우리가 이슈화이팅이나 의제가 많으니까 그걸 계속 소통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시민협을 만들 때 안 들어갔던 이유는 동기가 아래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였어요. 저희한테 제안된 내용은 염태영 시장이 논의할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연대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요. 다른 테이블에서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원지역에서 수요촛불이라는, 시민이든 활동가든 누구나 늘 오는 장이 하나는 있었어요. 거기에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라는 형식과 제도화의 틀로서 하나를 가져가려고 한 시도였지요. 이전 월례회의 형태에서 얘기되던 지역 사안을 토론하고 함께 해가기 위한 연대체를 결성하는 게 어떤가 하면서 시민협이 제안되었던 거예요. 연합회나 협의회를 놓고 논란이 존재했는데, 여러 단위의 참여에 더 목표를 두고 편하게 발언하는 과정으로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협의회로 가게되었어요. 어쨌든 그 모색도 <지역운동포럼in수원>과 비슷한 시기, 문제의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박진 ■ 그 고민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될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부각시켜서 전달받았고 우리는 수원 촛불이 있었거든요. 수원촛불이라는 다양한 시민들이 오는 광장이 있어서 여기 힘쓰기도 바쁘고 굳이 뭐 우리가 들어가나 했어요. 지금이었으면 또 다르게 판단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집회만 하기에는 뭔가 헛헛했고, 운동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푸는 방법이 달랐네요.

2009년만 해도 MB의 진영과 함께, 지역에서는 김용서 시장 체계에서 민관 협력이 없었던 시기였고, 본격적으로는 염태영 시장 당선 이후 지역에서 뭔가 해보아야 하는 분위기들과 연계되어서 한쪽에서는 오히려 있었겠어요. 수원사회의 어떤 변화된 상황과 함께 시민협이 만들어진 거고 2009년 지역운동포럼in수원을 할 당시에는 지역에서 그런 연대나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수요촛불의 결합 외에는 없었다는 거군요.

박진 ■ 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건가 담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집회로도, 대책회의로도, 맨날 연대는 하는데, 뭔가가 일이 터졌을 때 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걸 우리가 먼저 던지고 거기로 같이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지역운동포럼을 제안 했던 거죠.

수원촛불에 나오는 자발적 시민들과 진보적 담론이 만나졌으면 했고요. 사람 참 안 변하는 게, 그렇게 몇 년을 촛불에서 이명박을 넘는 이야기들을 해도 어느 순

간에 결론은 반이명박, 친노무현으로 그어진 선을 못 넘어가요. 그 지점을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라는 의미도 있었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를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야기 대상은 ‘깨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우리 자신들로 보았구요. 근데 지역운동포럼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외에는 행사를 넘어선 의미로 받아들인 느낌은 많지 않았어요. 주로 다산 주변에 모여 있던, 좀 더 레디컬한 사람들 정도까지만 관심있게 참여되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또 ‘깨시민’들, 자발적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이명박을 반대 하니까 모이는 거 외에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담고 싶은 의도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계속 수원 촛불과 비슷한 담론이었어요. 이것도 결국은 그런 한계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다고 봐요.

2,3일간 연속된 일정에, 주제를 바꿔가면서 토론하고 참여단위가 세션을 맡아 운영해가는 과정이 수원 활동가들에게 어려웠거나 또 너무 진보적인 주제였을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활동가들이 말할 때는 실천이 따라야하는 것들이라 부담스러워서 결합력을 높이지 못 했던 것은 아닐까요?

박진 ■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논쟁의 판은 벌렸는데 주최자들이 성급했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방향 깃발은 쫓았지만 동의기반을 넓히는데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했어요. 논의의 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계속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면 여러 형태로 계승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다산이 제안하지 않으면 판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좀 지쳤던 거죠.

지역운동포럼in수원처럼 수원이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차근차근 논의하는 장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 중앙 단위 또는 정부 차원의 이슈에 대응하기 바쁜 현실이 존재하지않았나 합니다. 그런 시기에 수원에서 어떤 담론이든 만들어 보려고 하니, 지역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고 학습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너무 생경했던 것이 아닐까,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거나 또는 진보적인 외형에 그냥 가려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박진 ■ 수원대책회의를 책임져왔던 주체들은 공감했어요. 환경사안에 대해서 환경단체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윤은상이나, 교육 의제를 학교 안에서만 논의할 수 없다고 했던 서운수, 이런 사람들은 지역운동포럼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내 업무 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잘 안 그려지고 객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본인이 관심 있었던 세션에는 와서 참여도 하는데, 전체 세션에는 참여하기 좀 어려웠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이 끊임없이 소모적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서울에서 어떤 의제가 던져지면 반대 하려고 모이거나 아니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거나 하는데 자기동력에 의해서 수원은 어떤 곳이다 하는 이야기장은 여전히 없잖아요. 제가 월례회의에도 제안했던 것도 횡단대화였거든요. 여성과 인권, 환경과 인권이 만나지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횡단대화 내지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담론, 이걸 여전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운동포럼이 명실상부하게 대규모로 진행한 거는 2~3년 하고 끝났어

요. 최근에 2018년 부활했어요. 그런 필요를 지역에 또한번 던져 보고 싶어서 다산에서 이야기 마당처럼 지역운동포럼을 했죠. 그것도 더 지속하지 못했지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판은 다시 벌려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시민운동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있는 거 같아요. 실제 활동가들의 연령의 변화로 인해서 세대교체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전반의 노동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운동 방식과는 혼돈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활동가 개인 또는 단체 여건이 변화되면서 활동가마다 다르게 수원을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목표를 세우고 해가고 평가하는 공동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어려움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진 ■ 저는 이제 늘 위기였다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문제의식이나 지금의 문제의식이나 똑같았거든요. 늘 위기고, 늘 사람은 없고, 늘 돌파구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괜찮지않은 것이 아니라는 게 전제고요.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그때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이 다른 거죠. 지금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그릇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고민과 맞는 그릇은 될까요. 지금 시대에 맞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판을 벌리고 그 판 안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논의의 장이 없어요. 그래서 논의의 장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주역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386 영향 안에 있는 제 사고만 보더라도 지금 운동은 답답하기 짝이 없죠. '저게 무슨 운동이야,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 밥벌이 하는 거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져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논의를 할 때 나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조직체일지는 모르지만 협동조합이든, 공익법인이든 또 다른 어떤 형태가 존재되고 있어요. 시민운동은 앞으로 어떤 형식 또는 틀을 가져갈지 생각해본 바가 있으신가요?

박진 ■ 그게 구상에서 비어져 있는 부분인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도 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산 30년의 운동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30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의 논의를 계속 하고 있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개인 활동가예요. 어쨌든 다산도 공간이든, 단체든 유지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냥 혼자 있으면서 나 운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개인 활동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개인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냐고 선지영 활동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게 운동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는 생각이 연결되어졌어요. 이게 딱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동은 단체가 하는 거고 조직이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운동을 지원한다? 근데 귀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선에서 보니까 앞으로는 좀 고정된 공간도 사라지고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단 싶어요. 이런 컨텐츠가 있을 때 누구나 와서 들어라,

그리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그리고 출근하는 형태의 일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결정한 걸 각자 집행하고 점검하는, 뭔가 다른 방식이 수용되는 판을 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 왜냐하면 허브는 있어야 되니까. 그 허브에 사람이 오고가고 내용, 담론이 모이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 예를 들면 그 건물이 인터넷 공간의 가상공간 일 수도 있나요?

박진 ■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에 없는 메타버스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올리자는 거예요

사실 수원에도 지역의 담론들을 놓고 토론되고 만들어지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예를 들면 프레스센터 내지는 시민청인 거죠.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공공적인 공간과 자율성을 함께 확보하고, 거기에서는 지역운동포럼에서 했던 담론이 늘 이루어지는 게 어떤가 생각했어요. 또 가상공간에서 계속 논의가 연결되고요. 단체 베이스로 공론의 장들을 유지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박진 ■ 시대에 맞게 고민하는 게 운동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향을 향하는 개인, 개별 활동가들이 자꾸 늘어날 거거든요. 인권운동은 이미 그런 판이에요. 저게 무슨 운동이야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 운동가로 자처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주고 그게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화가 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고민을 할 지점이다.

차별금지법 된 수원이라는 사회, 비전, 위상을 어떻게 꿈꾸시고 수원은 어떤 사회가 되면 좋을까요?

박진 ■ 수원은 어떤 사회가 되겠냐는 질문 자체가 너무 커요. 대한민국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똑같으면서도 구체성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더 어려운거예요. 막연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실 광역단체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광역은 불필요한 거 같고 한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만 관계 맺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원도 너무 커요. 그래서 수원이라는 공동의 삶을 이야기 하는 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행궁동이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 속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거나 비전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원지역에서 앞으로 더 추진되면 좋겠다 하는 활동 또는 장소, 사례와 반대로 문제가 있어서 다고쳤으면 좋겠다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박진 ■ 저 어제 광고 갔다가 문화적 충격 받았어요. 법원 갔다가 버스타고 죽 지나가면서 아, 나 살아생전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니 까요. 그 격차를 저만 느낄까요? 강남, 대치동, 분당을 떠올리는 또다른 위치성이 수원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살 수 있으면 거기서 살면 좋겠죠. 환경이 좋잖아요. 가

카이 호수에, 편의시설, 맛집들. 수원이라 하지 않는 수원이 만들어져있더군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광고는 어떤 곳일까요. 수원역에서 집회해도 광고 사람들은 무관할 거예요. 이런 격차들도 수원에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저는 광고와 비광고 수원시민들과의 격차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고는 앞으로 강남이랑 비슷할 거 같아요. 푹푹 뭉친 자기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곳이 될 거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뉴스를 예상할 때 수원의 구별 선거 양상은, 서울 전체가 파란색인데 강남만 빨간색인 상황이 그려져요. 수원 전체가 그래도 한국 정치에 영향도 받고 또 뭔가 스텝을 비슷하게 맞춰 가잖아요. 근데 이 영향권 바깥으로 넘어간 어떤 지역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일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병점에 살 때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동탄과 병점의 딱 기로에 있어서 옆 동은 동탄이에요. 거기 아이들이 병점으로 학군을 배정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런 양상이 여기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수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시민운동이 광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함께 자리하신 칼라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요?

탈라 ■ 저는 아파트가 그만 지어져도 좋을 거 같아요. 저는 호매실 사는데 너무 개발되고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수원이 매력적인 이유가 옛스러움과 현대스러움이 같이 있다는 점인데,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오히려 옛스러움을 좀 더 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활동가들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 재난이 계속 심각하고 앞으로도 또 올 건데, 그럼 재난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수원은 코로나에 너무 잘 대응했다고 백서도 내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재난을 이겨내는 핵심은 행정에서 잘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행정의 빈자리를 찾을 거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민사회에서 함께 협력해갈 내 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재난 체계를 잘 갖춰 놓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재난세계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마련해 놓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박진 ■ 저는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할래요. 회의 자리에서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건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일을 넘어서서 만나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몇 십 년을 회의 아닌 곳에서도 만나왔기 때문에 편안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 봐도 회의에서만 잠깐 만나지면 여전히 잘 몰라요. 자기 단체를 넘어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 하면서 같이 공동의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냈으며 좋겠다고 생각해요. 대응하는 거 말고,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자!

우리가 대응하는 거 말고 환경한마당, 통일한마당도 같이 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같이 했잖아요. 공동의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밥도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또 다른 일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월례회의에 한 번 만났고, 대응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반대 활동 뭐 이러면 만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아요. 인권을 좀 쉽게 얘기해보자 인권영화제 어때? 이렇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경험을 얘기하자면 서울 NPO센터에서 했던 변화라는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기획단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단체는 한 10% 정도이고. 내가 모르는 공익 개념을 가진 NGO, NPO가 90%인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변화'를 들어보니 '내가 보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회혁신을 영리기업 형태로 풀어가는 기업가들 생각도 굉장히 레디컬 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다기보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정말 새로운 개인과 새로운 형태의 단체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NGO, NPO로 통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 혁신기업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NPO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익이라는 모호한 말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익판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 운동은 정말 작아요. 그리고 공익판에서 가장 교류가 없는 데가 우리 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온대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막 만나고 싶어하고 네트워크 하고 싶어해요. 새로운 것들, 배우는 게 많으니까 엄청 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컨퍼런스 행사장이 몇 백석이었는데 다 찼던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리 장사가 잘 되지, 우리 뭐 해도 장사가 안되는데. 그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금 보수적이지 않은지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막고,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옛날에는 이랬는데. 시민운동이란 이런 거지' 했던 견고한 벽이 어찌면 우리를 보수적이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2021.08.27 10:30 다산인권센터 | 이상명 진행, 김성연 기록

4기 2006-2010

이의지구 광고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

2002년 경기도, 수원시의 이의동 일대 360만평에 경기도청 등 행정타운과 컨벤션센터, 1만8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해, 도시 과밀화와 난개발을 우려하며 광고산 녹지축 보전을 위한 범시민서명 및 캠페인 활동 펼침(2003년)

5기 2011-2015

북수원민자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2013년 영동고속도로 북수원C~용인 수지구 상현동 연결하는 폭 20m(4차로), 길이 7.7km의 민자고속도로 추진 (2004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과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광고주인들이 공대위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 1인 시위(45일), 인간띠잇기, 공익감사청구 등을 추진하고 광고신도시 학생·학부모들의 행동을 지원. 2017년 4월 착공 ~ 2020년 9월 준공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장동빈 ■ 2000년 9월 경기환경운동연합(이후 경기환경연)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수원환경운동연합(이후 수원환경연)을 창립하기 위해 조직을 준비했는데, 추진 기간이 길어 창립에 이른 것은 2002년 7월어야 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사무국장으로 10여 년 일했어요.

2012년 이후에는 경기환경연에서 일을 주로 해오고 있지, 2021년 올해로 10년 차라 할 수 있어요. 전국 52개 지역에 환경연이 있고 수원은 41번째로 늦게 조직되었다. 사무실을 수원 환경연과 공유해 사용하고 있다. 환경연의 장점은 전국조직이다 보니 150명의 활동가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활동가들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을 순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수원의이지구 개발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소개해주세요.

장동빈 ■ 지금부터 20년전인 2003년에 일어났던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진 않네요. 2000년 향후 저의 활동 진로를 고민하며 수원에 왔어요. 수원에 와 맨 처음으로 한 것은 수원을 도보로 걸으며 구석구석을 보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시간만 나면 수원 곳곳을 돌며 자연환경을 조사했죠. 크게 두 곳을 방문하며 깜짝 놀랐었는데, 하나는 도심에 있던 수원비행장이었고, 둘째는 수원의 대부분이 도시화 되었지만 3천여 명이 거주하던 이의동과 하동지역은 시골 풍경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2002년에는 수원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며 환영하는 플래카드들이 수원의 곳곳에 게시되고 있었어요. 이곳을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의의지구 개발을 추진하였어요. 이 계획에 대해 평가가 여럿 존재해요.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를 포함해 340만 평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면적에 2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통지구 100만 평의 면적에 4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크죠.

수원시의 개발속도는 너무 빨라, 1980년에 30만 명이 거주하던 곳이 2002년에는 100만 명으로 7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초고밀도의 인구가 사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수원 도시화에 대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원경실련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의 활동가들과 의기투합을 하며 문제의식을 이야기해 나갔어요.

지역 조사활동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연대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고민했어요. 수원에는 입북동을 빼곤 유일하게 집성촌이 있던 곳이었는데, 한씨 문중이 있었어요. 용인시 행정에서는 하동지역이 개발되면 이 지역을 수원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으로 반대하였으나, 주민들은 수원으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의의동 주민들의 입장은 시민단체에서는 잘 알 수 없었어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두 곳의 저수지를 끼고 있어 현재는 방치되어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크게 개발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실제 토지소유주 현황을 조사해보니 70~80%가 이미 외지인 소유였어요. 그리고 문중들의 소유구조가 다음 순이었죠. 수원시민들의 여론은 보전하자는 쪽과 함께, 이곳이 개발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저밀도 개발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환경단체들의 보존 입장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현재의 도시 성장의 속도를 줄여야 하고, 도시개발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이 이곳을 개발하는 주요 이해당사자였어요. 수원시나 용인시는 시의 세금이 개발과정에 들어가지 않아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조성해 도청과 고등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큰 흐름을 완전히 반대하기에는 어려워, 개발의 규모 총량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요. 이곳의 개발과정이 아파트 18,000여 세대 규모에서 24,000여 세대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법정 허용세대수인 31,000세대를 다 채우는 고밀도개발로 귀결되었지만. 정부가 이미 계획을 세워 발표한 개발계획을 전면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주민들도 도시개발과 관련해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냐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이 달라져, 공공이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토지주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대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개발속도가 엄청 빨랐던 것으로 기억해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밀고 가고, 김용서 수원시장과 용인시도 도시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환경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했고, 토지주들이 역시 외지인들이 많아 이곳 개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31,000세대에서 주택개발 총량을 제한되었어요. 두 저수지의 원형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고, 지천을 살리며, 광고산

이 보이도록 스카이라인을 조정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는 선으로 합의되었어요.

광고신도시의 예전 모습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이후 광고신도시 관련해 시민운동은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장동빈 ■ 이 활동 후에 수원경실련에서는 아파트분양가 공개운동을 추진했어요. 초기 분양가가 평당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운동을 통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는 유원지였어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대학생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어요. 보트를 타거나 낚시를 하던 장소로 이용되던 원천 유원지가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많았어요. 이곳의 호수가 수원시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신대저수지는 원형 상태로 보전되며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었고, 원천저수지는 놀이기구를 타고, 식당(방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어 놓고)을 운영하는 등 유원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쉽게 신도시개발을 수용했던 것은, 영통지구가 개발된 이후 시민들의 놀이와 여가문화가 빠르게 변해 장사로 인한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가 잘 안되는 경향에 영업주들도 시대적 변화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환경단체들의 저항운동에 함께 연대하려 했을 텐데, 그분들과 함께할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이곳은 개인적으로도 도보로 조사를 많이 했던 추억이 있던 곳이에요. 수원지역의 원형이 마지막까지 보전되었던 곳이며, 매번 지도책을 보면서 걸어 다니다 퇴로를 찾지 못하여 헤매던 곳으로 기억돼요. 맛집에 대한 추억이 있던 곳이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수원북부민자도로 대책 활동과도 연결되는데,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장동빈 ■ 저는 광고신도시 개발 이후 이 지역을 보기 싫어 3~4년 동안 가지 않았어요. 개발 이후 이곳은 수원을 닮지 않은 곳이 되었어요. 차를 타고 가보면 그때의 자취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곳에 다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수원북부민자도로 대책 활동 때문이었어요. 2020년 9월에 개통되었는데, 7.7km에 걸쳐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환경단체들은 45일간 1인시위를 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어요. 광고웰빙타운 주민들이 이 민자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소음과 분진피해를 우려했어요. 이 민자도로의 건설은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혹여 개설된다면 방음벽으로 완전 밀폐시킬 것을 요구하였어요. 더욱이 이 도로와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광고신도시에 입주 초기시점이라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시기였어요. 온라인 카페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주민들이 왕성하게 도시 개발에 대해 각종 민원을 제출하며 단결력이 높았어요. 총연합회와 단지별 주민모임에서는 행정에서 수원북부순환도로라 명명했던 이 도로개설에 대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음에도 또 도로를 붙여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했죠. 광고산 허리를 자르고, 지지대 노송길을 훼손해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의 진출입로에 고가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 등도 제기하였어요. 광고주민대책위와 수원지역 3개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활동이 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했나요?

장동빈 ■ 토론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이 있었고, 광고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와 함께 인간 띠 잇기를 추진했어요. 당시 겨울철로 기억하는데 20~30대의 버스를 동원해 수원시청 대강당에 몰려가 등교를 거부하는 활동을 한 것이에요. 겨울이라 무척 추웠어요. 수원시 부시장의 설명에 주민들이 큰소리로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공대위와 함께 행정에 환경 현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자고 요구했어요.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인지 그렇지 않은지, 꼭 필요하다면 2차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수원시 부시장이 이 공론화 하는 작업에 합의를 해주었는데, 다음 날 합의사항을 뒤집어버렸어요. 어쩌면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광고 주민들의 저항이 커지고, 평소 광고산에 대한 애정이 큰 수원시민들에게 광고산 허리를 가로지르고 지지대 노송지대를 훼손하며 개설하는 이 도로개설에 대해 반대여론이 커 행정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주민들도 처음에는 공론화를 하자는 환경단체들에 대해 수원시 입장에 서서 도로개설 찬성을 주입하려 하지 않나 하는 불신을 가졌어요. 다행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론화의 취지에 동의해 주었어요.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자도로가 개설되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충분한 학습과 숙의의 과정을 통해 찬반 입장을 발표해 그 결과를 수용하는 도시개발계획이 설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던 거죠. 수원시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었어요.

공대위에서는 공론화 운영 기간을 6개월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원시에서는 너무 길다며 4개월의 기간을 제시했어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표출 모집단을 구성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라면 2차 피해는 없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어요. 수원시는 처음에 방음벽으로 터널을 만들어 달라는 안에 반대했지만, 결국은 다 수용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지구개발에 있어 도로개설은 항상 늦게 추진되어왔어요. 도로계획에 맞게 이격거리를 두어 주택들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개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저항을 일으켰던 거예요. 도로개설 반대 운동이 주춤해진 것은 공고롭게

도 광고총연합회 집행부가 재구성되는 시기와 맞물렸어요. 한편 광고신도시에 도청 이전추진이 어렵다는 경기도 입장이 발표되어 이에 대응해야 하고, 전철역 입구를 정하는 문제 등등 재산 가치의 문제가 대두되자 이 쪽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급히 옮겨간 것도 이유라 할 수 있어요.

현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장동빈 ■ 저는 제가 경험한 수원지역 시민운동 20년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운동의 전환점으로 2008년 촛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밥상을 차려놓고 시민을 불러 모았던 시절의 시민운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어요. 2008년 수원 촛불의 정신과 고민을 계승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상을 차리고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며 주체적으로 광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해요.

환경부문의 시민운동을 회고해 볼 때, 수원지역 시민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어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거예요. 수원지역에서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도로의 이동수단을 바꿔야 해요.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도로교통정책에 변화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넓은 도로의 차로를 줄이고 싶은데 시민의 반발이 크다 싶으면, 도로공사를 6개월 이상 길게 추진한다고 해요. 이 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좁고 불편한 도로에 적응한다고 해요. 그때 도로의 한 차로를 보도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바꾸어 놓는 혁명적인 발상들을 추진한다고 해요. 우리 사회는 행정이나 시민사회나 그렇게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혁명적 발상은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전제로 해야 해요. 이게 그냥 책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시행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지요. 수원지역사회에 다양한 단체들이 생기고 여러 민간협력기구도 생겼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은 더 줄지 않았나 싶어요. 수송분담율을 생각해보면 수원시민 전체적으로 6:4나 7:3으로 도보통행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보행이나 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더 확충해야 하는데, 아직도 차로가 좁다며 도로를 넓히는 공사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엇이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거예요. 수원에서 저상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꾸리찌바에서는 버스를 타는 곳이 높아 바로 버스에 오르기 편한 구조로 조성했는데, 우리의 버스교통 환경은 장애인이나 노인, 일반 시민들에게도 저상버스에 쉽게 오르기 어려운 버스정류장 구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 정책과 도시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시민들로부터 직접 불편한 점이나 고충을 듣는 일을 덜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잘 알아야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 있겠지요.

4기 2006-2010

수원촛불

2013년 11월 18일, 305차 수원촛불은 밀양주민과 함께하는 수원역 촛불이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수원역에서 한국 및 수원지역사회의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는 수원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촛불을 밝힘.

5기 2011-2015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활동

2013년 2월, 노조를 만들던 버스기사를 2년 전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려하자 천막농성(100여일), 시민사회와 연대로서 회사의 사태해결과 사업허가권자인 수원시의 중재노력 요구, 후원주점 개최 등의 지원활동을 하였다. 누적된 버스회사의 탈법과 살인적인 배차·운행시간. 버스기사들의 고용 불안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참여, 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함

안병주

수원환경운동센터(이후 센터)에 인연을 맺어 수원지역에서 처음 활동하게 되었나요. 어떤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안병주 ■ 그렇죠. 제가 학생운동을 2000년에 정리하고 센터에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 센터에 들어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고, 다음에 광고산 생태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했는데 광고산의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통해 광고산 지역을 개발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어요.

수원 수요 촛불을 이야기하려면 안병주님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매주 수원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 당시의 운동을 회고하며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병주 ■ 수원촛불을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어렵네요.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압사사건과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 등이 전국적으로 있었지요. 수원에서도 관련한 집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수원역에서 진행한 촛불집회의 경우 2005년 ‘길바닥 평화행동’이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당시에는 ‘수원반전평화연대’ 차원으로 진행했었는데, 당시 쟁점이었던 ‘이라크 전쟁’에 관해 정말 소박한 촛불을 시작했었어요. 이 ‘길바닥 평화행동’은 1년 가까이 진행한 거 같고요, 이 흐름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다시 시작된 거지요. 한 5년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문화제는 사실 그전에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 같아요. 2008년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행동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드는 흐름이 생기고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부터 하나의 문화

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이 수원에도 이어졌고 특히 그때 온라인 카페 중심의 커뮤니티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 친구들이 시민단체들의 수원 촛불에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처음 만들기만 했는데, 시민들이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이러한 광장이나 거리 집회는 이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이 토론하고 기획해서 마당을 열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어요.

수원 촛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촛불 광장 온라인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는 수원 촛불의 공식적인 카페였어요. 이 네티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돌아가고, 촛불 집회가 계속 되면서 ‘수원촛불광장’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죠. 이 공간 운영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집행위원을 뽑아 실무를 맡는 시민운동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카페들에 참여하는 분들중에 운영진 몇 명을 구성해 놓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시민협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했나요?

안병주 ■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흐름과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이 촛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결합이 됐던 거였어요. 그 시너지가 수원 촛불의 초반과 중반까지는 잘 이어졌어요.

안병주 님이 그 다산에 들어가게 된 건 몇 년도였죠?

안병주 ■ 제가 수원환경운동센터를 그만둔 건 4년 동안 실무일을 하고 난 2004년도예요. 그 다음에 인권재단 사람이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때, 제가 인권재단 사람에서 1년 동안 기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끝나고 나서는 인권재단 사람도 정리하고 경기 민언련에 잠깐 있다가 다산으로 가 일을 했어요.

수원 촛불은 다산에 들어가기 전인 2008년도에 경기 민언련에 있을 때 시작했어요. 경기 민언련의 일을 하면서 수원 촛불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약간은 벗어나는 활동이었어요. 민진영 처장님이 배려해주어 크게 문제는 안 되었죠. 수원 촛불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일반 시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다산의 박진이나 제가 했었어요. 다산의 사무실이 나 경기 민언련에 모여 수원 촛불 진행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수원 촛불에서 국가와 수원지역에서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한 시민들이 무대 위에 올라 발언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안병주 ■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에 광우병 주제로 시작했다가 4대강과 민영화 등 4대 의제들이 등장했고 시민사회의 큰 저항에 딱딱뜨리게 되요. 수원 촛불 진행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4대 국가적인 의제와 수원지역의 정치사회 의제를 모아 촛불도 하고 발언도 배치했어요. 나중에는 철도 파업, 용산

참사 등이 터져 나오면서 이를 수원 촛불에 담기 시작했어요.

수원 촛불에서는 ‘오늘은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보다는 의제는 넘쳐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 결론은 ‘MB 아웃’으로 다 정리되긴 했지만, 각각의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것도 광장에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명 운동도 무척 많이 진행했어요.

수원 촛불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안병주 ■ 저희가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까지 계속 수원 촛불을 했잖아요. 초반에는 네티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촛불 시민이었어요. 네티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것이 초기와 중기까지 갔었죠.

아시다시피 이 촛불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촛불 온라인 카페에서 사기 사건도 일어나는 등 여러 사건 사고들로 분란이 생겼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서 수원 촛불이 한 풀 꺾였어요.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등 실무적으로 집회를 준비하실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저희 활동가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할 분담이 짐이 되기도 하고,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죠.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는 거의 수그러드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것은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MT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분들의 고민이 활동가들의 고민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제 껌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활동가들하고 촛불에 나오는 일반 시민들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는데 결국에는 어렵게 되었어요. 한 1년 정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버틴 거죠.

예로 ‘촛불총각’님이나 ‘젠틀매니아’님 등 정말 꾸준하게 나오는 시민 위주로 집회가 진행되었어요. 이때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참가, 철도파업 등 민주노총 노동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던 시기여서 수원 촛불도 노동 관련 의제가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고 매주 수요일 날 수원 촛불을 개최하기가 물리적으로 힘이 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겨울에 추울 때는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촛불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힘이 빠지긴 했어요.

결국은 수원 촛불은 기본적으로는 MB 정부 5년 안팎으로 해서 함께 터져 분출되고 생명력을 갖다가, 또 물리적인 시간과 여러 제약들 속에서 촛불 집회를 중단하게 되었군요.

안병주 ■ 그렇죠. 아예 정리를 해야 할 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끝까지 남아 계속 유지하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다 보니,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자는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어요. 저희가 다산이나 여러 활동가들하고 고민했던 건 이제 막 대중적인 어떤 저항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시

민 운동 역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역운동포럼’을 개최하자고 촛불 중간쯤에 제안을 했었죠.

‘지역운동포럼’을 제안했던 이유도 어떤 이슈에 대해 파이팅도 파이팅이지만 지역 운동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부재하다기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촛불 광장을 개최해 여러 의제들이 함께 얘기되고 또 함께 ‘연대를 광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런 얘기들을 운동적인 내용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는 측면에서 지역운동 포럼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지역운동포럼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수원 촛불 과정에서 의미를 확장시킬 목적과 고민에서 제안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 평가에서 추진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길게 수원 촛불을 오래 도록 들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수원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길게 갔던 거 맞나요?

안병주 ■ 전국적으로 촛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훌륭했어요. 어디 지역이 더 길게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책위를 단체들끼리 구성하면, 집행위 회의하고 대표자 회의하고 이런 절차적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가 있었나 해요. 그러니까 광우병 대책위 활동에는 시민단체 수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야 촛불도 얘기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광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크게 준비하는 데 절차가 필요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아마 중간쯤부터는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맡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번은 민주노총, 한 번은 다산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특별히 뭐 준비가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초중반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수원 촛불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MB정권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 수원 촛불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침체국면이나 중단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국면은 병주님께서 꽤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었어요?

안병주 ■ 막판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제가 대부분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스피커나 장비를 실어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옮기고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두 명 와서 저랑 둘이 막 나르기도 하는 등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긴 했어요. 물론 이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죠.

촛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 내가 광장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신념에 찬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여론이나 혹은 지역 운동에 이렇게 파장이나 의미를 주는 촛불 혹은 촛불 광장을 못하면 크게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정리하자니 아쉽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와서

같이 촛불을 들고 서명운동을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중단하겠다는 이야기하기 어려웠죠.

촛불에 몸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촛불을 정리한다고 하면 정리할 거고. 오롯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사실 기억이 없네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시민운동 어떻게 회고하고 있나요?

안병주 ■ 거칠게 표현하면 이게 운동인가 하는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됐었던 거 아니었나 싶어요. 기존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이분법으로 나누었는데, 이런 구도를 떠나 전체 사회운동 흐름 자체가 소위 민중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 쪽 재편이 돼 왔고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대규모 단체들 중심으로 한 어떤 의제 중심의 활동이었어요.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저항성 같은 건 별로 없었고요. 시민단체에 있을 때 제일 자괴감이 들었던 거는 공모사업하는 거였어요.

공모 사업을 통해 인건비 만드는 관행은 과거에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공모 사업은 할 수는 없겠지요. 실무자 활동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저도 거기서 몇 푼 안 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서 활동비를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이런 고민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환경운동센터를 정리했어요. 그렇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부정적이라는 생각보다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는 편이 낫겠네요.

재는 시민단체 출신이야. 재는 인권단체출신이야,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과 내용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태도나 자기 운동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정 단체가 회원이 수천 명이든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든 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헌신하는 활동가가 있고, 회원들과 함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운동의 기본 방향과 원칙, 단체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에 대해 반복적인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 쪽과도 계속 관계도 맺고 같이 일도 했었어요. 노동운동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활동가들 중에서도 정말 정파적인 활동, 공동의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목표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어요.

노동운동을 하니 시민단체 운동을 하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자기 운동에 대한 성찰, 이런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민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운동포럼도 고민의 수준 높낮

음을 떠나 그런 고민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 기획을 했던 건데.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흐름은 저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수원을 떠나 활동하고 있는데, 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안병주 ■ 제가 여기 남해에 와서 느낀 건데요. 수원에 인맥이 너무 정말 많구나. 특히 경기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하하하. 그리고 남해에서 있다 보니 수원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역에 사회운동 그룹과 활동가들이 존재하다는 측면에서 말이에요.

남해군에는 소위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고령화돼서 젊은 활동가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기도 해요. 맨땅에 헤딩한다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차라리 이판 저판 고려하지 않고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남해군에서도 시민사회운동의 토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는 설레고 좋은 데, 기존의 어떤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 혹은 사회운동 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행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계속 만들어가야죠.

수원지역에 운동이 뭔가 역동적이지 못하고 수구적이거나 좁혀진다는 비판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는 수원의 시민사회운동 경험과 내용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가치를 잘 존속해 가야 될 어떤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안병주 ■ 염태영 수원시장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지요. 당시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나 경진여객 해고자 투쟁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지요. 문제는 지역적 의제에 관해 투쟁이든 협의든 수원시와 어찌되었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이른바 ‘거버넌스’ 시스템은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나 힘이 강력하면 시민중심의 거버넌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에 끌려 다니거나 행정중심의 거버넌스가 될게 뻔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떤 의제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합의해서 이렇게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경진여객 해고투쟁도 그랬죠.

경진여객 대응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성과 혹은 한계에 대해 들려주세요.

안병주 ■ 생각해 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아요.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1차적인 과제이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버스 행정이나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했어요. 저는 다산인권센터에 있다 보니 소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매진했었어요. 하지만 버스 문제가 해고자 문제도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문제 제기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7000번 사당 노선 가지고 문제제기 했지요.

그래서 사당 노선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목표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관련 기사가 언론에 크게 몇 번 났었는데, 그건 해고자 처우 문제가 아니라 해당 노선의 기사 처우 문제로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고자의 복직으로 연결되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하나 힘들었죠. 결국에는 해고 무효소송에서 지고 말았어요.

대법까지 가서 졌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 분께는 제가 미안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좀 뚫고 나가는 어떤 집단적인 힘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시민협이라든지 시민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펼쳐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 틀은 어떤 것이 될까요? 사실 수원 촛불의 경우도 단체가 주도한 거냐 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공간이었어요. 시민단체의 틀을 통해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혹은 이와 같은 단체 형태로 시민운동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나요?

안병주 ■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하하.

저는 지역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제가 있을 때랑 많이 변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나 저항, 혹은 의제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또 여기저기서 그런 활동들을 모색하고 소규모 모임이지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조직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 단체의 어떤 조직적 전망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래 버티는 것에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안 될 거면 그냥 일단 접고 다른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하하하.

남해에서는 활동을 얼마만큼 펼치고 있으신가요?

안병주 ■ 저는 운동을 접고 시골에서 짱 박혀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조건에 맞게 활동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제가 생판 다 모르는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라 항상 긴장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또 가능성의 여지도 좀 많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활동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민’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고 봐야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술마시고 하다보면 재밌는 일들이 곧잘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남해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일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도모해보려고 해요.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 모임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식적인 지역의 기후관련 단체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공동체들의 남해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들이에요.

안병주 ■ 저희가 마을에서 같이 만든 협동조합도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예전부터 ‘공동체’ 관한 이야기나 활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 어떤 공동체고 관계여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냐 이걸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유동적으로 계속 만들어져가는 과정으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기존에 형성된 마을공동체를 변화시키기에는 많이 어렵지만 관계망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협동조합 방식도 마찬가지로 기후 모임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이예요. 여기 남해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양하게 좀 만들어보고 싶고. 그게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험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남해 상주에서 하는 것도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거창한 디자인을 갖고 있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재미있게 가는 게 목표죠. 하하하.

2021.08.24 19:00 온라인(Zoom) | 이상명 진행, 이상명·김성연 기록

5기 2011-2015

수원환경교육
네트워크

홍은화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입점
반대 활동

노건형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반대

서주애

장애인 이동권
확보활동

신승우

수원환경교육 네트워크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환경교육의 비전 마련, 활동가
연대,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등을 추진. 민선5기
수원시생태환경체험교육관
(칠보·광고) 및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음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참여하게 된 시점이나 계기는 어떤 것이었죠?

홍은화 ■ 한 20년 된듯해요. 농촌진흥청 산하에 한국야생식물연구회를 통해서 허브모임을 했었는데 주로 외국의 풀들(라벤더, 로즈마리 등)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만 허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이 다 허브라고 인식하고 보통은 잡초라고 불리지는 것들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싫어서 그 식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걸어다니는 식물도감’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이 일반 시민들도 접하면 좋겠다면서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알려주셨어요. 그때 환경운동을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시민 대상 환경교육을 시작했는데 환경강사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든지, 숲해설사 같은 제도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생태안내자라는 이름으로 환경교육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지인분이 저에게 식물 분야로 조사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보자라고 하셨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의 시기부터 교육과 활동에 함께 했던 사람들로 누가 있어요?

홍은화 ■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함께 강사를 했다가 이직을 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만두셨죠. 수원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 관장님이 제 후배 기수고요, 환경운동연합의 초창기 강사단 교육을 했었어요. 바른생협에서 활동하시는 산들레생태연구회, 다른 지역에서 하천교육이나 식물교육도 했는데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이제는 타단체 국장이나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죠.

수원환경운동센터의 환경운동 모임이 지역의 여러 단위에서 활동가와 환경교육동아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꼭 그것을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니 그런 환경교육의 길이 생겼군요.

오늘 이야기할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를 결성했던 2013년은 민선 5기 염태영 시장님이 출범하고 생태환경체험교육관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설계하고 만들어지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했던 운동을 한마디 단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홍은화 ■ ‘환경교육은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때만 해도 환경운동이 과격하고 반대만 한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의제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대응이 왜 필요한가를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산에서 하천에서 또는 실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해서 인식을 넓혔던 거죠.

교육이 운동이다! 혹시 20여년 환경교육에서의 사례나 에피소드로 알려주시겠어요.

홍은화 ■ 청소년 활동으로 만났던 한 친구는 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갔어요. 광고산의 양서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편의성으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태보존을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진로를 잡은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청소년은(지금은 청년이 된) UNEP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활동초기에는 곤충이나 양서류를 무서워하던 친구들이 일 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서식지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했지요.

내 행동, 하는 일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20년 동안 하고 있지?’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 ‘저걸 해야 되나 보다.’ 인정해주고 단체를 후원하거나 생활습관의 소소한 변화가 보일 때, 행동이 운동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시기와 계기를 들려주세요.

홍은화 ■ 2013년에 창립을 했어요.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부문의 환경교육, 보존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시기였죠. 역으로 말하면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점이 점점 더 심해지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육으로 인식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역할이 함께 할 때의 영향력과 에너지가 더 강해지기도 하죠. 단체들 모두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데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거버넌스의 형태들이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이미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가 우리보다 먼저 생겨나서 수원의 하천뿐만 아니라 저수지 등을 생태적 관점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던 선경협이 있었던 거죠. 환경운동도 교류를 하고 서로 가진 장점을 나누었을 때 더 효과가 더 크겠다는 생각이 모아지고 준비해서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2013년 생태교통수원이 끝나고 2014년에 시에서 환경교육을 내용으로 용역을 할 주체를 찾으려고 할 때 수원지속협이 받아서 환경활동가와 함께 환경교육도시 계획과 비전을 논의했었어요. 2014년에 환경교육도시와 관련된 과제들과 계획들을 만들어 내오고 그런게 발표도 되고, 그러면서 환경교육도시, 내지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조금은 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전에 이미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논의되던 것이 구체화되었죠.

그런 활동들은 일정하게 수원시 예산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장애가 되었나요?

홍은화 ■ 사실 네트워크 소속이지만 각 단체 활동이 우선이잖아요. 누군가는 네트워크에 집중해서 고민을 이어내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단체 일을 하다보면 네트워크 활동은 놓쳐져서 진행이 쉽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오늘 자료를 찾다가 민관환경교육협력협약서라는 것을 찾았어요. 2013년도에 수원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창립하면서 환경교육한마당을 그 해에 진행하고 민관환경교육협력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수원시와 환경교육네트워크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이렇게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환경교육계획 수립도 했고, 100인 원탁회의도 했고, 시범도시 선언도 하며 쭉 이어지긴 했지만, 이게 뭔가 행정에 맞추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원환경교육한마당은 계속 해갔지만 여기에서도 예산과 참여인원과의 변수는 빠질 수가 없었죠. 환경교육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되는 것도 있어서 좀 아쉽죠.

물론 환경교육 계획에 자문단으로 참여한다거나, 칠보나 광고생태환경교육체험교육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는 해도 한계가 있어요. 각자 단체의 활동에 주력을 하게 되니까요. 좀 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원의 환경교육이 더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행정에서 받으면 자율권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시와의 관계는 그렇고, 단체들은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기도 했고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시나 시의원들이 감사에서 예산 대비 참여인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지역과 환경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교구·교재를 활용해서 참가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대했는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선시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환경교육 분야가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잣대로 결과를 평가하니 질적인 향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단체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합니다.

한번은 수원환경교육한마당을 보이콧한 적이 있었죠. 수원시가 광고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 했었고 이것은 지역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라 판단하여 수원시와 함께 행사를 하지 않겠다 통보했었죠.

수원이 환경교실은 '탄소뽕뽕'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탄소를 배출해가며 환경교육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환경교육네트워크와 협약까지 했는데 왜 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을 할까? 초반에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환경교육의 가장 기본은 먼저 지역을 아는 것이예요. 수원 지역의 자연환경과 환경 문제를 접해온 사람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환경 지식을 전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시민사회 쪽에서의 수원이환경버스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환경교육은, 지역의 생생한 문제의식과 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그런 교육들은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으로도 지향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영역인 생태탐사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가, 교육자들의 역량을 키워온 것인데, 탐사활동에 대해 평가 해주시겠어요?

홍은화 ■ 저희가 시민생태탐사 할 때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찾는 일, 생물들의 생활사는 어떤지, 어떻게 연결되어서 생태계가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굳이 오지 않아도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준 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지역의 수원시 8대 깃대종을 선정하기도 했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힘이 되었죠.

환경교육을 전문으로하는 환경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실무자와 예산을 갖추고 운영해온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환경운동단체들과 환경교육기관의 관계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홍은화 ■ 한계라고 하면, 시 예산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일이 있다 보니 주요 평가 기준으로 보는 실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정된 예산에 교육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 칠보생태체험교육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활동 참여 수요는 엄청 많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환경교육 요청이 많은데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정된 예산에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수원이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환경교육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점점 줄어왔어요.

그리고 체험관에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으면 시로 귀속돼요.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경교육에 재투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시의 원들은 체험관끼리 경쟁을 시켜요. 저쪽 시설은 이만큼 벌었는데 이쪽은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이런 사실 변질되고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과를 말하자면, 지금 체험관들에 계신 분들이 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예요. 교육을 통한 환경운동을 단체에서 소소하게 진행해왔지만 지금은 전문 기관에 들어가서 수원의 환경을 밑바탕부터 알고 활동했던 경험을 운영에 반영하

고 있다는 점이죠. 기관의 강사 분들이 지역의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서식지 보존에 힘을 보태는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서 지역 활동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운동으로 해왔던 활동이 체험관에서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하는데 기반을 이루게 된 면에서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좋은 유산, 미래의 선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활동이나 공간, 반대로 미래에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로 꼽고 싶은 것은요?

홍은화 ■ 수원에서 보존되어야 할 곳이 저는 황구지천이라고 생각해요.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수원천 복개반대운동을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되었다지만 실제로 수원천은 사실 공원이 되었죠. 그래도 수원에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으로 하나 남아 있는데 어찌지 못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천은 주변 생태계와 더불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거든요. 상상해보면 황구지천이 수원천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황구지천이라고 할 수 없고 황구지공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았던 생물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수원에서 얼마나 지속가능함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황구지천이 주변 습지와 칠보산이 연결되면서 생물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라지는 생물종이 생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원청개구리죠. 겨우겨우 1년 동안 이 잡듯이 뒤져야 찾아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원에서는 점점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황구지천은 수원의 바람길이기도 하고요. 광고가 개발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원천동 주변 주민들이 문 열면 들어오던 바람이 안 분다고 해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수원은 더 이상 개발하면 안된다고 해요. 면적에 비해 인구도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의 도시계획 속에는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죠. 수원이 특례시의 권한을 더 확보해서 견제도 받지 않고 더 개발 위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워요.

우리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것을 소외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서수원의 경우는 비행장 소음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외된 것이 아니라 큰 기회이고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우리 동네에 보존지역이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원시가 펼쳤으면 좋겠어요.

240년 전에 세워진 수원화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수원을 창조해가고 가꿔가고 자긍심을 가지듯이, 황구지천이라는 긴 수로를 2020년대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꾸고 생물다양성을 지켜가는 힘들은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에너지를 시민사회부터라도 모아내야겠죠. 황구지천의 걷는 길은 하상으로 만들고 하천 독방은 아스팔트 포장해서 생생 달리게 하라는 요구가 꽤 강하게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논의 개발되어 상가와 건물로 뒤덮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변은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것은 수원천 복개 반대운동 했던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홍은화 ■ 자연이 잘 보존된 곳으로, 국내 뿐 아니라 외국까지도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왜 수원에서 못하냐는 거죠. 보존해서 남겨야 할 곳도 현재 많지도 않은데 왜 흠

길을 그냥 두지 못하고 포장을 하는 건지, 굳이 왜 생물들의 서식지를 없애면서까지 하천변에 와서 레저를 즐기려고 하는 건지. 시는 이런 이유들로 보존해야 함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민원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례시가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도구로 작동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운동, 환경교육 활동가로 긴 시간 해오면서 다른 활동가들에게 하고싶은 말은요?

홍은화 ■ 힘내자! 근데 지친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면 그건 욕이라고 하던데.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너무 힘들게 뭔가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잖아요. 활동가들이 쉬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꼭 안아주고 토닥거리 주듯이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당신이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운동사 작업이 그런 일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의 활동가가 했던 일, 우려, 고민되었던 지점을 듣는 과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수원을 살아가고 있고, 곳곳에서 다양한 색깔을 견지해가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30여년간 활동가들이 집단적으로 꿈꾸었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기록집에 담겨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9.01 17:00 온라인 인터뷰 | 이상명 진행, 돌멩이·김성연 기록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입점 반대 활동

대형마트(SSM)들의 골목상권 진출에 투쟁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SSM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제도개혁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한 수원지역 범시민대책위 활동(2009년-2010년)

노건형

노건형 님이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노건형 ■ 1996년 10월에 중앙경실련에 채용되어 보직을 받은 업무가 수원경실련에 가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수원경실련에서는 당시 수원시와 수원환경운동센터 등과 함께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박완기 간사를 파견했고, 나는 박완기 사무국장과 함께 지방의제21의 간사로 일을 했어요. 드디어 1997년에 4월 22일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연태영 현 수원시장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수원경실련은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인계동의 한민선교회관에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5월부터는 수원경실련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했어요. 2005년부터는 잠깐 쉬를 가졌던 것을 포함, 2년 정도 시민운동정보센터¹¹⁾에서 ‘대한민국민간단체총람’을 제작하는 일을 했지요. 이후 2008년 다시 수원경실련에 복귀해 2015년까지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을 했어요.¹²⁾ 경실련 활동에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2009~2010년에 걸쳐 수원지역의 SSM에 대응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노건형 ■ SSM(Super Super Market)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불러요. 수원지역에 SSM이 세 군데 지역에 진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동수원사거리 월드메르디앙에 롯데슈퍼가, 구매탄시장과 호매실 지역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선다는 것이었어요. 수원경실련에서는 지역상인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공동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어요. 유통법과 상생법 등 국가적인 중소기업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지연되면서, 우만동과 구매탄점은 결국 기업형 슈퍼가 입점했고, 호매실점만 유일하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막을 수 있었어요.

11) 아주대 교수로 활동했고 수원경실련의 대표로 활동했던 김영래 이사장의 요청이 있었다.

12) 그는 2017년에는 중앙경실련에서 1년간 재직하기도 했다.

이 쟁점은 수원경실련의 활동 목적에 직접 부합되는 활동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세 지역의 활동을 지원했어요. 구매탄시장에는 상인회가 입점 반대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우만동에는 상인조직이 없어 활동에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가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SSM 입점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예상될지를 설명하며 입점반대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상가 골목의 과일가게 등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고, 편의점들도 긴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지요. 수원경실련에서는 기자회견, 상권분석을 포함한 상권지도를 그려 향후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설명했어요. 대책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중간에 물건 납품 값을 떼어먹고 도망가 어려움에 처했던 일도 있었지만, 경실련의 관심은 제도적인 입법화에 있었어요.¹³⁾

사실 이 과정에 대해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제 기억이 흐릿하네요. 새로 입점을 계획하는 업체의 진입을 막을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 SSM과 기존의 슈퍼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어요. 칠보지역은 외곽의 고립적인 지역이었고 또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칠보상우회라는 탄탄한 상인조직이 있었고, 이 활동에 열심히 했던 조은석씨는 칠보상우회의 감사 역할을 하며 젊은 상인들로 구성된 칠보상인연합회의 주요 임원을 맡고 있었어요.

초기에 구매탄지역과 우만동 지역이 먼저 활동을 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 싸움을 계속해간 지역은 칠보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칠보상인연합회가 나중에 칠보상인협동조합을 창립 활동해, 소상공인진흥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안적인 지역경제 모델로의 발전을 주목했었어요. 영리에 눈이 밝은 상인조직에서는 외부인 적, SSM에는 투쟁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흐지부지해졌어요. 칠보지역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하진 않았으나, 1km 떨어진 지역에 대형 매장인 홈플러스가 입점해 그 노력이 바랬어요.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지역상생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 영국 테스코의 지배력이 커서 삼성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되요. 이들은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일부 상생발전기금을 내는 곳도 있었으나,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13) 당시 수원경실련에서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대상베스트코가 우만동에 식자재 매장을 몰래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과 함께 입점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 대상 베스트코 문제는 경실련과 상인들의 기자회견, 항의집회와 상인들의 1년여에 걸친 장기간 천막농성 등을 겪은 후 (주)대상과 상인들의 합의에 이르렀다. 150평 이상 대형매장에 한 해 대상베스트코가 납품하고 경기남부지역 6개 시군에 대상이 추가로 출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수원경실련은 경실련들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재래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입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 실시를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수원경실련20년의 기록, 220p, 2013.10 참조>

당시 활동했던 상인들 중 일부가 수원경실련 회원으로 참여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후 SSM이 수원 곳곳에 생겨나 그 노력의 빛이 바래긴 했지만, 시민운동에 대해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어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공정함을 얘기하고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이후 유사한 사례 생겼을 때 대응할 힘이 주민과 상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점포 입점여부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시민운동이 반대투쟁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어요. 당시 SSM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수원지역에도 현안 사항이라, 전국적인 집회에 참여해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IMF 이후 이 종목은 중소기업들의 몫이라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통이,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자유화에 의해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입하는 대기업들로 깨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경실련은 이 종목만큼은 중소기업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하고자 했으나 어려웠어요. 프랑스에서 정부가 개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이끌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위 사안에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은 어떠했는지 들려주세요.

노건형 ■ 전국에서는 참여연대 등이 결합했지 수원에서는 수원경실련 이외의 단체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이 운동이 현재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회고해준다면?

노건형 ■ 시장 논리에 의해 지역사회가 쇠퇴해간 지역도 있고, 상생을 통해 활성화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수원 곳곳에 신도시가 개발되며 중심상권이 계속 이동하며, 상권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새로운 상권이 생기는 과정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 운영하던 기존의 상권이, 도시계획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크게 취약해져 버린 것이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자가 기존 상권의 보호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신도시 토지를 비싸게 판매할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돼요. 경쟁입찰방식으로 비싼 가격을 내기만 하면 팔아,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규제 일변도 방식보다는 상권이 적절히 배치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해가도록, 골목이나 지역의 상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봐요.

노건형님이 지나온 시민운동을 회고해보며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노건형 ■ 한 회원의 회고담에 의하면 “30대의 노건형 시민활동가는 반미치광이처럼 보

였다.”고 했어요. 한번 시작한 활동을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뭐라도 이루리라 생각해요.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던 활동가들이나 젊은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노건형 ■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가진 정체성을 잘 발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단체들은 지역밀착형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대응해가면 좋겠어요. 시민밀착형, 지역밀착형으로 시민운동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우는 어떤 이슈에 대응하며 단체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활동에 있어 대책회의를 하기보다 현장조직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참여를 독려하는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 칠보충연합부녀회의 많은 일반 주부들과 지동시장 상인회가 참여해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SSM 활동 당시 칠보상인회가 버스노선의 변경을 통한 경관조성사업을 요구하려고 할 때, 당시 길 양쪽에 있던 120개나 되는 모든 상가의 상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내 수원시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시민단체가 광장에서 집회, 서명운동을 많이 하며 문제에 대응하지만, 가가호호 사람을 대면하며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을 나누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단체는 긍정적이고 협력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비판적이거나 저항적인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있으니 그 장점을 잘 살리되, 직접 시민들을 대면하고 생각을 듣고 나누는 노력을 기울여가면 좋겠어요.

광고신도시 조성 시기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던 활동가로 알고 있는데, 당시를 회고해주세요.

노건형 ■ 처음에는 이의행정지구 개발계획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생각돼요. 실제로 경기도청부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소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손학규 도지사가 당선되며 광고신도시의 규모를 작은 규모로 개발하면 인근 주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다며, 큰 규모의 신도시로 계획해 보존과 개발구역을 분명하게 구분해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이 부지에 있던 하동지역은 경기남부광역녹지축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가들은 이 녹지축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보호하려는 입장을 견지했어요. 당시 시민단체들은 수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 신도시를 조성하느냐며 이 정책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이 광역녹지축을 꼭 보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어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수원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요청했고, 승인을 보류하고 반려하는 사례를 만들었어요. 이후 녹지보전지역 증가 등을 담아 조건부 통과가 되어, 초창기 계획에서 5만 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던 것이 2만 7천 세대로 감축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현 광고신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노건형 ■ 경기도와 수원시는 계속 수정계획을 제출하며 추가적인 아파트 개발을 늘려갔어요. 당시 2년간 송파 서울에서 일을 한 후, 수원경실련에 돌아와 상근활동을 하고 보니 광고신도시개발계획이 초기 계획과 많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하고 많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나요.

도시계획 전문가로부터 광고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며 혹평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동탄신도시와 다르게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며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등, 새롭게 등장한 철학과 가치를 담지 못하였다는 평가였어요.

수원시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관련한 대응활동에 대해 피력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노건형 ■ 2001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 활동을 할 때,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가 우리의 목표였어요. 수원시도 모양새 갖추고 시민단체들도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성과를 내길 원했지요. 수원지역의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앙단위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 건이 크게 보도되고 방송을 탔지요.

그런데 심재덕 시장이 구속되면서 협상해야 할 상대가 없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료와 징수료의 결정 권한이 있는 수원시의회 김용서 의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책임을 지라고 하며, 그동안 받았던 서명용지들을 건네고 나왔어요. 김용서 의장은 시의원들을 찾아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하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어요.

당시 KBS에서는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을 편성·제작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출연했던 시민에게서 ‘수원시의회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하더라.’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에 이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날 수원시의회 의장과 의 면담을 잡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방송으로 촬영해 보도하게 하였어요.

2001년도 1월 16일 시청 앞에서 진행했던 첫 시위로부터, 수원시의회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결정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드린 날은 같은 해 11월 17일이었어요. 이 운동 이전에는 수원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단체냐고 늘 질문을 받곤 했는데,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묻지 않더라고요. 20리터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해 당시 전국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을, 이 결정으로 600원으로 내리게 되었어요.

수원의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하도록,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수원시 결정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원가를 산정해 그 적절한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원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로청소를 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쓰레기봉투 가격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을 밝혀냈지요. 이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이 아닌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개정을 요구했지요.

환경부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했어요. 수원시의회에서 20리터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여야 적정하냐고 물어, 배출자부담원칙을 지키더라도 600원 정도가 합당하겠다고 의견을 말했는데, 이를 받아들였어요. 2001년 7월에 김용서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당시 심재덕 수원시장의 구속으로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수원시 부시장은 전임시장이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마침내 수원시는 11월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은 나 개인에게도 ‘쓰레기봉투 가격’이란 의제를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했어요. 1년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값은 50억 원이었어요. 또 당시 불법주차 단속을 새벽 3시에도 했는데, 이는 2002년 수원월드컵행사를 치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수원과 전주가 월드컵구장을 지으려고 하자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삼성이 수원 월드컵구장을 자체비용으로 짓겠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이것은 수원시에게 큰 짐을 떠맡겨 월드컵 관련 부대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100억 원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상황과도 일치하는 대목이죠.

의회 방청을 하며 쓰레기봉투 가격보다 더 큰 비용들이 소요되는 항목들을 보게 되었어요. 다리를 건설하는 공사 설계변경을 하면 더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섯 번이나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보았어요.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비용도 같이 증액되었어요. 기업들은 공사를 따 놓고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설계변경을 계속하며 수익을 얻는 것이었어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의 문제보다 더 큰 도시 건설과 개발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개발반대 운동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운동이나 도시 부동산 문제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어요.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용인경전철 건설계획이 추진될 때, 수원에서도 1조 원 정도의 경전철을 놓으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보통 시민단체에서는 시의 계획이 이미 결정되고 난 후 언론을 통해서나 정보를 알게 되어 반대 운동은 빈번히 성과를 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잘 대응해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어요.

활동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노건형 ■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기에는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다양한 단체들과 다양한 형식의 시민운동이 생겨나고 있어요. 시민들 스스로 SNS 등 사회 관계망을 통해 곧바로 자기의 의견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해오던 활동도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중앙경실련에서 지

역경실련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니, 광역경실련들 이외에 기초 경실련들은 언제 활동을 중단할지 모를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단체들이 열악하니 1인의 상근구조가 가지는 한계가 터질 수 있어요. 활동가가 단체를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데,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좋게 끝나면 괜찮은데,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내게 되면 단체의 활동 경험과 역사도 함께 단절되는 것을 보았어요. 열악한 상근구조에서 새롭게 활동가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역할을 인수·인계받기 어렵고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도 부족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더라고요.

신입 활동가에게 단체 임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요구만 하려는 것은 대단히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조직 활동의 미래와 관련 내적으로 구성원들과 조직 진단을 합심해 내려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들이 동호회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2021.09.15 18:3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김영균 진행, 신윤범·이상명 기록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반대

2012년 6월 수원시가
시립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현장
서비스 제공, 보육교사의 책임감
고취 등을 위해 자체 예산
1억9천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실내
CCTV 설치를 행정예고한 데에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아동과 교사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활동 추진, 7월 수원시는
CCTV 설치계획 철회를 발표

서주애

2012년 수원시 어린이집 보육시설 내 CCTV설치 반대운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원여성회가 주축이 되었는데 같이 협력했던 단체들도 있었나요?

서주애 ■ 그때 단체들이 많이 안 왔어요. 수원지역 어린이집 중에 보육 문제된 곳들이 기사화 되면서 보육아동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를 보육실 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까지 다 해놓았어요.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회의에 통보를 했어요. 수원여성회가 운영하던 평동어린이집은 교사들도 회원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도 있었으니 교사들 사이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CCTV를 설치하려면 사실,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들 대신한 보호자와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의 기저귀를 찬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고 보여진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해서 다산인권센터에 처음 제안 했고요. 함께 하자는 제안서를 돌렸는데 시민단체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산 외에는 목회자연대 정종훈 목사님하고 시민협 이성호 대표님, 환경운동연합, 교사들이 가입한 보육노조 등이 함께 하셨어요.

행정에서 1억 9천만원 비용으로 행정예고까지 한 사안을 약 1달 반 사이에 철회를 발표했어요. 공무원들하고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초창기에는 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주애 ■ 그 사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이 갈렸고,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했었어요. 원장, 보육노조, 여성회에서 제가 나가서 찬반의견을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CCTV가 아동 안전을 책임지지는 못하기에,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과, 교사1인당 아동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얘기했고 교사들도, 원장들도 동의를 했죠. 행정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보육 서비스와 민원의 문제가 생기니 CCTV 설치로 그나마 조금 해소할 있지 않을까 하며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공론화되기 시작하니깐 보육아동과에서도 동의한 거죠. 저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처리할 줄 몰랐어요.

빠르게 행동하여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고 일방적 행정처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서주애 ■ 지금은 CCTV 설치가 대세이지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여전해요. CCTV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쳐요. 더 악랄하게 안 보이는 데에서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사고를 줄이려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사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에 집중하는 업무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방마다 사각지대 없이 CCTV를 달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였던 거죠. 그 때 해결방안으로 CCTV가 아니라 부모 참여프로그램과 소통의 방식을 확대하고 교실을 공개하는 것을 제시했었죠. 저는 CCTV가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방의 효과를 명분으로 가져갔을텐데, 철화하게 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 해결방향에 대한 공감기 있어서일까요?

서주애 ■ 기자회견하고 토론회하면서 조금 바뀌었던 거 같아요. 토론회 사회를 사회복지협의회 송원찬 선생님이 보셨고 원장선생님과 교사 당사자도 나와 이야기를 한 결론이 CCTV가 근본적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육아동과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에 반감이 있었어요. CCTV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떠냐, 교사 의견을 수렴해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정하고 예산 세워서 통보하는 방식에 원장들도 반대가 컸어요. 선생님들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어린이 집에 있는 본인들 일상이 촬영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수원여성회가 운영하는 평동어린이집 교사들은 서명지 만들어가지고 연대서명 받고, 필요하면서 서울에 보육노조와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을 진정을 시키기도 했어요. 보육노조로 가져가게 되면 문제 해결 보다 쟁점을 커져서 노조와 시의 문제로 가게 되면서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보육노조와 하는 싸움으로 가기보다 운영법인인 여성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교사들을 설득을 했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당시 장정희 대표님은 이런 분위기를 보육아동과에 전달했죠. 만약에 지역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조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어서 시민사회가 문제제기 했을 때 접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기자회견만 한 게 아니었어요. 보육아동과에서도 이 정책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보육 관련되신 분들이 확 뭉쳤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성회가 운영한 평동어린이집 말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CCTV 반대에 함께 한 곳이 있나요?

서주애 ■ 원장님들은 시 눈치 보느라고 의견을 크게 못 냈어요. 시립어린이집 원장 회의에서도 시 정책이나 동원이 필요한 사업을 전달 받는 게 보통이고 비리 없이 회계

처리를 잘 하라는 행정적 지시를 받는 것이지, 안전이 있어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 일도 없어요. 특히 시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개인이니까. 그런데 여성회는 시민단체로서 우리 회원들을 내세우며 할 이야기를 해왔어요. 회원들이 공감하고 나서주지 않았다면 CCTV 설치 관련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원여성회와는 어떻게 만나시고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서주애 ■ 저는 평동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수원여성회를 만났고요, 수원지역에서 믿고 보내는 괜찮은 어린이집이고, 좀 어린아이들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여성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원활동을 시작해서 소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운영위원을 하고 그리고 영상사업단에 참여하고고 그리고 나서 사무국장을 했죠.

평동어린이집과의 만남으로 여성회 활동도 시작이 된 거네요. 그때 평동어린이집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애가 4살 되면서 고민했었는데 집이 정자동이라 평동까지 데려다줄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었어요.

서주애 ■ 저도 평동 근처 아니고 세류동에 살면서 애들을 차로 등원시켰잖아요. 수원 전역에서 왔었어요. 사실 평동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절반 안되었어요.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수원지역 시민운동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주애 ■ 여성회 20주년 사업할 때 슬로건이 ‘동네방네 꽃을 피우다’였어요. 류명화 대표, 장정희 대표, 임혜경 대표님 계시며 여성회가 가장 활발했던 거 같아요. 제일 전성기였죠. 그때는 시하고도 사업을 많이 했었고, 시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여성회에 연락해서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그랬어요.

저는 여성회 사무국장 있을 때, 시민협 운영위원장을 한 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연대해가고 다른 단체 활동을 알게 되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시민협도 상근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될 때 나중에 시민단체연대회의나 협의회에서 반상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을 정도로요. 여성회 일 뿐만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이나 다산인권센터와 협력하고 연대하며 활동가 만나는 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연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재미있었다?

서주애 ■ 네. 그래서 사안별로 협의체가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시민단체협의 회로 사안이 들어왔어요. 시민협 초창기 2012년 즈음,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그해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장애인들이 시청 점거했었잖아요. 그때 이성호 대표님이 시와 협의를 일방적으로 하고 왔다고 일부 단체에는 욕도 엄청 나게 했었던 일도 있어요. 협의회 대표의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죠. 이후에 시민협 운영위원장을 할 때 여성회 사무국장보다 시민협 일을 더 비중있게 했었어요.

2012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관련해서 신승우님과 인터뷰 했어요. 그때를 너무 감사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경기도 투쟁 일정의 마지막 거점이었고 수원은 원만히 수용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공무원들의 오해와 관행들이 작용하면서 일촉즉발로 접거가 들어갔었죠. 그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함께 편에 서준 것, 특히 시민협에서 이성호 대표가 뛰어들어와서 살피고 연결하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기억하시더군요.

서주애 ■ 그렇군요. 시민협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 이성호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민단체가 면담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된 거였지 안 그랬으면 오래 갔을 사안이었어요. 시장님도 내용을 잘못 보고 받았다고 나중에 수원시가 사과했던 거 같아요.

이어서 광교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서주애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해서 수원지역에서 제일 많은 단체가 참가한 조직었고 제가 시민협 운영위원장으로 들어갔어요. 수원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협 만이 아니고 더 많은 조직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여태까지 대책회의들 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회의할 때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보통 결정되면 따른다는 분위기였는데 이 사안은 의견도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때 서명도 정말 열심히 받으러 다녔죠. 그리고 시민들 반응도 좋았어요. 시민들이 '거기 개발되면 안되지'하며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에 활동가들이 서명 받으러 다니면서도 기운 나고 힘 받았어요. 그리고 1인 시위도 오랫동안 했죠.

시민단체들이 서명받고 1인 시위하고 나서 협의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저랑 수산스님, 윤은상 국장이 들어가고, 광교산 주민 대표 3분과 제1부 시장과 시 관계자,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회의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는 어떻게든 집행해야하겠으니 마치 시민단체와 주민과 갈등관계 속에 시가 중재자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데에 많이 열 받았었죠. 주민들에게는 시민단체가 자신의 재산권 주장을 막는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런 반감으로 꼭 집어 'OOO 물러가라'는 식의 인신공격형 현수막도 걸렸었잖아요. 빨간 글씨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화내지 않고 대화를 계속 진행했어요. 결국 주민들이 또 자진해서 떼어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졌어요. 다른 지역의 사례나 당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첨예한 문제를 다룬 공론화위원회들을 봐도, 사실 내용이 충실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수원에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주민들도 내세울 것, 감수할 것을 스스로 내었고, 현장조사도 하며, 상생협약안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논의한 결과로 주민, 수원시, 시민사회의 합의사항으로 사인을 했는데, 막판에 그 내용을 시민사회가 원하는 대로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식당 영업에 있어 주차장 문제 등으로 위법으로 벌금 내왔던 것을 일정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풀게 되니까 개발심리가 발동되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은 생존권 위

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땅값 문제인거죠. 회의에서 협의하고 나오면 다음 회의에서 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요.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 하는거죠. 재산권 문제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이런 저런 상황과 문제로 돌려져서 반복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재산권 문제인 것을 다 알지만 아무도 입에다가 올리 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공의 필수와 개인의 욕망이 줄다리기를 하며 오랜 과정을 거쳐 논의하면서 마지막까지 사인을 하네, 마네 했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협약서의 내용에 범대위가 가고자한 바가 100% 관철된 것은 아니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광교산의 개발은 예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서주애 ■ 대응과정에서 대립하는 모양으로 날카롭게 각을 세워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대화로 자리로 이끌어 내고 같이 협의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후 기존에 주민들이 위법해온 것들을 자진 철거하는 제도 기간을 두고 시민사회와 같이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잘 났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는 분기별로 회의가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논의를 검증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게 어려운 형태인거죠. 회의가 그 이후론 잘 안된다고도 들려오고요.

수원 어린이집 CCTV설치 반대운동,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참여해오신 시민운동에 있어 서주애님이 생각하는 성과와 한계, 현재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서주애 ■ 어린이집 CCTV 반대할 때 단체들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으면 외부 연대에 같이 하기 힘들게 다들 바쁘잖아요. 그때 기자회견에 우리 회원들하고 다산, 여성단체들로 해야겠거나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목회자연대의 정종훈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단체 일에도 같이 해야지, 우리 사안이 있을 때도 단체들이 참여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교산 범대위 때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힘이 모아진 게 대단했다 생각돼요.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센터가 열심히 움직이기도 했고, 서호천의친구들에게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셔서 발언도 하셨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 했지만 한여름에도 멈추지 않고 1인 시위하고, 주말에는 서명을 받으러 나갔죠. 그렇게 같이 해서 100% 관철은 아니지만 대화 통해서 협약을 이끌었던 것은 큰 성과죠. 수원시도 광교산상생협약을 자랑하고 다니고 좋은 사례로 알려져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리에게서 광교산 반대쪽의 용인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력했어요. 용인 고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막아야겠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어떻게 상생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가를 함께 경험했어요. 그런 연대 활동이 중요한데 제가 운영위원장 마친 이후에 시민협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었어요. 제비뽑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활동가들 교류를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결국 바빠서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되어서 아쉬웠어요. 단체 활동가들이 얼굴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자회견 마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굴보고 서로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가고 이후 그 단체의 누구와 연락을 해야 되는지 연결하는 계기가 되죠. 제가 여성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여성회, 다산의 20대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면을 자주 보았어요. 단체에 젊은 활동가들이 잘 없어서 고민이 깊은데 이들이 3년 이상 활동해간 데에는, 개인적인 고민과 단체 안에서 못하는 얘기도 나누는 그들의 교류가 큰 힘이 되었겠다고 생각해요. 각 단체 지향과 자기 운동방향이 잘 맞아서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겠지만 단체 내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또 있어서 단체를 넘어서는 활동가 교류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시민사회가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자기 기반의 힘을 가지고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단체나 활동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텐데요.

서주애 ■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으라면서요. 무슨 말을 해요. 알아서 잘하겠지만 지갑 열 능력은 안 되니까 한마디 보탤다면요. 너무 지치지 않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 하다보면 자꾸 까먹어요, 내일도 있다는 것을. 그 일, 안 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치지 않고 가는 방법을 잘 찾아가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오타 하나에도 정말 죽을 거 같았거든요. 그 오타 때문에 회의 망치는 거 아니고 그저 대표한테 지적질을 받을 뿐인데. 오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행사를 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지나치게 부과된 책임감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선배들은 가서 잔소리를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 활동가들은 그런 선배들 걱정을 가려서 들으셔야. 예전 활동하던 방식과 현재는 변화가 있어왔으니 계속 가지고 가야되는 게 있고 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지금을 평가하시는 선배활동가들을 만날 때는 답답해요.

2021.09.03 14:30 수원지속가능발전재단 | 김영균 진행, 돌맹이·김성연 기록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

<경기420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12년 5월 14일부터 경기지역의 시·군을 다니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추진. 23일 수원에 도착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44대의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요구했으나 예산상 수용불가라는 수원시의 답변에 항의하기 위해 24일 시청본관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함. 수원시가 시청불법점거라며 장애인들의 출입을 막자 장애인들이 농성을 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인 이동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 수원시의 변화를 이끌었다.

신승우

2012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을 회고하면서 수원지역 시민운동, 또는 수원지역 장애인 운동을 한 문장,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승우 ■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원이 당시 장애인 투쟁으로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들, 지방 자치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남아있어요. 가령 '자립생활체험홈'이라는 게 있는데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31개 시군이 이를 따라 할 거라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타깃이 되었던 게 수원이었습시다. '두 바퀴로 가는 세상' 이동권 투쟁에서는 수원이 마지막 도시였고 수원시를 꼭 성사시켜야 다른 31개 시군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활동가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벌어졌죠.

장애인 운동과 관련해서 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군요.

신승우 ■ 그렇죠.

수원에서의 시행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10년 전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나요?

신승우 ■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그 당시에 시청 로비에서 계셨던 신승우님은 그때 경기도를 다 돌았었던 거예요?

신승우 ■ 경기도를 다 돌고 수원시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투쟁단 집행부는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님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오다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은 다른 시에 가서 바로 시장실 점거하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마지막 수원시에서는 협상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막혔어요. 막혔던 이유가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법정 대수를 요구한 건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시장님은 보고를 잘못 받으셨던 거예요,

수원이라는 지역이 참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농성단이 점거에 들어갔을 때,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연대해주었어요.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도 달려왔고, 다산인권센터에서도 결합해주는 식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 장애인들만 농성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장애인들만으로 농성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수원에서는 그런 연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여러 지역을 돌 때,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와의 연대는 잘 되었나요?

신승우 ■ 그냥 저희 장애인들이 참 부실한 몸이지만, 몸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2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활동을 통해 장애인단체 활동에 시민사회단체의 호응과 연대, 또는 수원시민들의 호응과 연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승우 ■ 일단 수원시 투쟁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에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역에서 뚜렷하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장애인들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주요 이슈에도 연대하고 있고요. 그 꾸준함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지역 지부나 환경단체, 세월호 공동대책위,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랑 연대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용인 수지 지역이 그렇고 안산 단원, 거기는 소장님이 장애인이면서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연대구조를 많이 형성하고 있어요.

수원의 경우 그 당시 이성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중재를 해줘서 결국 문제를 해결되었고, 저희 단체 역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께 중간에서 간부가 잘못 보고하지만 않았어도 시장님이 그렇게 나오시진 않았을 텐데, 농성 끝날 때쯤 그거 알고 시장님이 사과하고 끝났어요.

그때 며칠간 농성했었죠?

신승우 ■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주일 안 되었죠. 그때 부시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와서 ‘농성 풀어라, 농성 풀면 해주겠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동지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일단 헤어지자 하고 나왔는데 속았죠. 그분은 수원시청에서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부시장이라고 아니고 다른 부서 과장이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혹시 요즘 장애인 운동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승우 ■ 서울에서는 계속 투쟁 중인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속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탈시설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원지역에서 장애인 운동과 관련해서 수원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신승우 ■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원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아가

수원이 장애인 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 중 하나이거든요. 새벽빛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나 새벽빛장애인야학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기는 해요. 장애인 제도가 장애인에게 돈만 던져준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관점이 바뀌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것이 예술 활동이죠. 그 부분은 수원을 따라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문화나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신승우 ■ 그렇죠, 장애 비장애를 떠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화예술로서 그 내용을 녹여 내야 하죠.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에서 장애인 연극을 땀 터뜨렸을 때, 그걸 보고 안산, 오산, 제주에도 극단이 생겼어요. 우리가 필요한 법이나 제도를 고치려 할 때 예산 싸움하고 점거하고 시위·농성하는 극단의 방식이 있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년 동안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는데, ‘도가니’라는 영화 한 편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결국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미 그전에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몇 년간 농성했을 때는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인 연극을 매년 올렸던 거 같은데,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중단된 것인지,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이 되었던 것이지요?

신승우 ■ 저희는 무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 공연 때는 객석에 수원시 관계 공무원들만, 전엔 시장님도 오셨어요. 이번에도 10월에 연극을 하는데 그냥 영상물로 제작해 제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이 활발한 것은 시 차원의 지원이 잘 되어 있는 까닭인지요?

신승우 ■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야학이나 센터에서 사업으로 잡았을 때 선뜻 예산을 배정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건 부족하잖아요, 항상. 마음대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죠.

수원에도 2021년 6월 30일 기준 43,181명에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거리에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장애인 이동권의 시선으로 공원이나 일상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주세요.

신승우 ■ 이것은 항상 공무원들 만나면 하는 얘기고 도의원에게도 한 적 있는데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이란 말의 ‘대중’에 포함이 안 돼요. 버스가 와도 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가 와도 택시를 타지 못해요. 수원시는 법정 대수만 지켰어요. 법정 대수는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이 정도니 최소한의 요건이지요.

수원 투쟁 있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어떤 휠체어 장애인과 커피를

마시다가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더니 콜택시 오듯 금방 오더라고요. 장애인 이동 차량이 넉넉하니까. 서울은 먼저 투쟁을 했죠. 반면에 우리가 투쟁을 시작한 몇 년 후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도시에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택시가 한 대도 없었어요. 법정대수를 안 지키는 거죠

그건 어디 지역이었죠?

신승우 ■ 통계로 찾을 수 있어요. 수원은 아니에요. 수원은 오히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경증장애인들이 타는 택시들까지 운영하면서 앞서나가고 있죠. 임산부, 노인들도 등록하면 탈 수 있어요.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 버스 계단이 힘든 임산부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원이 참 잘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은 그렇군요. 공원이나 일상에서는 어떤가요.

신승우 ■ 그건 접근권의 문제예요. 공원이 참 좋은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불안감을 느껴요. 장애인들에게는 새로 짓는 건물 말고 옛날 건물들은 계단만 있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어느 동사무소에는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그 동에도 분명 휠체어 장애인이 살거든요. 그 장애인은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런 접근권의 문제는 심각해요.

수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은 좋다,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하는 부분, 또는 우려하고 있어 잘 대응하고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승우 ■ 일단 환경운동을 해온 시장님을 만나서 했던 것들, 관점.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제일 화가 났을 때가 장애인단체 지원에 수원시는 부자 동네라서 수원시가 예산의 9를 내고 경기도가 1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어서 경기도가 맘대로 해 행정에서도 경기도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지시에 따라야 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2021.08.12 17:40 온라인(Zoom) | 이상명 진행, 김성연 기록

6기 2016-2020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

이인신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광고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

윤은상

수원 지방선거 100대 과제
선정 및 작성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활동

최응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대책위 활동

정선영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대책위 활동

박승하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수원시민공동행동을 조직하여 활동함. (2019.04.17)

2019년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6,246명 중 경기도민은 30.5% (1,908명)이고 수원시민 165명이었다.

2019년 5~12월, 영통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찾기 조사를 시행하였고 1인 시위, 대중강연회로 참사를 알리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유해화학물질 표시 및 관리법 강화 등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인신

어떻게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인신 ■ 2015년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단위 시민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본 누군가 알려줘서 지원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한창 밀양과 세월호 참사 등으로 환경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이니까 이쪽 일을 해보라고 권해주었습니다. 관심 있고 하고 싶었지만 어떤 창구로 정보를 접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알려주신 분이 있어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수원환경운동연합에는 2016년 1월에 왔습니다.

2019년 가습기살균제 참사¹⁴⁾ 규명 수원시민 공동행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인신 ■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어요. 특조위의 가습기 참사 규명위원회에서는 2018년 시범 사업으로 서울의 마포구, 도봉구 두군데에서 피해자 발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본조사로 수원 영통을 타겟팅해서 피해자 규모를 추산해보

14)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주변의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1994년 처음 제품이 출시된 이후 2011년 한국 정부의 역학조사로 참사가 알려지기까지 18년간 43종류 998만개가 넘는 제품이 판매되었지만 제조·판매사도 한국 정부도 누구하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는 SK케미칼, LG생활건강,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애경산업 등 한국의 유명 기업은 물론이고 영국의 레킷벤키저(옥시)와 테스코, 독일의 헨켈 등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도 한국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가습기 물통에 살균제를 섞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살균성분이 호흡기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제품 사용중 소비자들이 느낀 건강 이상의 호소도 무시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의 가슴 아픈 사연이고 자칫 나와 우리 가족이 겪을 뻔한 일입니다. 2020년 7월 현재까지 한국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823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553명입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제품사용자 627만명, 건강피해경험자 67만명 그리고 사망피해자 1만4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시민사회단체랑 수원시와 특조위, 3자 MOU 체결을 하고 협조해서 피해자 발굴조사사업을 했습니다. 수원시는 시 기반의 인프라, 행정력으로 피해자 찾기 홍보사업과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토대로 이 사업을 홍보하고 대시민 캠페인과 대중강연 등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가슴기살균제 참사라는 의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역할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논의하여 '가슴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꾸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가슴기살균제참사를 캠페인과 설문으로 접했던 시민들의 호응이나 단체들의 연대는 어떠했나요?

이인신 ■ 1인 시위, 캠페인을 하는 현장에서 보는 시민들 반응의 변화가 뚜렷했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 하는 질문들이 있었고 캠페인이 반복될수록 서명과 설문에 이미 참여했다는 반응이 많아졌고 현황을 물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과의 연대를 느끼게 되었어요.

2019년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이인신 ■ 2019년 사업은 피해자 발굴 조사사업이었어요. 피해 규모를 추산해보고 싶기도 했고 실제 피해자로 신고하기 전에 언제, 어느 정도로 가슴기 살균제를 썼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업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피해자로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쉽게 말해 피해자찾기 조사였는데요. 특조위와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 ARS업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시민단체로 기획단위를 꾸렸고 수원에서는 제가 들어갔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ARS 조사와 피해자 찾기 과정에 시민이 어떤 루트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참여하게 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연구가 주축인 사업이었다보니 시민단체에서는 기획에만 참여했지 실무영역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치료나 보상이 연결되지 못했던 실제 피해자가 발굴된 사례가 있나요?

이인신 ■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피해자로 신청하거나 검사받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과 제도적 한계가 있었어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또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데, 여기가 관료적 특성으로 피해자 대할 때 시민사회보다 덜 친절하고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 이미 오래 시간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이 어려웠어요. 그런 한계 속에서 저희가 파악하여 설득해서 피해자로 조사 받게 된 사례는 없었어요.

가슴기 살균제 광고를 믿고 저도 사용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 등록을 해보고자 했더니 그때 샀던 증빙자료가 있어야한다 해서 포기했었어요.

이인신 ■ 특조위가 노력 많이 해서 개선된 점도 있어요. 카드사와 제휴해서 그 당시 카드사용 내역을 협조받기도 했어요. 특조위가 국가기관으로서 협상력도 있고 적극적으로 있었기에 카드사나 유통업체, 군대 등과 제휴해서 협조를 받고 공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수원에서 아쉬웠던 점은 거리 홍보, 통반장님들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정도로 밖에 진행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과정과 현재 특조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인신 ■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분야만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특조위 내부적으로도 많은 한계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환경부이던지 보건복지부이던지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닌 위원회로서 운신하는데 관료적 한계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다보니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비토대상이 되기도 하는 한계들로 많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슴기 참사 특조위가 배제된 데에 대해 강경한 투쟁이 있진 않았어요. 다만 국가가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노골적으로 알려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인신 ■ 가슴기살균제 참사 나고부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되었죠. 제도적으로 연결된 것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재해에 대해 시민들이 다시 생각하게 된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 안전한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소비활동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불매운동으로도 표출되었고 대안생활 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원에서도 가슴기 살균제 참사가 배경으로 명시되어 환경보건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이자 자랑하는 것 중에 수원시 화학사고 및 알 권리 조례가 있는데 그 배경에도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직접적이었다고 하지만 2011년도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시민단체 역량이 많이 강화된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안고 있지만 가슴기살균제 참사가 많은 영향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노동 등 전 분야에 가슴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봐야한다는 인식이 생겼으니까요.

최대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던 수원 지역에서 현재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이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신 ■ 어렵죠. 수원이 경기지역에서 제일 피해규모가 컸는데 대도시 특성상 피해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불매운동이 전개되던 2016년 당시에는 시도 적극적이었어서 당시 수원시와 같이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어떻게까지 가능했는가

하면 수원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대형유통업체와 면담을 했었어요. 대형유통업체 입장을 사실상 불렀던 건데 다왔어요. 거의 모든 유통업체에서 접장이 아니면 부점장이든 책임자급이 와서 시랑 시민사회단체와 면담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었고 합의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이 공공의 운동, 시민운동에 반응하는 싸인 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시민들과의 연대나 소통은 됐고 견제가 있었고 행정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민행동을 조직해서 대규모 불매운동과 같은 행동으로 다시 이어지는 단초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사회 역량이기도 하지만 재점화 하기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와 역량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불매운동 때는 옥시라는 타겟팅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참사로 이어진 살균제의 성분은 CMIT-MIT, PHMG, PGH로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이 성분들을 못 써요. 국가와 대기업이 안전하다 인정한 것이었지만 결국 위험했던 것이었어요. 호흡시의 독성은 또 다른 것이었고 이후의 허용되는 화학성분들이 호흡독성으로 작용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물질이, 이 제품이 위험하다고 타겟팅 하기 어려운 상황 이예요. 전성분 표시 제도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회원 <https://hwawon.net/guide/qna> 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품 속 화학물질 성분 검색과 기업의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수많은 사안들에 대응하기에 시간도 역량도 부족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 시민운동은 어떤 의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거나 완결한 사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된다고 보는게 이를테면 삼성 우수관으로 흘러나온 화학물질로 인해 원천리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생긴 조례나 위원회가 끝은 아니거든요. 감시나 견제가 안되는 제도는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시민운동은 문제를 해결하여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회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혹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나무나 풀이 자라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를 만들었다고 완료한 것이 아니고 함께 감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민운동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힘이 많이 빠지기는 하죠.

활동 시기를 돌아보면서 시민운동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인신 ■ 시민운동은 ‘땅 다지기’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정화하려는 노력, 결과를 내는 것 보다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이고,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지역 바라보며 단체나 활동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이인신 ■ 수원 지역운동포럼을 2018, 2019년에 다시 진행하면서 기획단으로 함께 한 젊은 활동가들 대부분이 만나는 활동에 대한 욕구를 접하면서 놀라웠어요. 2016,

2017년 박근혜 투쟁하면서도 활동이 파편화되어 있었고 그런 형태를 원하는 줄 알고 있었고. 연대성을 약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거든요. 활동가들이 지쳤기도 하고 만나는 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상황이 더하여졌고요. 만남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제로 엮이지 않더라도 이전에는 송년회나 신년회, 다같이 만나는 기회를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선배 그룹대로 새로운 활동 영역과 젊은 활동가들이 소중하고 뿌리를 내리는 토양에 대한 고민은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안은 선배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요구가 있다면요.

이인신 ■ 제가 느낀바, 젊은 활동가들이 수평적일 줄 알았던 시민사회단체가 수직적 조직이라는 데에 회의감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을 조절하는 권한은 없다보니 일은 일대로 해야 하면서 지역운동 특징상 우리 단체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단체 일만 하다보면 다른 단체와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단체랑 많이 만나다보면 우리 단체에서 혼나는 악순환이 이어지죠. 조직문화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될 것은 아니고, 다만 조직 안에서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조직 밖에서 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에 나와지면 거기서 풀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안된 조직문화에 대한 상상력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조직 안에서만 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조직 밖에서 푸는 방법들을 생각해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대표자들이 이런 인식과 논의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보면 현재 수원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의 교류가 많이 줄었다고 보여져요.

이인신 ■ 작년 제가 시민협 운영위원장을 맡은 시기에 운영위원장과 단체 대표님들 소통방을 만들고 모이자고 했었지만 코로나로 못 모였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많이들 모일 수 있었을까 싶은 게 분위기 형성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새로 취임해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자리에 같이 가는 문화가 없어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면 그건 업무로 인정해야 해요. 조직의 역량을 위한 거잖아요. 업무 밖으로 생각해서 주말에, 저녁에 잡는 것은 일의 연장이 돼버려요. 좀 암울한 이야기인데요. 지역운동포럼을 준비한 단위가 <성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고 같이 워크숍도 진행했는데 평소에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관심을 안보이시고 오히려 그 고민을 계속 같이 나누던 분들만 참여하셨어요. 관심 밖의 문제로 두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었어요.

지역에 활동가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활동의 위축으로 다가옵니다. 활동가로 참여를 이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인신 ■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생각입니다. 환경 파트만 봤을 때 단체들보다도 경각심과

실천력이 훨씬 높이 올라간 시민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단체들이 추진력을 더해 주기를 바라시죠. 일상 속에서 행동하는 시민은 많은데 환경단체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가 가장 컸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잘 안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점과 잘못된 것에 더 주목하다보니 위축되어졌어요. 위축된 분위기를 풀고 시민들과 만나다 보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며 멋지고 더 강화되면 좋겠다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또는 보완이 필요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요?

이인신 ■ 멋진 지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원에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합니다. 항일 독립투쟁부터 민주화운동을 거쳐 시민운동의 흐름에서 시민들의 자별적 참여와 결속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토양을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 도심이라는 점에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운동사회 전체가 위축되며 수원지역 내 시민사회 간 결속력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반성이 됩니다. 각 단체별 운영과 활동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운동으로서 시민사회가 행정과 의회권력 감시 기구로 역량이 약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도심이라는 점이 이점일 수 있지만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많은 부분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기후위기가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도시는 승용차만 이동하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를 시대 요구에 맞게 휠체어와 함께 도보 이용자들이 걷기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모습을 상상하며 활동을 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100대 과제 진행 과정에도 참여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기억과 시사점을 들려주시겠어요.

이인신 ■ 다가오는 지선이 준비하며 시민협에서는 정책위원회를 꾸려서 정책역량을 강화하며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협이 아닌 조직들도 충분히 정책역량을 갖고 있는데 100대 과제 선정위원회 때는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동, 장애인, 인권 등에서 정책을 받고 여성단체네트워크에서도 여성 정책을 내주시고 환경단체는 따로 모여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묶어낼 수 있는 자리가 또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시 시민협에서 그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수원의 역할들도 잘 정리되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공부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2014년 10월 31일 삼성우수토구에서 1만여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삼성의 비협조에 대응해 1년여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 제정운동을 펼침(2016년 3월 21일 조례통과)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활동이 추진 중

광고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

광고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수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 하자, 광고산 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막기 위한 시위(113회), 시민청원운동, 토론회 등을 추진함. 시민사회, 행정, 주민 등 민관협력을 통해 광고산 상생협약이행과 광고상수원 조례제정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윤은상

언제부터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했나요?

윤은상 ■ 2002년부터 수원환경운동연합(이후 환경련)에서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회운동을 더 늦기 전에 해야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던 차에, 수원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환경연합 활동 권유를 받고 활동하게 됐죠. 그리고 보니 20년이 흘러갔네요.

그 지역에 적응하고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사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다르게 활동했을 수도 있었는데, 수원이 기회가 돼서 오게 됐고요. 이렇게 오래 활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가 청년 초기에 앞으로 나 20년 넘게 이거 할 거야, 다짐하고 세상을 살진 않겠죠.

수원의 화학사고와 그 대응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할게요. 저도 당시 카톡에 '큰일났어요'하며 함께 올라왔던 사진이 기억나는데요.

윤은상 ■ 2014년 10월 31일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죽었다고. 처음 물고기 죽은 현장에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이후 네트워크)의 이오이 국장이랑 활동가들, 원천천에서 하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YMCA가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봤더니 소방, 삼성, 공무원, 경찰 다 나와서 물고기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상황을 설명하자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최초의 전파자는 지나가던 시민인데, 수원 시민단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환경련을 찾은 거죠. 그날 아침엔 제가 외부회의가 있어 전날 전화를 착신해놓고 갔던 건데 안 그랬으면 받지 못했을 거예요. 수원시에도 전화했지만 안 받아서 찾아진 게 우리 단체였어요. 환경연합이 좀 큰 단체니까 인터넷 검색이 쉽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원천리천인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물고기가 꽤 많이 등등 떠가고 허영계 배가 드러나 있다는 것이었죠. 보통 활동가들이 경험이 있으면 대표적인 지형지물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큰 건물이나 이런 걸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회의에 가면서 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에 전파하고 수원시 담당부서에도 함께 연락해달라고 했지요. 도심 하천은 계절성으로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 슬러지에서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미생물들이 활발해져서 용존산소 부족 때문에 쇼크사로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또 아스팔트를 초기에 씻어낸 물은 독극물보다 더 독한데 갑자기 강수가 발생하면 그 독성이 우수에 섞여 하천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서 폐사가 있기도 해요. 처음엔 저도 그런 경험치로 대략적인 원인과 상황을 예상했지요.

현장에 가봤더니 사고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현장에 활동가들이 나갔을 때는 이미 삼성 직원들과 소방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물고기 죽고 있었던 거죠. 사고 당일에 삼성전자는 자체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원인되었던 것이 분명했군요.

윤은상 ■ 초기에 맥락이 너무 다양해요. 폐수가 왜 나왔는지, 폐수 안에 어떤 독성이 있었는지 맥락이 좀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은 워낙 공단이 크니까 물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연구동에서 세탁기를 한두 대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돌리면서 실험한다더라고요. 중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다시 쓰거나 아니면 1차 처리만 해서 청소하거나 녹지에 물주는 용도로 쓰는 그 중수 처리 시설을 보강하는 공사 중이었어요. 탱크를 공사해야 하니까 처리 중에 있는 물을 옆의 우수 관로에 빼놓았어요. 소독약으로 차아염소나트륨이라고, 마취제로도 쓰이는 약품을 넣고 처리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폐수를 우수 관로에 임시로 저장해뒀던 상태에서 흘러나간 거예요. 삼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우수 관로 시설들이 자동개폐장치라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8시쯤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자동으로 열린 거죠. 그 폐수가 원천리천을 쪽 덮었는데 그게 28톤이에요. 발견하고 현장 가서 이제 시료 채취한 거 10시 정도, 그러니까 발생을 8시로 봤을 때 2시간 지나고 나서 물을 시료 채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 성분이라는 게 물을 만났을 때 희석이 빨리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물을 만났을 때 차아염소나트륨이 화학 반응해 다른 염소 성분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기 독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채취해서 분석한 데에서는 청산가리 성분도 나왔어요. 처음에 담당 과에서 단순히 염소 성분으로 물고기들이 쇼크사 했다고 그랬던 거예요.

하천 수원 시민단체들도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라는 연대체를 꾸려서 운영한지 10여년 되었다보니 그런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빨리빨리 전파하고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어서 엄청 대응을 잘한 거예요. 우리 시민단체는 전통적인 활동이잖아요. 시를 믿든 안 믿든 그걸 따로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오고 맡겨봤는데

시에서의 분석과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독성 물질까지 다 포함해서 24개 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한 거고, 수원시는 그냥 잔류염소만 분석 의뢰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PM, TP, BOD, COD 등 기본적인 6가지 항목만 했어요. 왜냐 하면 사고 나고 삼성이 빨리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소독 과정에 있는 물이 흘러나갔으니까 염소 성분 때문에 그랬겠네, 그런 정황을 듣고 보건환경연구소는 잔류염소 분석으로 여섯 가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 생산라인은 없지만 제품 실험으로도 독성 물질 등을 다 쓴다고 생각해서 기본 분석을 해 본 거죠. 그런데 우리와 시의 분석이 차이가 났어요. 물고기가 죽기 전에 빨리 냉동을 하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말기던가, 그도 아니면 그 자체로 빨리 피를 뽑아서 말기거나 해야, 초기에 어떤 원인 독성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대응하면서 공부하고 알게 된 거예요. 담당자가 물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폐기해 버렸다더군요. 물고기를 말긴다 해놓고 왜 안 말렸지? 왜 잔류염소만 있지? 보통 공사를 하면 다른 탱크로리로 빼놓거나, 우천시 자동 개폐 시스템을 공사 측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감리사도 역할을 안 한 것이고. 실수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을까? 그리고 비가 온다면 그 소독수가 다 나가게 되는 건데 비 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왜 우수관로에 빼냈지? 28톤이면 탱크로리 차량을 임대해서 거기다 빼놓으면 되는데... 대충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10여 가지 이상 오류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전국에 물고기가 죽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게 보통 1차 원인 규명이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거죠. 어쨌든 활동가 중에는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묻는 단체 활동가들이 좀 있어야 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왜? 삼성이나 시가 인정했고 다시 이런 일 없게 조치하겠다고 하며 몇 가지 약속 발표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대처가 한 번 간 거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죽었는데 계절에 따른 요인도 아니고 명백하게 폐수가 들어갔잖아요. 그 폐수에는 소독약,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화학사고, 환경오염, 하천 오염사고의 성격이 모두 있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천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쪽 나중에 가면서 고발도 하고 감사 요청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초기에 시민단체들과 공동조사 요구부터 빠르게 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기 전에 며칠간 다른 하천들도 이런 위험이 없는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진 없는지 점검을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빨리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것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였어요. 사고 전반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한 거죠.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시민단체가 워낙 많았는데, 거기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양한데, 그런 분들과도 대책위를 구성한 거예요. 대책위에 20여 개 넘는 단체들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하천 환경사고여서 처음에는 환경단체 위주로 대책위를 꾸렸던 것 같아요. 인권단체도 함께 했고요.

그때 대응과 활동에서 화학사고 알 권리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성과나 한계 그리고 현재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윤은상 ■ 그것은 아주 단편적일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그전에도 비슷한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유형은 아니고 2014년 초에 수원 삼성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는데 노동자가 죽었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물고기가 많이 죽으니까 시민단체가 발끈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지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오류의 연속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계속 추적하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집약되다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발생한 것이지, 조례 만들고 이거는 결과로서 나온 건데 하나의 과정이죠. 조례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반응했던 시민사회이고,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이죠.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대 활동들이 쭉 이어져 왔고, 특히 상설 조직으로서 시가 꼭 예산을 주거나 주지 않을 때도 하천유역네트워크라든가 환경 주제의 네트워크들은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적된 역량이 그때 발휘된 거죠. 그리고 지역에 꼭 환경단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 단체들도 큰 환경사고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제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대책위를 꾸려 재발 방지책을 만들자, 단순한 환경 오염 사고가 아닌가 생각했더니 화학 사고고 기업이 원인 제공을 했으며 수원시가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했던 거고 민관합동조사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3인하고, 시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대책위 사람들이 같이 공동조사단을, 의회는 나중에 들어왔고, 꾸려 공동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려다 보니 권한이 없어요. 갑자기 급조된 공동조사단이라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까지는 법률적으로 지방에서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왜 부재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가야 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안은 환경부 사안이 되었어요. 어쨌든 지역에서 화학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종합적인 대비 체계가 갖추어져야 했어요. 이를 다룰 근거인 자치 법규, 또 화학사고 이해 당사자들, 기업도 있고 소방 경찰 담당 공무원 그리고 주민, 화학물질 화학 사고가 일어날 만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취약시설 당사자들, 시민사회들,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근거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내용을 개정하는 등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져 온 거였어요.

특히 환경부도 2011년에 구미 불산 사고가 나고, 지자체가 이런 큰 사고나 화학사고에 대응할 전문적인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통 무슨 사고 나면 씩 없애버리거나 권한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사고는 항상 지역

에서 나잖아요. 어떤 사고도 현장은 어느 구 어느 동이고 동네죠. 아무리 크고 작은 사고에도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의 소방이라든가 경찰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가장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기초지자체가 그런 거 잘못한다고 업무를 가져와 버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만 이 화학사고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꾼거죠. 이런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확산해 나가는 시범 케이스가 수원에서 나온 거죠. 이 사고가 환경 사고나 수질 오염 사고인 줄 알았더니, 화학사고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대기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화학물질 화학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초 지자체에서 대응 역량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그냥 행정 소방 진압 위주가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사고의 어떤 포괄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정보의 알권리를 확대해 대비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고가 만나게도 할 수 있고, 사고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빨리 복구할 수 있어야 하죠. 수원이 어쨌든 물고기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과정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각 지자체에서 화학사고에 대비한 대비 체계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겠구나.

이제 정부는 지자체 권한과 업무만 회수해 온다고 화학사고에 대해 대응을 잘하고 전문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즈음 기초 지자체의 그런 역량들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수원에서 사고 상황을 딱 접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보인거죠. 기초 지자체는 권한이 많지 않았어요. 민관 합동조사를 조사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민간 전문가랑 담당 공무원이랑 딱 이렇게 조사단을 꾸렸을 때, 사고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근거 법령이 없으니까. 삼성전자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민관 합동 조사를 하려다 보니 그렇게 조사할 수가 없어서, 사후 정황 조사만 한 거예요. 그리고 사고 규모에 대한 정량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물고기 종류, 그 당시의 유량, 그리고 물고기 사체의 범위(폭과 밀도 등) 그런 걸로 대략 사고 정도를 추정하잖아요. 최소 3만 마리 이상 죽었다고 봤어요. 물고기 종류도 12가지. 그리고 뭐 가물치부터. 가물치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개들은 웬만하면 안 죽거든. 가물치가 죽었다는 거는 저서 생물까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2km 이상이니 뭐 천 마리 정도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숫자를 줄이죠. 자기가 담당할 때 천 마리 이상 죽으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요. 천 마리 미만 죽으면 기록 안 돼요. 공무원이 자가 담당일 때 천 마리 이상 사고가 나면 기록에 남아 나중에 인사고과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무조건 천 마리 미만이라고 해요. 방어적으로요. 나중에 합의한 게 만 마리에요. 담당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양보해서 5천 마리 이상은 죽은 것 같다

고. 처음에는 천 마리 죽었다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만 마리로 정정한 거예요. 민관합동조사 공식기록이죠. 그런 조치들이 꼭 진행됐고 지역 화학사고 발생시 대책의 사례가 됐던 거예요.

또 한 축은 환경사고 오염사고 났을 때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치하고 증거 확보하고 2차 오염 방지하고 하는 매뉴얼이 없어, 이를 만드는 작업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했어요. 한쪽에서는 시의원들하고 환경 오염사고나 화학사고 났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자치법규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에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알권리, 사고 난 다음에도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 지역에서 화학물질이라든가 유해 물질을 취급한 사업장들이 어떻게 입지해 있고, 공정 과정 중에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며 취급 물량과 생산 물품이 뭐고, 생산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고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담았어요.

관리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비 체계를 만드는 거죠. 부족하면 보완해야 해요. 그런데 미관리 영세 사업장들은 유독 물질을 다루는데 직원이 몇 명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고 그러면 그런 데서 사고 나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지금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대비를 강화하자는 게 화학사고 대책의 큰 흐름이고 대표적으로 시작했던 사례 되던 게, 2014년 10월 31일 날 수원에서 물고기 죽은 사건이에요. 시간도 잊지 않아요. 8시 10분.

김신범 소장님¹⁵⁾과 강원대에서 오셔서 현장에서 해부해보는 것을 저희 단체들도 참여해서 실습해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윤은상 ■ 물고기 이슈를 왜 이렇게 여러 분야로 확대하냐고도 하고 또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로 물고기 사고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담수어 전문가니까 사고를 물고기 사고를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되 너무 의존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사회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들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쪽 끌고 나갔잖아요. 3개월 만에 민관합동 조사 보고서를 냈어요. 권한이 없으니 현장 조사도 못했어요. 보고서를 좀 책자로 내자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은 대책위에 인 권단체도 들어오고 하천유역네트워크도 들어오고 환경단체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기보다는 앞에 나서기가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환경연합 같은 단체가 코디 역할을 해야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떠넘겨 받은 거죠. 그런데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에요.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는 어떻게 해라, 삼성은 이제 사고 원인자였으니까 어떻게 하고, 다른 하천의 기업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때 의뢰해 봤더니 이런 게

15)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정책을 만드는 연구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활동가. <출처> 알라딘

좀 부족하더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뭐 해야 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무엇을 하고 담당부서는 뭘 해야 하는지를 담은 권고사항을 넣어 발간한 거죠. 그 권고사항 핵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 조례 내용, 그리고 매뉴얼 작성,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진 거죠.

그리고 시는 사고 낸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하면 되었지만, 대책위에서 삼성전자 본사를 고발했죠. 포괄적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데에 근거 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아 고발장도 다 썼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장 이하 다섯 명의 고발장을 직접 다 써냈지만 공무원은 고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책위가 합의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당시 삼성 부회장 이하 몇을 고발했죠. 단순 관리 감독이 아니라 발주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소홀해서 자동 개폐기가 열리고 독성 폐수가 흘러 들어간 것이 단순히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더 법으로 싸울 수는 있었어요. 그 정도 한 것도 지역 시민단체의 역량이 있었던 거죠.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군요.

윤은상 ■ 그거는 공무원 자체 감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봐도 잘못된 거거든. 시민단체(대책위)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에 합의를 못했어요. 대책위에서 몇몇 단체들은 하자고 하고 그래서 공무원 고발장도 썼는데, 단체 합의가 안 돼서 말았어요. 시장도 지휘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단체들이 합의를 안 해주었어요. 고소야 개인 간에 하는 것들이고, 고발은 그 사람을 해꼬지 하려는 게 아니고, 사고의 경위에 대해 낱알이 조사해서 밝혀달라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계통에 문제가 있고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긴 건지, 지휘 관리 감독 계통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그래서 하려다가 동의 안 돼서 못 했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조례 만들고 매뉴얼 만드는 걸로 약속하고는 땡이잖아요. 그럼 언제 실제로 이행할지 몰라요. 그때도 사실 미리 결과물을 만들어놓고 반드시 시장님이 시간이 되는 날 모시고 기자들 다 불러서 보고회를 하자고 두 달 기다렸어요. 공개적인 보고회에서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도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했어요. 그리고 헤어지려던 순간에 바로 그 현장에서 과장님을 불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그랬어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실무 기구로 만든 거죠. 권고사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직접 이해당사자 기업들은 참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통해서 뭔가 특수 이해 관계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여서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시민단체, 전문가들 그리고 대책위,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시의원 2명을 포함해서 담당부서, 전문가, 시민

사회 등으로 조례팀을 만들어서 약 7개월 동안 활동했고, 매뉴얼은 좀 빨리 완성했죠. 조례는 문구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걸 만들 때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강력한 알권리 조례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 알 권리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조례팀에서는 화학 사고 중심으로 다뤘고, 매뉴얼팀은 하천 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매뉴얼 작성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빠르게 보고하고, 조례는 약간 이행과 관련해서 민감하니까, 그 당시에는 화관법에 기초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이리이러한 시의 책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규정한 조항은 없었어요. 당시는 화관법도 보강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례팀에 참여했던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12월에 발의해서 그다음 해인 2016년 3월 21일 날에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거예요.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음이었나요?

윤은상 ■ 아니요. 군산에서 먼저 제정했지만 10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야 할 정책 사업들이 있고 구성해야 할 거버넌스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조례를 제정해도 시행을 미루다 보면 그렇게 되죠. 단계적으로 가장 급한 것부터.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기초 조사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쪽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런 우선순위를 의결 구조에서 결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잖아요.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거 해야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죠. 우선 조례 만들어 났으니까.

캐비닛에 195개 조례가 있어요.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즘 코로나 터졌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당시에도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해서 얘기했죠. 왜 조례 이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안 하세요? 조례를 시행하려면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위원회 구성, 예산, 인력 등 조례가 규정한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도 개발해야 하니까,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런대로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담당 부서는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니까. 사고 나면 또 대응하면 되고 체계적으로 그런 시책 사업을 발굴 개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계속 한 달 지나고 담당 팀장님에게 '왜 안 하세요?' '해야죠.'라는 답변이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환경부 부르고 전문가 부르고 다 불러서 조례 시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버린 거죠. 환경부 과장까지 불렀어요.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 돈으로 우리가 토론회 준비할게. 그래서 9명의 패널을 부르면서 환경국장에게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요청을 했었죠. 조례를 어떻게 잘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조직한 거죠.

그걸 계기로 실무협의회가 또 구성됐어요. 일부러 한 거죠. 시민단체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자. 그 근거는 민관합동조사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전신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사고 대비 체계로 지역 사례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해야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다음 단계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나의 단계가 끝났을 때 보통 가만히 있는데 계속 보는 거죠. 집요하게 보고, 하나하나. 그리고 어느 기다린 시점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판을 짜는 거예요. 공무원이 알아서 안 하면 아예 판을 만드는 거죠. 무조건 공무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한 판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해서 같이 가게 만들어요.

지역사회 기반이 있으니 활동가들의 그러한 민감하고 그 핵심을 잡아내는 역량도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가 이렇게 끌고 가자. 그러면 단체들이 다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고 조직하고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손발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오래 가면 넘어가 버리는데, 가장 핵심이 다음 단계로 계속 실무적으로 잘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다음 목표로 진행하고, 또 다음 목표로 진행하고. 코디네이트를 맡아서 그렇게 가자고 제안도 했고 다들 그렇게 느낀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해놓고 보고서 내고 말순 없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 하죠? 마지막에 나온 제안 사항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다음 단계로 갔어요. 그럼 그때 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대단했던 거죠. 지역사회의 사례는 전국 사례로, 해외에서도 아마 참고할 만한 사항도 될 수 있어요. 큰 화학 사고는 구미 불산 사고라든가 산업단지 있는 사고 대응들이 있을 거고, 근데 지자체에서 재난 수준 외에 이런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 중소 규모 화학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례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수원 사례가 대표적인 기반이 됐던 거죠. 근거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화학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왜 그 당시 시민사회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끈질기게 나갔냐는 거죠.

환경련 활동은 언제까지 하셨죠?

윤은상 ■ 2019년 2월 총회까지로 마쳤습니다.

20년 가까이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셨어요. 그 수원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본인이 했던 시기를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은상 ■ 시민의 역량이죠. 그건 단체 활동 중심의 시민 역량일 수도 있고 공화국 주권자 국민으로서 그런 시민들의 역량일 수도 있고, 어느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권이나 행정이나 또 경제 권력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거기에 다 들어가 있

죠. 집에 있을 때 누구 엄마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그러다가 출근하면 또 기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시민단체면 시민단체고 다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인데 대개 시민이라 하면 민주공화국 시대에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근간이 되는 국민으로서 시민이잖아요. 정체성이 단순하진 않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제 권력이라든가 정치 제도 권력과 자율적인 그냥 시민 권리로서 시민권과 다름에서 시민권이 약자였던 거죠. 최근에도 강자였던 적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안으로도.

의제와 현안들은 서로 여러 다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화학사고 경우도 이 조레만 독자적으로 단절돼서 지역사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사안과도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같은 모델로 다른 부분에 이게 적용됐을 때 또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거버넌스라든가 지역 상황과 이슈, 지역사회 과제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문화라든가 태도라든가 성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그 지역의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이 기반이 된, 축적된 경험 그리고 연대와 협동의 경험들, 아주 다층적으로 축적돼있는. 그게 토양 같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건강해야 아무거나 심어도 잘 피어나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토양이 불충분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도 잘 안 자라잖아요.

이거저거 몇 가지 활동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원엔 아무거나 던져놔도 잘 살 수 있는 토양이다. 그러니 누가 시장 되고 정치인이 됐다고 조금 성과를 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수원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국내에서 상대를 찾지 마시고 세계에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라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원 정도면 좋은 여건이죠. 근데 뭐 좋은 여건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이나, 도농 복합도시든 산업 산업도시든 그 지역에 기반한 여러 가지 잘 떠드는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또 이념적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금빛봉사회에서부터 참전유공자환경연합회도 있고 보수적인 단체들도 있잖아요. 뒤에서는 저한테 빨갱이라 욕하지만 하면 앞에서 “윤국장 고생했어. 이거 진심이야.” 그런데 이게 환경이나 가치, 지역 현안에서 이념이 극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꼭 이념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그런 단체, 가까운 단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의제라든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 때문에 시민사회의 어떤 이념적 지형도 더 넓어질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풍토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시민사회가 얼마나 튼튼하나가 중요하더라고요. 한 고비를 겪다보면, 그 고비를 해결하는 역량도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이예요. 그 하나의 고비를 잘 해결해 나갔을 때 또 그 역량 자체가 더 축적되는 거죠.

그런데 퇴보하기도 해요. 지역에 봐요.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중간조직도 많아요. 거기에 많은 활동가들이 채용되죠. 그런데 진짜 싸울 수 있나?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거나 개발하고 뭐 한다는데. 최근에는 이슈 파이팅 안 하잖아요. 엄청난 큰 사안들이 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불과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뭐 하나 똥는다, 어디 개발한다고 하면 무조건 대책위 꾸렸어요. 반대가 아니라 일단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왜 굳이 저 수십만 평 숲에다가 숲과 농지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지? 필요해서 만들더라도 시간 끌고 들여다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련돼요.

지역 시민사회는 자꾸 그냥 원래 하는 거 하겠지 하고 냅뒀 버리면 약해져요. 단체는 많고 단체에 채용된 사람도 많고 중간 직능인도 많은데 취약해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든 탑은 방치하면 오래 못 가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뭔가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아 지역사회 과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선정해 싸워야 돼요. 치고받고 하라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가 경제 권력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도 정치권력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데. 아름아름 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하고 넘어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다 제각각이고 각자도생이죠.

이제 윤은상님이 조금은 결이 다르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윤은상 ■ 저는 지금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온 지 3년 되었어요. 어차피 그 당시에도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도 하고, 여러 의제별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고 그런 연속이라고 보면 되죠.

시민단체의 중심에서 나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중심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서 지금 수원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나 혹은 활동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윤은상 ■ 중심에 있고 싶지는 않은데. 뭐 기후행동네트워크도 시민단체 네트워크니까 꼭 나와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시도거든요. 사업 모델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시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직접적인 관계에서 시민사회 활동하고 더 직결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운동이나 사회적 기업 활동 자체가 마치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기본은 더 직접적인 액션이거든요. 경제활동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영역처럼 동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사회가 분리되는 거고 취약해지는 거죠. 강하게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기업 활동과 NGO 활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런 시각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마치 다른 영역처럼 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쓰라는 게 아니라, 아니 사회적 과제, 거대한 큰 담론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든 아니면 내 생활 공간이든 그래서 더 좋은 삶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에서 모니터도 하고 생활문화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지만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시책 또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정치 이슈 파이팅도 하고 더 큰 구조적인 것과도 싸움도 하고 지구적인 것 갖다가 싸움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정 잡아주고 어떻게 싸우라고 알려주고 하나요? 사고라도 뽕뽕 터지면, 대책이라도 잘 만들어서 대응하다 보면,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전문 지식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단련이 되는 건데, 그런 시도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구요.

또 기존에 있는 시민 참여 기구들, 거버넌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중간 조직예요.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바깥이 튼튼해야 하는데 단체 출신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전문가나 또는 시민사회 대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개별 활동이 돼버린 거죠. 진짜 시민의 대표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거고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디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더라도 밖에서 활동력을 높여서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소통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덩치는 커져 있고, 외형은 커져 있고 제도에서 시민사회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여러 가지 영향력, 법과 제도에 근거한 지원이라든가 중간 조직도 많고 센터도 많고 그러는데,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튼튼하고 어떤 위기나 위험이 왔을 때 아주 탄탄하게 버티면서 잘 대응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힘이 있는 건지는, 내가 봐서는 취약해져 있어요.

취약해져 있다고 보시는군요.

윤은상 ■ 기본적인 학습이 부족하고 학습이 부족하면 같이 모여서 어떻게 고민을 나누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 인권단체, 환경단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원은 그래도 여러 네트워크가 활발했잖아요. 환경교육도 있고 기후운동네트워크도 있고 하천유역네트워크도 있고 시민협동도 있어요. 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대책위를 만들었다가 해산하기도 하고 이게 들고 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되려면 원래 사안별로 학습이 되거든요. 대개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꼭 앉아서 뭔가 텍스트를 보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습이 돼요. 사회적 학습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이윤 챙기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조작해 볼까 이런 별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우리가 워낙 자기 이익과 이윤에 덜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력이 그냥 고만고만한 건지 그게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익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다른 것으로 좀 전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윤은상 ■ 우리가 몇 개 시민단체가 다 주도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정도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크고 거대한 건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생활적인 것에 뭔가 변하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가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다 있는데 시민 개개인이 그걸 못하니까 시민단체랑 시민단체와 연대와 참여를 통해서 단순 대리 만족이 아니라 또 적극적인 분들은 결사체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협동해서 큰 사회적 문제, 내가 원하는 사회적 문제,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 참여자 지지자도 있지만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중요하죠. 단체가 때로는 시민사회와 같은 의미로 얘기도 되죠. 근데 단체가 왜 시민사회야, 시민사회 대표성이 있어?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활동해 봐요. 결국은 시민단체 활동이 시민사회라고, 단체의 이름으로서도 대표성이 높아지죠. 공무원들은 고시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표성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거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죠. 선출직들은 선거 제도를 통해서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는 뭐예요. 약간 정형화돼 있지 않은 대표성이죠. 그게 활동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선출됐다고 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고정적 법적 권한을 쥐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라든가 행정이라든가 특히 경제 권력과 시민사회는 다층적이고 여러 다발로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잖아요, 이 세계가. 거죠. 거기서 시민사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고. 한 사회가 그러면 되게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약해지면. 그런 논문도 있대요. 어느 지역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문제 제기하는 단체가 많은, 큰 단체 여러 개가 아니라, 여성 인권 환경 등 부문이 꼭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 지역의 공무원과 정치인 청렴도가 높고 부패지수가 낮다는 논문발표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조그만 것도 그냥 안 넘어가는데. 맘대로 해 먹겠어요?

지금 다양한 1인 활동들을 한 번 모아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윤은상 ■ 그럼 일단은 잘 떠들어야 돼요. 잘 떠들려면 뭐예요. 많이 읽고 써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모여서 그리고 지역 이슈 있으면 같이 공동 대응해보고. 그러다 보면 활동과 관련되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에 독서 모임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세요?

윤은상 ■ 아, 우리 활동가 세미나 모임이요. 장안문 근처에 있는 몇 개 단체 활동가들 모여서 했던 거죠.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세미나 모임 하면서도 남문 쪽 단체 좀 하고 영통에 있는 단체 모여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지역에서

몇 군데 하면 연합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며 제안을 했는데, 단체 활동도 좀 경직된 것도 사실이다. 가치와 다르게 좀 권위적이랄까.

학습모임도 단체의 중요한 활동(일)의 일부로 별도로 시간을 배려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환경, 여성 단체들도 일에 치인 국장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죠. 그런데 문화로, 권위로 굳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각 단체들끼리 하든가. 그것도 안 해요. 회의 자료라든가 그때그때 일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같이 얘기하는 정도죠. 좀 꿈을 꾸긴 했는데, 장안문, 남문, 북문, 영통, 호매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소한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자 인문 사회적인 세미나도 하고 또 정치적인 이슈 세미나도 하고, 근본이 되는 노동이나 인권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 근대적 가치들이 어떻게 출발했고 그 역사적 과정이 어떤 건지 이런 기본 학습이 되다 보면...

이런 게 지금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500년 전 것이 옛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약하면 뭐든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분석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는지. 경험이 쌓이면 책임 활동가가 되려면 사무국장이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전결권자로서 한 조직의 회원을 대신해서 대표 발언을 하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충 가서 몇 마디 떠들고 오면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회원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 조합원한테 설명해야 하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고 앞뒤 맥락도 안 맞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냥 시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니까 그냥 월급 많이 못 준다고 해서 뭐라고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회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죠. 어쨌든 월급은 올라야겠지만.. 이런 거를 끌어 올리려면 지역의 의제가 활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 언론도 많이 죽었고, 지역 시민단체는 많고 중간 조직도 많아졌는데 그 지역사회가 계속 건강해지기 위한 의제 개발을 안 해요.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과제가 차고 넘치는데 개발을 안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싸울 건 싸우고 캠페인성으로 할 건 하고 조례를 만들 건 만들고 교육과 모니터라든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초 자원이 필요하고 회원도 많이 모집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문제인데.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 깨닫고 가능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는 지역사회 건강이 다른 거죠.

광고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을 할 때, 이때도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호응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1인 시위를 거의 백 몇회 이어갔었죠.

윤은상 ■ 처음부터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비비 꼬였는데. 서로 험한 말도 오가면서 싸웠죠. 대책위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그런 상황도 있었죠.

저도 전에 녹색에너지마을만들기 한다고 광고 노인정 가서 설명회를 했다가 우리 사정 알고 왔느냐며 욕먹고 왔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활동가들끼리 만나

고 회의만 하지 말고 주부 모임이라든가 마을로 가서 주민한테 설명하고 노인정 가서 이런 사업 같이 해보자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원래 시민단체 장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단체마다 자기 거점이나 주민 조직들하고 이렇게 접점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게 장점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그때 녹색에너지마을만들기 할 때 시 부서와 엄청 싸워가면서 우리가 마을 발굴한다고 광고에 가서 설명하다가 욕만 먹고 왔지요. 지금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 광고 상황에 딱 좋은 거야.

결국 광고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과는 상생협약을 도출하게 되었어요.

윤은상 ■ 주민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아마 계속 불만은 있을 거예요. 좋은시정위원회에 시민들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대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각자 속한 현장의 활동에 기반해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는가, 대책위는 한계가 많다고 봤죠. 특히 이 사안이야말로 새롭게 사회적 논의 기구와 합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회도 했어요. 지금도 신뢰가 많이 쌓인 건 아니지만. 일인 시위하는 와중에는 뭐 빨갱이, 염태영 시장 앞잡이, 저를 비롯해 활동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라. 광고 전역에 이런 현수막을 쪽 걸어놓다가 토론회 하고 좀 지나서 자진 철거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 생각한 거죠. 그리고 토론 할 때까지 주민 대표를 낮에 따로 만나 술도 많이 마시며 설명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주민들이 피해자니까 피해를 얼마만큼 보상해 준다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해결 못한다는 것어요. 그러나 행정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잘못했던 것이고, 선거 때마다 와서 선심성으로 마치 해결해줄 것처럼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가는 것들과 우리도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그때그때 같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잘못했음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없앨 수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물이라는 건 지금 당장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보호구역 해제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내에 있는 만석거, 일월 저수지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바람직한 전개잖아요. 옳은 말씀이시라고 했죠. 예를 들면 기후 위기, 재난 안전이 생기니까 비상으로 쓰려면 수원 시내 저수지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거죠. 주민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지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저 상수원 보호구역 비상취수원을 단순히 주민들의 경제활동 보상 차원에서 규제를 풀고 말고로 접근하지 말고, 저기는 잘 지켜야 한데 기본적인 동의를 하자는 것이었죠. 120만 시민들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데, 잘 지키려고 하면 원주민들은 어떤 행위 제한으로 생활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도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평택이나 여러 지역 사례들이 또 반면교사가 됐어요. 지역의 보호구역은 사

회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목적이 사라졌다면 또는 다른 장치로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규제가 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몇 그룹이 피해를 받으니까 해제해버리자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까 논리를 만든 거고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피해자 접근이 아니라 공로자 접근하는 게 가장 전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중요한 건 도시 관리이고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고요. 도시계획적으로 특별한 구역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장기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만들고 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해야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생위원회가 잘 되어야 하지만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법률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막 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위원회가 잘 열려야 되는 거죠.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거버넌스예요. 환경부 면담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그러더라고요. 보호구역 싸움하면서 시민 지역사회가 이렇게 합의를 가져온 건 처음이래요.

더군다나 사유지, 개인 재산이 더 중심이 되어 가는 세상에서 쉽지않은 결과였죠.

윤은상 ■ 사회적 목적에 의해 주민들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행위를 제한 받았는데 그걸 피해라고 협소하게 보지 말고, 오래 보호구역이 잘 지켜지게 한 사회적 공로자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이 지원책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든 제한을 다 풀고 시내처럼 아파트 개발할까요 한다면 그걸 또 바라지 않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정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수원 시민들 인식 속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피해자가 아니라 그것이 지켜지는데 기여한 자에게 충분히 윌링네스 페이¹⁶⁾가 가능하죠. 솔직히 석탄 화력발전 멈추기 위해 전기료를 각 가정마다 1,200원씩 더 부담하자고 하듯이 저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 시민인 나한테 어떤 부담이 주어진다면 일정 금액을 감당할 의사가 있다, 시 예산을 써야 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게 담론이 돼버린 거죠. 그걸 만든 경험이에요. 우리가 없는 걸 새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를 조직한 거죠. 여론 조사에서 시민들의 80%는 보호구역을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실제로 지역 의제로 묶어내고 여론도 확인하고 제도화시키는 경험이고 전국에도 사례가 없어요. 이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참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큰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서명 받고 일인시위 하고 있으면 나이 드신 주민 분들이 험한 말도 마구 하고 시청 앞에 트랙터로 들이닥치는 거죠. 여성 단체들이 일인시위하고 있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쌍욕도 듣고 그랬어요. 살면서 이런 욕은 처음 들어봤다고들 했어요.

¹⁶⁾ willingness to pay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나 마음.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보전 등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별적으로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원래 토지형질을 안 바꾸는 것이 대책위 기본 입장이었어요. 형질변경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바뀌봤자 주민들도 큰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환경부도 당시 형질변경이 일부 포함된 조건부 협의안이 올라가도 반려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나름 알아도 봤죠. 그러면 2안으로 형질을 안 바꾼 상태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럴 줄 알고 협의안을 올렸는데 환경부가 나중에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장관도 바뀌고 주거지역인 대지에 한해서 보호구역이 그린벨트로 형질이 바뀌었죠.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겁니다.

10.05 10:00 수원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홍은화 진행, 신윤범·이상명 기록

수원 지방선거 100대 과제 선정 및 작성

수원시 지방선거 100대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부문의 시민 건강, 먹을거리, 생물다양성, 물, 기후변화, 녹색소비 등의 항목별 분야로 나눠 100대 세부과제를 'GREEN 정책'으로 선정함. 이후 3명의 수원시장 후보에게 60여 분야별 정책요구 발송한 후,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2018년)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활동

당수동 시민농장 부지를 공동주택지구로 조성하고, 농업진흥청의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을 사업자와 행정의 협의·결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사회의 평가 및 공론화하는 활동으로, 자연생태공간인 황구지천 유역의 그린벨트와 우량농지에 대한 개발압박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최용선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죠?

최용선 ■ 민선 5기가 시작되던 2010년에 내려왔어요. 민선 5기, 염태영 시장이 당선되어 들어서자마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KYC 경력은 더 있지만, 수원에 온 건 2010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연대 활동 등에 관심이 있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예 마을기업하고 행궁동에만 꽂혀 있었어요. 광고산에 있는 분들과 유기농 마을 기업을 만드는 거에 꽂혀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겠다고 내려온 거였고, 그 일을 2년 정도 많이 봤고 나머지는 좀 뜸했던 것 같아요. 행궁동에서 마을 활동하고 상광교동의 농민들하고 일하는 게 주요한 제 역할이었어요.

최용선님이 펼쳐온 당시의 시민운동을 회고하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최용선 ■ '뜨뜻미지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

네요. 내가 생각하는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 성과가 많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기에도 어렵네요. 처음에 행궁동에 내려왔을 때는 거주자를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행궁동도 거주자가 많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던 분들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마을은 아니었고, 방문자를 위한 마을이 된 거죠.

광고산마을에서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은 전혀 안 맞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만들고 로컬푸드 매장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건 다 했지만 주민들한테 운영권이 돌아가지도 않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약간 뭐라고 그러지, 행정한테 길들여졌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쏟아내는 아이디어도 많고 뭔가 주민들하고 으쌰으쌰도 많이 해봤는데, 주민들한테, 거주자들에게 돌아온 건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동네 주민들의 선택이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민선 5, 6, 7기에 들어와 시민사회가 행정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나 생각해봐요. 그 전보다는 치열하게 운동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때부터 무슨 거버넌스, 협치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용선 ■ 저도 이 인터뷰를 위해 퇴근해 돌아오며 여러 생각을 해보았어요. 처음에 도시 계획시민회의 할 때도 그랬고 100대 과제선정¹⁷⁾을 할 때도 그랬는데, 저의 요청은 그 권한을 빼내 오자는 거였는데, 계속 위원회들만 만들어진 꼴이었어요. 자문회의와 위원회들만 만들어진 게 협치였던 거죠.

100대 과제를 만들 때도, 예를 들면 KYC의 공약 사항은 이거였죠.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하자, 권한을 쟁취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여의 수준이 그 권한에 대한 쟁취였는데, 다른 단체들도 아직 그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 센터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많았죠. 사실 그거에 되게 불만이었어요. 도시계획시민회의도 지방자치도 문제였지만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열 받는 거예요. 이게 꼭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저는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정해지는 것은 주권자들에게 위배된 사항이라고 봤어요. 토지가 개발 단계에 들어가도 계속 LH나 국토부는 분양 대상자들 위주로 도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은 주민등록이 그 지역, 수원에 없어요. 정작 현재의 주민들, 수원에 주민등록에 되신 분들의 도시에서의 권한은 도시계획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양권을 가진 입주자는 아직 수원 시민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민주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자문이 아니라 이렇게 권한이 없으면 그런 참여는 다 동원인데, 수원시는 맨날 그거를 내놓지도 않으면서 협치라고 갖다 붙였던 거예요.

수원에서 도시계획시민회의를 만들어 강좌도 개최하고 기획단도 구성했지만, 현재 활동은 거의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최용선 ■ 저로서도 안타까운 생각이예요. 그럼에도 수원에서 도시계획시민회의를 만들어 냈다는 것, 시민들과 도시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잠시나마 고민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 결정이나 위원회에 들어가 얘기할 때 고려할 거라 생각해요.

최용선님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호응과 연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했던 기억나는 것, 아니면 현재의 그런 것들을 만듦으로 어떤 성과 내지는 구체적인 한계, 있을까요?

최용선 ■ 이제 제가 활동내용이 바뀌고 다른 지역을 보며 일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것을 잊어먹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 위치 때문에 그런 걸 더 비교해서 느끼는데요. 그래도 수원은 선수들이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예전에도 도시계획시민회의가 도시계획에 대한 강좌도 열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정보나 교육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을 했었어요.

¹⁷⁾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정책제안기획단을 구성하여 '수원 지방선거 100대 과제선정' 활동을 하고, 지방선거 후보 및 정당들에 제안하였다.

저는 수원지역에서 한계라고 느낀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조차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그 성과라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인 평균이 수원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모이고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교육이 열리면 또 오고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으니까. 지금도 3기 신도시 발표하는데 많잖아요. 근데 한계는 딱 그 수준이었어요. 교육과 정보는 소통됐는데, 권한은 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또 수원만의 한계는 아니잖아요.

수원에는 선수가 많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연대의 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축소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런 여건과 힘으로 펼치기에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나요?

최용선 ■ 기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참여하는 주민도 있고 시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잖아요. 거기 문구에 보면 지방 행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게끔 문구로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의 한계는 수원만의 한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도 생기게 되지만, 수원시 안으로 보면 자치권에 대한 개정사항이 수원시장이나 공무원의 권한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민들한테 그 권한이 넘어와야 합니다. 톱 까놓고 제일 좋은 거는 인사와 예산이죠. 우리 동네의 인사. 우리 지역의 구청이라도 인사와 예산 권한에 주민들이 훨씬 많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도시계획시민회의가 추구한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네 일, 누가 누가 다 위에서 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수원특례시와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례시로 되면 무엇이 주민들한테 유리한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수원특례시를 하면 결국 광역이 갖고있던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뭐가 유리한지를 왜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특례시 제도를 시행하면, 수원특례시가 수원 시민들한테는 어떤 권한을 더 부여할 것인지,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치인에게 수원시에서 차라리 수원시립대학이라도 만들어 기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수원시는 특례시를 위한 과제가 수십 개 있다던데, 그거를 시민들한테 밝히지 않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것 자체가 ‘시민에게 뭐가 좋은데’ 하고 묻는 일이 도시계획시민회의의 일이라고 봐요.

도시계획시민회의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 수원시로서도 설명하기에 조심스러운 상황 아닐까요?

최용선 ■ 뭐가 주민들한테 좋은데. 수원특례시가 되면 수원 시민한테 왜 유리한지를 설

명해줘야 해요. 결국 공무원들의 직급 올리고... 그냥 막연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권한이 늘어나겠지만, 그 예산으로 뭐 해줄 건데요?

지자체로 권한이 내려왔는데 그럼 주민들에게 어떻게 권한으로 나눠줄 거냐, 각 동이든 마을로 권한을 골고루 나눠 줄 거냐, 수원시 행정 권한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용선 ■ 그거 반드시 따져 물어봐야 해요. 심지어 수원의 인구는 13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시장 한 명의 인사 권한이 너무 커요. 하다못해 울산광역시도 수원보다 인구가 더 작은데도 광역시란 덕택에 구청장들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어요. 울주군이니 남동군 군수를 임명할 권한이 없어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견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어요. 시장 한 명한테요. 시장이 어떻게 그 수많은 민원을 다 감당을 해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수원 시민들의 주권은 비례해서 낮게 행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용선님의 경우 10년에서 15년 정도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선배들도 있었고 후배들도 생겼잖아요. 시민단체 혹은 현재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는지요.

최용선 ■ 제가 KYC에서 임기를 다 했을 때, 특히 수원이나 다른 KYC, 전국 대표로도 역할을 하면서 제 임기 중에 목포지부 등 몇 군데를 해산했어요, 저는 그게 옳은 방향으로 믿었거든요. 심지어는 수원도 제가 솔직히 말해 해산하자고 그랬어요. 선배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며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내가 할게'라고 해 떠났죠.

해산하자는 취지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겪어 왔잖아요. 광우병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시절까지. 특히 행궁동에서 활동하면 그게 다 느껴지는데 우리 같이 결사체가 된 단체잖아요. 결사된 조직이잖아요. 근데 점점 더 계속 동네에서도 그렇고 광화문에서도 그랬고 그냥 어떤 사안에 공감되고 확산하시는 분들이 쭉 모여주는 거지 세상 전체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결사하진 않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시는 주민들이 모이는 거지, 지금도 행궁동에서는 여러 삼삼오오 모임이 있는데 그걸 단체라고 부르는 좀 애매해요. 뭘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카톡에 들어오라고 해서 봤더니 또 남창초등학교를 옮긴다고 또 그거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이 왱자지껄 하는 거예요. 옮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학부모님들이 공청회에 갔다 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모일 수 있는데, 결사된 단체는 아니다, 그리고 KYC도 어차피 그걸 꿈꾸지 않았냐는 질문을 해왔고요. 시민 참여라는 거를 그런 걸 꿈꾸지 않았냐는 질문 속에서 이제 해왔고 그렇게 느낀할 거면 굳이 단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물론 이제 그런 조직의 변화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안이 없기도 했기 때문인데, 하여튼 KYC 입장에서 보면 진전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맨날 주민자치 운동했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는 계속 변화가 됐으니까, 기대한 만큼 속도만 느려질 뿐이지. 그러니 이제 변화됐으니 회사를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회운동은 계속해가겠지만 결사된 조직에서 이걸 해야 하나. 작은 조직 모임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래야 활동가도 그렇고 조직도 유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최용선님은 단체나 사람이 여러 결사의 형태가 좀 더 유연해지고, 그런 유연함이 단체와 함께 뭔가 호흡하거나 인정되거나 하는 것들로 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신거죠?

최용선 ■ 조직도 유연하고 사람도 유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도 그러하지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분들의 심각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왜 자꾸 5개년 계획 세우지’의 아한 거예요. 이게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또 5개년 계획 세울 거냐고. 5년 뒤에 뭐가 나올 줄 아냐. 차라리 4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4년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우리의 사이클이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계획이나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5개년 계획 세우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에게 기후변화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알았나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줄 알았나. 그거를 5년 전에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해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빨리 변하지만 시대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고, 심지어는 기후까지 그러니 이렇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는 거가 내재 돼 있으면 사회운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회운동이 시민들한테 공감 많이 받자고, 참여 많이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외톨이 될까 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운동에서도 시민들을 모으는 게 힘들어지기도 해요.

최용선 ■ 무슨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5개년 계획이냐고 하며 4년으로 바꾸자고 해도, 그걸 못 바뀌요. 아무도. 심지어는 ‘무슨 기준이 있을걸요’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기준이 없으니까 4년을 하자고 했어요. 도시계획이든 참여의 사이클이든 여러 행동 패턴이 저는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3년마다 하던가.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할 1~2년이 중요한데, 그런 실천 과제는 못 만들어내고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유연해지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느 농촌 지역에서는 50년, 100년 계획을 세운다며 몇십억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며 언쟁도 해보았는데요.

최용선 ■ 예산 같은 문제에서도 왜 그런 말하잖아요. 지금 예산을 사용하자 하면 후대에

빛을 얼마나 지게 할 건데 하는 말을 해요. 저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봐요. 그건 그냥 지금 하시는 일 하면 되지 나중에 걱정해요? 젊은 세대가 없으면 나라 망할지도 모르는데. 은행 대출하듯이 1년 이상이면 장기예요. 은행도 1년 미만이면 단기고 1년 이상이면 장기 대출이라 하잖아요. 저는 1년 이상은 장기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100대 과제 선정할 때 어떤 분위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어떻게 끌어갔는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용선 ■ 주제별로 나눈 거는 그때 기록을 보면서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여성, 환경 등 분야별로 3~4개 단체가 모여, 2018년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삼고 수원시에 필요한 정책제안이나 시장 후보가 제안할 공약에 대해 만들어 오고, 그거를 모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3선에 나서는 시장 때문에, 이미 여론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의 후보한테 전달하는 것이 되었어요.

다른 당 후보들은 당선된 시장을 네거티브하는데 관심을 가졌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 차례 메일로 보냈다 해도, 이거를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고요. 그나마 현 시장 측은 제대로 읽어보고 어느 정도는, 특히 KYC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구 중에는 공무원 노조 때문에 그거 해주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구청장, 읍면동장 직선제 같은 거죠. 이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를 저희가 했는데, 한 명밖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한 이 정책제안들이 효과적으로 더 드러나길 원했고, 모아진 정책을 후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게 선거구도상 유의미하지 않았던 거죠.

선거 구도 때문에 이미 여론이 돌아섰고 사실상 누가 된다고 사람들이 다 인식해버리니까, 이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 현 시장이 봤냐 안 봤냐, 얼마나 수용할 거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핑퐁이 됐던 거 같아요.

당시 정책으로 제안된 것 중에 그래도 뭔가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최용선 ■ 그때를 떠올려보면, 예를 들어 ‘문화예술 예산 확보 몇 퍼센트’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성과라고 보지 않는 게, 실제로 예산이 그만큼 들어왔어요. 알기로는 그만큼 확보한다고 공약화했어요. 물론 제가 그 이후 예산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공약에는 다 포함되는데, 문제는 그 예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또 위원회인 거예요. 또 위원회였던 거죠. ‘무슨 무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고는 ‘여기저기 부서 문화예술예산 다 합쳐보면 그만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단을 만들면서 거기다 쏟아부은 예산을 가지고는 이리 돌려받고 저리 돌려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웃기는 거죠.

그리고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은 땅장사해서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이게 시예산 세수가 늘어난 거죠. 수원시가 늘어나서 예산 규모가 늘어났던 것뿐이지, 그제 1인당 녹지 비율이 높아졌다든지 문화예술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났다고든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관료화된 구조 안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거고, 저는 민선 5기를 지나 6기와 7기에서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성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수원은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는거야? 질문하게 되요. 100대 과제에서 제안한 다른 분야들은, KYC가 제안했던 것은 어떤가요?

최용선 ■ 저희는 서수원에 꼭 공공의료시설이 들어오기를 위해 포함시켰어요. 도시계획에 꼭 포함시키자. 그리고 청년 운동을 해왔던 경력 경험에 의하면,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인데, 문장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를 국공립화 하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꼭 그거를 4년제 대학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국립대학이 수원에 있어야 한다? 아니면 요즘 캠퍼스가 반드시 한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성에 있는 한국 한경대학교가 있듯이 같은 재단이 국립대학교 수원에 있는 대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학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게 시민들한테 좋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도의료원에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많이 가지 않더라. 신뢰 받는 국립병원이 되려면 결국은 대학병원 수준은 돼야 한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맨날 다른 의료재단을 통해서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만 발표했지, 국공립화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과제를 가지고 해법이 늘 달랐던 것 같아요.

도로도 공공의 도로여야 하는데 민자도로를 건설한 거고. 수원시가 사회 인프라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 예를 들자면 고양과 김포는 자기 시비를 들여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겠다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불 보듯 뻔한 일들이 있는데도 그때 수원시는 북부민자도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런 해법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보호지도 결국은 사유지가 아니라서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이 잘 되려면 국공유지 아니면 공공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면 뭘 하려고 해도 토지 보상 등으로 예산이 다 사용하게 돼 있고, 실제로 수원시가 권한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식의 발상들이 좀 없었다고 봐요.

당수동 시민농장이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만 해도 그렇죠.

최용선 ■ 그래서 권한을 받아오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시민은 시민대로 권한 이전 투쟁을 하고 시는 시대로 권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뿐인 내 이름을 올리자고 탄 짓을 한 거죠. 세수 확보를 원했던 거지요. 세수 확보를 하면 많은 일

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에 불만이 많아요.

현 시장에서 공공 시설물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건 딜레마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 특히 김포나 남양주와 같은 신도시들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역할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요즘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니 집단이용 시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사실은 기능적으로. 그런데 소규모 삼삼오오 해왔던 것들은 그나마 어떻게든 굴러가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문 닫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문 닫아.’ 하면 닫아버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 많은 집단 다중 이용시설들이 갑자기 문을 닫았지요. 뭐야. 그런 의미로 보면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늘 미래 지향적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미래 지향적이지도 않고, 컨셉이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

수원시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명받은 정책이나 조성한 시설들, 빗물시설과 같은 환경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용선 ■ 제가 말하는 컨셉은 우선순위가 없이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 도시다, 물의 도시다, 뿔 했는데 근데 뿔 동네는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창원 가니까 창원도 무슨 환경도시라고 온갖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수원이 독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뿔 놈의 포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왔으면서, 그게 더 나았다거나 수원시가 더 낫다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대 과제 선정과정에 참여하면서의 느낌은? 단체들의 각 역량이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연대를 만들어 온 과정에 대해 성과로 남았거나 하는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최용선 ■ 저는 100대 과제 선정을 하면서 수원 전체의 각 영역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원지역에서 다른 활동가들이 무엇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 당시 성과를 만들려면 연대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적 조건에서 그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 행정이 함부로 한다거나,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연대했고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시대에서는 그런 수의 해법을 써야했던 거죠.

2018년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지금도 그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 혹시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없는지 회고하고 제안해줄 사항이 있는지요?

최용선 ■ 저는 그때도 지금도 항상 주장하는데, 뿔 하자고 하는지 시민들한테 바로 알아

먹을 수 있는 주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서수원에 공립대학을 짓자’, ‘읍,면,동장은 우리가 뽑겠다’고 하면 회원들이든 시민들은 다 알아본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무슨 무슨 센터 구축, 서비스 구축, 무슨 전담부서 설치’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단체들이 주장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나갈 것처럼 공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임팩트가 있어요. ‘현재 수원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3%밖에 안 되는데, 2025년도까지 5%로 올려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현재의 수준이 이런 상황인데, 현재 없는 것들을 지적하거나, 현 약점을 지적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야해요. 계속해서 위원회 만들자 하는 게 아니라, 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해요. 그냥 권한을 달라고 해야 해요. 권한을 왜 당신들이 다 가지고 있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같네요.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것에는 이상적인 것들이 담겨 있어 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전 해라’ 요구하는데, 어디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건지 하는 것 처럼요.

최용선 ■ 예로 저희 단체에서 회의하다가 ‘보편적으로 학생한테는 기숙사를 제공하자.’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짝 바꿨어요. 예를 들면 통계를 보니 수원에 있는 1학년들이 원하는 대학의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 집 몇 채, 방 몇 개를 할 건지 정해야 해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란 것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해요. 목표치를 제시해야 공약이 이행됐나 안 됐나 점검도 쉽고, 약속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계속 주민들한테 넣어 줘야 해요. 사실 제목에도 그런 거 많지만, 외국인 아동 보호시설 얼마나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쉽게 와닿게 말을 넣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도 예방접종 하자’, 뭐 하자는지 바로 알잖아요. 그걸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끔 써내는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후보자도 알고 시민도 알고 그 동네 사람도 알고 다 알아듣게끔 말이죠.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 같기도 해요. 도시계획시민회의나 지방선거 100대 사업 활동하며 느낀 것 중에 더 추가해서 해줄 말이 있다면?

최용선 ■ 지난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염태영 시장의 태도를 보고 ‘나는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 공무원이야 아니면 관료야’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는 거죠. 다른 시보다 반년이라도 앞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도적이라며 상도 많이 받았지만, 대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시·군에 비해 뭐가 앞서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앞서가고 좀 다른 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정책을 제시하잖아요. 좀 늦어요. 남들 다 하는 것 제시하면서, 수원시에서 더 잘하겠다고 포장하고 선전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그게 되게 싫었어요. 어차피 시장이 될 줄 알아서 그랬겠지만. 후보 토론회 할 때도 전혀 긴장이 없었어요. 시민들 앞에서 긴장을 안 하는 정치인이 되게 싫더라고요. 좌우단간 앞서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어떤 거는 과감하게 시민사회단체보다 더 먼저 주장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더 논쟁을 하며 붙여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원지역에는 단체들이 활발하게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다는 평가가 있는데, 수원지역 시민운동 밖에서 보니 어떤 점에서 시민단체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최용선 ■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통계에 민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어요. 스스로 데이터에 계속 민감해야 해요. 제가 아까 5년짜리 계획을 왜 세우냐고 그랬지만, 결국은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려면 통계에 민감해야 해요. 그리고 수원도 수원만의 여론조사든 수원만의 뭔가 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 단위의 여론조사를 많이 보고 뉴스를 접하잖아요. 수원만의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수단은 많아진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수원시정연구원이 패널을 막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아지잖아요. 하다못해 페이스북 광고도 몇 제곱 킬로미터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수원만의 통계 데이터, 여론조사 아니면 반응들을 살피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해요. 정보 공개는 기본인 거고 수원시가 공개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계획도 발표 안 하고 데이터도 발표 안 하니 써먹을 게 없어요. 또 그런 거는 많이 했다면,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하면 된다든지, 미래를 예측해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통계를 시민단체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가 제도적으로 이리이러한 분야를 계속해서 추적해 통계를 생산하고 올리고 해야 할 것 아닐까요.

최용선 ■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다른 시도도 시도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을 예를 들었지만, 매우 커뮤니티적이잖아요. 동네 기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설문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웃기게도 경기도에는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앱이에요. 여주시에서는 그것으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걸로 물어봐서 한다고 해요. 시장님들도, 시의원들도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족보 있는 정책을 원하잖아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옳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설문할 때마다 3천원 쿠폰을 주더군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요.

최용선 ■ 인구 구성이 변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잘 발전되면 소위 말해서 스위스에서처럼 어떤 동네에서는 조레나 예산을 시민들이 다 발의해서 투표에 붙인다더라. 직접 민주주의를 좀 더 구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거라 생각해요. 묻고 대답하고 그걸 쌓아놓고 또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 시민들 또한 우리 지역이나 우리 동네의 데이터도 막 살펴보게 돼 있어요. 쓰레기가 얼마나 고양이가 얼마나 사나, 자기 지역의 데이터를 잘 모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고, 고양이가 몇 마리나 사는 거야 그런 것 알고 싶잖아요. 자기 지역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그냥 단순 아카이브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잘 모으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니까요.

최용선 ■ 라이프스타일을 그걸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빅데이터라고 표현하니깐, 무슨 거대한 뜬구름이라는 거 같다는 느낌을 갖는 데요. 실제로 빅데이터를 뒤져보면 미세하잖아요. 미세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칠보에서 광고산으로 통행하는 13번 버스를 무료화할 수 있을까? 에 주말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용량을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광고산에 갈 때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강력하게 승용차를 막고 무료로 버스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도시 정책을 설계할 때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원시만의 장점, 혹은 개선할 점 한가지씩만 소개해주세요.

최용선 ■ 수원은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고. 상대적이예요. 빨리 가는 것도 없고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여기서 뭐 배워갈 게 있나요. 제게 '벤치마킹하러 어디에 가야 해요'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수원이 떠올려지지 않아요. 추천하기 어렵더라고요. 행궁동이 명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화생활이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관광특구인가요? 특별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벤치마킹할 게 없는 곳이에요.

2021.09.08. 19:00 온라인(Zoom) | 흥은화 진행, 신윤범·이상명 기록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대책위 활동

여성인권,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철폐를 요구하는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2015년 05월28일 <수원역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를 발족하여 수원역집결지가 인권침해 현장임을 공론화하고 이에 수원역집결지여성들의 자활조례제정 활동을 함.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 2020년 8월에는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현장 상담소' 개소, 2021년 4월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수원시민대책위>를 재구성하여 완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전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원(2만5364㎡)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2021년 5월 31일 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가 자진 폐쇄

정선영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수원여성인권 돌음¹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정선영 ■ 수원여성여성인권 돌음은 2020년 12월19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성착취문제를 해결을 위해 조직한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신생 단체로 보이지만 그동안 수원여성의전화에서 약 14년 동안 다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반성매매/성착취 활동에 집중하고자 수원여성의전화에서 독립한 단체입니다. 인권지원을 위해 부설기관인 상담소 '오늘', 10대를 지원하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모아', 그리고 탈성매매 후 여성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권돌음은 성평등이 최종 목표이고, 성평등을 이루는데 성매매/성착취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집결지에 계셨던 분들의 참여와 적응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정선영 ■ 2019년 12월 수원시에서 집결지여성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자활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자활조례 대상자는 수원역 집결지에서 일하시던 여성들이고요.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수원역집결지가 5월31일자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원을 원하는 여성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원역 집결지 들어가서 아웃리치(현장방문)를 통하여 실태조사와 여성들과 라포를 형성해왔어요. 자활조례제정에 따른 현장상담소가 개

18) 수원여성인권 돌음은 여성인권에 반하는 젠더기반의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반성매매 운동과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통해,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산업구조의 해체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

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활조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확실한 분들이 신청서와 자립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원시에 제출을 하면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해요. 생계비로 1년간 월 100만원, 주거비로 연간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자립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현장상담소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적 상황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1년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활지원센터 모모이에 참여를 원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계가 되어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적응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불편한데요. 영업이 중단이 되었고, 집결지 내에서 계셨던 여성들 100%가 탈성매매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수원역에 계셨던 분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 많은 고민이 있지만 여성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모이 활동을 해보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선영 ■ 수원여성의전화에서 활동 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상담소만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많았고 통합지원에 필요성을 느꼈어요. 탈성매매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활동에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한 고민 끝에 탈성매매는 과정 즉, 성매매하지 않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주거지원 및 자활지원센터가 절실하여 2007년 7월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를 개소하게 되었어요. 개소하고 지원하면서 성매매할 권리에서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들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자립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수원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인연을 맺은 계기와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정선영 ■ 저는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자랐어요. 1996년쯤 수원으로 이주했구요. 1998년 앞집에 살던 언니가 수원여성의전화 회원이었는데 후원행사로 이주실씨에 연극을 한다고 티켓을 내밀면서 수원여성의전화 소개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인연이 되었어요. 제가 자라온 맥락에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전 명예남성으로 살았기에 솔직히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많았어요.

1980년대를 경험한 저에게 대의는 민주주의였어요. 여성문제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딸, 여자라는 이유로 불편한 감정은 많았지요. 그러던 제가 페미니즘을 통해 그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에게 결혼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엄마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20대에는 차라리

남성으로 사는 것이 덜 불편하다고 느껴서 반삭하고 남자 옷을 입고 이 정도로 제 자신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또 여성에게 결혼은 그냥 참아내야 하는 것 또 이혼하게 되면 받을 사회적 시선 등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삶에 연속이었던 제가 수원여성의전화에서 상담원교육과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왜 지금까지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터부시했을까?’를 후회했어요. 끊임없이 질문이 늘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제 삶을 돌아보고 재해석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계속해왔어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부장제 안에서 저를 해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회원 활동을 하던 중 지금은 돌아가신 강미정대표가 2005년도에 상근 제의를 했고 이 때부터 본격적인 여성단체 활동가가 되었어요. 상근하면서도 저에 작업이 우선하였기에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는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여성의 문제를 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정치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주로 한 활동은 인권지원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활동 및 정치세력화에 주목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정선영 ■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믿고 찾아와 자신에 피해 사실을 말하므로써 사건이 되고 이슈화를 통한 정책생산 및 시민들을 만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기에 인권지원활동이 주요활동입니다. 개인이 경험한 사고에서 사건으로 사건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성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에 목소리를 듣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수원역집결지가 5월31일자로 영업을 중단된 도화선은 당사자에 용기와 경찰들에 적극적인 수사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수원시는 이를 삭제하고 있지만 아마 여성들에 목소리에 경찰들이 소극적이었다면 수원역집결지 영업을 지속되었을 겁니다.

2000년 군산성매매집결지인 개복동·대명동화재사고가 있었어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단순화재사고로 묻힐 뻔 했는데 주변에 있던 군산여성의전화가 개입하면서 단순화재사고가 아닌 인권침해사건으로 한국사회에 이슈화되었지요. 화재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들을 감금한 창살과 업소 구조와 여성들이 작성한 일기장에서 단순화재사건이 아니라 인권침해사건으로 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거든요. 그리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제정까지 되었지요. 이처럼 법이 제정되었지만 수원시는 성매매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수원여성의전화에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에서도 여성들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해왔어요. 그러던 중 수원여성의전화에서 부설기관인 2007년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지원을 하는 상담소‘어깨동무’를 개소하게 되었어요. 운동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성의전화 안에서도 부설기관 확대가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성의전화는 부

설기관 즉, 보조금 받는 상담소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운동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도권 사업을 확장하는데 운동성을 잃어버리는 딜레마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했거든요. 여성의전화는 아내 구타 문제로 출발하면서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법제정운동을 치열하게 했지만 제도권운동이 주는 한계가 분명했으니까요. 여성의전화에겐 가정폭력, 성폭력의 이슈가 더 중요한 사업이었고, 받아야만 한다면 나중에는 꼭 분리하겠다는 방향 설정을 했어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며 활동을 하다 보니, 그동안 방관자로 살아왔구나 하는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최전선에 그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보려고 여성학공부도 개인적으로 했고요. 성매매문제가 해결 되어야 다른 여성폭력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신념도 가지게 되었어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아웃리치, 예방교육, 현장연구, 캠페인 등 다양하게 펼쳐 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사자운동입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이 역량강화되어 주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당사자운동을 하는 문치와 네트워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 주제를 지속적으로 집중해 일을 해왔고, 지금은 또 ‘돌움’을 통해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선영 ■ 앞에 이야기 했듯이 2000년 군산 화재사건이 발생하며 여성의 전화는 이 문제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수원에서도 성매매 인식조사를 하거나 기자회견, 토론회를 했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성매매 피해 문제를 놓아두고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했어요. 여성의전화가 관심을 가지고 반성매매운동을 한 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반성매매/성착취 활동에 통합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탈성매매를 하는 과정에는 주거지원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수원여성의전화 안에서 제도를 확대시키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독립이 절실했어요. 지역에 수원여성인권돌움을 설립하여 통합성 및 전문성을 갖추어 반성매매/성착취에 집중하는 단위를 조직화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성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가끔은 업주와 사채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협박도 받고 하지만 이 또한 여성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즐거웠어요.

즐겁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정선영 ■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인권지원(상담)을 통해서 여성들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즐겁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¹⁹⁾으로 일주일에 수원역집결지를 2번도 가고 3번도 갔어요. 초창기에는 의욕이 불타서 활동했어요. 업주들에게는 우리가 그 곳을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잖

¹⁹⁾ 아웃리치(outreach)는 청소년, 여성, 노숙인 등에게 먼저 다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상담 등을 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결지와 성매매업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여성들을 만나는 일이 고 불법인 성매매 현장에 균열을 내는 활동이기에 긴장감이 있지만 놓지 못하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정보지를 통해서 여성들은 긴급구조요청도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업주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겠죠? 아웃리치를 할 때 간단한 선물을 사가거나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들고 가서 여성들을 만나는데 업주들은 가져 나간 물품을 던지거나 심하면 협박을 하기도 해요. 서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날을 세우지만 성매매/성착취를 균열내는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저는 즐거워집니다. 집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거나 김치를 담다가 먹여주는 분 등 그녀들이 계시기에 지속적으로 균열을 내기 위해 행진하는 겁니다.

만났던 사람들, 업주와 성매매 당사자 여성들의 반응은?

정선영 ■ 우리는 낯선 사람이에요. 업주들 모임인 한터²⁰⁾조직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고, 포주인 회장이나 총무의 감시를 늘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허락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골목골목 누비면서 여성들을 만나러 가면, 업주들은 ‘만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하면서 유리방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 했어요. 그 행동은 아마 많은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성들 역시 다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업주와 알선자들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으니까요. 집결지에 들어가 걷는 일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갔어요.

업주들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여성단체들이 험악한 상황을 대면할 때 행정이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공권력은 잘 도움과 협조를 해주었는지?

정선영 ■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공간을 들어가 보지 못해 그 공간 구조를 알아보고 싶은 욕심에 소방점검이나 전기점검을 하는 기술자들을 따라가, 공간 구조를 눈으로 익히고 여성들을 만났어요. 어느 때는 업주들이 언니들에게 여성단체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들은 경찰에 넘어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며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긴급구조요청이나 정보를 받으면 경찰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집결지 입구에서 곧바로 전화해 만나 들이닥치는 식으로 했지요. 경찰은 언제나 소극적이었지요. 때로는 경찰이 서로 선후배라면서 우리 앞에서 보란 듯이 형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니까요. 경찰의 단속과 구조 활동이 있었지만, 업주의 불법행위로 번 수익에 대해 몰수 추정까지 처벌은 되지는 않았어요. 올해 사건하면서 경찰들이 200명이 집결지 입구를 막고 대대적인 압수수색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요구할 때는 하지 않더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구나를 느끼면서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업주들은

²⁰⁾ 전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의 모임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범망을 빠져나가곤 했거든요.

2014년 수원시가 집결지 폐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몇 번의 용역과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결국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어요. 뿌리 깊게 형성된 집결지를 폐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강력한 의지가 현재 자활지원조례의 제정 및 시행까지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움직여 수원역집결지 매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추진되었나요?

정선영 ■ 민선 6기 염태영 수원시장 공약으로 추진되어 기자회견, 원탁토론회 등 큰 의지를 보였으나 진척이 없었어요. 연구용역만 몇 번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도로정비(소방도로확장)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수원역 상황을 폐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는 완전 폐쇄 계획 없이 도로정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지요. 5월31일 업주들이 전체가 영업을 중단된 것은 용기를 내준 여성들과 경찰들에 강한 의지 및 시민들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시는 이후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부모에게 이어받아 온 가족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 많은 불법이익을 취한 이들에게 경찰이 2021년 3월 19일 업소를 압수 수색하였어요. 압수 수색하는 날 집결지 입구를 경찰들이 막고 있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에 전율이 올랐어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 원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어요. 업주들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이 봐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몰수추징까지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꼬리자르기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업주들이 겁을 먹지 않았을까요. 요번 수원 사례를 통해서 성매매/성착취를 해결하는데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주었다고 봐요.

어떤 때는 지지부진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말을 들어보니 급물살을 탔네요.

정선영 ■ 앞 서 이야기 한 것처럼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졌고 이에 업주들이 5월31일 영업 중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업주들은 교묘하게 은하수 마을 시민의 품으로 들어가겠다고 현수막을 걸었지요. 업주들 중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불법 이익을 챙겨왔던 업주들은 건물주이기도 한데 이들에게 개발이익이 가는 것이 맞나? 은하수 마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주민처럼 행사하는 그들에게 완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여성들을 이용하여 너무 많은 불법수익을 챙겼어요. 여성들에 생존권을 걱정하고 성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퇴직금은 안 주죠? 지금까지 돈이 안 된다면 영업을 했을까요? 돈이 되니까 영업을 했겠지요.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은하수 마을이라는 이름 하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성매매알선 가능 업소들이 생기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주변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민의 품으로 공간을 돌려준다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의해 유리방이 철거가 된 곳이 있고, 그 중 앞서 말씀드린 몰수추징한 가족이 운영 업소 중에 2층집 한 채가 있어요. 2층은 무허가 슬라브라서 해체되었고, 1층만 남아있어요. 그 공간을 수원시가 매입해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집결지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성들에 인권침해 했던 공간을 여성 인권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해요. 성매매/성착취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남성들이 성을 구매하겠다고 드나들었고, 구매자에 욕구에 맞추어 업주들은 불법영업을 지속시켰고, 불법영업을 지속시키는데 연류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를 방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면서 마치 섬처럼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니었는지? 낙인이라는 경계를 만든 것 역시 우리가 아니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성매매/성착취는 여성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 인권을 침해한 공간을 다시 복원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인권,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탄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수원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이 운동에 힘이 되어 주었나요?

정선영 ■ 수원여성의전화는 94년 9월에 창립하여 여성폭력에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인권 지원을 하면서 이슈화 시켜왔어요. 성매매역시 여성폭력문제로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인권에 관심과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왔어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은 피해여성들의 지원이 전무한 한국사회에 법제정을 통해서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운동으로 이끌어낸 성과죠. 제도 안에서 운동의 한계가 있지만 제정 운동은 그 시대에 필요한 시스템이었어요. 수원여성의전화는 제도 안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특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시민사회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구조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어요. 2015년 시민사회에 대책위를 구성하자 제안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고, 저희와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도 입었고 연대를 구성하기까지 난항이었으며 주춤주춤해왔지요. 여성에 문제로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면서 확대를 하여 기자회견, 자활조례제정을 위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했어요. 그러한 단위가 2019년 자활조례가 통과된 후 2021년 시민대책위를 재구성하여 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한 요구와 집중단속을 요구해왔습니다. 수원역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민원들을 넣어 문제제기를 했어요. 수원역에서 완전 폐쇄 서명도 시민들에게 받았구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수원역집결지 걷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걷고 있지만 아마 시민들에 힘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현재 이러한 변화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도 걷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남아있는 업주들이 너희들 왜 들어오느냐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습지 않나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그리고 불법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들을 고발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업주와 건물주 모두 고발해야 해요. 이 공간이 여성들의 인권침해공간이었던 것을 알려야 해요. 유리방은 해체된 것 같지만 여전히 다른 용도(성매매알선가능업소)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시민사회 숙원이었던 수원역집결지는 시에 힘이 아닌 시민들과 용기 있는 당사자들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정선영 ■ 집결지가 2021년 5월 31일 영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대책위활동은 이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5월31일 너무나 빠르게 수원역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왜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과 여성들의 삶이 그대로 삭제되거나 느낌으로 가슴이 저려왔어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망이 되더라도 가족들이 인도가 안 되어 때로는 마지막까지도 허망하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수원역 집결지에는 여성들에 삶이 녹아 있어요.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당해온 삶을 살아온 당사자들은 때로는 본인에 위치성이 업주들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저희가 스톡홀름증후군²¹⁾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려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몇 십년 생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가스라이팅²²⁾을 겪고 있기도 해요. 내 업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업주들도 불쌍해, 때로는 연세든 업주들을 병간호해주고 있기도 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도 얽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피해자화 하려는게 아닙니다. 탈성매매라는 것은 업소를 그만두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혼란이 있지요. 생계비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들은 누구에 도움없이 치열하게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왔던 여성들입니다. 탈성매매를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절실해요. 성매매정책은 선도보호에서 여성인권관점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체제로 다시 쓰기 했어요. 권리를 찾아가는 거죠. 단체와 인연이 된 분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만나온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매매는 여성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비범죄화 추진활동과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수원자활조례사업이 2022년에 종료가 됩니다. 백서작업과 올해는 집결지 안에서 성매매방지법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9월 성매매방지법행사 때 화려한 여성인권 평화의 깃발을 화려하게 제작해서 집결 안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

21) 범죄심리학 용어로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 또는 동화되는 비합리적 현상을 말하며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을 말함.

22)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려 대상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지속해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력이 매우 낮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 그가 행위자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세뇌의 일종을 말함

는 바람이 있어요. 거점 공간에 ‘여성인권’에 대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여성인권이 담긴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되도록 활동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정선영 ■ 우리의 활동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하면서도 분절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고 있고,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도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활동에 연결성을 놓고 문제들을 바라보았으면 해요.

수원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협력해 잘 대응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단체간 혹은 민간과 행정사이에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곤 해요. 개선해갈 방법이 있다면?

정선영 ■ 공통의 의제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의제가 환경, 여성, 분절적이어도 모두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의 세상에서 살기 원한다고 생각해요. 굶주리게 활동한 선배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아웃팅되는 방식이 잘 체감되지는 않아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예요. 물론 그 안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로 들어가 남녀동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 갔을 때 정치인들이 수당만 받고 일하는 것을 보았는데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찰, 학교 교육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랐어요. 취약한 아동에게는 더 강하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공평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사건이 벌어져야 그때에서야 허둥대는 식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의제들을 해결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사회 안에서도 열정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이는 즉 집중토론하는 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여서 토론하고 성찰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어떤 문제의 당사자예요. 당사자로서 고민하고 개인 변화를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직 내가 하는 문제에 더 집중되어 실천은 잘 못하고 있지만 해야겠지요. 아무튼 문제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를 선별하고, 이것이 여성과는 어떻게 연계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 좋겠어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문화가 다양하게 추진되도록 서로의 운동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누고 있나요?

정선영 ■ 시민사회 안에서는 못하고 있지요. 돌음 안에서 나누고 있어요. ‘활동가라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

기해요. 수원여성인권동음에서도 내년에는 각 단체를 찾아 활동가들과 인터뷰도 해 보고, 지역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을 '활동가 교육'에 담아 보려고 해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이 운동을 오랫동안 펼쳐온 활동가 출신 의원들의 역할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선영 ■ 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점도 있어요. 저희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니까.....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여성단체에서 활동해온 의원이 있어, 많은 어려움을 독심있게 밀어주어 2019년에 자활지원조례까지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시의원들 안에서 전체가 여성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서 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후폭풍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시 공무원들도 압박을 받아 이 사업의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만 볼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언제나 활동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만 보고 싶어요.

선후배 세대 활동가들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선영 ■ 그들이 변화하길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전 시민단체들이 다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노동자 맞지요? 저는 헛갈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요 변화의 흐름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는 노동의 시간을 줄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시간이 여유가 주어지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예전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래 세대들이 저의 세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 잘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존중받아야 하고, 서로가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인 변화를 인식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을 강화할지 저도 답은 없지만 찾아가야겠지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저에 과제여요.

이 일을 해오며 정선영 님의 활동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정선영 ■ 신입활동가가 캘리그라프로 써준 문구가 생각나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자도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원의 멋진 활동이나 장소, 혹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꼽는 것은?

정선영 ■ 문화운동이요. 수원의 임광아파트에 살 때 좋았던 것은 야외음악당이 준 혜택이 너무 컸어요. 저녁에 마실을 나가 앉아서 쉽게 접하지 못한 오페라 공연도 보고 이러

한 혜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유연해지면 서로가 더 신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구요.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조그맣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2021.09.29. 10:30 (사)수원여성인권동움 | 이상명 진행·기록

참고자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다시 생각하다

2021년 4월 20일 결성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에는 지역주민연대, 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 요구사항

- ① 2021년 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
- ②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③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공간 활용을 시민과 함께 논의,
- ④ 불법 성매매(성착취)로 거대한 부를 착복한 건물주(토지주)와 업주 처벌 등이다.

• 수원시민 대책위원회의 집결지 폐쇄에 대한 입장 발표 (2021. 6. 8)

- 1)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반성, 성평등한 문화 조성
- 2) 성매매 알선 업자와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 3) 성매매 문제는 남성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 집행
- 4)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적 지원 확대
- 5) 인권 복지가 실현되는 지역주민의 공간으로의 변화에 대한 노력

• 집결지 공간 활용 방안 제안

- 여성 인권 센터. 문화예술 공간, 생태자연환경공원, 쉼의 공간, 청소년 공간
- 주민, 상인,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 협력이 필요.
- 수원시의 꾸준한 감시와 공간 확보 노력이 있어야.
- 겉모습만 폐쇄, 단순한 폐쇄가 아닌 집결지 지역이 인권, 성평등, 환경,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람.

2021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다시 생각하다, 여성·인권·공간 새로운 길을 찾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2021. 9. 7) 자료집에서 참고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대책위 활동

2019년 4월 10일 청년노동자 김태규님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1년 10개월 정도의 경기·수원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의 연대투쟁 추진.

산재사망 책임자인 은하종합건설(주) 대표는 공식사과, 법원은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실형을 선고.

대책회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단식, 노숙 등을 하며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여

박승하

‘일하는청년 2030’이 발족한 것이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신건가요?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박승하 ■ 그전에는 제가 정당에서도 활동했고, 지금은 그 이름으로 하지는 않는데 수원진보연대라고 여러 단체들이 연합체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참여했어요. 그 전으로 가면 수원청년회라는 데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일하는 청년 2030’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승하 ■ 2015년 8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전하지만 청년들의 불평등이 극심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살 만한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관련 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수원지역에 살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시엔 혼자 작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은 대학 미진학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친구들 95% 정도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초면에 힘들다고 울기도 하고, 또 울고 화도 내고 이런 일을 그때 겪으면서 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역의 그릇이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일하는2030 구상을 했습니다.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승하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4월 13일쯤 김태규 청년이 죽은 지 4일인가 5일인가 됐을 때예요. 이미 장례 다 치렀을 때입니다. 제가 다른 일로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에서 상근활동을 하는 이는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규 청년은 수원에서 일했지만 어머니가 평택에 사셨습니다. 사고로 어쩔 수 없었나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 상황도 석연찮고 또 이

렇게 죽을 자식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좀 뭔가 미심쩍은 면도 많고 이래서 성당의 신부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성당에는 최재천 신부님이라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셔서 다 아실 분이 계셨는데, 마침 그 성당에 계신 분이어서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연락한 곳이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청년노동자가 수원에 살고 또 제가 대표로 있던 지역의 청년노동자 단체에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연결이 됐어요.

기억나는 게, 다음날 단체 회원들과 함께 계획된 동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내내 김태규 청년 생각을 했죠. 연락이 돼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추락 현장도 함께 방문하고 정보를 모아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했어요. 희생자가 청년노동자이기 때문에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 제 시민단체, 정당 청년활동가들에게 연대를 요청하고 뜻을 모아 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최한 대책회의 첫 모임으로 이어졌죠.

기자회견 이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노총을 찾아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과 별개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궁극적 해결이 되어야 이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유가족의 뜻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결이 되려면 민주노총이 결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서 직접 양경수 본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흔쾌히 같이 해보자 해서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으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했었습니다. 아마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얘기하시고 또 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같이 협의를 했지요. 이런 활동을 제한할 때 시민단체들의 호응과 연대의 과정, 그 성과는 어땠는지요?

박승하 ■ 성과라고 하면 수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 하던 과정 자체인데요. 사실 저는 그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도 저희 수원 시민사회가 다 함께 연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전에는 이 사건이 그렇게 많이 김태규 청년 당시처럼 같이 아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로 오기까지의 공론화 과정이나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이때를 시발점으로 수원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같이 모였다는 것에 의미가 크죠.

작년과 올해 잘 생각을 해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해서 여론이 크게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100% 마음에 드는 결과는 아니지만, 이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원의 김태규 청년노동자 산재사망대책회의가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갖고 법안까지 사회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수원 시민사회가 같이 해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마 다 여기 기억하실 텐데, 2016년에 박근혜 퇴진 행동을 했었잖아요. 이후 정권 교체되고 3년 정도 기간 동안 같이 모여서 어떤 단일한 사건을 갖고 연대해서 마음 맞추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흐름에 어느 정도 '균열'을 낸 것이 이번 김태규 청년 사건으로, 이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단체들의 연대 이외에 시민들 중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함께 대응하시거나 참여한 분들이 있을까요?

박승하 ■ 제일 처음에 생각이 나는 건 김태규 청년의 친구들이죠. 고 김태규 청년의 친구들이 장례도 다 치르고 여러모로 움직였는데 이후의 대응과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로 저희가 성명을 남겨놨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공유해준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가 도청 방문해서 도지사한테 이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안서를 보내러 갔을 때, 거기서 그 친구들을 실제로 만났는데 마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 있는 것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대응과정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제가 내용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메시지가 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도 봤다, 기사도 보고 했는데 건설 현장 일을 하고 있다며 이걸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분도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청년이 아니고 그 자식 또래의 자식을 둔 어머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연락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대요. 수원에 이런 일이 있더라. 서수원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넘기고 막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데, 세월호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자꾸 이러냐 라며,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했대요. 제게 말씀을 전해준 그분도 '야,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계기로 '중대기업처벌법' 이런 것도 생겼어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혹시 지역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박승하 ■ 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규 청년 대책위에 이어 경기 단위로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본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미 김용균 청년이 참사를 당하기 전에 충남 지역에서는 연대체 비슷하게 있었대요. 지역에서 고용노동부를 압박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알람 역할을 하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구축하고 같이 움직이자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수원에서의 대응 과정에서 더 공고해졌고, 변화들이 감지됩니다. 지금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그 지역 지청들이 있어요. 우리지역에는 경기청이 있고요. 이 곳에서 원래는 사고가 일어난 걸 안다 하더라도 굳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들 손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이제는 시민사회들이 함께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어떤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다쳤거나 사망한 이런 정보를 접하면 그걸 시민사회에 알려주는 거죠. 지역 사회가 김용균 청년 사건 이전부터 이미 이런 변화까지 이끌어낼 정도였고, 지금 있는 변화들에 더해 시간이 지나면 그와 같은 방식이든 아니면 방법이 차이는 있든 그렇게 진전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약간 역진 같은 건데, 이제 거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돌아보면 저는 2016년이지 잊혀지지 않아요. 전국에서 수원에 산다는 게 그만큼 자랑스러웠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박근혜한테 맞서 싸웠던 기억들이 다 그런 경험들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반드시 기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부품처럼 사용하다가 버리고, 죽도록 방치해 두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셨거나 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박승하 ■ 이 단일 사건에만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가족도 사실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산재사망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좀 요원해요. 기업들이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비용과 본인들이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입는 불이익을 저울질 해보면 차라리 노동자가 죽게 내버려두는 게 이익이라는 게 아직도 여전한 현실인 거예요.

이런 현실에선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죽고 시민들이 죽게 돼요. 이런 재해 발생은 노동 현장뿐만이 아니에요. 참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으로 계속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만든 책임자들이 겪을 처벌 등의 불이익이 너무나 커서 이를 두려워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방지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회사가 끝장나겠구나” 하는 현실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계라기보다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뀌고 이 법들의 허점들도 다 보완되어 정말 강력하게 사전 방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테고 그럼 당연히 그 전에 했던 활동들은 의미가 퇴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하는 청년 2030’을 조직하고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이 운동을 해오는 과정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박승하 ■ 저희 창립 선언문에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청년노동자들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도전’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에서 세대 규정을 하고 여기에 계급성도 규정을 했죠.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핵심을 찌르고 싶은 겁니다. 질러서 사회모순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결국은 노동자들이 내몰려서 죽고 다치지 않도록, 사회의 생산관계에서 노동자가 소외되고 위험만을 떠안는 게 같은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계속 있어요.

청년 노동자 문제 외에도 지금 수원에서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는데, 혹시 다른 시민운동에 같이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박승하 ■ 최근에 가장 우리 청년 문제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계속 같이 참여를 하고자 했던 게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미래를 좌우할 큰 사안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정책을 시행했는데, 수원시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어요. 수원시는 너무 선별적으로 했어요. 우리 요즘 청년들 말로는 선택적 스윗이라고 하죠. 해주고 싶은 곳은 해주고, 자기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은 안 해주는 것이죠. 수원시에서 책상에 앉아 이 사람들 이름 가르고 숫자 가르느 작업들 속에서 소외당한 노동자들도 많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크게 분노했던 기억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희한하게 반응이 즉각 오기도 했습니다.

더 앞을 바라보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활동하는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박승하 ■ 저희가 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선택이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길게는 수십 년 아까 91년부터 이제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91년 이전부터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계속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수원지역 시민활동을 이타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 그 활동들에 많이 힘을 쓰고 또 각자는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흐름에서 보면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더 자주 만나던 때도 수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서로 하고 있는 분야, 전문 분야나 관심사 이런 부분도 다르긴 한데, 사실은 거기에 다 교집합이 있으니까 같이 시민사회에서 힘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런 살아가는 것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박승하님은 이전에 선거에 출마하셨었죠. 정치로도 계속 나아가 예정이신가요?

박승하 ■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어요. 같이 하셨던 분으로 지금은 여당내에서 초특급 거물이 된 백혜련 의원이 ‘제 표를 다 가져가서’ 당선 되셨어요. 제가 보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정치가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2021.10.04. 20:00 온라인(줌) | 이상명·홍은화 진행, 신윤범·이상명 기록

수원지역
시민운동사 30년을
담은 아홉달
경과보고, 평가와 제안

수원지역 시민운동사 30년을 담아낸 아홉 달 경과보고, 평가와 제안

1. 발간 목적

-1990~2020년 수원지역 시민운동의 전개과정을 매 시기 주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사람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과제를 도출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매 시기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주요 시민운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것을 회고하고 향후 수원의 과제를 도출해 시민운동의 발전방안 모색한다.

2. 일정

발간사업 주체·기획단 구성 및 기획	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주체 결정 :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위원단 구성 : 김성연, 김영균, 이상명, 홍은화 유문종 ※부시장 부임으로 중도하차
수원지역 시민운동 자료 발굴 및 정리, 연표 작성	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운동 주요 문헌 및 자료 탐색, 교훈 정리 •시민운동사 연표 정리 •시민협 공유, 수정 보완 요청 •선정 주제와 활동가 목록 회람 후 의견 수렴
활동가 인터뷰 활동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명의 시민운동 활동가 인터뷰 •구술 작업 및 인터뷰이 확인 수정
연구자료 발표회 보완 활동, 보고서 발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술집 PDF에 대한 활동가들의 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작업 •PDF 보고서 발간

3. 수원지역 시민운동 연표 작성

- 자료 수집 : 1990년대에 활동했던 단체들의 총회자료집 등 수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총회자료집, 숲과나눔 아카이브)
- 연표 작성 : 시민운동에 포함되는 655개의 활동사례를 일시, 장소, 내용, 주요 참여단체, 출처의 내용을 담아 정리
- 연표에 대한 시민단체 회람 및 보완
- 시민운동 주요 주제 선정 : 1991~2020 5년 단위로 6개 시기로 구분. 수원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거나 많은 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운동 주제로 32개 사례 선정

• 선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 회람 및 의견 청취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운동, 수원시 어린이날 행사, 수원시 보행권 조례제정 및 보행환경 개선활동,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운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활동, 아나바다·녹색가게 등 자원 재활용 운동, 국정교과서 운동이 주제로 제안되었으나 자료 발굴과 기한 내 완료의 어려움 등의 실무적 판단으로 이번 작업에서는 제외했음.

4. 활동가 선정, 인터뷰 및 구술 작업

시민운동 주제 활동가 인터뷰 일시·장소		1기 1991~1995
1	옹기종기놀이방 개원(보육운동)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운동 수원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	전경숙 08/18 17:45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환경한마당	김충관 09/10 10:00 수원지속가능발전재단
3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및 자료집	박완기 08/23 15:20 수원경실련
4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단 활동	최미정 09/02 09:00 온라인 및 서면
5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	박천우 09/07 11:00 권선동 파리바게트
6	해방 50주년, 통일맞이 수원시민한마당	고정호 08/09 17:00 경기에너지협동조합
		2기 1996~2000
7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시 보행권 조례제정 및 보행환경 개선활동	유문중 09/23 16:30 수원시청
8	자전거타기운동 '지구의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안병주 08/24 19:00 온라인(Zoom)
9	좋은 마을 만들기운동	고경아 08/25 20:30 온라인(Zoom)
10	수원 인권영화제	송원찬 09/03 10:30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
		3기 2001~2005
11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운동	류명화 08/23 15:20 수원경실련
12	지역 미디어 개선 운동	민진영 09/10 11:00 경기상상캠퍼스
13	우만고가차도 건설 반대운동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운동	김명욱 09/03 16:00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14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권미영 09/06 16:00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4기 2006~2010
15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 지역운동포럼 운영	이성호 10/19 15:00 풍물굿패 삶터 박진 08/27 10:30 다산인권센터
16	이의지구 광교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	장동빈 09/15 14:00 수원환경운동연합
17	수원참여예산연대 결성	허윤범 09/03 10:30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
18	수요촛불	안병주 08/24 19:00 온라인(Zoom)

5기 2011~2015

19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홍은화	09/01	17:00	온라인(Zoom)
20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입점 반대 활동	노건형	09/22	17:0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1 수원시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반대	서주애	09/03	14:30	수원지속가능발전재단
22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	신승우	08/12	17:40	온라인(Zoom)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3 경진여객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안병주	08/24	19:00	온라인(Zoom)
24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장동빈	09/15	14:00	수원환경운동연합
25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공동행동	유주호	09/06	16:00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

6기 2015~2020

26 가슴기 살균제 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	이인신	09/14	11:00	온라인(Zoom)
27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윤은상	10/05	10:00	수원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8 수원 지방선거 100대 과제 선정 및 작성	최용선	09/08	19:00	온라인(Zoom)
29 광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	윤은상	10/05	10:00	수원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30 수원여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민대책위 활동	정선영	09/29	10:30	(사)수원여성인권동움
31 수원 도시계획 시민회의 활동	최용선	09/08	19:00	온라인(Zoom)
32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대책위 활동	박승하	10/04	20:00	온라인(Zoom)

5. 활동가들이 전한 수원지역 시민운동 회고 및 과제

28명의 활동가들과 인터뷰했던 32개 주제의 이야기들을 4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A. 활동가로 서도록 움직인 계기나 화두

-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에게 보호받은 권리를.
- 시민운동은 비전찾기다.
-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 걸음.
- 민관협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 마을만들기 운동은 살아온 삶에 대한 터닝 포인트. 지나온 삶들에서 새롭게 세상을 보거나 사람과 관계를 하거나, 앞으로 누구랑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한 운동, 흐름, 에너지였다.
- 재미있는 도전. 미디어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 다양하게 경험하며 배웠던 시절.
- 급식이 학교에서 먹는 점심의 개념이 아니라, 급식이 교육이라는 개념의 운동.
- 환경교육도 환경운동. 환경운동이 과격하고 반대만 한다는 인식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도록 환경교육을 진행.

- '30대의 000는 반미치광이처럼 보였다.'는 말을 들어, 한번 시작한 활동은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뭐라도 이루리라.

- 시민운동은 '땅 다지기'.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정화하려는 노력, 결과를 내는 것보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며 활동을 하다 보니, '그동안 방관자로 살아왔구나' 하는 죄책감을 가져. 그 최전선에 그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보려 여성학 공부를 해,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여성폭력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 대학 미진학 청년노동자들을 대상 실태조사과정에서, 95% 정도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 힘들다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는 청년들을 만나며, 청년노동자들이 참여해 활동하는 지역의 공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모임 운영해.

B. 30년 시민운동 회고 중에서

- 연대운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 보육이나 돌봄 운동은 결가지 운동으로 취급하던 운동진영의 태도에 실망.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그 일에 매진해야 하고, 계속 움직이고 활동해야.

- 시민운동은 '비전 찾기'이다. 이전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명확하게 있어,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식들이 많았다. 시민운동은 찬·반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자, 공공선을 추가하는 비전을 모색하는 운동이었다.

- 1991~1995년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수원에서 시민운동이 새롭게 태동했던 시기이다.

-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부정·부패·관권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해 발족한 '수원지역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이후 공선험)'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수원지역 시민단체 연대체의 시작이었다.

- 1998년 경실련, 경기일보, 경기방송이 공동주관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선거법이 바뀌며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면서 재미가 없어졌다.

-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수원지역 시민사회의 여러 보이지 않는 역량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장이나 시의원들의 활동에 있어 수원의 전반적인 실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 여성운동을 해오며 씬담의 역할을 했다. 문제를 보면 제기하고 그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 부당함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려 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대응 시민운동에서 수원시의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책 방향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민에게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수원시 정책 결정을 비판한 것.
-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들었던 아쉬움은, 환경보전의 가치로 한정하거나 환경정책과 수준에서만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왔다는 점. 민선5기 수원 시정운영에서 좋은시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지방의제21 민관협력체계를 넓혀 전 수원시정을 포괄하는 거버넌스기구로 만들어 갔다면 어떠했을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원리가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 활동에 그쳤다는 거. 시장(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 즉 민의 요구를 담고 민의 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이 높아지도록 재구조화 되어야.
- 1991~1995년은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시작한 시기
- 이순심 씨 방청단 활동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지역에 알리는 계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출발선이 되어.
- 시민단체가 행정이나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운영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 정치가나 행정,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어.
- 통일운동은 일부 지식인층이나 활동가들의 전유물이거나 자족적인 잔치로서의 행사가 아닌, 공개적이며 대중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펼쳐져야.
- 참여·나눔·성찰 1%씩, 3% 소금이 바닷물을 씹지 않게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3%가 시민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자.
- 수원 시민운동의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참여예산연대의 가장 큰 의미는 지방 권력 감시운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기구가 생겼다는 점으로 봐.
- 우만고가차도가 지어졌을 때 이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패배감과 상실감이 커. 우리가 왜 했나 하는 자책과 평가도 일부에서는 강하게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받아들이겠다고 해. 내 동네만의 사안과 이권을 위해 싸웠던 투쟁이기보다는, 수원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놓고 싸웠던 측면에서 주민들의 행동으로 의미를 두고 싶어. 행정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과 대기라든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없었어.
- 시의원들로부터 의원발의라든가 행정발의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주민들이 힘을 행사해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운동은 시의원에게 맡기지 않고 주민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야,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 수원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일상적으로 4.16 활동을 하는 풀뿌리 모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임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이 잘 결합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어.

- 시민협이 창립했을 때, '이제 통로가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 그곳을 통해 수원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하게 돼., 오히려 책임질 단위가 있었던 거 같고, 책임지려고 했던 거 같다. 시민협은 각 단체의 주요 목적 행사들에 대표들이 참여해, 그 단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고유사업을 살피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단체들을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활동가들끼리도 깊은 사귀을 하게 된다. 시민협은 이런 점에서 기존의 주제별 혹은 사안별 투쟁연대기구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요즘에는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잘 모르는 듯해. 코로나19 상황이긴 하겠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어보지 못했고, 한 번 인사를 한 후 다음 회의에 갔었는데 알아보지 못해. 최근 시민운동에 참여한 젊은 활동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많이 끊기긴 것도 같아.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개혁들이 다 좌절되는 과정을 보았다. 광우병 촛불이 불타오르면서 민주주의 요구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데에 큰 힘을 얻었다. 촛불만 들지 말고 촛불로 모여서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들하고 진보적 담론들, 운동에 대한 담론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지역운동포럼'이었다.

- 현장이 주는 힘을 활동가들이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스스로 기획하고 매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계속 논의했다. 그때는 지겹다고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이었다. 현장을 스스로 만들고, 그 현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이 활동가들에게는 훌륭한 민주주의 훈련장이었다.

- 수원지역 시민운동 20년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운동의 전환점으로 2008년 촛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밥상을 차려놓고 시민을 불러 모았던 시절의 시민운동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상을 차리고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며 주체적으로 광장을 만들었다. 2008년 수원 촛불의 정신과 고민을 계승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

-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활동가들 중에서도 정파적인 활동, 공동의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사적인 목표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단체가 회원이 수천 명이든 아니면 건물이 빌딩을 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헌신하는 활동가가 있고, 또 활동 회원이나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해.

- 시민사회는 7000번 수원-사당 노선을 가지고 싸워, 수원-사당 버스노선의 기사
처우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게 해고 기사의 복직으로 연결되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는 못했다. 소송에서 해고된 기사는 지고
말았다. 미안해하거나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다. 그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좀 뚫고 나가는 어떤 집단적인 힘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 수원의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하도록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추진한 수원시 입장에 찬성했다. 수원시 결정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가를 산정해 그 적절한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원장님들은 시 행정의 눈치 보느라고 의견을 크게 못 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
회의에서도 시 정책이나 동원이 필요한 사업을 전달받는 게 보통이고, 비리 없이 회계
처리를 잘 하라는 행정적 지시를 받는 것이지, 안건이 있어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
일이 별로 없었다. 시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개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단체는 시민단체로서 우리 회원들을 내세우며 할 이야기를 해왔다.
회원들이 공감하고 나서주지 않았다면 CCTV 설치 관련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

- 시민단체들이 서명 받고 1인 시위하고 나서 협의기구가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회의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는 어떻게든 집행해야 하겠으니, 마치 시민단체와 주민이
갈등하는 관계 속에 시가 중재자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데 많이 열 받았다.
주민들에게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재산권 주장을 막는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런
반감으로 꼭 집어 빨간 글씨로 'OOO 물러가라'는 식의 인신공격형 현수막도 걸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화내지 않고 대화를 계속 진행했다. 결국 주민들이 자진해서
현수막을 떼어냈고,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졌다.

-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수원지역 장애인 투쟁으로 진행한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들,
지방자치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남아있다. 가령 '자립생활 체험 홈'이라는 게 있는데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된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31개
시·군은 수원을 따라 할거라는 공포감과 압박감을 가진다. 그래서 항상 타깃이 되었던
게 수원이었다.

-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이란 말의 '대중'에는 포함이 안 된다. 버스가 와도 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가 와도 택시를 타지 못한다. 공원은 참 좋은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어느 동사무소에는 경사로가 없더라. 그
동에도 분명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살텐데, 그 장애인은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접근권의 문제는 심각하다.

- 감시나 견제가 안되는 제도는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시민운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여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회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혹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나무나 풀이 자라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도를 만들었다고 완료한 것이 아니고 함께 감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민운동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한다.

- 지역운동포럼을 준비한 단위가 <성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고 같이 워크숍도 진행했는데, 평소에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했던 분들은 관심을 안보이고, 오히려 그 고민을 계속 같이 나누던 분들만 참여했다. 관심 밖의 문제로 두고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든다.

- 수원 시민단체들도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라는 연대체를 꾸려서 운영한 지 10여 년이 넘다 보니,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빨리빨리 전파하고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어. 수원의 지역사회 기반이 있으니까 활동가들의 그러한 민감하고 핵심을 잡아내는 역량이 있었던 것. 뉴런을 만들고 조직하고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손발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지자체에서 이런 크고 작은 환경 오염 사고, 중소 규모 화학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 사례가 대표적인 기반이 됐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곳에 화학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시민사회가 끈질기게 나갔던 것.

- 광교산마을에서도 시기는 잘 맞지 않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만들고 로컬푸드 매장도 만들고 했다. 그런 건 다 했지만 주민들한테 운영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행정한테 길들여졌다는 느낌도 들었고, 뭔가 쏟아내는 아이디어도 많고 주민들하고 '의씨의씨'도 많이 해봤는데, 주민들한테, 거주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별로였다.

- 분양권을 가진 시민들 위주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정해지는 것은 주권자들에게 위배된 것이다. 그분들은 주민등록이 수원에 없음에도 LH나 국토부는 분양 대상자들 위주로 도시계획을 짜는데, 정작 현재 수원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도시에서의 권한은 도시계획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게 민주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였다. 자문이 아니라 이렇게 권한이 없으면 그런 참여는 다 동원인데, 수원은 맨날 그거를 내놓지도 않으면서 협치라고 갖다 붙인다.

- 우리는 낯선 사람이었다. 업주들 모임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고, 포주인 회장이나 총무의 감시를 늘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허락 없이 그냥 들어갔다. 골목골목 누비면서 여성들을 만나러 가면, 업주들은 '만나지 마라'고 하면서 유리방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균열은 있었다. 피해 여성들이 우리에게 긴급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집결지에 들어가 걷는 일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갔다.

- 수원에서의 대응 과정에서 더 공고해졌고, 변화들이 감지된다. 고용노동부의 그 지역 지청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굳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시민사회들이 함께 압력을 가하다 보니 자기들이 먼저 어떤 현장에서 누군가가 다쳤거나 사망한 이런 정보를 접하면 그걸 시민사회에 알려주고 있다.

C. 시민단체 활성화, 시민운동 발전에 대한 제안

-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이 되려면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시민적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전문성을 견지하다 보니 그 단체나 그룹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폐쇄성이 강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이 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 전문성 부족 등 각 단체들의 어려움을 연대의 힘으로 뚫고 나갔는데, 지금도 똑같은 형태와 방법의 운동을 하고있는 거 같다.

-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심의 소통을 하다 보니, 세상 밖으로 나가 다양성을 축적하지 못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영역을 벗어나 명망가인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환원되지 않고 개인의 활동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시민사회 영역이 고립되고 영향력을 상실했다. 시민단체 활동과 정치의 영역이 순환되면 좋겠다.

- 시민운동은 시민의 세금(지방세와 국세)을 걷고 사용하는 것,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세금을 똑바로 쓰도록 올바른 정치가 발굴·투표로 잘 뽑고, 잘 쓰도록 감시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나아가 관이나 기업에 의존되는 시민운동을 탈피해야.

- 우리가 북한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태도로 북한을 알려고 노력하고 교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통일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성, 창조적인 발상들을 접하며 놀랄 때가 많아.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통합성을 갖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

-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선거, 3개월 후인 6월 1일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선거에만 가 있어. 지자체 선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 않는데,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발굴되는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어야. 내 골목의 쓰레기만 고민하면 골목 문제로 머무르는데,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과 제도를 들여다보고 고민해가도록 누군가가 촉진해 줘야. 시민단체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그분들 삶 속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연구 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어.

- 촛불혁명을 떠올려. 시민사회도 예전 같지 않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로 자료와 이야기를 잘 모아놓고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소모임·토론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시민운동이 유지되어야.

-(현장을 나온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은 옛날처럼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에 맞게 시민사회 성장과 관철 방식들, 의제들이 전환되어야 하는 거지, 권력 감시 운동, 저항운동으로만 비교해서 지금이 떨어진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 토양과 성숙함을 확장해 나가는데, 선배들의 지원과 고민이 들어가야, 현장의 활동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들은 다른 역할로 해나가야. 공익활동센터가 될지, 기금조성이 될지 현장의 활동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면 좋겠다.

- 시민운동의 추이나 변화를 봐야. 온라인 시민운동, 1인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정형화된 시민운동의 조직구조가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추이나 변화들을 지역사회에서 인큐베이팅 한다던가 현장의 활동가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던.

- 시민들의 생각을 읽고 의견을 정리하며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에는 활동가들 사이에 많은 소통과 토론이 중요해. 과거와 다르게 활동가들 사이의 소통이 많이 파편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일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생각들도 발전시켜 갈 수 있어.

-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의원에 출마하거나, 꼭 선수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시민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안목을 가지고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전략적인 역할을 해야.

- 시민운동은 연대의 힘인 것 같아. 각 기관들이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갖고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 조직만의 운동이고 저것은 저 조직만의 운동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갔을 때 그것이 조직된 운동으로 시민들에게 시너지를 내고 또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어. 한 단체 운동으로만 가다보면 금방 끊어지고 기억해 주지도 않고 역사도 없어지는 것 같아.

- 시민단체를 찾아오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죠. 온라인상에서 개인들이 관심 있는 운동과 영역들을 만들어, 공간없이 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무형의 조직들도 많아요.

- 지금 너무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을 한다고 초심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
-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기 자기 영역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활동가들도 그 전문성을 통해 성장해야. 자기 단체에만 너무 매몰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 '자기 단체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연대사업을 자꾸 해야 자기 단체도 더 성장해.
- 수원에 시민운동 활동가로 생활하거나 단체 회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우리들의 경제공동체를 수원 시민사회영역에 만들고, 여력이 된다면 수원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면 좋겠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회적 책임이 생소했는데 해보니, 이미 우리 시민단체들이 해오던 모든 활동들이 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공익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더라. 수원지역 시민사회들이 가진 재정이나 활동가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표자들이 모여 토론을 깊게 해봤으면.
- 횡단 대화를 생각해봐. 여성과 인권, 환경과 인권이 만나지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 횡단 대화 내지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
- 그 시대에 맞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그릇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고민과 맞는 그릇은 뭘까, 지금 시대에 맞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판을 벌리고 그 판 안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논의의 장은 없다. 그런 논의를 할 때 나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텐데, 그걸 잘 모르겠다.
- 서울NPO센터에서 했던 '변화'라는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기획단으로 참여를 했었다. 그때 고전적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는 한 10% 정도이고, 모르는 공익 개념을 가진 NGO, NPO가 90%인 거에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공익판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 운동은 정말 작운데, 공익판에서 가장 교류가 없는 데가 우리 쪽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만나고 싶거나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스스로가 보수적이지 않은지, 변화에 대해 우리가 막고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옛날에는 이랬는데. 시민운동이란 이런 거지' 했던 견고한 벽이 어찌면 우리를 보수적이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가진 정체성을 잘 발현하는 게 좋겠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단체들은 지역밀착형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대응해가면 좋겠어. 시민밀착형, 지역밀착형으로 시민운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 단체들이 열악하니 1인의 상근구조가 가지는 한계가 터질 수 있다. 활동가가 단체를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데,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좋게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활동 경험과 역사도 함께 단절되는 것을 본다. 신입 활동가에게 단체 임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요구만 하려는 것은 대단히 배부른 소리로, 조직 활동의 미래와 관련, 내적으로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조직 진단을 내려야.

- 단체에 젊은 활동가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 지역의 고민이 깊는데 이들이 3년 이상 활동해간 데에는, 개인적인 고민과 단체 안에서 못하는 얘기도 나누는 그들의 교류가 큰 힘이 되었겠다고 생각한다. 각 단체 지향과 자기 운동방향이 잘 맞아서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었지만, 단체 내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또 있어 단체를 넘어선 활동가 교류들이 정말 필요해. 그래야 시민사회가 좀 더 탄탄하게 자기 기반의 힘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 젊은 활동가들에게 수평적일 줄 알았던 시민사회단체가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데에 회의감과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 지역운동 특성상 우리 단체 일만 할 수도 없다. 우리 단체 일만 하다보면 다른 단체와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단체랑 많이 만나다보면 우리 단체에서 혼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조직 안에서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조직 밖에서 풀려는 노력도 지지해주는 문화가 필요해.

- 지역 시민사회는 자꾸 '그냥 원래 하는 거 하겠지' 하고 뭉뚱거리면 약해져. 단체는 많고 단체에 채용된 사람도 많고 중간 직능인도 많은데 취약해진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든 탑을 방치하면 오래 못 가듯,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뭔가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아 지역사회 과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선정해 싸워야 한다. 전문가나 시민사회 대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개별 활동이 돼버린 거다. 진짜 시민의 대표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활동력을 높여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소통하는 노력도 잘 해야 한다.

- 통계에 민감해야 한다. 스스로 데이터에 계속 민감해야 한다.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려면 통계에 민감해야 한다. 최근 그런 수단은 많아지고 있어, 그런 수단을 통해 수원만의 통계 데이터, 여론조사 아니면 반응들을 살피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기본이며 수원시가 공개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미래를 예측해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

- 아무튼 문제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를 선별하고, 이것이 여성과는 어떻게 연계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 좋겠다.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문화가 다양하게 추진되도록 서로의 운동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처럼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을 시정운영에서 확장해갔으면 좋겠다. 핵심은 예산이다. 시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적실성 있게 써야 한다. 적극적으로 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지향점과 활동의 방향성, 집단 의지들이 발현해가면 좋겠다.

D. 수원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 아파트에서 걷히는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사용하고 감시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면,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을 익힐 수 있어.
- 전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문화도시로서의 수원의 미래
- 수원과 화성, 오산시는 한 행정구역이 되어야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어.
- 현재의 공간을 미래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주어야. 미래세대(의 이익)를 주장하고 대표해줄 주체가 없거나 약해
- 중간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가. 행정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면 상관없지만, 주민들이 행정적인 일을 더 잘하게 역할을 하려면 주민들 곁으로 가야. 통합·융합이 일어나는 장소는 마을이다.
-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예산과 국도비 예산까지 하면 거의 40~50%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총액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해.
- 공무원들의 기획력과 내용을 높여야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부시장 행정체제도 필요.
- 혐오와 편견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온 사람들이 변화하여 개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인권의 눈을 적용하기 위해 꾸준한 인권교육과 제도개선 등이 이어져야.
- 광교와 비광교 수원시민들과의 격차를 고민해야. 광교는 앞으로 강남이랑 비슷해져, 푹푹 뭉친 자기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지 고민이다. 시민운동이 광교지역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 수원에서 보존되어야 할 곳은 황구지천으로, 하천은 주변 생태계와 더불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 황구지천이 수원천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더이상 황구지천이라고 할 수 없고 황구지 공원이 된다. 황구지천이 주변 습지와 칠보산이 연결되면서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라지는 생물종이 생기게 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원청개구리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도시로 거듭나야.

6. 기획위원 평가와 제안

- 수원지역사회의 시민운동 연표를 각 단체를 넘어 수원지역의 시민운동 연표로 정리해 자료 수집 및 단체들에게 회람해 수정·보완하는 일을 거듭 진행함. 향후 이 기록의 기반 위에 단체 활동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면, 수원지역에서 시민운동이 개별 단체를 넘어 단체 간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연표 구성에 대한 초기의 시도를 통해 연표에 담을 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자들 간 토론을 통해 현 연표를 완성하였음. 최종적으로 어떤 활동이 시민운동의 성격에 부합한지를 결정하고, 일정과 장소, 내용, 참여단체, 활동자료 출처를 정리해 향후 연표 기록물의 체계를 정리함. 반면 관련 사진, 관련 구체적인 자료집이나 사진의 목록화 과정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음.
- 30년간 주요 시민운동 주제 32건에 대해 28명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당시 활동 및 현재에 주는 교훈을 회고하고, 현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하였음. 사람 책 운영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 활동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달해주어 이 자료는 수원지역 시민운동, 나아가 공익활동을 펼쳐가고 이해하는데 유익한 기록물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2021년 초반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6월 이후 증가하며 10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상태가 유지됨으로써, 대부분의 인터뷰 과정을 개별 만남으로 진행함으로써 기획한 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그래서 시민운동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위해 일정을 따로 잡고, 인터뷰한 결과를 구술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음. 그러나 이런 한계를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별 인터뷰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활동가 개개인이 경험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 스스로에 의해 연구된 자료로 기록물의 전문성은 미흡할 수 있으나, 생생한 경험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및 해결방안을 담을 수 있었음. 향후 보완해가면 좋을 것으로 제안
-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에 의해 연구된 자료로 향후 시민운동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기록물 보전 및 시민 홍보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 책자 발간의 경험, 인터뷰 참여 활동가, 책자는 수원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제공되어,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과 공론의 장에 활용하면 좋으리라 예상.
- '수원지역 시민운동사 연구' 관련 자료의 빈약함, 연구자의 기록화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연구 초기 설계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향후 기록화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참고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을 넣어 발전시켜가면 좋을 듯함.
- 각 지역의 시민운동, 나아가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성찰을 포함한 자기 평가의 과정이 필요함. 사람 책 인터뷰 및 구술과정은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제공하고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유익한 기회였음.

○ 연구 작업도 시민운동(공익활동)의 하나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향후 이 연구 자료는 향후 본격적인 시민운동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 기록물 보전,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습의 자료, 나아가 시민들에게 시민운동(공익활동)을 소개하는데 좋은 홍보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

수원지역 시민운동사 30년
1990-2020
활동가 구술기록

사람책으로 엮는 수원지역 시민운동 연구

- 사람책 고경아 고정호 권미영
 김명욱 김충관 노건형
 류명화 민진영 박완기
 박승하 박진 박천우
 서주애 송원찬 신승우
 안병주 유문종 유주호
 윤은상 이성호 이인신
 장동빈 전경숙 정선영
 최미정 최용선 허윤범
 홍은화
- 연구자 김성연 김영균 이상명 홍은화
- 연구기간 2021년 3월~11월
- 참여단체 사단법인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